

경북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대 방안 연구 - 김천시, 예천군, 울진군을 중심으로

연구책임 : 김명화(경북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Gye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경북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대 방안 연구
- 김천시, 예천군, 울진군을 중심으로

발 행 인 : 하 금 숙
발 행 일 : 2026. 08. 31.
발 행 처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주 소 : (36849) 경북 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53 동행관 3층
전 화 : 054-650-7900
홈 페이지 : <https://forwoman.or.kr>
디자인·인쇄 : 대구전환서비스센터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목적

- 경상북도의 여성친화도시 조성률은 2025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정 시군을 특화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희망 지역을 발굴·지원하는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신규 여성친화도시 2개 지정이 이루어져 기존 18.2%에서 27.3%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46.5%, 기초자치단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지역 간 여성정책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도 전체 차원의 성평등 환경 조성 및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친화도시 미조성 지역의 추진환경 및 추진여건 등을 진단하고, 미조정 지역에 적용가능한 사업개발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도내 여성친화도시 미조성 지역은 16개이나 이들 지역을 모두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 분석지역(3개)을 선정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개발·제안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여성친화도시 미조성 지역의 추진환경 및 여건 분석
 - 통계청 및 각 지역 통계자료, 행정자료 등을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중점 분석지역의 인구가족 특성 및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별 특성 분석함
 - 중점분석 지역 정책 관련 내부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 역량과 기반, 여건 및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함
-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인식과 요구 조사·분석
 - 중점 분석지역을 선정하기에 앞서 미조성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중점 분석지역 선정에 활용함

- 중점 분석지역의 여성가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정책 관련 부서 공무원, 기관/단체 활동가, 전문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또는 FGI 조사를 통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분석하고,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와 관련한 요구, 대표사업 발굴을 위한 의견 등을 조사분석함
- 지역특성을 고려한 여성친화도시 추진 방향 및 사업 개발·제시
 - 조사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도내 미조성 중점 분석 대상 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대표적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 과제 등을 도출제안함, 아울러 경북의 미조성 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II. 경북의 여성친화도시 추진환경 및 여건, 정책 요구

1) 미조성 지역 공무원 인식 분석 결과

- 미조성 14개 시군의 여성가족정책 담당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기본 인지도는 96.0%로 높았으나,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56.0%, 사업 참여 의향은 40.0%, 실제 여성친화도시 추진 의향은 28.0%로 낮았음.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은 95.0%로 매우 높았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안전정책, 여성일자리·경제활동 지원, 지역정책에 대한 여성의 관점과 참여 확대 등에는 일정한 기대가 확인되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준비 부족, 예산·인력 부족,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이 추진여건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제시되어, 미조성 시군에 대해서는 곧바로 지정신청을 요구하기보다 공무원 교육, 지역진단, 과제발굴, 부서협업 기반을 먼저 형성하는 준비단계 지원이 필요함

2) 통계분석을 통한 중점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여건 분석

- 통계분석에서는 김천시·예천군·울진군의 인구 및 가구구조, 산업과 여성고용,

안전, 돌봄 관련 기반, 정책결정과정의 여성대표성 등을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여건을 비교함

- 분석결과 세 지역 모두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안전, 돌봄, 대표성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나, 동일한 여성정책을 적용하기에는 지역의 인구구조와 산업기반, 생활권의 형태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남
- 먼저 김천시는 제조업과 혁신도시·공공기관이라는 도시적 성장기반이 존재하면서 읍면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는 도농복합형 지역으로 나타남
-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지만 제조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24.4%에 그치는 반면 여성은 보건·사회복지, 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지역의 핵심산업과 여성고용 간 분리구조가 나타남
- 2025년 상반기 여성고용률은 57.8%로 남성 73.8%보다 16.0%포인트 낮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함께 일자리의 직종 및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안전에서는 교통사고 5등급, 화재·생활안전 4등급으로 나타나 범죄예방뿐 아니라 교통·보행·생활안전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안전지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지표가 아니므로 향후 여성의 실제 생활동선 및 체감안전 자료와 결합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은 41.5%로 양적 기준은 일정 수준 충족하고 있으나 제조업·도시계획·교통·안전·혁신도시 등 김천의 핵심 정책영역에서 여성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지를 추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예천군은 도청신도시의 조성으로 젊은 인구와 양육가구가 유입되는 동시에 기존 읍면에서는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어 신도시와 농촌이라는 두 개의 상이한 생활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나타남
- 여성 종사자 비율은 47.4%로 세 지역 중 상대적으로 높지만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여성고용이 집중되어 있으며, 교육·돌봄·공공서비스와 농촌생활서비스가 여성고용의 중요한 기반으로 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남성보다 17.5%포인트 낮아 여성의 양적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함께 신도시의 경력보유·양육기 여성과 농촌 중고령 여성에게 서로 다른 일자리 전략이 요구됨

- 또한 여성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농촌지역 여성 1인가구는 고령층에 집중되는 한편 도청신도시에는 청년여성 1인가구도 존재하여 고령여성의 생활돌봄과 청년여성의 주거·안전·관계망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위원회 여성비율은 41.5%로 양적 수준은 양호하지만 도청신도시의 전문직 여성과 기존 읍면 여성 간 대표성의 균형, 복지·교육 분야와 산업·농업·도시계획 분야 간 참여의 균형이 향후 과제로 요구됨
- 울진군은 세 지역 가운데 여성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원전·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한 남성 중심 산업구조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동시에 고령여성 1인가구와 분산된 농어촌 생활권이 공존하는 지역임
- 전체 여성 종사자 비율은 42.4%이지만 여성은 숙박·음식 및 보건·복지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에너지·기술·건설 분야에서는 과소대표되어 있어 지역의 핵심 성장산업과 여성 경제활동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도출됨
- 여성고용률의 남녀 격차는 20.5%포인트로 세 중점지역 중 가장 크게 나타나 여성에게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문제가 특히 중요함
- 여성 가구주 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은 63.6%로 높게 나타나 고령여성의 돌봄·주거·이동·안전 문제를 생활권 단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여성비율 역시 33.6%로 세 중점지역 중 가장 낮아 에너지·안전·환경·산업개발과 같은 지역 핵심정책 분야에서 여성전문인재를 발굴하고 정책결정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남
- 종합하면 통계분석에서는 김천은 ‘산업·혁신도시와 도농복합구조’, 예천은 ‘도청신도시와 농촌의 이중생활권’, 울진은 ‘에너지산업과 고령·분산생활권’이라는 차별적 특성이 있었음

3) 중점 분석지역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지역 주요업무계획 분석 결과

- 정책분석에서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지방정부 시행계획에 포함된 김천시·예천군·울진군의 사업과 각 지역의 주요업무계획을 검토하여 현재 지역

정책이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세 지역 모두 여성·가족 관련 사업뿐 아니라 일자리, 돌봄, 안전, 청년, 산업, 도시·농촌개발 등 여성친화도시와 연계 가능한 정책자원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사업을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주요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5대 목표와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양성평등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여성일자리 교육, 폭력예방, 돌봄, 여성단체 역량강화 등 전통적인 여성·가족정책 영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역의 주요업무계획에는 산업·청년·교통·도시계획·통합돌봄·에너지 등 보다 폭넓은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정책에서는 여성·가족부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 일반 시정·군정 핵심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 김천시는 세 지역 중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기존 정책기반이 가장 많이 축적된 지역임.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는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양성평등기금사업,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여성시간선택 일자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불법촬영 점검, 아이돌봄, 남성 육아참여, 안심거울 등 5대 영역과 연결 가능한 사업이 비교적 폭넓게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운영계획상 전담인력, 성인지 통계, 시민참여단과 협의체 운영 등 제도적 기반도 일정 수준 구축되어 있음. 그러나 기존 사업의 상당수가 일자리 교육, 안전시설, 돌봄서비스,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형태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에는 제조업·혁신도시·도시계획 등 김천의 핵심 정책과 여성친화도시를 연결하고 기존 사업 간 조정과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함
- 예천군은 2026년 주요군정에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자체를 역점사업으로 설정하고 군민참여단 구성, 부서 간 협력체계와 관련 협의체 구성,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어 신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형성 의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서는 여성일자리 교육,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공공부

문 폭력예방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현재 여성정책 자체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편임

- 반면 주요업무계획에는 도청신도시 청년센터, 첨단산업단지, K-보듬, 아픈아이돌봄센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독거노인 지원 등 여성친화도시와 연결 가능한 정책자원이 다수 존재함
- 따라서 예천은 기존 여성정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보다 도청신도시·청년·첨단산업 정책에는 여성의 일자리와 참여를, 농촌복지·통합돌봄 정책에는 고령여성의 이동과 생활돌봄을 결합하는 방식이 중요함
- 울진군의 양성평등 시행계획은 양성평등주간, 지역특화 여성취업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 및 역량강화, 폭력피해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통적인 여성정책 및 교육·지원사업의 비중이 높음
- 그러나 군 전체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신한울 3·4호기, 지역맞춤형 일자리, 청년 정착지원, 청년일자리센터, 사회적경제, 의료·요양 통합돌봄, 군민 참여형 재난예방 등 훨씬 폭넓은 정책자원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원전 관련 주요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여성친화도시에서는 이 과정에 여성의 고용·전문인력 양성·의사결정 참여를 연결할 여지가 큼
- 또한 군정 차원에서 통합돌봄과 군민 참여형 재난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고령여성 생활돌봄과 주민주도 안심마을 등으로 연결할 가능성도 확인됨
- 종합하면 현재 정책기반은 부족하다기보다 관련 사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기존 사업이 성별 수요와 충분히 연결되지 않은 것이 핵심적인 한계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과제 개발시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지역 주요업무계획의 기존 핵심사업을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와 연결하는 정책연계형 과제를 중요하게 포함할 필요가 있음

4) 심층면접 및 FGI 조사 분석 결과

- 심층면접과 FGI에서는 통계와 행정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여성의 실제

생활경험과 정책이용의 제약 및 수요, 기존 사업의 실효성, 지역사회 참여와 행정추진 과정의 문제를 파악함

- 3개 지역 현장의 활동가, 유관기관, 공무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정책수요 분석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고, 김천시의 경우 전문가 FGI를 통해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 발굴을 추가하였음. 따라서 조사결과는 동일 문항에 대한 정량조사가 아니라 지역과 조사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과 제안이 제시된 질적자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함
- 먼저 김천시에서는 새로운 사업의 부족보다 기존 정책의 분절과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제기됨
- 여성일자리 분야에서는 여성 대상 교육이나 자격과정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와 함께 청년과 노인 사이에 놓인 40~60대 여성에 대한 지원 부족이 제기됨
- 돌봄에서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의견보다 다양한 시설과 사업이 존재하지만 전체 자원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사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나타났으며, 안전에서는 기존 시설의 양보다 외곽 가로등·횡단보도·폭염대응 등 일상적인 생활안전과 설치 후 관리가 중요하게 제기됨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은 비교적 활발하지만 여성들이 생활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정책요구로 발전시킬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전문가 FGI에서도 여성친화일촌기업·안심시설·K-보듬 등 기존 사업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지역산업·생활안전·돌봄사각지대·여성정책 참여와 연결하여 재설계해야 한다는 평가가 제기됨
- 이에 따라 김천의 정책수요는 기존 사업의 고도화, 중장년 여성과 산업·혁신도시의 연계, 생활안전 중심 전환, 돌봄자원 조정, 시민참여단의 정책파트너화로 집약됨
- 예천군에서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도청신도시와 기존 읍면 농촌지역의 정책수요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 가장 특징적임
- 성평등 인식에서도 젊은 인구가 많은 신도시와 기존 농촌지역의 차이가 제기되었으며, 여성일자리에서는 신도시 양육기 여성의 근로시간과 일자리 시간의

불일치, 농촌 중고령 여성의 이동제약과 제한된 일자리 선택지가 함께 나타남

- 돌봄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명확하여 호명읍 등 신도시는 아동돌봄이 중요한 반면 기존 읍면은 노인·생활돌봄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고, 농촌에서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자신의 이동과 처우 문제도 함께 나타남
- 안전 역시 신도시는 야간보행과 시설관리, 농촌은 교통·이동과 생활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됨
- 여성대표성에서는 여성 이장과 여성 협의체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참여의 수가 실제 의사결정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경향이 확인됨
- 따라서 예천의 정책수요는 신도시-농촌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각각의 일자리·안전·돌봄 수요를 맞춤형하고 두 생활권의 여성인재를 지역정책 참여구조 안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울진군은 안정적인 여성일자리 부족, 공공기간제·돌봄·사무직 중심의 제한된 취업구조, 고학력·청년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부족 등을 제기함
- 또한 청년여성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창업지원 역시 초기단계 이후 지속적인 성장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남
- 고령여성에게는 범죄 자체보다 교통부족, 1인가구의 취약한 생활기반, 생활돌봄 등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 등 실제 돌봄 인력의 부족도 제기됨
- 여성들은 농업·가공·교육·봉사 등의 지역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은 낮다는 평가도 나타남
- 이에 따라 울진의 정책수요는 안정적인 여성일자리, 에너지산업과 여성의 연결, 청년여성 네트워크, 고령여성 생활돌봄·안전, 지역 핵심정책 분야의 여성 대표성 강화로 집약할 수 있음
-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중요한 정책수요 중 하나는 안전정책을 물리적 안전환경 조성에만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임
- 주민과 시민·군민참여단이 직접 생활공간을 살펴보고 위험요인을 발굴하며 안심반상회·안심마을·안전지도 활동을 통해 개선안을 만들고 행정과 협의한 뒤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함

- 이는 안전환경 개선뿐 아니라 주민이 자신의 지역을 스스로 안전하게 만드는 역량을 높인다는 점에서 3영역인 지역사회 안전 증진과 5영역인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결합하는 중요한 사업방향으로 볼 수 있음

Ⅲ.중점 분석지역 대표과제 및 경북의 향후 과제

1) 중점 분석지역별 여성친화도시 조성방향과 과제

-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점지역별 여성친화도시 조성방향과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영역	김천시	예천군	울진군
추진방향	산업·혁신도시형 여성친화도시 고도화	도청신도시-농촌상생형 여성친화도시	에너지·분산생활권형 여성친화도시
①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 성인지 데이터 기반 정책 리디자인 - 부서협업·BSC 고도화	- 여성친화 정책발굴 공무원 아카데미 - 예천군 여성친화도시 BSC 단계적 도입	- 여성친화 정책발굴 공무원 워크숍 - 울진군 여성친화도시 BSC 단계적 도입
②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김천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 - 산업·혁신도시 여성 커리어 프로젝트 - 중장년 여성 커리어 브리지 - 투게더 김천 협업형 여성일거리 실험	- 일자리 편의점 2.0 - 도청신도시 여성 경력이어가기 - 예천 농촌여성 로컬워크	- 울진 에너지 여성 커리어 패스 - 울진 로컬 여성일거리 협업랩 - 울진 여성청년 커리어·창업 네트워크
③ 지역사회 안전 증진	- 안전 포커스 김천 2.0-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생활권 - 김천 여성 생활동선 안전지도 - 김천 주민주도 안심마을 사업	- 예천 안심반사회-안심마을 만들기 - 신도시-농촌 안심생활권 이동지도	- 울진 주민주도 안심마을 - 울진 고려여성 안심생활권 - 울진 여성농업인 기후안전마을
④ 가족친화 (돌봄) 환경 조성	- 김천 돌봄노동자 안심일터 - 김천 돌봄자원 통합맵+돌봄 사각지대 관리 - 배달의 돌봄-김천형 찾아가는 생활돌봄 시범사업	- 같이 돌보는 예천 아빠 돌봄-성평등 프로젝트 - 예천 성평등 마을 만들기 - 예천 생활권 맞춤 돌봄네트워크 - 예천 농촌 돌봄이동 지원	- 울진 성평등 마을 만들기 - 울진 찾아가는 고려여성 생활돌봄 - 울진 돌봄인력 매칭·긴급돌 - 울진 마을 돌봄거점
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여성 지역문제 해결형 커뮤니티 공모 - 김천 여성친화 디자이너스쿨 - 시민참여단 정책파트너 프로젝트 - 김천 여성사 다시 잇기-여성역사 발굴·스토리텔링 프로젝트	- 예천 여성생활권 정책기획단 - 예천 여성 마을리더 성장학교 - 농촌형 성평등 마을강사 양성과 찾아가는 교육 - 예천 여성의 삶을 기록하다 - 농촌여성 구술생애사 프로젝트	- 군민참여단 안심마을 코디네이터 - 울진 여성 에너지-안전 정책리더 - 울진 여성정책 네트워크 - 울진 성평등 시민강사 양성과정 - 울진 여성의 삶과 마을을 기록하다 - 구술생애사·여성생활사 아카이브

<그림 1> 중점 분석지역별 여성친화도시 조성방향과 과제

2) 미조성 시군 여성친화도시 지원방안

- 경북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대를 위해서는 단기간에 지정도시 수를 늘리는

방식보다 미조성 시군이 여성친화도시를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주민 기반을 단계적으로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함. 특히 군 지역은 여성정책 담당자의 업무가 다중화되어 있고, 관련부서에서도 여성친화도시를 여성가족부서의 개별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지정신청 단계에서 곧바로 부서협업과 대표사업 발굴을 요구할 경우 형식적인 과제발굴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음. 이에 미조성 지역에 대해 ‘여성친화도시 준비도시’ 단계를 설정하고,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재의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도 개선이 필요함. 첫째, 시군 매칭형 특화사업은 사업비 교부 후 사업을 설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년도 기획-차년도 실행’ 구조로 전환하여 충분한 사업기획과 주민참여, 컨설팅, 성과측적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전년도 하반기에 수요조사, 지역진단, 사업발굴 워크숍과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차년도 초부터 사업을 즉시 실행하는 체계가 적절함
- 둘째, 컨설팅은 타 지역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에서 지역진단 기반 정책개발형 컨설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김천의 산업·혁신도시, 예천의 신도시-농촌 이중생활권, 울진의 에너지·분산생활권처럼 지역별 문제구조가 다르므로, 성인지 통계와 지역정책 분석을 선행한 후 적합한 사업방식을 찾는 순서가 중요함. 이를 위해 경상북도 또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공통통계를 활용한 「시군 여성친화도시 지역진단 카드」를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함
- 셋째, 신규 추진지역은 사업 컨설팅에 앞서 공무원 교육을 필수 준비과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서가 별도의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교통·안전·농업·도시계획·복지 등 기존 부서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이므로, 관리자·중간관리자·실무자가 실제 지역사업을 사례로 토론하는 현안 중심 교육이 효과적임
- 넷째, 시군협의체는 단순한 사업현황 공유에서 벗어나 공동학습과 우수사례 확산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우수사례 역시 최종성과만 소개하기보다 사업추진배경, 주민수요, 계획 변경과정, 부서협업, 주민참여, 시행착오와 개선과정을 함께 공유하여 미조성 시군이 실제 사업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목 차

I. 서론	0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03
2. 연구 내용 및 방법	10
3. 연구의 수행체계	12
II. 경북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미조성 지역의 관심	13
1.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에 대한 이해	15
2. 경북의 여성친화도시 지원 정책 분석	19
3. 미조성 시군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	22
III. 중점 분석지역 여성친화도시 조성 환경 및 정책 분석	37
1. 중점 분석지역 선정 기준	39
2. 중점 분석지역 특성 분석	40
3. 중점 분석지역 정책 분석	67
IV. 중점 분석지역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요 분석	91
1. 조사 개요	93
2. 조사 결과	95
3. 중점 분석지역 정책 요구와 시사점	168

V. 중점 분석지역 대표과제 및 경북의 향후 지원 방안	175
1.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77
2. 중점지역별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향	186
3. 중점지역별 세부 정책과제	198
4. 미조성 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대를 위한 추가 제언	244
참고문헌	249

표 목 차

<표 I-1> 전국 여성친화도시 조성 현황(2026. 현재)	4
<표 I-2> 경북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추진 현황(2026. 3. 현재)	5
<표 I-3> 2026년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내용	7
<표 I-4> 시도별 시·군·구 여성친화도시 조성률 비교(2026 현재)	8
<표 II-1> 성평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및 주요 내용	15
<표 II-2> 여성친화도시 신규·재지정 평가지표(개편 제도)	17
<표 II-3> 여성친화도시 신규·재지정 시 선택지표 배점	18
<표 II-4> 경상북도의 2025, 2026년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내용	20
<표 II-5> 2026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시군조성사업 주요 내용	21
<표 II-6> 2026년 경북 지역별 대표사업 현황	21
<표 II-7> 응답자 현황 및 특성	23
<표 II-8>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24
<표 II-9> 여성친화도시 인지경로	25
<표 II-10>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인지도	26
<표 II-11>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참여 의사	27
<표 II-12> 여성친화도시 연구 분석 대상 지역 참여 의사	28
<표 II-13>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효과와 기대	30
<표 II-14>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필요성	31
<표 II-15>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필요성 이유	32
<표 II-16> 여성친화도시 추진 상 어려움 내용	33
<표 II-17>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의향	34
<표 II-18> 양성평등기금 또는 여성가족기금 조성 여부	36

<표 Ⅲ-1> 경북 도내 여성친화도시 미조성 지역의 조성 여건과 의지	39
<표 Ⅲ-2> 김천시 인구 및 가구 관련 주요 지표	42
<표 Ⅲ-3> 김천시 경제 관련 주요 지표	44
<표 Ⅲ-4> 김천시 안전 관련 주요 지표	45
<표 Ⅲ-5> 김천시 출산.보육.돌봄 관련 주요 지표	46
<표 Ⅲ-6> 김천시 여성참여 관련 지표	47
<표 Ⅲ-7>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환경 및 여건 종합	48
<표 Ⅲ-8> 예천군 인구 및 가구 관련 주요 지표	51
<표 Ⅲ-9> 예천군 경제 관련 주요 지표	52
<표 Ⅲ-10> 예천군 안전 관련 주요 지표	54
<표 Ⅲ-11> 예천군 출산.보육.돌봄 관련 주요 지표	55
<표 Ⅲ-12> 예천군 여성참여 관련 지표	56
<표 Ⅲ-13> 예천군 여성친화도시 추진 환경 및 여건 종합	57
<표 Ⅲ-14> 울진군 인구 및 가구 관련 주요 지표	59
<표 Ⅲ-15> 울진군 경제 관련 주요 지표	61
<표 Ⅲ-16> 울진군 안전 관련 주요 지표	63
<표 Ⅲ-17> 울진군 출산.보육 및 돌봄 관련 주요 지표	64
<표 Ⅲ-18> 울진군 여성참여 관련 지표	65
<표 Ⅲ-19> 울진군 여성친화도시 추진 환경 및 여건 종합	66
<표 Ⅲ-20> 김천시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사업	68
<표 Ⅲ-21> 김천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69
<표 Ⅲ-22> 김천시 지역사회 안전 증진	70
<표 Ⅲ-23> 김천시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72
<표 Ⅲ-24> 김천시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73
<표 Ⅲ-25>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 추진 특성 및 향후 보완.개선 방향	74
<표 Ⅲ-26> 예천군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사업	75
<표 Ⅲ-27> 예천군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76

<표 Ⅲ-28> 예천군 지역사회 안전 증진	78
<표 Ⅲ-29> 예천군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79
<표 Ⅲ-30> 예천군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80
<표 Ⅲ-31> 예천군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 추진 특성 및 향후 보완.개선 방향	82
<표 Ⅲ-32> 울진군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83
<표 Ⅲ-33> 울진군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84
<표 Ⅲ-34> 울진군 지역사회 안전 증진	86
<표 Ⅲ-35> 울진군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87
<표 Ⅲ-36> 울진군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89
<표 Ⅲ-37> 울진군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 추진 특성 및 향후 보완.개선 방향	90
<표 IV-1> 정책수요 분석 조사대상 및 방법	94
<표 IV-2>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별 문제점 및 개선요구	169
<표 IV-3> 예천군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별 문제점 및 개선요구	171
<표 IV-4> 울진군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별 문제점 및 개선요구	173
<표 IV-5> 3개 지역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별 문제점 및 개선요구	174
<표 V-1> 통계분석을 통한 중점지역별 여성친화도시 조성여건 요약	179
<표 V-2> 양성평등 시행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분석 결과 요약	182
<표 V-3> 면접 및 FGI를 통한 지역별 여성친화도시 정책수요 요약	185
<표 V-4>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별 필수지표 및 대표사업 제시 ·	186
<표 V-5> 예천군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별 필수지표 및 대표사업 제시 ·	190
<표 V-6> 울진군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별 필수지표 및 대표사업 제시 ·	194
<표 V-7> 미조성 지역 단계별 지원내용	245

그림 목 차

[그림 I-1] 여성친화도시 조성률(2026. 현재)	4
[그림 I-2] 경북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추진 현황(2026. 3. 현재)	5
[그림 I-3] 전국, 경북 연도별 여성친화도시 조성률(2021 ~ 2025)	6
[그림 I-4] 광역도 여성친화도시 조성률(2021 ~ 2025)	6
[그림 I-5] 전국 및 경북 시.군.구 여성친화도시 조성률(2025. 12. 현재)	9
[그림 I-6] 광역도 시.군별 여성친화도시 조성률(2026. 3. 현재)	9
[그림 I-7] 연구의 수행체계	12
[그림 II-1] 여성친화도시 인지경로	24
[그림 II-2] 여성친화도시 인지경로	25
[그림 II-3]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인지도	26
[그림 II-4]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참여 의사	27
[그림 II-5] 여성친화도시 연구 분석 대상 지역 참여 의사	28
[그림 II-6]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효과와 기대	29
[그림 II-7]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필요성	31
[그림 II-8] 여성친화도시 추진 상 어려움	32
[그림 II-9]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의향	33
[그림 II-10]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 정책(1순위)	35
[그림 II-11] 양성평등기금 또는 여성가족기금 조성 여부	35
[그림 II-12] 지역정책 정기적 모니터링, 제안하는 여성그룹 및 단체 여부 ..	36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수행체계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기초자치단체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에서 성평등 관점과 생활밀착형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성평등 환경 조성 and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성평등 정책으로,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돌봄과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를 의미함
 -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 지역여성정책의 종합모델이라 일컬어지는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가족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형태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확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임
 - 우리나라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 전국 107개(기초자치단체 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의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며, 생활환경 개선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성과를 창출해 왔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참여 의지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질적 발전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

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 조성률 지역간 격차 커, 경북은 27.3%로 전국 46.5%에 비해 매우 낮음
 -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추진된 이후 그동안 꾸준히 양적 성장이 이루어져 왔음.
2026년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05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조성률 46.5%(기초지자체 단위)로 절반 가까이 이르고 있음
 - 하지만 광주, 인천, 충남 등과 달리 경북을 포함한 울산, 대구, 부산, 전북 등의 지역은 여성친화도시 조성률이 매우 낮아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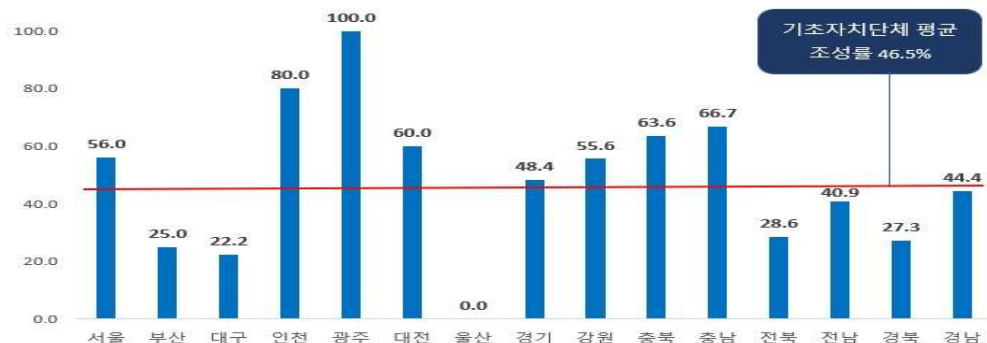
<표 I-1> 전국 여성친화도시 조성 현황(2026. 현재)

단위 : 개, %

지역	구	지정 여성친화도시		지역	시·군	지정 여성친화도시	
		수	(%)			수	(%)
계	226	105	46.5	경기	31	15	48.4
서울	25	14	56.0	강원	18	10	55.6
부산	16	4	25.0	충북	11	7	63.6
대구	9	2	22.2	충남	15	10	66.7
인천	10	8	80.0	전북	14	4	28.6
광주	5	5	100.0	전남	22	9	40.9
대전	5	3	60.0	경북	22	6	27.3
울산	5	-	-	경남	18	8	44.4

주 :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나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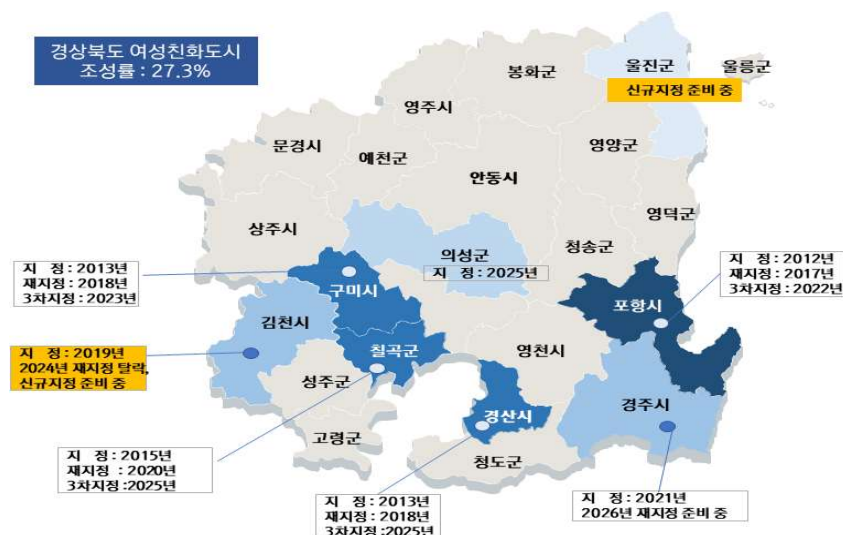


[그림 I-1] 여성친화도시 조성률(2026. 현재)

- 경북은 22개 시·군 중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6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조성률이 27.3%에 불과함
- 2025년부터 지정 시·군 특화사업 추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희망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신규 여성친화도시 2개 지정이 이루어져 기존 18.2%에서 27.3%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양적 확대가 필요함

<표 I-2> 경북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추진 현황(2026. 3. 현재)

지 역	내 용
포항	2012년 신규 지정, 2017년 재지정, 2022년 3차 지정
구미	2013년 신규 지정, 2018년 재지정, 2023년 3차 지정
칠곡	2015년 신규 지정(도내 군지역 첫 사례), 2020년 재지정
경주	2021년 신규 지정, 2026년 재지정 준비 중
의성	2025년 신규 지정
김천	2019년 신규 지정, 2024년 재지정 탈락, 현재 신규 지정 준비 중
울진	2026년 신규 지정 준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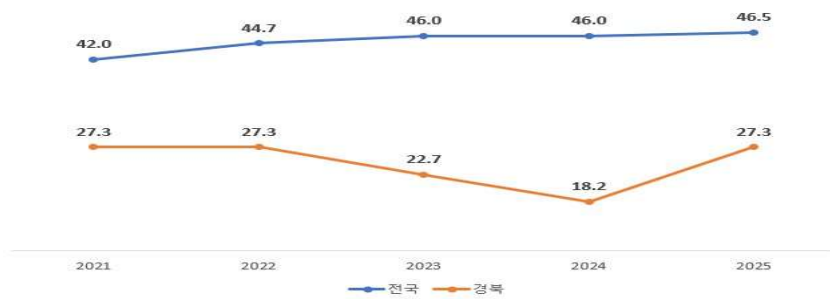


[그림 I-2] 경북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추진 현황(2026. 3.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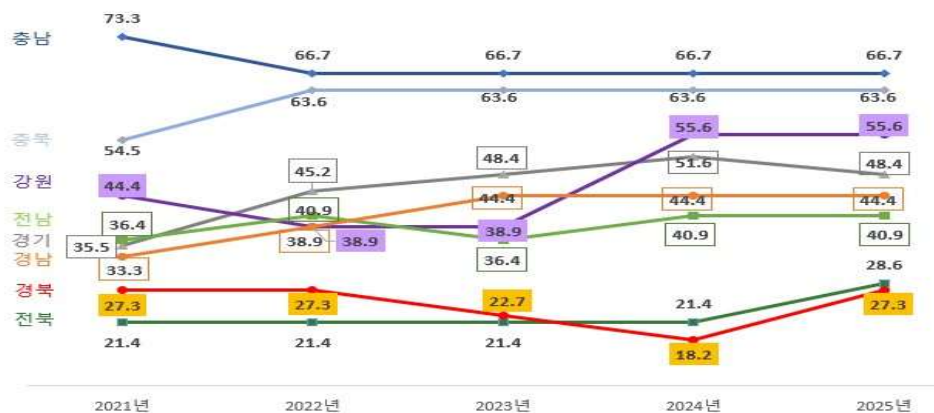
□ 여성친화도시 양적 확대와 함께 질을 고려한 접근 필요

- 특히, 최근 5년간 연도별 전국 여성친화도시 조성률을 보면, 매년 여성친화도시가 꾸준히 증가한데 반해 경북은 2023년과 2024년에 오히려 감소했다가 2025년에 서야 2021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 타 광역지자체를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률이 가장 높은 충남(66.7%)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률이 2021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 2023년과 2024년 경북의 여성친화도시 조성률이 감소한 것은 각각 경산시와 김천시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서 탈락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친화도시의 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속성과 내실화라를 질을 고려한 정책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함

단위 : %



[그림 I -3] 전국, 경북 연도별 여성친화도시 조성률(2021 ~ 2025)



[그림 I -4] 광역도 여성친화도시 조성률(2021 ~ 2025)

- 지속성과 질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지역의 환경과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특성에 맞는 과제발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특히 2022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 개편 이후 여성친화도시 심사 기준이 향후 추진해야 할 계획이 아닌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변화하였고, 매년 사업을 지속성 있게 추진했는지 여부를 재지정 심사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과제 발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음
- 기본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상북도에서도 2025년부터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확대 및 내실화를 지원해오고 있음. 이 사업과 연계해 도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확대하고 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표 I-3> 2026년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내용

구분		내 용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시군조성사업 (1.2억)		- 집행방법 : 시군보조 ※ 사업내용에 따른 차등 지원(700만원 ~ 2,500만원) - 추진방법 : 시군별 특성화된 공모사업 추진
경북형 여성친화 도시 조성사업 (4천만원)	여성친화도시 준비도시 발굴·지원	- 집행방법 : 위탁 운영(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추진내용 : 여성친화도시 조성 희망시군 선정 후 교육 및 필수지표 관리, 대표과제 발굴 지원, 시군조성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정신청 준비 등 지원
	여성친화도시 지정 도시 컨설팅	- 집행방법 : 위탁 운영(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추진내용 : 대표과제 발굴 지원, 시군조성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 도농 지역 간 여성친화도시 조성률에서도 격차 있어,
장기적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 도농 지역 간의 격차도 고려가 필요함.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행정 역량 부족, 정책 인식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시·군·구별로 여성친화도시 조성률을 살펴보면 시 62.7%, 구 52.2%인데 반해 군 지역 조성률은 25.6%로 매우 낮음
- 광역시·도의 경우도 군 지역에 비해 시나 구 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조성률이 대부분 높은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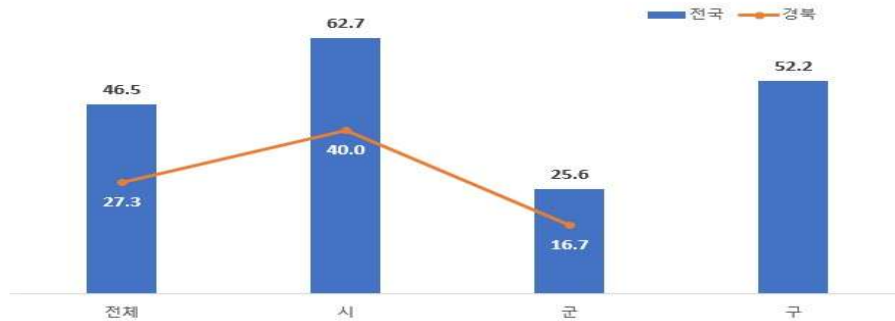
<표 I-4> 시도별 시·군·구 여성친화도시 조성률 비교(2026 현재)

단위 : 개, %

지역	전체	시·군·구	여성친화도시	조성률(%)	구·시/군 조성률(%)
계	226	75시, 82군, 69구	105	(46.5)	시(62.7), 군(25.6), 구(52.2)
서울	25	25구	14	(56.0)	구(56.0)
부산	16	1군, 15구	4	(25.0)	구(26.7) 군(0.0)
대구	9	2군, 7구	2	(22.2)	구(28.6) 군(0.0)
인천	10	2군, 8구	8	(80.0)	구(100.0) 군(0.0)
광주	5	5구	5	(100.0)	구(100.0)
대전	5	5구	3	(60.0)	구(60.0)
울산	5	1군, 4구	-	-	구(0.0) 군(0.0)
경기	31	28시, 3군	15	(48.4)	시(48.4) 군(0.0)
강원	18	7시, 11군	10	(55.6)	시(85.7) 군(36.4)
충북	11	3시, 8군	7	(63.6)	시(100.0) 군(50.0)
충남	15	8시, 7군	10	(66.7)	시(75.0) 군(57.1)
전북	14	6시, 8군	4	(28.6)	시(50.0) 군(12.5)
전남	22	5시, 17군	9	(40.9)	시(100.0) 군(23.6)
경북	22	10시, 12군	6	(27.3)	시(40.0) 군(16.7)
경남	18	8시, 10군	8	(44.4)	시(62.5) 군(20.0)

주 :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나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단위 : %



[그림 I-5] 전국 및 경북 시.군.구 여성친화도시 조성률(2025. 12. 현재)

단위 : %



[그림 I-6] 광역도 시.군별 여성친화도시 조성률(2026. 3. 현재)

- 이러한 상황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지역 간 여성정책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도 전체 차원의 성평등 환경 조성 및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고려가 필요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도내 여성친화도시 미조성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환경 및 추진여건, 정책 수요 등을 조사분석한 후, 이들 지역에서 적용가능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제시하는 것임
- 도내 여성친화도시 미조성 지역은 16개이나 이들 지역을 모두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 분석지역(3개)을 선정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을 개발·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결과는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여성친화도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여성친화도시 미조성 지역의 추진환경 및 여건 분석
 - 통계청 및 각 지역 통계자료, 행정자료 등을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중점 분석지역의 인구가족 특성 및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별 특성 분석함
 - 중점분석 지역 정책 관련 내부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 역량과 기반, 여건 및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함
-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인식과 요구 조사분석
 - 중점 분석지역을 선정하기에 앞서 미조성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중점 분석지역 선정에 활용함
 - 중점 분석지역의 여성가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정책 관련 부서 공무원, 기관/단체 활동가, 전문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또는 FGI 조사를 통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분석하고,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와 관련한 요구, 대표사업 발굴을 위한 의견 등을 조사·분석함
- 지역특성을 고려한 여성친화도시 추진 방향 및 사업 개발·제시
 - 조사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도내 미조성 중점 분석 대상 지역의 여성친

화도시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대표적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 과제 등을 도출·제안함

- 아울러 경북의 미조성 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여성친화도시 관련 선행연구,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 사업, 사례 등 수집·분석
- 여성가족 정책 및 사업을 포함해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인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안전 증진, 여성친화(돌봄) 환경 조성, 지역여성 활동역량 강화와 관련한 정책, 사업 등 검토하여 각 지역의 전반적인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 분석

○ 통계분석

- 지역여건 분석을 위해 통계청, 정부, 자치단체 등에서 생산한 통계 수집·분석

○ 설문조사

- 도내 미조성 14개 시군의 여성가족정책 담당자(팀장, 주무관)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과 의지, 계획 등을 파악하고, 중점 분석지역 선정에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5명의 응답을 분석하였음

○ 면접조사 및 집단면접조사(FGI)

- 중점 분석 대상 지역별(3개 지역)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추진 의지, 관심도를 비롯해 각 지역별 여성친화도시 추진전략 및 대표과제 발굴을 위한 의견 및 정책요구를 조사·분석하기 위해 주무부서 및 유관부서 공무원, 유관기관 종사자, 단체 활동가, 관련정책 전문가, 시군민 등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및 FGI 조사(34명)를 분석하였음

○ 전문가 자문

- 연구 착수단계에서 연구방법에 대한 자문을 추진하고, 정책제안 단계에서 여성친화도시 미조성 지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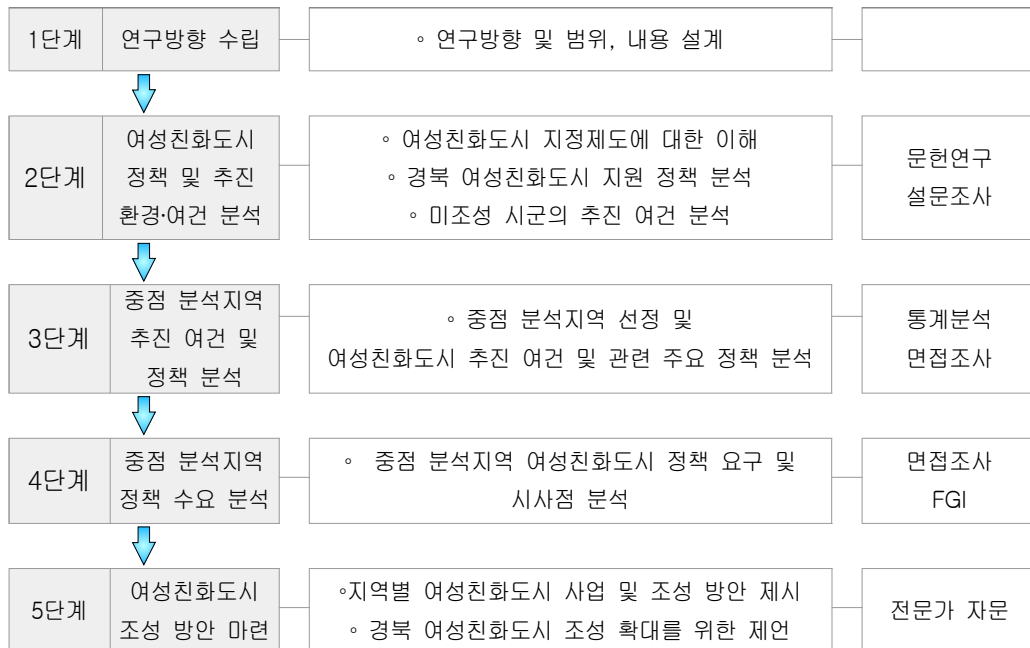
을 반영한 대표과제 발굴 등 자문

3) 연구 대상

- 본 연구는 경북 도내 여성친화도시 미조성 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 여성친화도시 미조성 지역은 시 지역 6개(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 지역 10개(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임
- 이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3개 정도 선정하여 이들 지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음

3. 연구의 수행체계

- 이상의 연구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 수행체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그림 1-7] 연구의 수행체계

II. 경북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미조성 지역의 관심

1.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에 대한 이해
2. 경북의 여성친화도시 지원 정책 분석
3. 미조성 시군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

II. 경북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미조성 지역의 관심

1. 여성친화도시 지정 제도에 대한 이해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를 근거로 추진되는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이 지역사회 전반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여성친화도시 비전을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목표로 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②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③ 지역사회 안전 증진, ④ 가족친화 환경 조성, 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설정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22)
- 각 목표별 주요 추진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II-1> 성평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및 주요 내용

5대 목표	주요 내용
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모든 부서에서 성 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양성평등정책 추진 부서 설치 - 양성평등정책부서를 중심으로 한 부서 간 협력 - 지역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활성화와 성인지 통계 구축 - 공무원 성인지역량 향상 교육
②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 - 근거리 일자리 발굴과 여성의 사회적 경제 활동 촉진 ▪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무성 확대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 여성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 목표 공시 및 지속 모니터링

③ 지역사회 안전 증진	▪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통행 특성 반영한 이동 여건 조성 -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에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위험에 대한 여성의 대처능력 향상 - 여성의 지역 안전 유지 역량 강화
④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 양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 여성의 경력 유지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가족친화기업 확대 ▪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 - 돌봄 서비스 내실화와 돌봄 인프라 접근성 향상 - 마을 단위 돌봄 확대
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지역사회 여성 활동 확산 - 다양한 분야의 마을 여성 모임 활성화와 커뮤니티 활동 공간 확대 - 지역사회 여성 활동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 모든 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 단체 및 자원 활동 등 지역사회 여성 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 지역사회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 참여 확대

자료 : 성평등가족부(2026), 「202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계획」, p. 24.

- 여성친화도시 지정제도는 2022년 신청부터 심사·평가체계가 개편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족해야 할 주요 평가기준도 보다 구체화됨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시·군은 성평등가족부가 제시하는 지정기준과 추진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수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지역 여건을 반영한 대표사업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개편된 지정 심사·평가체계는 총 500점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필수지표가 150점, 선택지표가 350점을 차지함
 - 필수지표 중 전담인력 여부,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 여성일자리 협의체 운영, 안전 부서 TF 운영, 지역사회 여성 대표성은 민관 거버넌스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이고, 이 외에 성인지 통계 구축 여부는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의 관련이 있는 지표임. 돌봄노동자(돌봄활동가) 지원사업은 필수지표로 분

류되어 있으나 지역특화사업에 포함해 추진해 볼 수 있는 지표임(김명화, 2025)

<표 II-2> 여성친화도시 신규·재지정 평가 지표(개편 제도)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방식 및 배점	
		정량	정성
1.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130)	(필수) 1-1. 전담인력 여부	40	-
	(필수) 1-2.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	10	-
	(필수) 1-3. 성인지 통계 구축 여부	10	-
	(선택) 1-4a. 부서평가 공통지표 운영	택 1	50
	(선택) 1-4b. 여성 대표성 성과목표제 운영		
	(선택) 1-4c. 지자체 자체 설정 지표		
2. 경제·사회 참여 확대(90)	(필수) 2-1. 여성 일자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여부	20	-
	(선택) 2-2a. 여성친화기업 협약/인증 사업	택 1	50
	(선택) 2-2b. 지역 산업 연계, 성별 직종분리 해소 목적 의 여성 취업 또는 창업 지원 사업		
	(선택) 2-2c. 지자체 자체 설정 지표		
3. 지역사회 안전 증진(90)	(필수) 3-1. 안전 부서 TF 구성 및 운영	20	-
	(선택) 3-2a. 지역사회 안전 모니터링 및 개선	택 1	50
	(선택) 3-2b. 안심구역 조성과 여성 안전 네트워크 운영		
	(선택) 3-2c. 지자체 자체 설정 지표		
4. 가족친화(돌 봄)환경 조성(90)	(필수) 4-1. 돌봄노동자(돌봄활동가) 지원 사업	20	-
	(선택) 4-2a. 여성친화(양성평등, 돌봄)마을 사업	택 1	50
	(선택) 4-2b. 공공기관(장소) 또는 커뮤니티 시설 기반 일시 돌봄 운영		
	(선택) 4-2c. 지자체 자체 설정 지표		
5.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100)	(필수) 5-1. 지역사회 여성 대표성	30	-
	(선택) 5-2a. 시민참여단의 행정 및 마을 내 의사결정 참여지원	택 1	50
	(선택) 5-2b. 여성활동 거점공간 운영		
	(선택) 5-2c. 지자체 자체 설정 지표		

자료 : 성평등가족부(2026), 「202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계획」, 3쪽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의 5대 목표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각 영역에 2개의 선택지표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1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영역별 선택지표를 살펴보면,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영역에는 부서평가 공통지표 운영과 여성 대표성 성과목표제 운영이 포함됨,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영역에는 여성친화기업 협약·인증사업과 지역산업 연계 및 성별 직종분리 해소를 목적으로 한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이 제시되어 있음. 지역사회 안전 증진 영역은 지역사회 안전 모니터링 및 개선, 안심구역 조성 및 여성안전 네트워크 운영, 가족친화 환경 조성 영역은 여성친화·양성평등·돌봄마을 사업, 공공기관 또는 커뮤니티시설을 활용한 일시돌봄 운영으로 구성됨.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영역에서는 시민참여단의 행정 및 마을 내 의사결정 참여 지원과 여성활동 거점공간 운영을 선택지표로 제시하고 있음(김명화, 2025)
- 선택지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하며, 추진기반의 역량,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사업의 추진수준에 따라 착수단계 20점, 확산단계 21~50점, 지속가능단계 51~7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25)

<표 II-3> 여성친화도시 신규·재지정 시 선택지표 배점

착수단계	확산단계	지속가능단계
20점	21점~50점	51점~70점
•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된 소규모 사업 추진 • 규모로 판단 어려운 사업은 평균 수준 목표	• 소규모 사업을 확대하여 전체 시·군·구지역 포괄 및 대상 확대 추진 • 상당한 수준 목표	• 시·군·구지역 포괄, 대상 확대해 추진하면서, 양질의 성과 지속 도출 • 높은 수준 목표

자료 : 성평등가족부(2025), 「202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계획」, 3쪽

2. 경북의 여성친화도시 지원 정책 분석

- 경상북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광역 차원의 지원체계인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기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으나, 경상북도는 재정지원과 전문기관 지원을 결합한 방식으로 시·군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크게 전문기관을 활용한 정책지원과 시·군 대상 재정지원의 두 축으로 운영됨. 전문기관 지원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을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준비지역에 대한 교육, 지정 및 기지정 시·군의 대표사업·지역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 공무원 및 시·군민 참여단 간 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체 운영 등으로 구성됨.
- 재정지원은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는 대표사업 및 특화사업을 직접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방식으로 운영됨. 사업비는 도비와 시·군비를 5:5로 매칭하여 편성하며,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정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 부서 간 협업의 어려움,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발굴의 한계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특히 전문인력과 정책기획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인 사업설계와 지속적인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컨설팅·네트워크·사례확산 기능을 지원하는 체계의 필요성이 높음. 이러한 점에서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단순한 사업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재정지원과 정책역량 지원을 결합한 광역-기초 간 지원체계라는 데 의미가 있음. 특히 중앙정부 지정에 따른 별도의 직접 재정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광역 차원의 사업비 지원과 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교육은 시·군의 여성친화도시 준비와 사업 실행을 뒷받침하는 정책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사업은 다음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위탁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준비 시·군 대상 교육, 지정 준비지역 및 지정지역의 대표사

업·지역특화사업 발굴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공무원 및 시·군민 참여단 협의체 운영 등을 지원함

- 둘째, 시·군 공모형 특화사업 지원으로 각 시·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대표사업 또는 여성친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비와 시·군비를 5:5로 매칭하여 사업비를 지원함
- 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I-4> 경상북도의 2025, 2026년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내용

구분		내 용
2025년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시군조성사업 (2억)		집행방법 : 시군보조(지정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 ※ 기초성 시군 3,000만원(4개), 예비 시군 2,000만원(4개) 추진방법 : 시군별 특성화된 공모사업 추진
경북형 여성친화 도시 조성사업 (6천만원)	예비여성친화 도시 발굴·지원	집행방법 : 위탁 운영(경북여성정책개발원) 추진내용 : 여성친화도시 조성 희망시군 선정 후 교육 및 필수지표 관리, 대표과제 발굴 지원, 시군조성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정신청 준비 등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군 특화사업 컨설팅	집행방법 : 위탁 운영(경북여성정책개발원) 추진내용 : 대표과제 발굴 지원, 시군조성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
2026년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시군조성사업 (1억 2천)		집행방법 : 시군보조(사업 내용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 최소 700만원 ~ 최대 ,2,500만원 추진방법 : 시군별 특성화된 공모사업 추진
경북형 여성친화 도시 조성사업 (4천만원)	여성친화도시 지정준비 도시 발굴·지원	집행방법 : 위탁 운영(경북여성정책개발원) 추진내용 : 여성친화도시 조성 희망시군 선정 후 교육 및 필수지표 관리, 대표과제 발굴 지원, 시군조성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정신청 준비 등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군 특화사업 컨설팅	집행방법 : 위탁 운영(경북여성정책개발원) 추진내용 : 대표과제 발굴 지원, 시군조성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

주 : 당초 예산 기준임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 이 사업을 통해 2026년에 추진할 지역별 사업의 내용은 <표 II-5>와 같음

<표 II-5> 2026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시군조성사업 주요 내용

지역	사업명	사업 내용
지 정 시 군	포항	「보다, 걷다, 잇다」 회복과 연대로 만드는 시민참여 인식전환 프로젝트
	구미	구미시 마을안전활동가 ‘안전하구미’ 양성사업
	경주	여성친화도시 생활밀착형 통합 지원사업
	경산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칠곡	럭키칠곡 드림키움 프로젝트
	의성	양성평등 꽃피움 행복의성
희 망 시 군	김천	김천시여성커뮤니티 지원사업
	울진	다가치 평등, 울진

주 : 당초 계획 기준임

○ 현재 경북에는 6개의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되어 있으며, 재지정에 탈락한 김천시의
경우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음. 이들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사업은 <표 I
-6>과 같음

<표 II-6> 2026년 경북 지역별 대표사업 현황

목표	포항	경주	김천	구미	경산	칠곡	의성
1. 성평등	건강하고 성평등한	부서평가 공통지표	부서평가 공통지표	부서평가 공통지표	여성친화 도시 조성	여성친화 도시 조성	공무원의 성인지력

추진 기반 구축	조직·사회 기반 구축	및 성과관리 (BSC) 운영	운영	(BSC) 운영	실적 부서평가 운영	실적 부서평가 운영	향상을 위한 사업
2. 경제· 사회 참여	일·가정 양립 여성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속 및 확대 추진	창업실전 점프업 (lump-up)	여성경제 지속가능 사업모델 개발	여성친화 기업 인증 사업 /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운영	경산형 여성친화 기업 지원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을 위한」 “우먼파워(WomanPo wer) 키움!” 사업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
3. 지역 사회 안전 증진	여(여성·아 동인권)시(시민안전) 路(길·지역) 프로젝트	민·관 협업 안전 Zone 만들기 (여성·아동 안심귀마리 조성, 안심반상화, 자기방어 역량강화)	안전 포커스 김천 프로젝트	구미시 3不 3安+ 프로젝트 추진	경산여성 안심 더하기 사업 (안심반상화 , 자기방어 역량강화 등)	「여성친 화 안심마을 조성」 “지켜드림 (Dream)” 사업	안전마을 조성 사업 (마을 순찰대 및 안전 캠페인)
4. 가족 친화 (돌봄) 환경 조성	포항형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축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함께 키우는 가족, 같이 돌보는 경주, 성평등 돌봄 실현	미정	구미형 온종일 돌봄 사업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	「여성친 화 공동 돌봄마을 조성」 “온 마을이 너를 키움!” 사업	커뮤니티 시설 기반 일시 돌봄 운영
5. 지역 사회 활동 역량 강화	누버라! 시민참여 단 만들자! 행복포항	여성행복 드림센터 운영(여성 친화도시 거점기관)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간 및 프로 그램 지원	지역 여성 성장지원 프로젝트	경산시 여성 뮤지컬 “논스톱 양성평등” 공연	「여성친화 공동 돌봄마을 조성」 “온 마을이 너를 키움!” 사업	양성평등 꽃피움 마을 조성 사업

자료 :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26), 경북 여성친화도시 공무원 협의체 1차 간담회

3. 미조성 시군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

1) 응답자 현황 및 특성

○ 여성친화도시 미조성 14개 시군의 여성가족정책 담당자(팀장, 주무관)를 대상으로

지난 5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및 인지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과 추진 의지, 여성정책 추진 여건 및 현황을 조사하였음

<표 II-7> 응답자 현황 및 특성

No.	성	연령	지역(시/군)	여성가족정책 담당기간(년)	직책
1	여성	45	영천시	1	팀장
2	여성	36	영천시	0.7	주무관
3	여성	54	안동시	1.5	팀장
4	여성	32	안동시	0.7	주무관
5	여성	45	영주시	1.9	팀장
6	여성	55	상주시	0.4	팀장
7	여성	33	상주시	0.9	주무관
8	여성	53	문경시	0.5	팀장
9	여성	40	문경시	0.9	주무관
10	남성	30	청송군	0.5	주무관
11	여성	54	영양군	3	팀장
12	여성	46	영양군	3	주무관
13	여성	50	영덕군	3.5	팀장
14	여성	27	영덕군	1.2	주무관
15	여성	46	청도군	1.5	팀장
16	여성	40	청도군	0.5	주무관
17	여성	33	고령군	1.5	주무관
18	남성	44	고령군	4	팀장
19	여성	57	성주군	1.3	팀장
20	여성	43	성주군	1.3	주무관
21	여성	46	예천군	1.5	팀장
22	여성	42	예천군	1	주무관
23	여성	46	봉화군	1	팀장
24	여성	44	봉화군	2.6	주무관
25	여성	40	울릉군	0.1	주무관

- 응답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하고 응답자 25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음
- 응답자의 현황 및 특성을 보면, 여성이 23명, 남성이 2명이었으며, 연령대는 44세 이하가 52.0%, 45세 이상이 48.0%를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43.2세로 나타남
- 지역은 총 14개 시군으로 응답자 기준으로 볼 때, 시지역이 36.0%, 군지역이 64.0%를 차지하였고, 여성가족정책 담당기간은 평균 1.4년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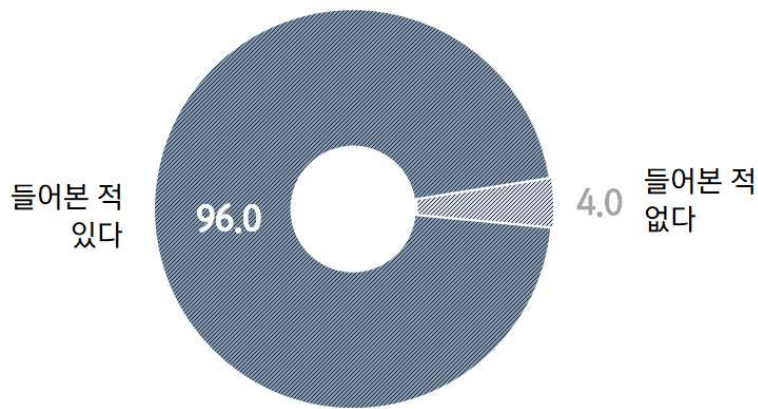
2)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및 인지도

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지도 및 인지 경로

-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층이 96.0%를 차지하였으며, 계층에 따라서도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성가족정책 담당기간이 1년 미만인 층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조사대상자 전체 기준(n=25)
단위 : %



[그림 II-1] 여성친화도시 인지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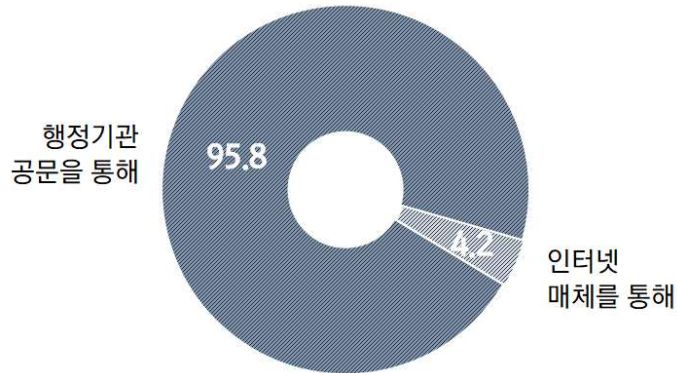
<표 II-8> 여성친화도시 인지도

구분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본 적 있다
합계 (25)			4.0	96.0
지역	시지역 (9)			100.0
	군지역 (16)		6.3	93.8
여성가족정책 담당기간	1년 미만 (9)		11.1	88.9
	1년 이상 (16)			100.0
직책	팀장 (12)			100.0
	주무관 (13)		7.7	92.3

-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행정기관 공문을 통해 들었다가 95.8%로 주된 인지경로로 나타난 가운데, 계층에 따라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여성친화도시 인지경로

조사대상자(n=25) 중 응답자에 한해(n=24)
단위 : %



[그림 II-2] 여성친화도시 인지경로

<표 II-9> 여성친화도시 인지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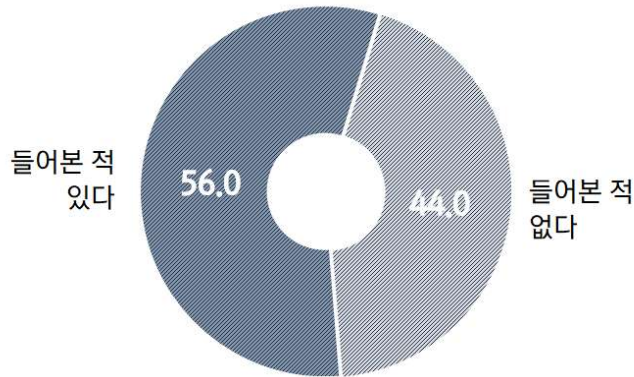
구분			행정기관 공문을 통해	인터넷 매체를 통해
합계 (24)			95.8	4.2
지역	시지역 (9)		100.0	
	군지역 (15)		93.3	6.7
여성가족정책 담당기간	1년 미만 (8)		87.5	12.5
	1년 이상 (16)		100.0	
직책	팀장 (12)		100.0	
	주무관 (12)		91.7	8.3

나.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인지 경로, 참여의사

-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56.0%로 나타나 여성친화도시 인지도에 비해 낮았으며, 계층에 따라서도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한편,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전체가 행정기관 공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함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인지도

조사대상자 전체 기준(n=25)
단위 : %



[그림 II-3]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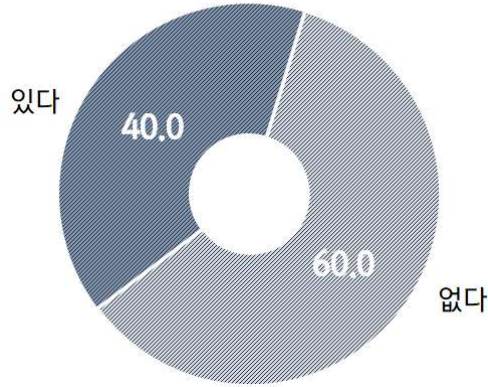
<표 II-10>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인지도

구분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본 적 있다
합계			(25) 44.0	56.0
지역	시지역	(9)	44.4	55.6
	군지역	(16)	43.8	56.3
여성가족정책 담당기간	1년 미만	(9)	44.4	55.6
	1년 이상	(16)	43.8	56.3
직책	팀장	(12)	41.7	58.3
	주무관	(13)	46.2	53.8

-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를 알아본 결과, 참여 의사가 있다는 층이 40.0%를 차지하였으며, 군지역에 비해 시지역에서 참여 의향률이 다소 더 높았으며, 여성가족정책 담당기간이 1년 미만인 층에서 참여 의향률이 다소 더 높음
- 한편,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인지층에서 비인지층에 비해 참여 의향률이 높게 나타나 본 사업에 대한 홍보가 참여율 제고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참여 의사

조사대상자 전체 기준(n=25)
단위 : %



[그림 II-4]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참여 의사

<표 II-11>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참여 의사

구분			없다	있다
합계			(25) 60.0	40.0
지역	시지역	(9)	55.6	44.4
	군지역	(16)	62.5	37.5
직책	팀장	(12)	66.7	33.3
	주무관	(13)	53.8	46.2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들어본 적 없다	(11)	72.7	27.3
조성사업 인지도	들어본 적 있다	(14)	50.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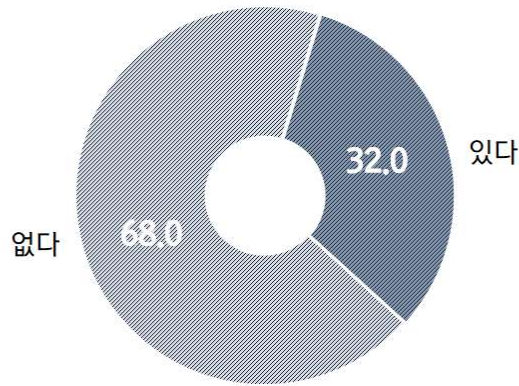
- 참여 예정 시기에 대해 알아본 결과, 1년 후(2027년), 2년 후(2028년), 3년 후(2029년)가 각 22.2%였으며, 정해진 바가 없다 등 기타가 33.3%를 차지함

다. 여성친화도시 연구 분석 대상 지역 참여 의사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준비하는 지역에 대해 여성친화도시 추진 여건 및 환경 분석, 정책 수요조사(면접 또는 집단초점면접조사(FGI)), 대표과제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연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 분석 대상 지역으로 참여할 의사에 대해 알아본 결과, 참여 의사가 있다는 층이 32.0%로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참여 의향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여성친화도시 연구 분석 대상 지역 참여 의사

조사대상자 전체 기준(n=25)
단위 : %



[그림 Ⅱ-5] 여성친화도시 연구 분석 대상 지역 참여 의사

- 계층별로는 군지역에 비해 시지역에서 참여 의향률이 다소 더 높으며, 대체로 연령대가 낮은 층에서 참여 의향률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남

<표 Ⅱ-12> 여성친화도시 연구 분석 대상 지역 참여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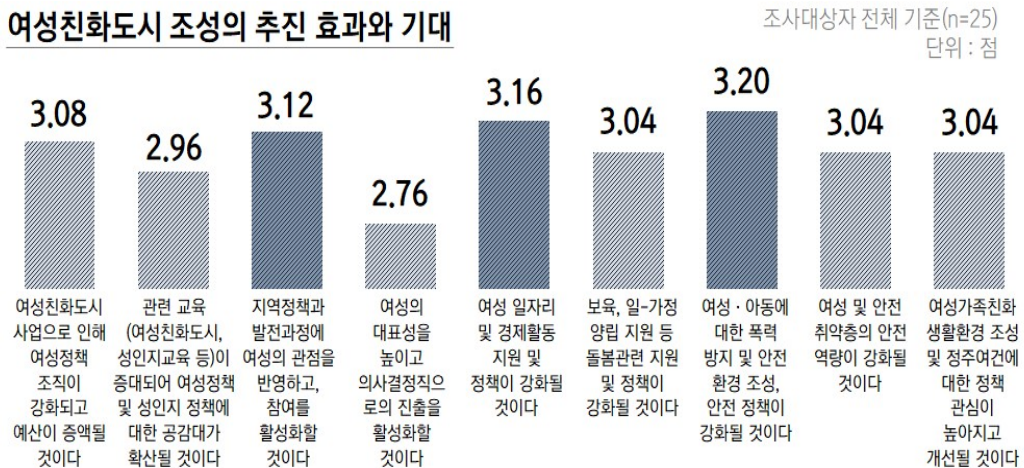
구분		있다	없다
합계 (25)		32.0	68.0
지역	시지역 (9)	44.4	55.6
	군지역 (16)	25.0	75.0
직책	팀장 (12)	25.0	75.0
	주무관 (13)	38.5	61.5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효과와 기대

-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효과와 기대에 대해 총 9개의 항목으로 알아본 결과,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 및 안전 환경 조성, 안전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평균 3.20), 여성 일자리 및 경제활동 지원 및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평균 3.16),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고, 참여를 활성화할 것이다(평균 3.12)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던 반면, 관련 교육(여성친화도시, 성인지교육 등)이 증대되어 여성정책 및 성인지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것이다(평균

2.96),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직으로의 진출을 활성화할 것이다(평균 2.76)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효과와 기대



[그림 II-6]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효과와 기대

- 계층별로는 44세 이하, 군지역, 여성가족정책 담당기간이 1년 이상인 층에서 여성 일자리 및 경제활동 지원 및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에 대해 다소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임
- 한편, 여성가족정책 담당기간이 1년 이상인 층에서 1년 미만인 층에 비해 대체로 다소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임
-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에서 여성가족친화 생활환경 조성 및 정주여건에 대한 정책 관심이 높아지고 개선될 것이다를 제외한 다른 효과와 기대에 대해 다소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임
-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인지층에서 비인지층에 비해 보육,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돌봄관련 지원 및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방지 및 안전 환경 조성, 안전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에 대해 다소 더 긍정적인

<표 II-13>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효과와 기대

구분		여성친화도시사업으로인해여성정책조직이강화되고예산이증액될것이다	관련교육(여성친화도시, 성인지교육 등)이증대되어여성정책 및 성인지정책에 대한공감대가확산될것이다	지역정책과발전과정에여성들의참여를확충할것이다	여성대표들이고의사결정으로추진할것이다	여성일자리및경제활동지원정책이강화될것이다	보육,가정지원등돌봄관련지원정책이강화될것이다	여성·아동에대한폭력방지및안전환경조성, 안전정책이강화될것이다	여성및안전취약층의안전역량이강화될것이다	여성가족친화환경성및주여건에대한정책관심이높아지고개선될것이다
합계		(25) 3.08	2.96	3.12	2.76	3.16	3.04	3.20	3.04	3.04
지역	시지역	(9) 2.67	2.67	2.89	2.67	2.89	2.56	2.78	3.00	3.11
	군지역	(16) 3.31	3.13	3.25	2.81	3.31	3.31	3.44	3.06	3.00
직책	팀장	(12) 3.00	2.92	3.17	2.67	3.08	3.08	3.25	3.00	3.08
	주무관	(13) 3.15	3.00	3.08	2.85	3.23	3.00	3.15	3.08	3.00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인지도	들어본 적 없다	(11) 3.18	3.18	3.27	2.91	3.27	2.73	3.09	3.00	3.27
	들어본 적 있다	(14) 3.00	2.79	3.00	2.64	3.07	3.29	3.29	3.07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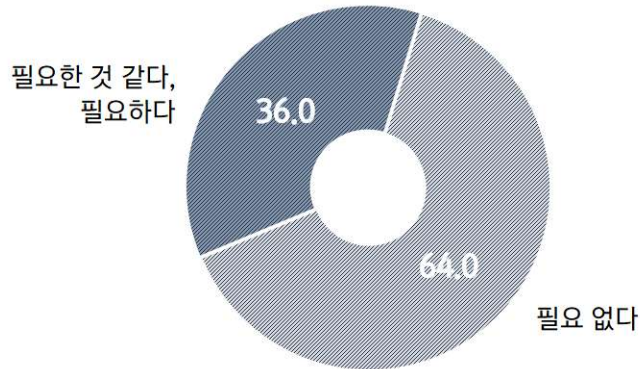
3)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과 추진 의지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필요성과 이유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필요한 것 같다, 필요하다는 층이 36.0%를 차지한 가운데, 연령대가 낮은 층과 더불어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인지도에서 필요하다는 층이 다소 더 많음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필요성

조사대상자 전체 기준(n=25)
단위 : %



[그림 II-7]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필요성

<표 II-14>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필요성

구분			필요 없다	필요한 것 같다, 필요하다
합계			(25) 64.0	36.0
지역	시지역	(9)	66.7	33.3
	군지역	(16)	62.5	37.5
직책	팀장	(12)	75.0	25.0
	주무관	(13)	53.8	46.2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인지도	들어본 적 없다	(11)	72.7	27.3
	들어본 적 있다	(14)	57.1	42.9

- 필요하다는 층의 이유를 확인한 결과, 인구증가 효과나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성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필요 없다는 층의 이유로는 가족친화인증제도로 충분하다는 의견과, 양성평등이 더 맞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여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역차별로 여겨진다는 의견과 기존 여성친화도시 지역의 차별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Ⅱ-15>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필요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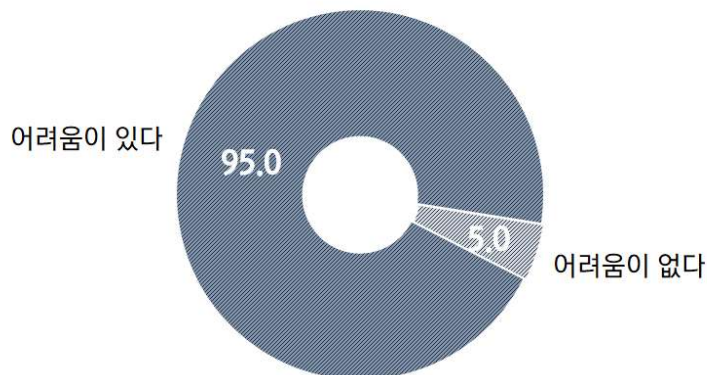
필요한 것 같다, 필요하다	• 살기좋은 도시, 인구증가효과 기대된다 / 인구감소 심각, 여성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 필요 • 여성권의 신장 및 지자체 이미지 개선 • 필요하니까 / 추후 필요 / 막연하지만 필요한 것 같다
필요 없다	•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확산하는 분위기 / 문경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성별 중심 접근보다 정주환경 중심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사업명도 '여성친화'보다는 '가족친화'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봄 / 가족친화인증으로 충분 •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정착에 따른 불필요성 / 양성평등으로 가는 방향이라 생각됨 / 성평등친화도시 구현이 필요 / 여성친화 어감이 양성평등에 저해되는 느낌 강함 • 특정 성별 중심의 접근보다는 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이 공정하다고 생각함 • 여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현시대랑 맞지 않아서 /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이 역차별로 느껴짐 •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뚜렷한 변화를 아직은 체감할 수 없음 / 친화도시, 인증시군 등등 명칭만 있고 크게 차이점이 없다 • 대상자의 관심도 및 참여율 저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아니라도 다른 사업들로 충분하다 생각함 • 성별갈등 유발, 이미 보편적 정책으로 해결 가능 • 우리 지역 환경이 사업추진 여건에 좋지 않음

나. 여성친화도시 추진 상 어려움

-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거나 추진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층이 95.0%를 차지한 가운데, 계층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여성친화도시 추진 상 어려움

조사대상자(n=25) 중 응답자에 한해(n=20)
단위 : %



[그림 Ⅱ-8] 여성친화도시 추진 상 어려움

- 어려움이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예산이나 인력과 관련된 의견이 다소 많았으며, 참여율 저조와 관련 부서간 협조, 공감대 형성, 여성친화도시 용어에 대한 반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있었음

<표 II-16> 여성친화도시 추진 상 어려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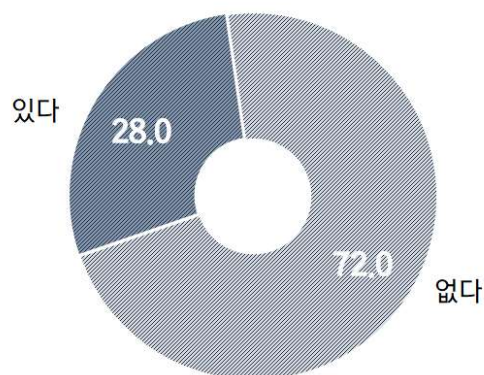
어려움이 있다	• 예산 확보, 인식개선교육 등 / 예산 부족 / 예산, 전담인력,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민 인식 / 전담인력 확보 어려움 및 협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전담인력 부재, 여성친화보다는 명칭이 양성평등친화도시가 시대적으로 요구됨 / 전담인력 없음 • 참여율 저조 / 주민참여 활성화 한계, 예산확보 문제 / 여성 인구의 고령화 및 주민 참여 미흡 • 정책 추진시 담당부서 외엔 관심을 가지지 않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음 / 추진시 모든 관계부서의 협조가 필요함 • 공감대 형성 / 관심도가 떨어짐 • 여성친화도시 명칭에 대한 반감(성평등친화도시) /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반발(역차별, 성인지 감수성 낮음 등) • 인구, 인프라 부족으로 사업의 효과 미비 • 절차적 어려움
---------	---

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의향 및 계획, 추진 여건과 필요한 도움

-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층이 28.0%를 차지한 가운데, 계층별로는 군지역에 비해 시지역에서 의향률이 다소 더 높으며,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인지층에서 의향률이 다소 더 높음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의향

조사대상자 전체 기준(n=25)
단위 : %



[그림 II-9]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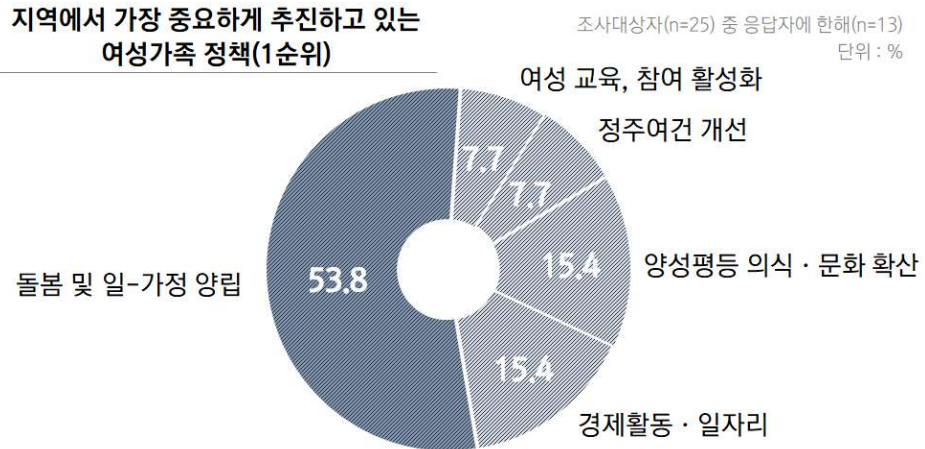
<표 II-17>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의향

구분			있다	없다
합계			(25)	(25)
			28.0	72.0
지역	시지역	(9)	33.3	66.7
	군지역	(16)	25.0	75.0
직책	팀장	(12)	25.0	75.0
	주무관	(13)	30.8	69.2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들어본 적 없다	(11)	18.2	81.8
조성사업 인지도	들어본 적 있다	(14)	35.7	64.3

- 한편, 여성친화도시 추진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가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는 응답이었으며,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여건에 대해서도 추진여건이 좋지 않다는 응답이었음. 추진여건이 좋지 않은 이유로는 준비 부족, 예산, 인력 부족, 여성담당자의 잦은 교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추진 의향이 있는 층에 대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를 확인한 결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음
-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도움으로는 지역 전반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서간 행정적 지원, 타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의견이 있었음

라.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 정책

-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 정책을 1, 2순위로 알아본 결과 1순위로는 돌봄 및 일-가정 양립이 5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활동·일자리,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각 15.4%), 여성 교육, 참여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각 7.7%) 순으로 나타남
- 한편, 2순위로는 여성 교육 참여 활성화가 3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23.1%), 돌봄 및 일-가정 양립, 정주여건 개선(각 15.4%), 경제활동·일자리, 안전·폭력 예방/대응(각 7.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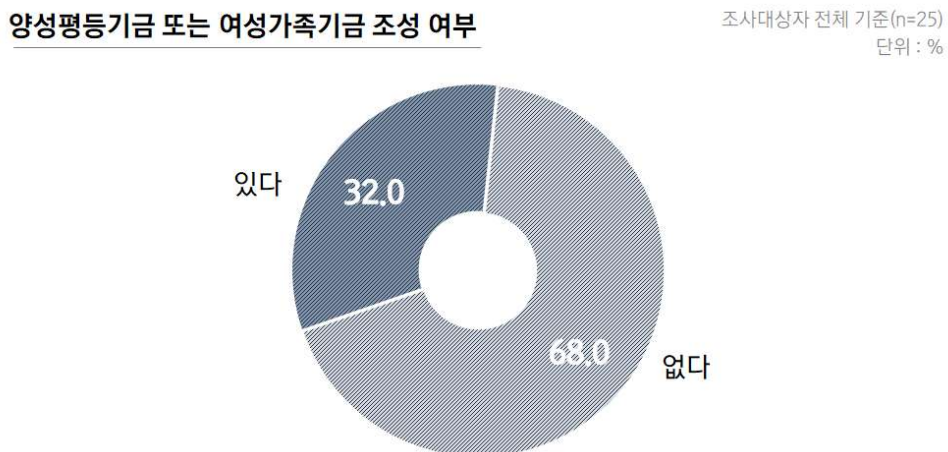


[그림 Ⅱ-10]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 정책(1순위)

4) 여성정책 추진 여건 및 현황

가. 양성평등기금 조성 여부 및 기금활용 공모사업 여부

- 양성평등기금 또는 여성가족기금(전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층이 32.0%를 차지하였으며, 군지역에 비해 시지역에서 조성하고 있는 비율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남



[그림 Ⅱ-11] 양성평등기금 또는 여성가족기금 조성 여부

<표 Ⅱ-18> 양성평등기금 또는 여성가족기금 조성 여부

구분		있다	없다
합계 (25)		32.0	68.0
지역	시지역 (9)	44.4	55.6
	군지역 (16)	25.0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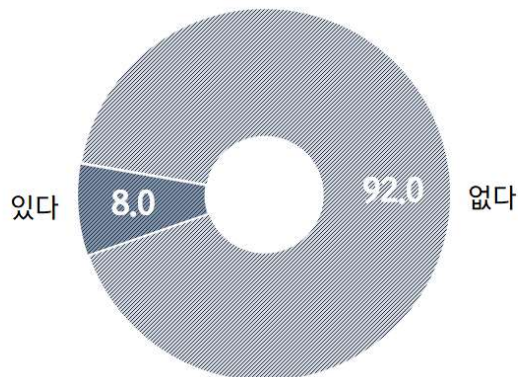
- 기금 조성액은 10억원, 2억7천3백만원, 2억5천4백만원, 1억원이 있었으며,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층 중 기금 활용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층이 50.0%를 차지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 행복아카데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이 있었음

나. 지역정책 정기적 모니터링, 제안하는 여성그룹 및 단체 여부

- 지번 내에 여성정책 지역시설과 환경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행정부서에 전달하는 여성그룹 및 단체가 있다는 층이 8.0%를 차지하였으며, 시지역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정책 정기적 모니터링, 제안하는
여성그룹 및 단체 여부

조사대상자 전체 기준(n=25)
단위 : %



[그림 Ⅱ-12] 지역정책 정기적 모니터링, 제안하는 여성그룹 및 단체 여부

Ⅲ. 중점 분석지역 여성친화도시 조성 환경 및 정책 분석

1. 중점 분석지역 선정 기준
2. 중점 분석지역 특성 분석
3. 중점 분석지역 정책 분석

Ⅲ. 중점 분석지역 여성친화도시 조성 환경 및 정책 분석

1. 중점 분석지역 선정 기준

- 선정 기준은 △ 올해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준비 지역으로 신청한 지역 우선 선정 △ 미조성 시군 공무원 조사 결과 조성의지가 있는 곳 △ 경북도청 소재지 및 인근 지역 △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거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역 △ 군 지역 2개 이상 포함을 기준으로 삼았음
- 그 결과 올해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 김천시와 울진군을 우선 선발했고, 도청 인근 지역이자 올해 하반기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높은 예천군을 선정하였음. 각 지역별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음

<표 Ⅲ-1> 경북 도내 여성친화도시 미조성 지역의 조성 여건과 의지

지 역	지정 관련	여성친화도시 조성 의향* (설문조사 결과)	도비 공모사업** 참여 여부	조례 유무***	비고
김천시	2019년 신규 지정, 2024~ 2025년 재지정 탈락, 현재 신 규 지정 준비 중	○ (신규 지정 준비 중)	○	2019.4.11. 제정 2025.11.13. 개정	
안동시	2019년 신규 지정 신청, 탈락 이후 미추진	× (도청 소재지)		2019.5.10. 제정	△
영주시	2011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2016년 재지정 탈락 후 미추진	×		2015.9.24. 제정	△
영천시		△			
상주시		○			
문경시		△			
청송군		△		2024.12.31. 제정	
영양군		×			

영덕군		×			
청도군		△			
고령군		×			
성주군		×			
울진군	2026년 신규 지정 준비 중	○ (2026년 상반기 추진 중)	○	-	○
예천군		○ (2026년 하반기 추진 예정)		-	○
봉화군		△			
울릉군		×			

* 담당 팀장과 주무관 모두 의향 있으면 ○, 둘 중 한 명만 의향 있으면 △, 둘 모두 의향 없으면 ×로 표시

**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중 시군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중점 분석지역 특성 분석

1) 중점 분석지역별 여성친화도시 추진 환경 및 여건 분석

- 분석 중점대상인 김천시, 예천군, 울진군의 각종 통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 환경과 여건을 5대 목표별로 분석하였음

가. 김천시

(1) 지역의 일반적 특징

- 김천시는 경북 중서부에 위치한 도농복합도시로, 혁신도시와 산업단지를 동시에 보유한 산업·공공기관 복합형 도시라는 특징이 있음. 김천혁신도시 조성 이후 공공기관 이전과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으며, 김천시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지역인재 양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한편 최근에는 김천1 일반산업단지 3단계 분양 완료에 따른 추가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어모면·개령면·대광동 일원에 약 36만 평 규모의 4단계 산업단

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유치대상 업종은 음식료품, 금속가공,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부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조업이 지역산업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음

- 동시에 혁신도시 성장과 달리 기존 원도심에서는 노후 주거환경과 상권 쇠퇴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김천역 주변 환경정비와 도시재생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음. 즉, 혁신도시·산업단지의 성장지역과 고령화·주거노후화가 진행된 기존 생활권이 공존하는 공간적 이중구조가 김천시의 주요 특성으로 볼 수 있음

(2) 인구 및 가구

- 2024년 기준 인구는 136,187명이며 여성은 67,485명으로 49.6%를 차지함.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6.6%이고 여성인구 중에서는 30.7%가 65세 이상으로 나타나, 산업·혁신도시의 특성과 함께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동시에 필요한 지역임
- 따라서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단순한 여성복지사업 확대보다는 ① 산업·혁신도시를 활용한 여성의 양질의 경제활동 확대, ② 30~40대 여성의 경력유지와 돌봄지원, ③ 고령여성 1인가구의 생활안전·돌봄 강화, ④ 원도심 및 생활권 환경 개선에 여성친화 관점 반영, ⑤ 공공기관·기업·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김천시의 인구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산업·혁신도시라는 도시적 특성과 고령화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임. 전체 고령인구 비율은 26.6%로 경북 평균보다 높으며, 여성인구만 보면 30.7%가 65세 이상임.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청년·육아가구 중심으로만 설계할 경우 김천시 여성인구 구조의 중요한 부분을 포괄하기 어려움
- 가구구조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남. 김천시 전체 1인가구는 23,211가구로 전체 가구의 37.7%이며, 여성가구 중 56.2%가 1인가구임. 특히 여성 1인가구 11,992가구 가운데 65세 이상은 6,654가구로 55.5%를 차지함. 반면 남성 1인가구는 40~64세 비율이 42.7%로 가장 높아 성별에 따라 1인가구의 연령구조가 상이함

- 이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에서 1인가구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접근하기보다 고령여성 1인가구와 중장년 남성 1인가구를 구분한 생활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특히 고령여성의 경우 건강·식사·주거·이동·안전·사회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방문형 돌봄과 생활안전 점검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김천시 합계출산율은 1.027명으로 경북 평균 0.897명보다 높으며, 30~34세 출산율이 101.8%, 35~39세가 51.9%로 나타남. 따라서 고령여성 정책과 동시에 30대 맞벌이·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틈새·주말·야간 돌봄 지원도 중요한 과제임
- 다문화가구도 1,051가구, 가구원 3,148명으로 일정 규모가 형성되어 있음. 다문화정책 역시 초기 결혼이민여성의 적응 지원을 넘어 자녀 성장, 여성의 취·창업, 지역사회 참여 등 장기정착 단계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김천시의 인구·가구 여건을 고려할 때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청년·양육가구 지원’과 ‘고령여성 생활지원’의 이중 전략이 필요함. 혁신도시에서는 맞벌이 및 양육가구의 돌봄과 일·생활 균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읍면 및 원도심에서는 고령여성 1인가구의 의료·돌봄·주거·안전을 결합한 생활밀착형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 적절함

<표 Ⅲ-2> 김천시 인구 및 가구 관련 주요 지표

구분	경상북도	김천시	1주요 특징
총인구(2024)	2,578,999명	136,187명	도내 중규모 도농복합도시
여성인구 비율	49.0%	49.6%	경북 평균보다 0.6%p 높음
65세 이상 인구 비율	24.9%	26.6%	경북 평균보다 1.7%p 높음
여성 중 65세 이상 비율	-	30.7%	여성인구 약 10명 중 3명이 고령층
합계출산율(2024)	0.897명	1.027명	경북 평균보다 높은 수준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율	38.9%	37.7%	전체 61,623가구 중 23,211가구
여성가구 중 1인가구 비율	57.5%	56.2%	여성가구의 절반 이상이 1인가구
전체 1인가구 중 여성 비율	49.7%	51.7%	여성 1인가구 11,992가구
여성 1인가구 중 65세 이상	-	55.5%	여성 1인가구의 과반이 고령층
다문화가구(2024)	20,181가구	1,051가구	다문화가구원 3,148명
외국인 인구(2024)	101,152명	4,742명	여성 외국인 1,735명(36.6%)

자료:통계청, 「인구총조사」, 2024

(3) 경제

- 김천시 경제구조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도소매·보건복지·건설·숙박음식 등 다양한 산업이 결합된 복합형 구조로 볼 수 있음. 제조업 종사자는 14,842명으로 전체의 21.1%를 차지하여 가장 큰 고용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김천시가 현재 4단계 산업 단지를 추가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제조업과 관련 산업의 지역 고용 영향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여성의 고용구조는 지역 산업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 제조업 종사자 중 여성은 약 24.4%에 그치는 반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여성 비율이 81%를 상회하고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 역시 여성집중도가 높음. 즉, 지역경제의 핵심 고용기반은 제조업인 반면 여성은 돌봄·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하는 성별 산업분리가 나타남
- 이러한 산업분리는 여성의 고용률과 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여성 고용률은 57.8%로 남성 73.8%보다 16.0%p 낮으며, 특히 30~49세에서는 여성 68.6%, 남성 91.6%로 격차가 23.0%p까지 확대됨. 자료만으로 이 격차의 원인을 출산·돌봄에 직접 귀속할 수는 없으나, 주요 경력형성기인 30~40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성이 크게 낮아지는 현상은 분명한 정책과제로 볼 수 있음
- 고용의 질에서도 격차가 존재함. 여성 상용근로자 비율은 45.8%로 남성보다 5.5%p 낮으며, 여성 월평균 임금은 222만1천원으로 남성 임金的 61.6% 수준임. 임금격차는 산업·직종·근로시간·근속·고용형태 등의 영향을 함께 받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동일노동 임금차별로 해석할 수는 없으나, 여성의 취업 확대와 더불어 고용의 질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지표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김천시에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할 때 경제 영역에서는 기존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사업을 넘어 ‘지역의 좋은 일자리로 여성의 이동’을 핵심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김천1 일반산업단지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여성친화도시 정책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제조업의 품질관리·안전·환경·생산관리·회계·구매·디지털 업무와 공공기관의 행정·사업관리·전문서비스 등의

여성 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산업단지 신규 기업 유치 단계에서 여성채용, 일·생활 균형, 여성근로환경 등을 기업지원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30~49세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특히 큰 점을 고려하여 경력유지→직업훈련→재취업→고용유지를 하나의 연속된 정책체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 Ⅲ-3> 김천시 경제 관련 주요 지표

구분	김천시	주요 특징
전체 사업체 종사자(2023)	70,402명	남성 41,705명, 여성 28,697명
여성 종사자 비율	40.8%	전체 종사자의 약 4할
제조업 종사자	14,842명(21.1%)	지역 최대 고용산업
제조업 여성 종사자	3,622명	제조업 종사자의 약 24.4%
보건·사회복지 종사자	7,475명	여성 6,076명
보건·사회복지 여성비율	81.3%	대표적인 여성집중 산업
도소매업 여성 종사자	3,840명	여성취업 주요 분야
숙박·음식업 여성 종사자	3,759명	여성비율 약 64.5%
전체 고용률(2025)	65.8%	취업자 약 8만 명
남성 고용률	73.8%	
여성 고용률	57.8%	남녀 격차 -16.0%p
30~49세 남성 고용률	91.6%	
30~49세 여성 고용률	68.6%	남녀 격차 -23.0%p
상용근로자 비율(남성)	51.3%	남녀 격차 -5.5%p
상용근로자 비율(여성)	45.8%	남성 대비 61.6%
남성 월평균 임금(2024)	3,603천원	도내 시군 중 중간 수준
여성 월평균 임금(2024)	2,221천원	
재정자립도(2025)	11.22%	

자료:경상북도, 「경상북도사업체조사」, 202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4~2025;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2025.

(4) 안전

- 김천시의 안전 여건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교통사고 5등급, 화재와 생활안전 4등급이라는 점임. 이는 여성친화도시 안전정책을 성폭력·범죄예방에 한정하기보다 보행·이동·주거·화재 등 일상생활 전반의 안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여성인구 중 고령층 비율이 높고 여성 1인가구의 55.5%가 65세 이상이라는 인구구조를 함께 고려할 경우, 고령여성에게 교통·화재·주거안전은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서로 결합된 생활안전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김천시는 여성친화도시 추진 과정에서 이미 안전총괄, 원도심재생, 교통, 경찰, 시민참여단 등이 참여하는 여성안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참여단 의견이 CCTV·보안등·안심거리 등 실제 시설개선으로 연결된 경험도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이 협업구조를 활용해 범죄예방 중심의 모니터링을 ‘생활권 통합안전 모니터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주요 모니터링 대상을 원도심과 고령여성 밀집지역의 골목길,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노후 주택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음. 특히 시민참여단이 시설설치 이후의 단순 확인뿐 아니라 사업계획 단계→현장점검→개선 제안→완료 후 재점검까지 참여하는 방식이 효과적임
- 김천시의 안전정책은 향후 ‘여성안심귀가’ 중심의 범죄안전에서 ‘고령여성 생활권 통합안전’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표 Ⅲ-4> 김천시 안전 관련 주요 지표

구분	경상북도	김천시	주요 특징
교통사고	4등급	5등급	가장 취약한 분야
화재	3등급	4등급	상대적 취약
범죄	1등급	3등급	중간 수준
생활안전	3등급	4등급	상대적 취약
자살	3등급	3등급	중간 수준
감염병	5등급	4등급	취약요인 존재

※ 지역안전지수는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5등급에 가까울수록 취약함.
 자료: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 2021.

(5) 출산·보육·돌봄

- 김천시의 합계출산율은 1.027명으로 경북 평균을 상회하며, 30~34세 출산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김천에서 청·장년 양육가구의 돌봄 수요가 여성친화도시의 주요 정책대상임을 보여줌
- 반면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은 16.1개로 경북 평균 17.9개보다 낮음. 다만 이 지표만으로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실제 돌봄 접근성은 시설의 위치, 정원과 이용률, 국공립 여부, 운영시간, 주말·야간 이용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김천의 경우 이러한 단순 시설수보다 ‘돌봄시간과 근로시간의 불일치’가 더 중요한 정책문제일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제조업·서비스업 근로가구의 경우 교대근무, 야근, 주말근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실제로 김천시는 혁신도시 K-보듬, 365 꺼지지 않는 돌봄어린이집, 119 아이행복 돌봄터 등 긴급·틈새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시간연장형 돌봄의 정책기반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으로 향후에는 새로운 돌봄시설을 일률적으로 확충하기보다 기존 서비스를 근로형태와 생활권에 따라 연결·재구조화하는 접근이 필요함
- 혁신도시에서는 공공기관·맞벌이가구 중심의 출퇴근시간 연계 돌봄, 산업단지 근로가구에는 교대·주말근무 대응 돌봄, 읍면 및 고령지역에서는 손자녀 돌봄가구와 이동취약가구 등을 고려한 생활권형 돌봄체계를 구분하여 설계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여성친화도시 관점에서는 돌봄 성과를 단순 이용아동 수가 아니라 여성의 경력유지·복직·근로 지속과 얼마나 연결되었는지까지 측정·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 Ⅲ-5> 김천시 출산·보육·돌봄 관련 주요 지표

구분	경상북도	김천시	주요 특징
합계출산율(2024)	0.897명	1.027명	경북 평균 상회
30~34세 출산율	85.9%	101.8%	주된 출산연령
35~39세 출산율	44.3%	51.9%	30대 후반 출산도 높은 편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17.9개	16.1개	경북 평균보다 1.8개 적음
보육시설 수	1,234개	65개	보육대상 인구 4,027명
30~49세 여성 고용률	-	68.6%	남성 91.6%와 23.0%p 격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4;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24;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5.

(6) 여성 참여

- 김천시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41.5%로 40% 수준을 넘고 있으며,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도 2023년 16.2%에서 2024년 20.5%, 2025년 24.3%로 상승하고

있음. 이는 여성 대표성의 양적 측면에서는 일정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대표성은 전체 여성위원 비율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특히 산업·경제·도시계획·교통·안전 등 지역의 핵심 의사결정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충분한지 별도의 점검이 필요함
- 김천시는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정책교육 및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참여단의 제안이 시설개선으로 연결된 경험도 있음.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중요한 강점임. 다만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안전점검이나 행사 참여에 집중될 경우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중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움
-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으로 향후 시민참여단의 활동영역을 일자리·산업단지·혁신도시·도시재생·교통·돌봄 등 주요 시정사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민참여단 및 여성리더 교육 수료자를 각종 위원회 후보군으로 연계하는 ‘여성인재 발굴→역량강화→모니터링 경험→위원회 진출’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산업·기업지원·도시·교통 분야의 여성전문가를 별도로 발굴하여 여성위원 비율의 양적 수준뿐 아니라 참여분야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표 Ⅲ-6> 김천시 여성참여 관련 지표

구분		경상북도	김천시	주요 특징
위원회 수(2023)		1,629개*	86개	
위촉직 위원 수		14,868명*	801명	
위촉직 여성위원		5,642명*	302명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1.1%*	41.5%	40% 수준 충족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	2023	-	16.2%	
	2024	-	20.5%	상승
	2025	-	24.3%	지속 상승
시민참여단		-	운영중	정책·안전 모니터링 참여

* ‘전체’는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전체를 의미함.

자료: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위원회 여성 참여현황」, 2023; 김천시, 「2025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7)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환경 및 여건 종합

- 종합적으로 김천시는 혁신도시와 제조업 중심 산업기반이라는 성장요인과 고령화 원도심 생활환경 문제라는 과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임.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정책도 하나의 대상집단에 집중하기보다 생애주기와 생활권을 고려한 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됨
-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연결고리는 ‘산업·일자리·돌봄·안전·참여’의 통합임. 산업단지와 혁신도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돌봄과 안전한 이동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연결되기 어려움. 동시에 고령화된 기존 생활권에서는 고령여성 1인가구의 돌봄·이동·주거안전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김천시의 여성친화도시 추진환경을 종합하면 ‘산업·혁신도시형 여성 경제활동 지원’과 ‘고령여성 중심 생활밀착형 안전·돌봄’을 양축으로 하고, 시민참여단과 여성인재의 정책참여를 이를 연결하는 기반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표 Ⅲ-7>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환경 및 여건 종합

구분	주요 특징	주요 특징
인구·가구	· 여성 고령인구 비중 높음 · 여성 1인가구 중 55.5%가 65세 이상 · 합계출산율은 경북 평균 상회 · 다문화가구 1천 가구 이상	· 고령여성 생활돌봄과 맞벌이·양육가구 지원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 필요 · 다문화여성의 장기정착·경제활동·사회참여 지원 필요
경제	·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 여성은 보건·복지·서비스업 집중 · 30~49세 고용률 성별격차 -23.0%p · 여성임금은 남성의 61.6% 수준	· 제조·공공·전문분야 여성 진입 확대 · 새일센터-산업단지-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강화 · 취업자 수보다 고용유지·임금·상용직 등 질적성과 중시
안전	· 교통사고 5등급 · 화재·생활안전 4등급 · 고령여성 1인가구 다수	· 범죄예방 중심에서 교통·화재·주거를 포함한 생활권 통합안전으로 확대 · 시민참여단의 생활권 안전 모니터링 강화
돌봄	· 출산율 상대적으로 높음	· 시설 추가보다 시간·생활권별 돌봄체계 연

	·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은 경북 평균보다 낮음 · 긴급·주말·24시간 돌봄사업 기반 보유	· 계 중요 · 산업단지·혁신도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반영한 돌봄 강화 · 돌봄성과와 여성 고용유지 연계
여성 참여	· 위촉직 여성위원 41.5% ·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 · 시민참여단 활동 경험 보유	· 산업·도시·교통 등 핵심 정책분야 여성대표성 강화 · 시민참여단을 정책 모니터링·제안 주체로 고도화 · 여성인재풀과 위원회 진출 연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 경상북도, 「경상북도사업체조사」; 행정안전부, 「전국 지역 안전지수 공표」 및 지방재정365;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여성가족부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김천시, 「2025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나. 예천군

(1) 지역의 일반적 특징

- 예천군은 경북 북부의 전통적인 농촌지역이면서 경북도청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도청신도시의 도시적 생활권과 기존 읍·면 농촌생활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형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음. 실제 예천군 교통체계에서도 경북도청과 호명읍 신도시, 예천읍 및 각 읍·면을 연결하는 생활권 구조가 확인되며, 예천농공단지와 제2농공단지 등 산업기반도 형성되어 있음
- 2026년 주요군정에서도 도청신도시 청년센터 건립, 청년창업 지원, 신도시 도로·교통망 확충, 도시재생과 함께 농업인 AI 활용교육,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 등 농업의 디지털·산업화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천군은 전통적인 농업·농촌지역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행정·전문서비스·청년·교육 기능이 확대되는 ‘신도시-농촌 이중생활권’의 성격이 뚜렷한 지역으로 볼 수 있음
- 2024년 인구는 53,609명이며 여성은 27,195명으로 50.7%를 차지하여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다소 많음. 또한 노령화지수는 282.0으로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인 반면, 도청신도시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맞벌이·양육가구가 집중되어 있어 지

역 내부의 인구구조 역시 이질적인 특성을 보임

- 따라서 예천군 여성친화도시는 전 군에 동일한 사업을 적용하기보다 도청신도시의 청년·직장·양육여성과 기존 읍·면의 고령여성·여성농업인을 구분하여 생활권별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적인 추진방향으로 판단됨

(2) 인구 및 가구

- 예천군의 인구·가구 구조에서 가장 주목할 특징은 높은 고령화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 수준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임. 이러한 현상은 도청신도시와 기존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지역구조와 연관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군 전체의 노령화지수는 282.0이고 중위연령은 54.4세로 고령화 수준이 높지만, 동시에 2024년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경북 평균 0.90명을 크게 상회함
- 따라서 예천군을 단순히 고령농촌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도청신도시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맞벌이·양육가구가 존재하고, 기존 읍·면에는 고령인구가 집중되는 공간적 이중구조를 정책설계의 기본 전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1인가구의 연령·성별 구조에서 농촌지역의 고령여성 문제가 명확하게 나타남. 예천군 1인가구 9,349가구 가운데 여성은 5,181가부로 55.4%이며, 여성 1인가구 중 65세 이상은 3,468가부로 약 66.9%에 해당함. 이는 김천시보다도 고령여성 1인가구의 집중도가 높은 수준임
- 따라서 읍·면지역에서는 고령여성의 의료·돌봄·식사·이동·주거·사회적 고립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필요함. 특히 농촌의 공간적 분산성을 고려할 경우 시설 중심 서비스보다 찾아가는 서비스와 이동지원, 마을단위 돌봄체계가 중요함
- 반면 도청신도시는 높은 출산율과 젊은 가구의 유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영유아·초등 돌봄, 일·가정 양립, 생활SOC 및 안전한 보행환경 등에 대한 정책수요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됨
-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으로 인구·가구 영역에서는 ‘도청신도시 젊은 가족정책’과 ‘농촌 고령여성 생활지원정책’을 이원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신도시에서는 맞벌이가구의 돌봄·경력유지·정주여건을, 농촌에서는 고령여성

1인가구의 이동·의료·돌봄·생활안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생활권별 여성친화도시 전략이 요구됨

<표 Ⅲ-8> 예천군 인구 및 가구 관련 주요 지표

구분	경상북도	예천군	주요 특징
총인구(2024)	2,578,999명	53,609명	농촌지역과 도청신도시가 공존하는 중소 군지역
여성인구 비율	49.0%	50.7%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다소 많
노령화 지수	259.2	282.0	경북 평균보다 높은 고령화 수준
중위 연령	50.7세	54.4세	경북 평균보다 3.7세 높음
합계출산율(2024)	0.897명	1.22명	경북 평균을 크게 상회
전체 가구	1,174,597가구	25,009가구	1인가구 9,349가구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38.9%	37.4%	경북 평균과 유사한 수준
여성가구 중 1인가구 비율	57.5%	59.3%	여성가구의 약 6할이 1인가구
전체 1인가구 중 여성 비율	49.7%	55.4%	여성 5,181가구, 남성 4,168가구
여성 1인가구 중 65세 이상	-	66.9%	여성 1인가구의 약 3분의 2가 고령층
다문화가구(2024)	20,181가구	521가구	다문화가구에 1,763명
외국인 인구(2024)	101,152명	954명	여성 506명, 여성비율 53.0%

자료:통계청, 「인구총조사」 및 「인구동향조사」, 2024

(3) 경제

- 예천군은 전체 사업체 종사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47.4%로 김천시나 울진군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임.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기반 자체가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임
- 그러나 산업별로 보면 여성의 고용은 보건·사회복지, 교육, 숙박·음식 등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특히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여성비율은 80%를 상회하는 반면 건설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여성참여가 매우 낮음. 또한 도청신도시가 위치한다는 특성상 공공행정·교육·전문서비스 분야와 여성 일자리를 연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함
- 여성 고용률은 59.5%로 남성 77.0%보다 17.5%p 낮으며, 특히 30~49세에서는

- 남성 95.3%, 여성 73.9%로 21.4%p의 큰 격차가 나타남
- 이는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것과 별개의 문제임. 즉, 일하고 있는 여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핵심 경제활동 연령대의 노동시장 참여에는 여전히 큰 성별격차가 존재함
 - 또한 남성과 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율 격차 자체는 약 2.2%p로 크지 않지만 남성 39.6%, 여성 37.4%로 양쪽 모두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예천군이 '성별 격차가 작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이 양호한 지역'이라기보다는 남녀 모두 고용안정성이 높지 않은 '낮은 수준의 성별 유사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 임금에서도 여성은 남성의 약 64.7% 수준으로 격차가 존재함. 다만 이 차이는 직종, 근로시간, 고용형태, 근속기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성차별의 직접적인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함
 - 경제 영역에서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은 단순 여성취업 확대보다 도청신도시라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공·행정·교육·전문서비스 분야의 여성 경력개발을 핵심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도청 및 관계기관, 경북도립대학교, 청년센터 등을 활용하여 청년여성과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공공행정, 사업관리, 회계, 디지털 업무, 사회서비스 전문직 등의 직무경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에서는 여성농업인이 단순 농업노동 참여자에 머무르지 않고 경영주·공동경영주·농식품창업·온라인 유통 및 마케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 따라서 예천군 여성 일자리정책은 '도청신도시 공공·전문직 여성경력'과 '농촌 여성농업인 경제역량 강화'의 이중 전략이 적절함

<표 Ⅲ-9> 예천군 경제 관련 주요 지표

구분	예천군	주요 특징
전체 사업체 종사자(2023)	17,824명	남성 9,384명, 여성 8,440명
여성 종사자 비율	47.4%	김천·울진보다 높은 수준
제조업 종사자	1,090명	여성 383명
제조업 여성 비율	35.1%	제조업 여성참여 일정 수준 존재

전기·가스 등 종사자	1,116명	여성 383명
보건·사회복지업 여성 비율	83.1%	지역 주요 여성고용 분야
교육서비스업 여성 비율	65.5%	지역 주요 여성고용 분야
전체 고용률(2025)	67.9%	취업자 약 3만1천 명
남성 고용률	737.0%	
여성 고용률	59.5%	남녀 격차 -17.5%p
30~49세 남성 고용률	95.3%	
30~49세 여성 고용률	73.9%	남녀 격차 -21.4%p
상용근로자 비율(남성)	39.6%	
상용근로자 비율(여성)	37.4%	성별격차는 작으나 남녀 모두 낮은 수준
남성 월평균 임금(2024)	3,730천원	도내 시군 중 중간 수준
여성 월평균 임금(2024)	2,413천원	남성 대비 64.7%
재정자립도(2025)	9.53%	자체 재정여력 상대적 제약

자료:경상북도, 「경상북도사업체조사」, 202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4~2025;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2025

(4) 안전

- 예천군은 범죄와 생활안전이 각각 2등급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안전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임. 반면 교통사고는 4등급으로 가장 취약한 분야로 확인됨
- 따라서 예천군 여성친화도시의 안전정책은 범죄예방시설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 보다 이동과 보행을 중심으로 한 생활안전정책에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예천군은 도청신도시와 농촌지역의 안전문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큼. 신도시는 아파트·상업시설·공원·학교·돌봄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어 여성과 아동의 야간보행, 교차로, 주차장, 통학·통원동선 등이 중요함. 반면 기존 읍·면지역은 대중교통 공급, 버스정류장 접근, 장거리 보행, 고령자의 도로횡단 등이 보다 중요한 안전문제가 될 수 있음
- 공식 버스체계에서도 예천읍, 호명읍·경북도청과 다수 읍·면 지역을 연결하는 광범위한 노선구조가 확인되는 만큼, 이동권은 농촌지역 여성의 의료·돌봄·사회참여를 결정하는 핵심 조건으로 볼 필요가 있음
- 안전분야에서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예천군의 안전정책은 ‘신도시 보행안전’과 ‘농촌 고령여성 이동안전’을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도청신도시에서는 학교·돌봄시설·공원·상업시설·주차장 주변을 대상으로 여성·아동

- 의 실제 이동경로를 모니터링하고, 농촌에서는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보도 유무, 횡단환경, 야간조명, 의료기관 이동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군민참여단 역시 동일한 체크리스트를 전 지역에 적용하기보다 신도시형 안전모니터링과 농촌형 이동안전 모니터링을 별도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임

<표 III-10> 예천군 안전 관련 주요 지표

구분	경상북도	예천군	주요 특징
교통사고	4등급	4등급	주요 취약 분야
화재	3등급	3등급	경북과 동일
범죄	1등급	2등급	상대적으로 양호
생활안전	3등급	2등급	상대적으로 양호
자살	3등급	3등급	경북과 동일
감염병	5등급	3등급	상대적으로 양호

※ 지역안전지수는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5등급에 가까울수록 취약함.
 자료: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 2021.

(5) 출산·보육·돌봄

- 예천군의 돌봄여건은 높은 출산 수준과 도청신도시의 젊은 가족인구라는 지역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출생아 278명 가운데 30~34세 모의 출생아가 141명, 35~39세가 76명으로, 출산의 중심이 30대에 형성되어 있음
-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17.2개로 경북 평균 17.9개와 큰 차이는 없음. 따라서 통계만으로 예천군 전체의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보다 중요한 문제는 시설의 공간적 배치와 서비스 접근성임. 공동육아나눔터 및 다함께돌봄시설 등 주요 서비스가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기존 읍·면 지역에서는 동일한 시설 수 기준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이동거리와 서비스 접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천군의 돌봄정책에서는 ‘몇 개의 시설이 있는가’보다 어느 지역에 위치하며, 어떤 시간에 이용할 수 있고, 실제 돌봄수요가 있는 가구가 접근할 수 있는가를 함께 점검해야 함
- 또한 30~49세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21.4%p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돌봄서비스를 가족복지 차원뿐 아니라 여성의 경력유지를 지원하는 경제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돌봄 영역에서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으로 돌봄 영역에서도 지역별 차별화가 필요함. 도청신도시는 맞벌이·영유아·초등가구를 대상으로 한 출퇴근·야간·주말 돌봄을 강화하고, 기존 읍·면지역은 소규모 공동돌봄·찾아가는 돌봄·이동지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함
- 특히 시설을 추가 설치하기 전에 시설별 정원, 이용률, 대기인원, 이용시간, 거주지별 이용자 분포를 분석하여 ‘신도시-농촌 돌봄 접근성 지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Ⅲ-11> 예천군 출산·보육·돌봄 관련 주요 지표

구분	경상북도	예천군	주요 특징
합계출산율(2024)	0.897명	1.22명	경북보다 높은 수준
출생아 수(2024)	10,333명	278명	30대 출산 비중 높음
30~34세 출산아 수	4,886명(85.9%)	141명	전체 출생아의 절반 수준
35~39세 출산아 수	2,651명(44.3%)	76명	30대 후반 출산도 상당 비중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17.9개	17.2개	경북 평균과 유사
보육시설 수	1,234개	34개	대상 유아인구 1,982명
30~49세 여성 고용률	-	73.9	남성과 21.4%p 격차

자료: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및 「인구총조사」, 2024;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24;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5

(6) 여성 참여

- 예천군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41.5%로 40% 수준을 상회하여 여성대표성의 양적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을 확보하고 있음. 다만 여성위원 비율만으로 여성의 실질적 정책참여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려움. 산업·도시계획·농업·교통·안전 등 주요 정책분야별 여성 참여 정도와 여성위원의 지속적인 발언·의사결정 참여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예천군은 2026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추진과 함께 군민참여단을 구성할 예정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군민참여단의 구성과 역할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예천의 경우 여성집단 역시 매우 다양함. 도청신도시에는 청년여성·직장여성·양육 여성이 존재하는 반면 읍·면에는 여성농업인과 고령여성이 주요 집단을 형성함. 따라서 군민참여단이 신도시 거주자나 기존 여성단체에 편중될 경우 지역 전체의 여성수요를 충분히 대표하기 어려움
-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으로, 군민참여단 구성 시 도청신도시 여성, 여성농업인, 청년여성, 고령여성, 맞벌이 양육자 등 생활권과 계층을 고려한 균형 있는 참여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민자치, 평생교육, 마을공동체 등 기존 참여체계와 연계하여 여성친화도시 활동이 별도의 여성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함. 특히 평생교육과 주민자치 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을 발굴하여 ‘지역활동→정책교육→군민참여단→각종 위원회 참여’로 이어지는 여성인재 성장경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표 Ⅲ-12> 예천군 여성참여 관련 지표

구분	경상북도	예천군	주요 특징
위원회 수(2023)	1,629개*	45개	
위촉직 위원 수	14,868명*	365명	
위촉직 여성위원	5,642명*	140명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1.1%*	41.5%	40% 수준 충족
군민참여단	-	2026년 구성 추진	신규 지정 추진과 연계
주민자치위원회		읍·면 중심 운영	여성 정책참여 연계자원
찾아가는 평생교육		읍·면·마을 단위 운영	농촌여성 역량강화 자원

* ‘전체’는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전체를 의미함.

자료: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위원회 여성 참여현황」, 2023; 2023; 예천군, 「2026년 주요군정」

(6) 종합 분석

- 종합하면 예천군은 고령화된 전통 농촌지역과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도청신도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 여성친화도시 추진환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임. 따라서 군 전체를 하나의 동일한 여성정책 대상지역으로 보는 접근보다 생활권에 따라 정책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함
- 도청신도시에서는 공공·전문직 여성의 경력개발, 맞벌이 양육가구의 돌봄, 여성·아

동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청년여성의 정책참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읍·면 지역에서는 고령여성의 이동·의료·돌봄·생활안전과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예천군의 여성친화도시 추진환경은 ‘도청신도시의 젊은 생활권과 농촌의 고령 생활권을 연결하는 도청신도시-농촌상생형 여성친화도시’로 정리할 수 있으며, 향후 지역특화 사업 역시 이 두 생활권의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 연결하는 방향에서 발굴할 필요가 있음

<표 Ⅲ-13> 예천군 여성친화도시 추진 환경 및 여건 종합

구분	주요 특징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 시사점
인구·가구	· 여성인구 50.7% · 높은 고령화와 높은 출산수준 병존 · 여성 1인가구 중 고령층 집중 · 신도시와 농촌의 인구구조 상이	· 도청신도시 청년·양육가구와 농촌 고령여성 대상정책 이원화 필요 · 고령여성 1인가구 생활돌봄 강화 · 생활권별 여성정책 수요분석 필요
경제	· 여성 종사자 비율 47.4%로 상대적으로 높음 · 보건·복지·교육 등 여성집중 · 30~49세 고용률 성별격차 -21.4%p · 남녀 모두 상용근로자 비율 낮음	· 도청·공공·전문서비스 여성일자리 확대 · 여성농업인의 경영·창업역량 강화 · 취업인원보다 고용의 질과 경력유지 중심 정책 필요
안전	· 범죄·생활안전 상대적 양호 · 교통사고 4등급 · 신도시와 농촌의 이동환경 상이	· 신도시 여성·아동 보행안전 강화 · 농촌 고령여성 이동권·교통안전 강화 · 생활권별 군민참여단 모니터링 차별화
돌봄	· 합계출산율 상대적으로 높음 · 보육시설 수준은 경북 평균과 유사 · 도청신도시 양육가구 증가	· 시설수보다 위치·시간·접근성 중심 관리 · 신도시 맞벌이 돌봄과 농촌 소규모 돌봄 차별화 · 여성 경력유지와 돌봄성과 연계
여성 참여	· 위촉직 여성위원 41.5% ·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신규 구성 단계 · 주민자치·평생교육 기반 존재	· 신도시·농촌 여성의 균형 참여 확보 · 여성농업인·청년·고령여성 참여 확대 · 군민참여단을 위원회 및 정책결정 참여로 연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인구동향조사」·「지역별고용조사」; 경상북도, 「경상북도사업체조사」; 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여성가족부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예천군, 「2026년 주요군정」

다. 울진군

(1) 지역의 일반적 특징

- 울진군은 경북 동해안에 위치한 군 지역으로, 원전·에너지산업과 해양·관광자원이 지역경제와 정주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관광 복합형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음.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및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향후 신한울 3·4호기와 연계한 에너지산업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울진군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원전 열·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핵심 산업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 동시에 해안과 산림을 기반으로 관광·휴양 기능이 발달해 있으며, 주요 군정에서도 해양치유산업, 해양신산업,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울진읍·평해읍과 북면·죽변면·후포면 등 생활거점이 해안선을 따라 분산되어 있고, 농어촌버스 83개 노선과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고 있어 생활권의 공간적 분산성과 이동거리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라는 점도 중요한 특징임
- 2024년 기준 인구는 45,274명이며 여성은 21,439명으로 전체의 47.4%를 차지함. 노령화지수는 390.7로 경북 평균보다 높고, 중위연령도 55.4세로 고령화 수준이 상당한 편임
- 따라서 울진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은 ① 원전·에너지산업의 성장과 여성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전략, ② 관광·서비스업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고용의 질 개선, ③ 분산된 생활권에 대응한 돌봄·보건·이동서비스 접근성 강화, ④ 고령여성 1인가구 생활돌봄 강화, ⑤ 에너지·안전·지역개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인구 및 가구

- 울진군 인구·가구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높은 고령화와 높은 1인가구 비중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임. 노령화지수는 390.7로 경북 평균 259.2보다 높고 중위연령 역시 55.4세로 나타나,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1인가구는 전체 21,992가구 가운데 9,303가구로 42.3%를 차지하여 경북

평균 38.9%보다 높음. 여성가구만 보면 1인가구 비율이 63.6%에 이르며, 여성 1인가구의 약 65.2%가 65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고령여성 1인가구가 울진군 여성 정책의 핵심 대상집단으로 판단됨

- 울진군은 읍·면 및 해안생활권이 넓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고령여성의 문제를 단순한 독거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이동거리, 의료접근성, 식사, 주거안전, 응급상황 대응, 사회적 관계망을 포괄하는 생활권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시설형 복지서비스만으로는 분산지역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방문형·이동형 서비스가 중요함
- 한편 합계출산율은 1.12명으로 경북 평균보다 높아 고령층 지원과 함께 자녀양육 가구에 대한 돌봄정책도 중요함. 즉, 울진군 역시 고령여성 정책만으로 여성친화 도시를 구성하기는 어렵고 양육가구와 고령여성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인구는 2,291명으로 확인되나 여성은 310명으로 13.5%에 불과함. 이는 에너지·건설 등 남성 중심의 외국인 노동수요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통계만으로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려움
-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으로 고령여성 1인가구의 생활돌봄을 울진군 특화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의료·돌봄·주거·안전·이동을 각각 별도 사업으로 운영하기보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함
- 또한 해안·산간 및 읍·면별 서비스 접근성을 분석하여 ‘서비스가 존재하는가’보다 ‘실제로 접근 가능한가’를 정책성과의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Ⅲ-14> 울진군 인구 및 가구 관련 주요 지표

구분	경상북도	울진군	주요 특징
총인구(2024)	2,578,999명	45,274명	농촌지역과 도청신도시가 공존하는 중소 군지역
여성인구 비율	49.0%	47.4%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다소 많
노령화 지수	259.2	390.7	경북 평균보다 높은 고령화 수준
중위 연령	50.7세	55.4세	경북 평균보다 3.7세 높음
합계출산율(2024)	0.897명	1.12명	경북 평균을 크게 상회
전체 가구	1,174,597가구	21,992가구	1인가구 9,349가구
전체 가구 중 1인	38.9%	42.3%	경북 평균과 유사한 수준

가구			
여성가구 중 1인가구 비율	57.5%	63.6%	여성가구의 약 6할이 1인가구
전체 1인가구 중 여성 비율	49.7%	51.9%	여성 5,181가구, 남성 4,168가구
여성 1인가구 중 65세 이상	-	65.2%	여성 1인가구의 약 3분의 2가 고령층
다문화가구(2024)	20,181가구	329가구	다문화가구원 1,019명
외국인 인구(2024)	101,152명	2,291명	여성 310명, 여성비율 13.5%

자료:통계청, 「인구총조사」 및 「인구동향조사」, 2024

(3) 경제

- 울진군 경제구조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원전·에너지산업의 높은 지역적 중요성과 여성 고용구조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임.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전체 종사자의 약 11.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해당 산업에서 여성 종사자의 비율은 약 15.6% 수준임
- 반면 여성은 숙박·음식업, 보건·사회복지, 공공행정, 도소매, 교육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음. 이는 지역의 전략산업은 에너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여성의 일자리는 서비스 및 돌봄 영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산업별 성별분리를 보여주는 결과임
- 고용률에서도 격차가 큼. 울진군 여성 고용률은 55.5%로 남성 76.0%보다 20.5%p 낮으며, 특히 30~49세에서는 여성 67.7%, 남성 92.1%로 24.4%p의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남
- 이는 김천·예천과 마찬가지로 핵심 경력형성기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임. 다만 통계만으로 출산·돌봄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산업구조, 직종, 근로형태, 지역 내 일자리 접근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여성 상용근로자 비율은 38.0%로 남성보다 낮고, 월평균 임금은 204만4천원으로 남성의 약 57.3% 수준임. 따라서 울진군의 여성 일자리 정책은 단순 취업인원 확대보다 여성이 지역의 핵심산업과 안정적인 전문직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정책이 중요함

- 울진군은 공식적으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과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기업·연구시설·산업인력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경제분야에서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은 원전·에너지산업을 남성 중심 산업으로 고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 여성이 진입 가능한 연관직무를 구체적으로 발굴하는 전략이 필요함
- 특히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방사선 관련 지원업무, 보건, 데이터관리, 기술행정, 연구지원, 회계·구매, 사업관리 등 다양한 직무를 발굴하고 청년여성 및 경력보유여성 대상 직업훈련과 연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양치유·관광 분야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단순 숙박·음식서비스 일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전문 치유인력, 관광기획, 콘텐츠, 마케팅, 창업 등 고부가가치 직무로 확장하는 접근이 요구됨

<표 Ⅲ-15> 울진군 경제 관련 주요 지표

구분	울진군	주요 특징
전체 사업체 종사자(2023)	22,849명	남성 13,150명, 여성 9,699명
여성 종사자 비율	42.4%	전체 종사자의 약 4할
전기·가스 등 종사자	2,513명	전체 종사자의 약 11.0%
전기·가스 분야 여성 종사자	392명	여성비율 약 15.6%
제조업 종사자	1,128명	여성 515명
공공행정	지역 주요 여성고용 분야	전체 종사자의 약 14.0%
숙박·음식업	지역 주요 여성고용 분야	관광·서비스업 중심 여성고용
전체 고용률(2025)	66.2%	취업자 약 2만7천 명
남성 고용률	76.0%	
여성 고용률	55.5%	성별격차 -20.5%p
30~49세 남성 고용률	92.1%	
30~49세 여성 고용률	67.7%	성별격차 -24.4%p
상용근로자 비율(남성)	45.0%	
상용근로자 비율(여성)	38.0%	성별격차 -7.0%p
남성 월평균 임금(2024)	3,568천원	도내 시군 중 중간 수준
여성 월평균 임금(2024)	2,044천원	남성 대비 약 57.3%
재정자립도(2025)	12.25%	자체 재정여력은 중간 수준

자료:경상북도, 「경상북도사업체조사」, 202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4~2025;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2025

(4) 안전

- 울진군 지역안전지수에서는 화재, 범죄, 감염병 분야가 각각 4등급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확인됨. 반면 생활안전과 자살 분야는 2등급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함
- 울진군의 안전정책은 이러한 지표와 지역공간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고령여성 1인가구 비율이 높으므로 노후주택의 화재·전기·가스 안전과 응급상황 대응이 중요함. 둘째, 관광·숙박·음식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야간근무 여성의 귀가 및 주차·보행안전도 중요한 여성친화도시 과제로 볼 수 있음. 셋째, 생활권이 넓게 분산되어 있어 범죄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서비스기관까지의 이동시간과 접근성 자체가 안전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울진의 여성안전은 도시지역의 CCTV·안심귀갓길 중심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거리와 분산성을 고려한 안전체계가 필요함
- 또한 원전·에너지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지역주민의 재난·안전 정책 참여도 중요한 요소임. 이는 여성친화도시의 안전 영역과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영역을 연결할 수 있는 울진만의 특징임
-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으로 '야간근로 여성 이동안전'과 '고령여성 주거·생활안전'을 양대 축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관광·상업지역과 읍·면 소재지에서는 주차장, 버스정류장, 야간보행로 등을 모니터링하고, 농촌·분산지역에서는 고령여성 가구의 화재감지기, 전기안전, 응급연락체계, 방문점검 등을 강화하는 방식이 적절함
- 시민참여단 구성 이후에는 안전점검 활동을 공중화장실이나 특정 시설에 한정하기보다 읍·면별 생활권 안전지도 작성과 현장 모니터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표 Ⅲ-16> 울진군 안전 관련 주요 지표

구분	경상북도	울진군	주요 특징
교통사고	4등급	3등급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
화재	3등급	4등급	취약 분야
범죄	1등급	4등급	상대적 취약
생활안전	3등급	2등급	상대적으로 양호
자살	3등급	2등급	상대적으로 양호
감염병	5등급	4등급	상대적 취약

※ 지역안전지수는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5등급에 가까울수록 취약함.
 자료: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 2021.

(5) 출산.보육.돌봄

- 울진군의 돌봄환경은 아동돌봄과 고령자 돌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적인 특징임. 합계출산율이 경북 평균보다 높은 가운데 여성 1인가구의 약 65%가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가족친화정책을 영유아 보육에만 한정하기 어려움
-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15.4개로 경북 평균 17.9개보다 낮음. 다만 이 수치만으로 시설 부족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는 읍·면별 시설 위치, 정원, 이용률, 운영시간, 아이돌보미 공급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함
- 특히 울진은 공간적으로 넓고 생활권이 분산되어 있어 물리적 거리 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가까운 어린이집이나 돌봄기관이 있더라도 교대·야간·주말근무와 운영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돌봄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는 지역의 숙박·음식·관광서비스 종사자와 원전·에너지 관련 교대근무가구에게 특히 중요함. 따라서 단순 시설수보다 실제 근무시간과 이동시간에 대응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함
- 고령여성 측면에서는 2026년 추진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고령여성 1인가구를 핵심 대상집단으로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의료·건강관리뿐 아니라 식사, 주거수리, 이동, 사회적 관계망까지 통합할 경우 울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성친화형 돌봄모델로 발전할 수 있음
- 돌봄 영역에서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은 ‘시간의 격차’와 ‘거리의 격차’를 함께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함

- 아동돌봄은 야간·주말·긴급돌봄과 읍·면별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고령여성 돌봄은 방문형 의료·복지·생활지원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돌봄서비스의 성과를 제공 건수뿐 아니라 여성의 고용유지, 돌봄공백 감소, 서비스 접근시간 개선 등의 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 III-17> 울진군 출산·보육 및 돌봄 관련 주요 지표

구분	경상북도	울진군	주요 특징
합계출산율(2024)	0.897명	1.12명	경북 평균 상회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17.9개	15.4개	경북 평균보다 낮음
보육시설 수	1,234개	18개	대상 유아인구 1,170명
여성 1인가구 중 65세 이상	-	65.2%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의 동시 수요 존재
30~49세 여성 고용률	-	67.7%	남성 대비 -24.4%p

자료:통계청, 「인구총조사」, 2024;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24;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5.

(6) 여성 참여

- 울진군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33.6%로 경북 지방자치단체 전체 수준인 41.1%에 비해 낮으며, 김천시와 예천군의 41.5%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음. 따라서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는 울진군 여성친화도시 추진 시 보다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임
- 특히 울진군에서는 단순히 전체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어떤 분야의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하는가가 더욱 중요함. 원전·에너지, 안전, 환경, 지역 개발, 산업, 교통 등 지역의 핵심 정책분야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지역사업에서 여성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움.
- 울진군의 여성단체 지도자교육과 연수사업은 여성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 가능하나, 향후에는 교육 자체보다 실제 위원회·협의체 진출로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함
- 특히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신한울 3·4호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은 지역의 장기적인 산업·정주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요 정책이므로 이와 관련한 협의체와

주민참여 구조에 여성의 참여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여성참여 영역에서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시 고려할 사항은 여성인재의 양적 확충과 전문분야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여성단체뿐 아니라 여성기업인, 청년여성, 보건·복지 전문가, 환경·안전 전문가, 교육·연구인력 등을 발굴하여 여성인재풀을 구성하고, 이를 각종 위원회와 원전·에너지 관련 협의체에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함
- 궁극적으로 ‘여성리더 교육→전문분야 여성인재풀 구축→위원회·협의체 추천→정책참여’의 연속적인 참여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Ⅲ-18> 울진군 여성참여 관련 지표

구분	경상북도	울진군	주요 특징
위원회 수(2023)	1,629개*	68개	다수 분야 위원회 운영
위촉직 위원 수	14,868명*	638명	
위촉직 여성위원	5,642명*	180명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1.1%*	33.6%	40% 수준 미달
여성단체 활동	-	운영 중	여성단체협의회 및 지도자교육 기반 보유
원전·지역상생 협의체	-	운영·구성	에너지·지역개발 의사결정의 중요 구조

* 전체는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전체를 의미함.

자료: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위원회 여성 참여현황」; 2023; 울진군 주요업무계획

(7) 종합 분석

- 종합하면 울진군은 에너지산업 중심의 성장기반과 고령·분산생활권이라는 정주여건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임. 이러한 특성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에서도 산업정책과 생활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기보다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경제영역에서는 원전·수소·에너지산업으로 여성의 진입을 확대하고, 안전영역에서는 관광·서비스 여성근로자의 야간 이동과 고령여성의 주거·화재안전을 강화하며, 돌봄영역에서는 공간적 분산성을 고려한 이동·방문형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원전·에너지산업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여성의 정책참여를 복지·여성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산업·에너지·안전·환경 분야의 의사결

정 과정까지 확대해야 함

- 이에 따라 울진군의 여성친화도시 추진환경은 ‘에너지산업의 성장 과정에 여성의 일자리와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분산된 생활권의 안전·돌봄 접근성을 보완하는 에너지·분산생활권형 여성친화도시’로 정리할 수 있음

<표 Ⅲ-19> 울진군 여성친화도시 추진 환경 및 여건 종합

구분	주요 특징	주요 특징
인구·가구	· 높은 고령화 수준 · 전체 1인가구 비율 42.3% · 여성가구 중 1인가구 63.6% · 여성 1인가구 중 고령층 약 65%	· 고령여성 1인가구 핵심 정책대상 설정 필요 · 의료·주거·안전·이동 연계 생활돌봄 강화 · 분산생활권을 고려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경제	· 원전·에너지산업 중심 지역경제 구조 · 에너지산업 여성참여 낮음 · 여성 고용률 55.5% · 30~49세 성별 고용률 격차 -24.4%p	· 원전·에너지 연관 전문직 여성진입 확대 · 안전·환경·품질·기술행정 등 여성 직무트랙 발굴 · 관광·서비스 여성일자리의 전문화 및 고용의 질 개선
안전	· 화재·범죄·감염병 4등급 · 고령여성 1인가구 다수 · 생활권 분산 및 야간 서비스업 존재	· 고령여성 주거·화재안전 강화 · 여성 야간근로자 이동·귀가안전 강화 · 읍·면 단위 생활권 안전 모니터링 필요
돌봄	· 합계출산율 경북 평균 상회 ·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15.4개 · 고령여성 돌봄수요 동시 존재	· 시간·거리 중심 돌봄접근성 개선 · 야간·주말·긴급 아동돌봄 강화 ·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고령여성 지원 연계
여성 참여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3.6% · 김천·예천보다 낮은 대표성 · 에너지·산업 관련 주요 협의체 존재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확대 필요 · 에너지·안전·환경 분야 여성전문가 집중 발굴 · 원전·지역상생 정책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 확대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지역별고용조사」; 경상북도, 「경상북도사업체조사」; 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여성가족부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울진군, 「2026년 주요업무계획」

3. 중점 분석지역 정책 분석

- 분석 중점대상인 김천시, 예천군, 울진군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파악하고자 각 지역의 주요 업무계획과 양성평등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분석자료는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별로 직접 관련성이 높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한 후 사업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연계방안을 모색하였음

가. 김천시

- 김천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탈락하고 신규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 신청 과정에서 성인지 통계 구축, 여성일자리협의체, 여성안전 실무협의체, 시민참여단,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등 비교적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는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아이돌봄, 여성안전 관련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김천시는 신규사업의 단순 확대보다 기존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와 산업·도시재생·돌봄·교통 등 일반 시정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중요함. 아울러 기존사업에서 대표사업과 부적합한 사업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1)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 김천시는 양성평등기금과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등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자체 사업수단을 확보하고 있음. 향후에는 해당 사업을 단순한 행사·프로그램 지원방식에서 지역의 구체적인 성별격차를 해결하는 정책실험형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시민참여단의 역할을 행사 참여에서 주요 시정사업의 성인지적 모니터링과 정책개선 제안으로 확대할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표 III-20> 김천시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사업

사업명	주요 내용	여성친화도시 연계 방안	비고*
김천시 성인지 통계 구축	· 2024년 자체 성인지 통계 구축 · 인구·세대, 경제, 보건, 복지, 사회참여, 정보·문화, 안전·환경 등 7개 분야 79개 지표 구성 · 20세 이상 시민 약 200명 대상 별도 설문조사 실시 · 일·돌봄 병행 어려움, 야간보행 안전, 폭력 목격 시 행동의지, 가족 내 역할분담, 성별 고정관념 등 조사 · 시민참여단과 읍면동 협조를 통한 현장조사 추진	· 5대 목표별 핵심 성인지 지표 상시 관리 필요 · 주요 시정사업의 사업기획·성과평가 시 성인지 통계 활용 강화 · 3년 주기 통계 외 핵심지표의 연도별 업데이트 체계 마련 필요 ·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결과와 통계자료의 연계 분석 가능	○
양성평등 기금사업	· 일반시민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 대상 공모 ·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지원 · 사업공고→심사·선정→보조금 교부→사업수행→정산 방식 추진 · 지역단체의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사업 참여 지원	· 지역 성별격차 해결형 사업 우선 선정 필요 · 여성 일자리·고령여성 안전·돌봄·대표성 등 5대 목표별 공모 분야 설정 가능 · 시민참여단의 사업제안 및 성과모니터링 참여 확대 필요	○
여성친화 도시 공모사업	· 지역단체 대상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지원 · 시민참여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추진 · 2026년 5개 단체 대상 사업공모 계획 · 도비·시비 연계 추진	· 단순 행사·프로그램보다 정책개선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일반 시정사업 모니터링, 생활권 문제 발굴, 성평등 정책제안 사업 확대 가능 · 사업성과 공유회와 부서 정책환류 연계 필요	○
주요 시정사업 성인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기업유치, 산업단지, 도시재생, 교통, 주차, 공공시설 등 대규모 일반 시정사업 다수 추진 · 여성정책 외 부서 사업이 시민 생활 여건에 직접적 영향	· 주요사업 선정→성인지 사전검토→시민참여단 현장점검→개선 의견 제출→반영결과 확인의 순환체계 구축 필요 · 부서별 여성친화도시 연계과제 지정 및 연도별 이행관리 필요	○

*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경우 ○, 연계 가능할 경우 ◇로 표시하였음

자료:김천시, 「2025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성평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6년도 시행계획」; 김천시, 「2026 주요업무계획」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김천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일자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여성의 재취업 및 경력회복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그러나 앞선 산업구조 분석에서 김천시 전체 고용은 제조업 중심인 반면 여성은 보건·복지, 숙박·음식, 교육 등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특성을 보임

- 이에 따라 향후 여성 일자리정책은 단순한 취업인원 확대보다 지역 주력산업과 혁신도시의 양질의 일자리로 여성의 진입경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조업 내 생산직뿐 아니라 품질·안전·환경·생산관리·구매·회계·디지털 분야 등 연관직무를 구체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함

<표 Ⅲ-21> 김천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사업명	주요 내용	여성친화도시 연계 방안	비고*
김천여성 새로일하 기센터 운영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대상 ·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 새일여성인턴 연계 · 취업 전·후 ONE-STOP 종합취업지원 제공	· 제조업·공공기관·전문서비스 등 지역 산업 맞춤형 직무과정 개발 필요 · 품질관리·안전·환경·회계·구매·디지털 행정 등 직무 다양화 필요 · 수료·취업 인원 외 상용직 취업을·임금·고용유지를 관리 필요	○
지역특화 여성일자 리 협의체 운영	· 여성일자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여성 직업훈련·취창업사업 통합연계 논의 ·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추진 · 여성친화일촌기업 인센티브 논의 · 여성세대주 직접일자리 선발 가정 적용 · 아이돌보미 지역 교육기관 확보	· 협의체 논의를 실제 채용·교육사업으로 구체화 필요 · 제조기업과 공공기관의 여성친화 일자리 협약 확대 가능 · 경력보유여성의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이동경로 구축 필요	○
아이행복 도우미사 업	· 관내 어린이집 65개소 참여 ·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공 · 어린이집 현장의 보육지원 업무 수행 · 여성 고용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동시에 추진	· 시간제 여성일자리 임금·근속·고용 안정성 점검 필요 · 전문교육을 통한 보육지원 전문직무화 필요 · 장기적으로 상용직 또는 유사 전문직으로 이동 가능한 경력경로 마련 필요	○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지원	· 취업지원센터 중심 구직상담·취업정보·알선 제공 ·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 지원 · 취업박람회 등 지역 고용서비스 운영	· 성별 구직·취업현황 별도 관리 필요 · 여성 대상 제조·기술·공공·전문직 채용정보 확대 필요 · 취업박람회 여성친화기업·여성전문직 채용관 운영 가능	◇
전략적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 김천 일반산업단지 확장 및 기업유치 추진 · 신규 투자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고용창출 · 물류·제조 등 산업기반 확충	· 투자협약 과정에 여성채용·유연근무·육아휴직 복귀 등 여성친화 고용항목 반영 가능 · 신규 입주기업의 여성 적합 기술·관리직 사전 발굴 필요 · 새일센터 직업훈련과 기업 인력수요 간 연계 강화 필요	◇
혁신도시 공공기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취업 확대 추진	· 청년여성 채용현황 성별 관리 필요 · 여성 대상 공공기관 멘토링·직무체험·	◇

지역인재 취업 확대	· 지역 청년의 공공기관 진입 지원	인턴십 확대 가능 · 경력보유여성의 공공기관 협력업체· 전문서비스 일자리 연계 가능	
---------------	---------------------	--	--

*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경우 ○, 연계 가능할 경우 ◇로 표시하였음

자료:예천군, 「2026년 주요군정」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 김천시는 시민참여단의 제안이 CCTV, 보안등, 화재안전키트 등 실제 시설개선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참여형 안전정책의 기반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음. 여성안전 실무협의체 역시 가족행복과뿐 아니라 안전·교통·도시재생·경찰이 참여하고 있어 부서 간 협업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지역안전지수 분석에서 김천시는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분야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므로 여성안전을 범죄예방에 한정하지 않고 교통·화재·주거·재난까지 포함하는 생활권 통합안전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표 Ⅲ-22> 김천시 지역사회 안전 증진

사업명	주요 내용	여성친화도시 연계 방안	비고*
김천시 여성안전 실무협의 체 운영	· 가족행복과, 안전총괄, 원도심재생, 교통행정, 경찰서, 시민참여단 등 12 명 참여 · 여성안전 관련 부서·기관 간 협업체 계 운영 · 범죄취약지역 보안등·CCTV 설치 의 견 반영 · 여성안심귀가거리 위치선정 및 교통 약자 임산부 이용 개선 논의	· 정기적 생활안전 실무협의체로 상시 운영 필요 · 범죄뿐 아니라 교통·화재·주거·재난안 전까지 의제 확대 필요 ·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결과를 부서 개 선사업과 직접 연계 필요	○
남산지구 도시재생 안전마을 인프라 확충	· 도시재생지역의 안전환경 개선 추진 · CCTV·보안등·고보조명 등 방범시 설 설치 · 화재안전키트 및 생활안전 모니터링 기기 설치 · 시민참여단 아이디어를 실제 안전시 설 설치에 반영	· 도시재생사업 전 과정에 여성친화 안 전점검 적용 필요 · 고령여성·여성 1인가구 밀집구역 우 선 점검 가능 · 사업 전·후 체감안전 변화 조사 필요	◇
공원화장 실 안심거울	· 공원 여성화장실 출입문 등에 안심거 울 설치 · CPTED 기반 범죄예방환경 조성	· 설치 개수 중심에서 이용자 체감안전 중심 성과관리 필요 · 비상벨·조명·CCTV·접근로까지 통합점	○

설치	· 가족행복과와 시민참여단 공동 추진 · 2024~2025년 지속 설치	· 검 필요 · 시민참여단의 설치대상지 발굴 및 사후점검 지속 가능	
스마트 안전귀가 시스템 구축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모바일앱 연계 · 위기상황 발생 시 위치정보 및 동영상 전송 · 관내 CCTV 관제망을 활용한 범죄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 아동·보호자 등 대상 홍보 추진	· 여성 1인가구·청년여성·야간근로자 대상 이용확대 필요 · 실제 이용률 및 위기대응 실적 관리 필요 · 안전취약지역 분석과 연계한 홍보 강화 가능	○
마음든든 안전비상벨 설치사업	· 공원·관광서·전통시장 등 공중화장실 대상 비상벨 설치 · 양방향 통신을 통한 경찰·관제센터 즉시 대응 · 가족행복과·김천경찰서·시민참여단 등 협업 추진	· 시설 정상작동 여부 정기점검 필요 · 여성·아동 이용이 많은 시설 우선 관리 필요 · 시민참여단의 정기 현장점검 활동과 연계 가능	○
교통·주차 및 생활권 안전사업	· 공영주차장 및 교통환경 개선 추진 · 도시재생지역·상업지역 등 생활권 인프라 정비	· 여성·고령자·아동 기준 조도·보행동선·횡단보도·주차장 사각지대 점검 필요 · 지역안전지수의 교통사고 취약성을 반영한 보행안전 사업 강화 필요 · 시민참여단 야간보행 모니터링 추진 가능	◇

*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경우 ○, 연계 가능할 경우 ◇로 표시하였음
 자료:예천군, 「2026년 주요군정」

(4)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 김천시는 혁신도시 특화형 K-보듬, 365 보육, 119 아이행복 돌봄터, 아이돌봄 등 다양한 시간대와 상황에 대응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특히 119 아이행복 돌봄터는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특화성이 높음
- 향후에는 개별 돌봄서비스의 수를 늘리는 방식보다 서비스별 운영시간·생활권·대상가구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 통합체계 구축이 필요함. 또한 앞서 30~49세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크게 나타난 만큼, 돌봄사업의 성과를 여성의 취업·복직·고용유지와 연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표 Ⅲ-23> 김천시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사업명	주요 내용	여성친화도시 연계 방안	비고*
김천형 세밀하고 촘촘한 돌봄 인프라 구축	· 혁신도시 특화형 K-보듬 프로젝트 추진 · 맞벌이가구의 틈새돌봄 지원 · 긴급·틈새돌봄 서비스 확대 · 가족센터·아이돌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연계 · 공공·사회적 돌봄기능 강화	· 혁신도시 특화형 모델을 제조업 근로 가구 및 읍면지역까지 차등 확장 가능 · 서비스별 이용시간·대기수요·미충족 수요 분석 필요 · 여성 고용유지와 돌봄 이용 간 성과 연계 필요	○
365 까지지 않는 돌봄어린 이집	· 부모의 주말근무·긴급상황 발생 시 아동 돌봄 제공 · 주말·공휴일 보육서비스 운영 · 맞벌이가구의 돌봄공백 해소 목적	· 제조·서비스업 교대근무자의 실제 근무시간과 운영시간 정합성 점검 필요 · 이용자 직종·근무형태별 돌봄수요 분석 필요 · 야간·휴일 돌봄체계와 통합 연계 필요	○
119 아이행복 돌봄터	· 읍곡119안전센터 내 운영 · 만 3개월~12세 아동 대상 · 365일 24시간 무료 이용 가능 · 돌봄 전문과정을 이수한 여성의용소방대원이 긴급·틈새돌봄 제공 · 양육자 질병·출장·야근·휴원 등 돌봄 공백 대응	· 혁신도시 맞벌이가구 특화 긴급돌봄 대표사업으로 활용 가능 · 이용자의 돌봄사유·시간대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필요 · 여성의용소방대원의 돌봄활동에 대한 교육·지원체계 강화 필요	○
아이돌봄 지원사업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일시적 양육 및 놀이활동 지원 · 아동 안전·신변보호 지원 · 2026년 이용자 확대 계획	· 읍면별 아이돌보미 공급과 이동거리 분석 필요 · 야간·주말·긴급수요에 대한 서비스 연계 강화 필요 · 여성 취업·복직·고용유지 효과를 성과 지표로 관리 필요	○
보육교직 원 돌봄 노동여건 개선	·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장려수당 지원 · 평가인증 장려수당 및 명절휴가비 등 지원 · 돌봄노동자의 근무여건·처우 개선 추진	· 여성집중 돌봄직종의 고용의 질 개선 대표사업으로 활용 가능 · 근속·임금·업무부담·이직률 등 처우개선 효과 모니터링 필요	○
달빛소아 과 등 야간 소아의료 체계	· 아동·청소년 대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상시대기 진료체계 운영 · 오전 8시~오후 9시까지 진료 제공 · 야간·틈새 의료서비스 제공	· 돌봄과 소아의료를 연계한 ‘야간 돌봄-의료 안전망’ 구축 가능 · 맞벌이·한부모가구의 이용수요 분석 필요 · 가족센터·아이돌봄 이용자 대상 통합 정보 제공 가능	○

*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경우 ○, 연계 가능할 경우 ◇로 표시하였음

자료:예천군, 「2026년 주요군정」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김천시는 시민참여단 활동이 실제 안전시설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여성커뮤니티·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여성들이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는 구조도 갖추고 있음. 이는 여성친화도시의 주민참여 기반 측면에서 중요한 강점임
- 다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아직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의 활동역량 강화가 교육과 단체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각종 위원회와 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대표성 확대까지 연결될 필요가 있음. 특히 제조·산업·도시·교통 등 여성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이 필요함

<표 Ⅲ-24> 김천시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사업명	주요 내용	여성친화도시 연계 방안	비고*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 관내 여성단체 리더 대상 · 여성리더 소양 및 리더십 교육 실시 ·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 중심 운영 · 지역 여성리더 활동기반 강화	· 단체운영·리더십 중심에서 정책참여 역량교육으로 확대 필요 · 성인지예산·도시계획·산업·안전·위원회 관련 교육 추가 가능 · 교육수료자의 위원회·협의체·시민참여단 진출 연계 필요	○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활용 · 여성커뮤니티 지원사업 추진 · 지역여성이 사업을 직접 기획·수행하는 방식 · 양성평등·여성역량강화·지역문제 활동 경험 지원 · 활동성과 공유회 개최	· 단기 프로그램에서 여성 활동가 육성 체계로 전환 필요 · 지역문제 발굴→사업기획→실행→정책제안으로 단계화 필요 · 청년여성·여성농업인·여성기업인 등 참여집단 다변화 필요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및 모니터링 교육 실시 · 안전·돌봄·생활환경 등 사업 모니터링 참여 · 여성안전 시설물 및 생활환경 개선 아이디어 제안 · 경북 시군민참여단 협의체 교육·간담회 참여	· 모니터링 대상사업을 연간 사전 선정하는 체계 마련 필요 · 단순 현장점검에서 정책제안 및 개선결과 확인까지 역할 확대 필요 · 일자리·도시계획·교통·산업 등 비복지 분야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양성평등 기금·여성 커뮤니티 사업 성과공유 회	·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시민참여단·여성일자리협의체·지원단체 등 참여 · 단체별 활동 및 성과 발표 · 상호 피드백 및 질의응답 추진 · 여성친화사업 네트워크 구축	· 성과공유회를 정책환류회의로 확대 필요 · 사업 개선안 및 다음연도 부서과제 도출 필요 · 우수제안의 주민참여예산·부서 본사업 연계 가능	○
각종 위원회 여성대표 성 확대	· 2025년 6월 기준 위촉직 여성위원 329명, 약 36% 수준 · 여성위원 40% 미만 위원회 비중 지속 존재	· 여성전문인력 DB 구축 필요 · 산업·경제·도시·교통·안전 분야 여성 전문가 집중 발굴 필요 · 여성지도자 교육 및 시민참여단 수료자를 위원 후보군으로 연계 필요	○

*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경우 ○, 연계 가능할 경우 ◇로 표시하였음
자료:예천군, 「2026년 주요군정」

(6) 종합분석

- 김천시는 세 중점지역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추진 경험과 관련 추진체계가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축된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음. 성인지 통계, 여성일자리협의체, 여성안전 실무협의체, 시민참여단, 양성평등기금 및 공모사업 등 정책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시민참여단 제안이 실제 시설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환류 사례도 확인됨

<표 Ⅲ-25>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 추진 특성 및 향후 보완·개선 방향

여성친화도시 목표	현재 추진 특성	향후 보완·개선 방향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 성인지 통계 구축 · 부서·기관 협의체 운영 · 양성평등기금·공모사업 보유	· 일반 시정사업 성인지 관리 확대 · 부서별 연계과제 정례화 · 핵심 성인지 지표의 연도별 관리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새일센터 및 여성일자리협의체 운영 · 시간선택제 여성일자리 추진	· 제조·공공·전문직 진입 확대 · 고용의 질 중심 성과관리 · 기업유치·산단정책과 여성고용 연계
지역사회 안전 증진	· 여성안전 실무협의체 운영 · 시민참여단 제안의 시설개선 반영 · 스마트 안전·비상벨 등 인프라 구축	· 범죄안전에서 교통·화재·주거안전으로 확대 · 고령여성·여성 1인가구 생활안전 강화 · 시민참여단 사후점검 기능 강화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 K-보듬, 365 보육, 119 돌봄 등 다양한 틈새돌봄 운영 · 돌봄노동자 지원 추진	· 서비스 간 통합연계 강화 · 제조업·교대근무 가구 시간수요 반영 · 여성 고용유지와 돌봄성과 연계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시민참여단·여성커뮤니티·지도자교육 운영 · 공모사업을 통한 여성의 사업기획 참여	· 위원회 여성대표성 확대 · 다양한 여성집단 참여 확대 · 정책결정 구조와 직접 연계
---------------------	---	--

나. 예천군

- 예천군은 2026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을 목표로 조성계획 수립, 군민참여단 구성, 부서 간 협력체계 및 관련 협의체 구축, 도비 지역특성화 사업 공모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주요군정에서도 청년센터, 청년창업, 돌봄체계, 도시재생, 스마트도시, 주민자치, 평생교육 등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와 연계 가능한 사업을 다수 찾을 수 있음

(1)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 예천군은 2026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을 주요군정에 명시하고 있어 성평등 추진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적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 특히 군민참여단과 부서 간 협력체계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정 준비 단계부터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
- 다만 신규 지정 준비가 담당부서 중심의 공모 대응에 머물지 않도록 일자리·도시·교통·안전·교육·농업 등 주요 부서의 일반사업을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연계하는 구조 마련이 필요함. 특히 도청신도시와 기존 읍면지역의 인구·생활여건 차이가 큰 만큼 생활권별 성인지 수요를 별도로 파악하는 접근이 요구됨

<표 Ⅲ-26> 예천군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사업

사업명	주요 내용	여성친화도시 연계 방안	비고*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추진	· 사업기간: 2026. 3.~12. · 여성의 역량강화·돌봄·안전이 구현되는 지역정책 추진 ·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추진체계 구축 · 군민참여단 구성 · 부서 간 협력체계 및 관련 협의체 구성 · 도비 지역특성화 사업 공모 추진 · 사업비 4천만원(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별 담당부서 지정 및 부서협업체계 정례화 필요 · 주요군정사업 대상 성인지 검토체계 구축 필요 · 군민참여단을 정책발굴·모니터링·환류 주체로 운영 필요 · 도청신도시와 읍면지역을 구분한 지역특화 과제 발굴 필요	○

혁신을 품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군정 혁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 주민·직원 등의 창의적 정책제안 활용 가능	· 여성친화도시 지정 준비와 연계한 성평 등 정책 아이디어 분야 신설 가능 · 여성·청년·고령자·돌봄가구 등 생활수요 기반 정책제안 발굴 가능 · 군민참여단 우수제안의 공모전 연계 가능	◇
도청신도시 10주년 타운홀 미팅 및 상생협력 사업	· 경북도·예천군·안동시 공동 추진 · 신도시 정책토론, 비전설명, 정책홍보 등 타운홀 미팅 운영 · 문화행사·팝업마켓·주민교류 프로그램 추진	· 신도시 여성·맞벌이가구·청년여성의 생활수요를 별도 의제로 설정 가능 · 돌봄·교통·안전·생활SOC에 관한 성별 의견수렴 가능 · 군민참여단이 여성친화도시 정책의제 발굴 과정에 참여 가능	◇

*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경우 ○, 연계 가능할 경우 ◇로 표시하였음

자료:예천군, 「2026년 주요군정」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예천군의 직접적인 여성일자리 사업은 현재 여성 일자리 교육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음. 반면 주요군정에는 도청신도시 청년센터, 청년창업, 푸드테크, 디지털 농업 등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앞선 분석에서 예천군 여성 취업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보건·복지 등 특정 업종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향후에는 여성의 취업 자체보다 공공·전문직, 디지털, 창업 등으로 직종 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함. 도청신도시 청년센터는 이러한 여성의 경력개발·창업·네트워크 기능을 결합할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 가능함

<표 Ⅲ-27> 예천군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사업명	주요 내용	여성친화도시 연계 방안	비고*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개발 지원	· 대상: 관내 주민 등 · 수행기관: 예천군 가족센터 · 여성 일자리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 2026년 참여목표 20명 · 도비·군비 지원을 통한 여성 취업역량 강화	· 단기 교육 중심에서 취업·고용유지까지 연계 필요 · 도청신도시 공공·행정·전문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직무과정 개발 필요 · 교육수요율 외 취업률·상용직 비율·임금·고용유지율 관리 필요 · 30~49세 여성 경력복귀 프로그램 강화 필요	○

도청신도시 청년센터 건립	· 위치: 호명읍 산합리 일원 · 사업기간: 2025. 12.~2028. 12. · 교육실·회의실·공유오피스·커뮤니티 공간 조성 · 청년 공유주거 기능 포함 · 총사업비 58억원 · 청년의 주거·일자리·문화·정책참여 거점 조성	· 청년여성 취업·창업 프로그램 별도 운영 가능 · 경력보유여성 및 청년여성 대상 공공·전문직 직무교육 연계 가능 · 여성 창업자의 공유오피스 이용 및 네트워킹 지원 가능 · 여성 이용자의 공간안전·돌봄·이용시간 요구를 설계·운영에 반영 필요	◇
청년창업 기반 구축	· 청년 창업단계별 교육·컨설팅·멘토링·네트워킹 지원 · 청년창업 키움·돈움사업 14개팀 지원 · 타 지역 청년의 예천 정착을 위한 사업화자금·정착활동비 지원 ·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활성화 추진	· 여성 청년창업자의 참여비율 및 업종별 현황 관리 필요 · 여성창업 별도 멘토링·판로·디지털마케팅 지원 가능 · 돌봄이 필요한 여성창업자 대상 사업참여 시간·공간 개선 가능 · 여성농업인·다문화여성의 소규모 창업과 연계 가능	◇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기반 구축	· 식품 제조·가공업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 제조현장 인력문제 해소 및 생산성 향상 · 품질관리 고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여성의 비중이 높은 식품가공 분야를 디지털·스마트제조 직무와 연계 가능 · 여성근로자 대상 스마트공장·품질관리·디지털 직무교육 추진 가능 · 단순 생산직에서 품질·관리·마케팅 직무로 이동 지원 가능	◇
AI 기반 농업경영· 마케팅 교육	· 농업인 대상 4개 과정 운영 · 청년농업인 경영개선 교육·컨설팅 · AI 활용 농산물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마케팅 교육 · 스마트 혁신 역량강화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 여성농업인 참여목표 설정 및 성별 참여실적 관리 필요 · 여성농업인의 온라인 판로·브랜딩·경영역량 강화 가능 · 여성농업인을 생산보조 역할에서 농업경영주·창업자로 육성하는 과정 연계 필요	◇

*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경우 ○, 연계 가능할 경우 ◇로 표시하였음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6년도 시행계획」, 예천군, 「2026년 주요군정」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 예천군은 양성평등 기본계획 시행계획 상 직접적인 안전사업이 공공부문 폭력예방에 한정되어 있어 여성의 일상적 생활안전에 포괄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주요군정에는 보행환경, 주차질서, 스마트도시, 도시재생 등 여성친화도시 안전목표와 연결할 수 있는 기반사업이 다수 존재함
- 앞선 지역안전지수 분석에서 예천군은 교통사고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범죄안전 중심보다는 보행·교통·이동안전 중심의 여성안전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도청신도시와 농촌 읍면의 공간적 특성이 상이하므로 신도시는 야간보행·공원·주차장, 농촌지역은 고령여성의 보행·대중교통 접근 등을 중심으로 시민참여단 모니터링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표 Ⅲ-28> 예천군 지역사회 안전 증진

사업명	주요 내용	여성친화도시 연계 방안	비고*
공공부문 폭력예방· 사건대응· 재발방지 강화	- 대상: 예천군 공무원 -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 및 대응역량 강화 2026년 교육이수 목표 100% - 공공부문 폭력예방 문화 조성	- 공직 내부 교육에서 지역사회 젠더폭력 예방정책으로 확장 필요 -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경찰 등과 지역 대응체계 점검 가능 - 시민 대상 폭력예방·디지털성범죄·스토킹 예방교육 연계 필요	○
신예천교 ~예천군 청 구간 외 전선지중 화사업	- 예천읍 시가지 약 1.5km 전선·통신선 지중화 -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사업기간: 2026~2028년 - 총사업비 112억원	- 여성·아동·고령여성의 실제 보행동선을 반영한 사업구간 모니터링 가능 - 조명·횡단보도·보도 폭·휴게시설 등을 여성친화 관점에서 동시 점검 필요 - 군민참여단의 사업 전·후 보행안전 모니터링 연계 가능	◇
불법주정 차 정비 및 주차질서 확립	- 예천읍 주요 구간 불법주정차 관리 - 주정차금지구간 추가 지정 - 교통안전시설물심의위원회 협의 - 민간단체 주도 캠페인 운영	- 동부초등학교·어린이집·시장·보건소 주변 여성·아동 보행안전 점검 가능 -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 시야 차단 및 유모차·고령자 이동불편 모니터링 필요 - 시민참여단 현장점검 결과를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연계 가능	◇
스마트도 시 통합운영 센터 정보시스 템 유지관리	- 호명읍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365일 24시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전문인력 상주 및 장애·보안 대응 - 스마트도시 2단계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	- CCTV 등 안전데이터의 여성안전 취약공간 분석에 활용 가능 - 신도시 여성 1인가구·청년여성의 야간 이동경로 모니터링 가능 - 시민참여단이 체감안전 취약지역을 제안하고 객관적 데이터와 연계 가능	◇
도시재생· 노후주거 지 및 취약지역	- 예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노후주거지 집수리, 담장정비, 마을안길, 주차장·주민센터 조성 - 취약지역 생활인프라 개선	- 고령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의 주거·보행·화재위험 점검 가능 - 집수리 항목에 조명·방범·미끄럼방지·화재감지 등 여성생활안전 요소 반영	◇

생활여건 개선		가능 · 주민역량강화 과정에 여성주민 참여 비율 관리 필요	
------------	--	--	--

*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경우 ○, 연계 가능할 경우 ◇로 표시하였음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6년도 시행계획」, 예천군, 「2026년 주요균정」

(4)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 예천군은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비교적 다양한 돌봄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특히 0세 특화 공동육아나눔터와 주말 이용이 가능해 영유아부터 초등단계까지 돌봄 기반이 일정 수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예천군 전체 차원에서는 도청신도시와 기존 읍면지역 간 돌봄서비스의 공간적 접근성 차이가 중요한 과제로 판단됨
- 따라서 시설 수 확대보다는 생활권별 돌봄수요 및 이용시간 분석을 통해 신도시는 맞벌이·영유아 중심, 농촌은 이동·소규모 공동돌봄 중심으로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표 Ⅲ-29> 예천군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사업명	주요 내용	여성친화도시 연계 방안	비고*
맞벌이 부부 등 자녀돌봄 지원 강화	· 대상: 관내 주민 등 · 수행기관: 예천군 가족센터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지원 ·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 완화 및 공동육아 지원 · 국·도·군비 연계 추진	· 맞벌이가구의 출퇴근시간과 돌봄시설 운영시간 간 차이 분석 필요 · 야간·주말·긴급돌봄 수요 조사 필요 · 신도시와 읍면지역의 돌봄 접근성 차이 모니터링 필요 · 여성 고용유지와 돌봄서비스 이용 효과 연계 필요	○
공동육아 나눔터 및 다함께돌 봄센터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 · 0세 특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아이키움·동일스위트·우방센터 마을돌봄터 등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운영 · 평일·주말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특성과 수요에 맞춘 맞춤형 돌봄 제공 ·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추진	· 시설별 이용률·대기수요·주말 이용수요 분석 필요 · 도청신도시 내 돌봄거점 간 기능 조정 및 통합정보 제공 필요 · 읍면지역 돌봄공백과의 격차 분석 필요 · 시민참여단의 부모 이용자 만족도·접근성 모니터링 연계 가능	◇

도청신도시 청년센터 내 청년 공유주거	· 교육·회의·공유오피스·커뮤니티 공간과 함께 청년 공유주거 조성 ·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복합거점 구축	· 청년여성 1인가구의 주거안전 설계 반영 필요 · 임신·출산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돌봄서비스 연계 가능 · 여성 이용자의 야간 이동 및 시설이용 안전 모니터링 필	◇
-------------------------------	--	---	---

*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경우 ○, 연계 가능할 경우 ◇로 표시하였음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6년도 시행계획」, 예천군, 「2026년 주요군정」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예천군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추진과 함께 군민참여단 구성을 계획하고 있어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정책참여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주민자치, 평생학습, 도청신도시 타운홀 미팅 등 주민참여형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여성친화도시 거버넌스와 연계할 수 있는 여지가 큼
- 향후에는 기존 여성단체 중심 참여에서 벗어나 도청신도시 청년·직장여성, 읍면 여성농업인, 고령여성, 돌봄가구 등 다양한 여성집단을 정책참여 주체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군민참여단과 주민자치위원회·평생교육지도자를 연결할 경우 읍면지역까지 여성친화도시 참여기반을 확장할 수 있음

<표 III-30> 예천군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사업명	주요 내용	여성친화도시 연계 방안	비고*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구성·운영	· 2026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추진과정에서 군민참여단 구성 예정 · 지역특화사업 추진과 연계 · 주민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및 여성친화도시 추진 참여 기반 마련	· 단순 홍보·캠페인 참여보다 정책 모니터링 중심 운영 필요 · 신도시와 읍면지역 주민을 균형 있게 구성할 필요 · 청년여성·고령여성·여성농업인·돌봄가구 등 다양한 계층 참여 필요 · 주요군정 사업에 대한 정례 모니터링 및 부서 환류체계 구축 필요	○
주민주도 사업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6개소 중심 사업 추진 · 주민이 직접 사업계획 수립·추진 · 걷기 프로그램·음악회·전통시장 장터·마을경관 개선·영화관 등 6개 사업 운영	· 주민자치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 관리 필요 · 여성주민이 제안한 생활밀착형 사업 별도 발굴 가능 · 군민참여단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동 생활권 모니터링 가능	◇

	· 사업종료 후 사후평가 실시	· 여성의 마을 의사결정 참여 확대와 연계 필요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 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40개소 추진 ·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 · 성인문해·사회적 배려계층·동아리 지원 등 15개 사업 운영	· 경력보유여성·고령여성·농촌여성 대상 정책참여·디지털·경제교육 연계 가능 · 여성 수료자의 마을평생교육지도자 및 주민리더 진출 지원 가능 · 읍면지역 여성의 참여 접근성을 높이는 찾아가는 교육 확대 가능	◇
예천군 정원도시 기본구상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 생활권 정원 대상지 발굴 및 조성방향 설정 · 주민·관광객 참여형 정원 프로그램 개발 · 기존 정원 인프라와 연계한 생활권 환경개선 추진	· 여성·고령자·아동이 이용하기 편리한 생활권 정원 설계 가능 · 여성주민의 공간기획 과정 참여 확대 가능 · 군민참여단의 시설점검·안전·휴게시설 모니터링 연계 가능	◇
도청신도시 10주년 타운홀 미팅	· 신도시 정책토론 및 비전 설명 · 주민 참여형 정책소통 추진 · 경북도·예천군·안동시 공동 운영	· 청년여성·양육여성의 정책발언 기회 보장 필요 · 여성친화도시 의제를 별도 세션으로 운영 가능 · 군민참여단 정책제안 발표 및 토론과 연계 가능	◇

*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경우 ○, 연계 가능할 경우 ◇로 표시하였음

자료: 성평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6년도 시행계획」, 예천군, 「2026년 주요군정」

(6) 종합 분석

- 예천군의 경우 2026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추진이 주요군정에 명시되어 있어, 기존 개별 여성정책을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의 체계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됨
- 현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상 직접사업은 여성 경력개발, 공동육아, 공공부문 폭력예방 등으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주요군정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면 일자리·청년·돌봄·도시·교통·주민참여 분야에서 연계 가능한 사업이 다수 찾을 수 있음
- 종합하면, 예천군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핵심은 ‘도청신도시·농촌 복합생활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여성친화도시 사업체계에 반영하는 것에 있음. 도청신도시에서는 청년여성의 공공·전문직 진출, 맞벌이가구 돌봄, 야간 생활안전 및 정책참여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기존 읍면지역에서는 고령여성의 이동·돌봄·생활안전, 여성농업인의 경제역량 및 주민자치 참여를 중심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동일 사업을 전 지역에 적용하는 방식보다 생활권별 여성수요에 대응하는 지역특화형 여성친화도시 모델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표 Ⅲ-31> 예천군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 추진 특성 및 향후 보완·개선 방향

여성친화도시 목표	현재 추진 특성	향후 보완·개선 방향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추진 · 군민참여단·부서협력체계 구성 계획	· 부서협업 정례화 · 주요군정의 성인지적 사업관리 · 신도시·읍면 특성 반영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여성 경력개발 교육 추진 · 청년·창업·디지털 산업 기반 보유	· 공공·전문직 여성 진출 확대 · 여성창업 및 디지털직무 강화 · 고용의 질 성과관리
지역사회 안전 증진	· 공공부문 폭력예방 중심	· 보행·교통·주거 등 생활안전 확대 · 신도시와 농촌의 안전수요 차별화 · 군민참여단 현장모니터링 강화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 공동육아·다함께돌봄 기반 구축	· 신도시·읍면 돌봄격차 분석 · 야간·주말·긴급돌봄 강화 · 여성 고용유지와 연계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군민참여단 신규 구성 예정 · 주민자치·평생교육 기반 확보	· 다양한 여성집단 참여 확대 · 주민자치·위원회 등 정책결정 구조 연계 · 모니터링 결과의 정책 환류 강화

다. 울진군

- 울진군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서 ‘대한민국 K-에너지 대표도시’, ‘군민 중심의 울진형 복지’를 주요 군정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원자력·에너지, 해양신산업, 일자리, 안전, 가족·돌봄 등 여성친화도시와 연계 가능한 정책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임
- 특히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성평등 사회 조성, 폭력 예방, 가족센터·아이돌봄, 여성단체 역량강화 등을 주요 업무로 설정하고 있음
-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지역의 핵심산업인 원전·에너지산업과 기존 여성정책 간 직접적인 연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역시 여성단체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직접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원전·에너지, 해양신산업, 지역상생협의체, 통합돌봄 등 주요 군정사업에 여성친화도시 관점을 접목하는 방향이 중요함

(1)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 울진군은 양성평등주간 행사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등 기본적인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을 갖추고 있음. 다만 여성친화도시 차원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사회복지과 내부의 여성정책에 한정하지 않고 원전·에너지, 경제, 관광, 교통, 지역개발 등 군정 핵심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한 특별지원사업은 상당한 규모의 지역사업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향후 주민대표 협의체 구성과 지역사업 발굴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 일자리·돌봄·생활안전 등 성별 수요를 반영한다면 울진군 여성친화도시의 대표적인 부서협업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음

<표 Ⅲ-32> 울진군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사업명	주요 내용	여성친화도시 연계 방안	비고*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 대상: 울진군민 및 여성단체 등 ·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추진 · 양성평등 관련 주제공연·퍼포먼스 운영 · 일상 속 양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목적 · 2026년 군비 2,500만원 편성	· 기념행사 중심에서 정책공론장 기능으로 확대 필요 · 울진군 성별격차·여성친화도시 정책과제 공유 연계 · 여성 일자리·안전·돌봄 관련 정책성과 및 사례 발표 연계 · 주민·여성단체의 정책제안 프로그램 병행 가능	○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소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기반 보유 · 군정사업의 성인지적 검토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 확보	· 원전·에너지·관광·교통·도시개발 등 주요 군정사업을 성별영향평가 대상과 적극 연계 필요 · 사업대상·이용자·수혜자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 생산 필요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의 실제 사업 반영 여부 점검체계 마련 필요	◇
울진통계연보 발간	· 인구·노동·사업체·에너지·교통·보건·복지 등 15개 분야 169개 항목 통계 제공 · 지역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데이터 구축	· 주요 통계의 성별분리 생산 확대 필요 · 고용·임금·1인가구·돌봄·안전·위원회 등의 성별지표 추가 필요 · 여성친화도시 성과관리를 위한 ‘울진군 성인지 통계’ 체계로 확장 가능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특별지원 사업 발굴	· 신한울 3·4호기 관련 특별지원금 활용 사업 발굴 ·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20명 이내 협의체 구성 예정 · 주민설명회·사업공모 등을 통한 지역 사업 발굴 추진	· 사업발굴 단계에서 성별 수요분석 실시 필요 · 협의체 여성위원 참여비율 관리 필요 · 돌봄·여성일자리·생활안전 등 여성친화형 사업을 특별지원사업으로 발굴 가능 · 사업 수혜자의 성별·연령별 현황 관리 필요	◇
---	--	---	---

*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경우 ○, 연계 가능할 경우 ◇로 표시하였음

자료: 울진군, 「2026년 주요업무계획」; 성평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6년도 시행계획」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울진군의 여성일자리 직접사업은 현재 취업희망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교육 및 취업연계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앞선 산업구조 분석에서 울진군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숙박·음식, 보건·복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의 핵심산업과 여성일자리 간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여성취업교육의 방향을 기존 자격증 중심에서 원전·에너지·해양신산업의 여성 진입을 지원하는 직무전환형 사업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원전 운전과 같은 특정 기술직에 한정하기보다 안전·환경·품질·보건·데이터·기술행정·구매·사업관리 등 여성의 진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관직무를 우선 발굴하는 것이 현실적임

<표 III-33> 울진군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사업명	주요 내용	여성친화도시 연계 방안	비고*
지역특화 여성취업 교육	· 대상: 취업희망여성 10여 명 · 사업기간: 2026. 3.~12. ·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교육 운영 · 교육수료 후 취업연계 추진 · 2026년 자격증 취득률 90% 이상 목표	· 일반 자격증 취득 중심에서 지역산업 수요 기반 교육으로 개편 필요 · 원전·에너지·해양신산업 관련 안전·품질·환경·행정·데이터 직무 연계 필요 · 수료율 외 실제 취업률·상용직 비율·임금·고용유지율 관리 필요 · 30~49세 경력보유여성 직무전환 과정 강화 필요	○
울진 청년 일자리센 터 운영	· 청년 대상 맞춤형 일자리정보 제공 ·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추진 · 2026년 구인·구직 상담 1,000건 목표	· 청년여성 상담·취업실적 별도 관리 필요 · 여성 대상 원전·에너지·해양 분야 직무정보 제공 확대 가능	◇

	표	· 여성 기술직 종사자 멘토링 및 기업 탐방 프로그램 연계 가능 ·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채용정보 제공 기능 추가 가능	
신한울 3·4호기 지역상생 일자리 및 인재양성	·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지역일자리 창출 추진 · 지역상생협의체 및 협력기업 간담회 운영 · 지역주민 대상 용접사 양성교육 추진 · 지역출신 교육생 및 취업자 배출 · 지역기업의 건설공사 참여 확대	· 교육·채용실적의 성별분리 관리 필요 · 여성 참여 가능한 안전·환경·품질 관리·기술행정·데이터 직무 발굴 필요 · 여학생·청년여성 대상 원전 연관직종 직무체험 추진 가능 · 한수원·건설사·협력기업과 여성인재 채용협약 추진 가능	◇
해양치유 산업 및 해양신산업 육성	· 해양치유센터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 해양그리드 데이터서비스센터 구축 · 마린팰로이드 산업화 지원 · 해양치유·데이터·신산업 분야 신규 산업기반 구축	· 여성의 해양치유 전문인력·건강관리·데이터·마케팅 직무 참여 확대 가능 · 여성창업자의 치유·웰니스 상품개발 및 관광콘텐츠 연계 가능 · 신규 센터 채용계획 수립 시 여성채용 현황 및 직급별 성별구성 관리 필요	◇
청년 창업·고용 지원	· 청년창업 사업화자금 및 정착활동비 지원 ·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운영 ·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추진 · 청년 근로자 자산형성 및 고용기업 환경개선 지원	· 여성 청년창업자·근로자 수혜율 별도 관리 필요 · 관광·식품·해양·디지털 등 여성창업 분야 특화 지원 가능 · 육아·가사 병행 여성창업자의 사업참여 여건 개선 필요 · 여성기업 네트워크 및 판로 지원과 연계 가능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 취업취약계층 직접일자리 132명 제공 · 저소득층·장애인·결혼이민자·여성가장 등 포함 · 기업성장 및 창업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 신중년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 여성 직접일자리 고용기간·임금·직종 분석 필요 · 단기 공공일자리에서 민간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경로 마련 필요 · 결혼이민여성·중장년여성 대상 직무훈련 연계 필요	◇

*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경우 ○, 연계 가능할 경우 ◇로 표시하였음

자료: 울진군, 「2026년 주요업무계획」; 성평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6년도 시행계획」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 울진군은 폭력예방교육, 긴급피난처, 의료지원 등 젠더폭력 피해 대응체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다만 여성친화도시 관점에서는 폭력피해 대응과 함께 여성의 일상적인 이동·주거·근로환경 안전까지 정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앞선 지역안전지수에서 울진군은 범죄·화재·감염병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고용은 숙박·음식업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관광·서비스업 여성근로자의 야간 이동과 귀가, 공영주차장 이용, 고령여성 1인가구의 화재·전기안전 등을 결합한 분산생활권형 여성안전정책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함

<표 Ⅲ-34> 울진군 지역사회 안전 증진

사업명	주요 내용	여성친화도시 연계 방안	비고*
4대폭력 예방교육	· 대상: 울진군 전 직원 약 1,000명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추진 · 고위직 별도 대면교육 실시· 공직 내부 교육에서 지역사회 폭력예방으로 확대 필요 · 관광·숙박·음식업 사업주·근로자 대상 폭력예방교육 연계 가능 · 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등 변화된 위험유형 반영 필요 · 공무원·기간제 포함 6급 이하 직원 교육 추진 · 교육이수율 80% 이상 목표	· 공직 내부 교육에서 지역사회 폭력예방으로 확대 필요 · 관광·숙박·음식업 사업주·근로자 대상 폭력예방교육 연계 가능 · 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등 변화된 위험유형 반영 필요	○
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	· 폭력피해 위기여성 대상 임시보호 제공 · 3일 이내, 최대 7일까지 긴급보호 가능 · 보호 이후 전문시설 연계 · 연중 상시 운영체계 구축	· 경찰·의료원·상담기관·복지서비스 간 통합연계 강화 필요 · 분산된 읍면지역의 피해자 이동지원 체계 점검 필요 · 긴급보호 이후 주거·생계·심리상담 서비스 연계 강화 필요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 폭력피해자 대상 치료비 전액 지원 · 울진군의료원 등 의료기관과 연계 ·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회복 지원	· 의료비 지원 이후 전문상담·법률·주거 서비스 연계 필요 · 피해자가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정보 제공 필요	
시가지 주차질서 확립 및 공영주차장 조성	· 울진읍·후포면 등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 · CCTV 12개소 운영 · 평해·죽변·후포 등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 상가·주거밀집지역 주차환경 개선	· 여성 야간근로자·관광객의 주차장 이용안전 점검 필요 · 조도·사각지대·CCTV·비상벨·보행동선 등 여성안전 기준 적용 가능 · 시민참여단의 야간 현장모니터링 연계 가능	○
전기 화재사고 및 정전사고 예방대책	· 마을회관 등 67개소 아크차단기 교체 추진 · 대규모 정전 피해예상지역 조사 및 대응계획 수립 · 전기화재·정전으로 인한 주민 안전사고 예방	· 고령여성 1인가구·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전기안전 점검으로 확대 가능 · 여성 1인가구 대상 화재감지기·전기안전 점검 연계 검토 가능 · 시민참여단의 고령여성 생활안전 취약지역 발굴과 연계 가능	◇

스마트·에너지 안전관리	·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장조사 코디네이터 운영 · 설비 전수조사 및 A/S 접수 지원 · 에너지 설비의 지속적 안전관리 추진	· 고령자·여성 1인가구 대상 설비 이용 불편 및 안전수요 파악 가능 · 방문점검 시 생활안전 취약가구 연계 발굴 가능	◇
-----------------	---	---	---

*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경우 ○, 연계 가능할 경우 ◇로 표시하였음

자료: 울진군, 「2026년 주요업무계획」; 성평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6년도 시행계획」

(4)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 울진군은 가족센터 신축·개관 이후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적임. 이는 돌봄서비스의 양적 공급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자의 근로환경까지 정책대상으로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높음
- 또한 2026년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울진군 여성친화도시의 지역특화 사업으로 활용할 여지가 큼. 앞선 분석에서 울진군 여성 1인가구의 약 65%가 65세 이상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통합돌봄사업에서 고령여성 1인가구를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의료·돌봄·주거·생활안전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표 Ⅲ-35> 울진군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사업명	주요 내용	여성친화도시 연계 방안	비고*
울진군 가족센터 지원	· 가족센터 연 이용인원 2만 명 목표 · 가족센터 운영 및 가족관계 프로그램 추진 · 취약·위기가족 상담·사례관리 추진 · 공동육아나눔터 및 자녀돌봄 품앗이 운영 · 다문화가족 교육·통번역·자녀지원 등 통합서비스 제공	· 가족센터를 여성친화도시 돌봄거점으로 활용 필요 · 읍면별 이용자·미이용자 및 이동거리 분석 필요 · 맞벌이·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별 수요에 따른 서비스 차별화 필요 · 시민참여단의 서비스 접근성·이용시간 모니터링 가	○
아이돌봄 지원사업	· 맞벌이·다자녀·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목적 · 가정방문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수당 및 아이돌봄 종사자 관련 지원 추진	· 관광·숙박·음식업 등 주말·저녁근무 가구의 이용수요 분석 필요 · 야간·주말·긴급돌봄 기능 강화 검토 필요 · 읍면지역 아이돌보미 공급·이동거리 문제 점검 필요 · 여성 고용유지 효과를 성과지표에 반영 필요	○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 2026년 신규사업 ·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월 5만원 처우개선비 지급 · 아이돌보미 건강관리비 지원 · 돌봄종사자의 장기근속 및 전문성 강화 추진	· 여성집중 돌봄직종의 고용의 질 개선 사업으로 적극 활용 가능 · 임금·근속·교육·업무강도 등 돌봄노동 실태 모니터링 필요 · 처우개선 수준의 단계적 확대 검토 필요	○
울진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 2026년 3월부터 군 전역 시행 · 신규대상자 167명 발굴·지원 목표 · 방문진료·방문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 돌봄·주거개선 등 통합지원 · 고령자 및 고령장애인 등 우선 지원	· 고령여성 1인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관리 필요 · 성별·가구유형별 서비스 이용실적 구축 필요 · 여성 1인가구의 의료·주거·고독사·생 활안전을 통합지원하는 모델로 확대 가능 · 시민참여단의 읍면별 서비스 접근성 점검 가능	◇
에너지 복지사업	· 주택·건물 대상 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 보급 · 전 군민 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 군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 고령여성·저소득 여성 1인가구의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조사 가능 ·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과 주거안전 연계 가능	◇

*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경우 ○, 연계 가능할 경우 ◇로 표시하였음

자료: 울진군, 「2026년 주요업무계획」; 성평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6년도 시행계획」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울진군의 여성 사회참여 사업은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와 역량강화교육 등 기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여성친화도시가 요구하는 정책결정과정의 여성 참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참여경로의 확장이 필요함
- 특히 울진군은 앞선 분석에서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33.6%로 중점지역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원전·에너지 관련 지역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서도 여성의 참여 여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여성단체 지도자 교육을 ‘교육→여성인재풀 등록→위원회·협의체 추천→정책참여’로 연결하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신한울 특별지원금 협의체와 한울본부 상생발전협의회 등 지역의 핵심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

<표 Ⅲ-36> 울진군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사업명	주요 내용	여성친화도시 연계 방안	비고*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	· 울진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대상 추진 · 국내·외 선진지 연수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 여성리더 양성 및 조직 활성화 목적 · 2026년 국내연수 30명 계획	· 단체활동 벤치마킹에서 정책참여 역량교육으로 확대 필요 · 에너지·지역개발·안전·예산·성인지정책 교육 추가 필요 · 교육수료자를 위원회·협의회 여성인재풀과 연계 가능	○
여성단체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 여성단체지도자 대상 워크숍·리더십 교육 추진 · 스피치 등 지역리더 활동역량 강화 · 지속 가능한 여성단체 활동기반 조성	· 일반 리더십 교육에서 정책분석·위원회 참여·주민제안 교육으로 확대 필요 · 여성단체 외 청년여성·여성기업인·여성농어업인 등 참여대상 다변화 필요	
신한울 3·4호기 특별지원금 협의체	·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20명 이내 협의체 구성 예정 · 특별지원사업 발굴·선정·심의 수행 · 주민설명회 및 지역사업 공모 추진	· 여성위원 참여비율 목표 설정 필요 · 여성단체 외 에너지·안전·돌봄 분야 여성전문가 발굴 필요 · 여성친화도시 관점의 특별지원사업 제안 기능 부여 가능	◇
울진군-한울본부 상생발전협의회	· 울진군과 한울본부 간 정책·실무협의체 운영 · 지역현안 및 상생사업 협의 · 사업지원사업 평가기준 및 중점사업 논의	· 협의체 성별구성 현황 점검 필요 · 여성의 에너지산업 진출·돌봄·안전 등 여성친화 의제 상정 가능 · 여성전문가 및 여성주민 참여경로 마련 필요	◇
해양치유 지구 및 지역활력 타운 기획	· 평해읍·기성면 대상 해양치유지구 및 지역활력타운 계획 수립 · 주거·문화·복지·해양치유 결합형 정주공간 기획 · 청년·은퇴자 등 신규 인구 유입 추진	· 계획수립 단계 여성·청년·고령자 의견수렴 필요 · 여성의 보행안전·돌봄·의료·일자리 관점 공간계획 반영 가능 · 시민참여단의 계획단계 모니터링 연계 가능	◇

*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경우 ○, 연계 가능할 경우 ◇로 표시하였음

자료: 울진군, 「2026년 주요업무계획」; 성평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6년도 시행계획」

(6) 종합 분석

- 울진군은 여성친화도시와 직접 연계되는 여성취업교육, 폭력피해자 지원, 가족센터·아이돌봄, 여성단체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군정 차원에서는 원전·에너지, 해양신산업, 청년일자리, 통합돌봄, 에너지복지, 지역상생협의체 등 여성친화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자원이 매우 다양하게 확인됨
- 종합적으로 울진군은 여성·가족 분야의 개별사업보다 지역 핵심산업과 주요 군정 사업을 여성친화도시와 어떻게 연계하는가가 핵심적인 과제로 판단됨. 특히 원전·

에너지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여성의 낮은 산업 참여도를 고려할 때, 여성친화도시를 여성복지 중심으로 접근할 경우 울진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

- 따라서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원전·에너지산업 여성인재 육성, 대표성 영역에서는 원전·지역상생 관련 협의체의 여성 참여 확대, 돌봄 영역에서는 고령여성 1인가구 중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안전 영역에서는 관광·서비스업 여성의 야간 이동과 고령여성의 주거·화재안전을 중점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이 적절함
- 이를 통해 ‘에너지산업의 성장과 지역발전 과정에 여성이 일자리·의사결정·지역상생의 주체로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라는 울진군 고유의 지역특화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표 III-37> 울진군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책 추진 특성 및 향후 보완·개선 방향

여성친화도시 목표	현재 추진 특성	향후 보완·개선 방향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 양성평등주간 추진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기반 보유 · 여성가족팀 중심 성평등업무 수행	· 여성친화도시 전담·부서협업체계 강화 · 원전·경제·관광 등 핵심 군정사업의 성인지적 관리 확대 · 성인지 통계 구축 강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지역특화 여성취업교육 추진 · 청년·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운영 · 원전·해양신산업 인력수요 존재	· 여성취업교육과 에너지 핵심산업 연계 · 기술·전문직 여성 진입 확대 · 취업률·임금·상용직·고용유지 중심 성과 관리
지역사회 안전 증진	· 4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운영	· 범죄안전에서 야간이동·주거·화재 등 생활안전으로 확대 · 관광서비스 여성근로자 및 고령여성 1인가구 고려 · 생활권 안전 모니터링 강화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 가족센터·아이돌봄·공동육아 운영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신규 추진 ·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	· 읍면별 돌봄 접근성 개선 · 야간·주말 돌봄 강화 · 고령여성 1인가구 중심 통합돌봄 연계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교육 중심	· 다양한 여성인재 발굴 · 위원회·원전 관련 협의체 여성 참여 확대 · 여성인재풀과 실제 정책결정 참여 연계

Ⅳ. 중점 분석지역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요 분석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중점 분석지역 정책 요구와 시사점

IV. 중점 분석지역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요 분석

1. 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 경북지역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대를 위한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중점 분석지역인 김천시·예천군·울진군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및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면접조사와 FGI를 실시함.
- 여성친화도시의 5대 목표인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체감하는 문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향후 사업개발 및 기존 사업의 개선방향과 연계하고자 하였음

나. 조사내용과 방법

- 조사는 중점지역 주민 및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뿐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 추진 공무원, 여성친화도시 전문가 및 컨설턴트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FGI·서면자문을 함께 실시함. 전체 조사 참여자는 34명이며, 예천군 8명, 울진군 3명, 김천시 9명을 비롯해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추진 공무원 조사(2명),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별 사업개발 전문가 조사 및 문화·농어촌형 사업개발 자문(6명), 김천시 기존 사업평가 및 개선방향을 위한 전문가 FGI·자문(6명) 등으로 추진함. 기존 사업평가 및 개선방향을 위한 전문가 FGI·자문조사는 2025년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컨설팅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음
- 김천시의 경우 여성친화도시 지정 경험이 있고 향후 재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천군·울진군과 조사목적을 달리함. 김천시는 지역생활 및 정책수요 파악과 함께 기존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적절성, 추진성과와 한계, 대표사업 개선방향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FGI 및 개별자문을 추가 실시함. 반면 의성군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조사는 특정 중점지역의 직접적인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보다 군 지역의 실제 추진경험과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별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적용 가능한 사례와 사업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기 위한 보완조사의 성격을 가진다.

<표 IV-1> 정책수요 분석 조사대상 및 방법

구분	사례	주요 조사대상 및 방법	분석 목적 및 주요 조사 내용
중점지역 현장 정책수요 조사	· 예천군: 참여자 1~8 · 울진군: 참여자 9~11 · 김천시: 참여자 12~20	· 지역주민 · 시민참여단 · 지역활동가 · 취업상담사 · 농업·농협 관계자 · 공무원·컨설턴트 등 ·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심층면접	· 지역 성평등 여건 및 생활문제 파악 · 일자리·안전·돌봄·여성참여 수요 파악 · 지역특화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타 지역 추진경험 조사	· 참여자 21~22	· 여성친화도시 조성지역인 담당 공무원 심층면접	· 군 지역 여성친화도시 추진경험 파악 · 실제 사업 추진의 어려움 및 대응방안 검토 · 중점지역 적용 가능성 검토
전문가 정책개발 조사	· 참여자 23~28	· 여성친화도시 전문가·컨설턴트·문화 분야 전문가 등 · 심층면접 및 서면자문	·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별 사업 추진방향 제안 ·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도출 · 문화·농어촌 등 지역특화 사업 가능성
김천시 심화조사	· 참여자 29~34	· 여성친화도시 전문가 FGI 및 서면자문	· 기존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 평가 · 5대 목표별 개선과제 도출 · 향후 대표사업 및 지역특화사업 발굴

다. 분석 방법

- 본 조사는 모든 조사대상에게 동일한 구조의 질문지를 적용하지 않고 연구목적과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표 IV-1>과 같이 조사분석을 내용을 달리하여 심층면접,

FGI 및 서면자문을 병행한 질적조사임. 따라서 특정 의견이 몇 사례에서 나타났는지를 단순 빈도로 비교하기보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주제와 각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의견을 중심으로 주제분석을 실시하였음

- 특히 분석과정에서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① 지역의 인구·산업·생활권 특성, ②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평등 관련 문제, ③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와 관련된 정책수요, ④ 기존 사업의 보완 또는 신규 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연계하여 분석하였음
- 또한 지역별 참여자와 조사대상의 구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조사결과를 각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해당 조사에서 확인된 정책수요와 쟁점으로 해석함. 특히 울진군은 심층면접 사례가 3사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면접결과를 앞서 분석한 통계적 추진여건 및 기존 군정사업 분석자료를 보완하는 질적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2. 조사 결과

가. 중점 분석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요

(1)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개선되고 있으나 세대·생활권에 따른 격차 지속

- 중점 분석지역 조사에서는 과거에 비해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지역사회에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인식이 동시에 확인됨. 특히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는 지역 자체의 차이뿐 아니라 세대, 신도시와 기존 생활권, 도시와 농촌, 외부인구 유입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예천군의 경우 도청신도시 조성 이후 유입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와 기존 읍면지역 주민 간 성평등 인식 차이가 나타남. 호명읍 등 신도시 생활권에서는 남성의 가사·양육 참여와 성평등에 대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존 읍면지역의 고령층에서는 남성의 가사·양육 참여를 특별한 일로 받아들이거나 여성의 적극적인 발언과 사회활동을 낯설게 보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여성 이장 등 실제 지역리더의 경험에서는 과거에 비해 여성의 발언이나 활동을 제약하는 분위기가 완화되었다는 평가도 확인되어, 전통적 인식이 유지되는 가운데 점진적인 변화 역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네. 평균보다는 높은 이유가 첫 번째는 이게 저희가 예천이 또 경북에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첫 번째로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주민들하고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여기 호명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연령대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확실히 조금 더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예천읍에도 자주 가다 보니까 예천읍에서 조금 더 연령이 높으신 어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양육이라든지 가사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 되게 남성이 어떻게 그런 걸 하 할 수 있냐 대단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의견을 많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참여자 6)
- “저희가 살다 보면 어르신들이 여자들이 나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거 아직도 많이 하시죠 여자가 얘기하면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조금 말을 들 기울여 주시고 조금 하대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죠. 연세 있으신 분들이 네 좀 있으시죠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시죠?” (참여자 5)
- “차이는 없어요. 옛날에는 조금씩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어디 가도 제가 그냥 당당하게 할 말하고 그럴이 커서 그런지 크게 좌우하지는 않아요.” (참여자 8)

- 그러나 여성의 지역리더 진입과 관련해서는 성평등 인식의 변화와 실제 대표성 확대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스스로 지역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는 높아지고 있으나 기존 남성 중심의 리더 구조와 ‘이장은 남성이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등이 여성의 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제기됨

- “아무래도 이제 여성 앞으로는 더 여 여성들이 활발하고 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장들은 많아요. 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많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퇴직을 안 하니까 그냥 못 나오는 거죠. 그런데 또 일부는 또 이런 이장들은 이제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해야 된다는 이런 옛날부터 고정관념 그렇구나 그런 게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참여자 8)
-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여성의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참여는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참여자 7)

- 따라서 예천군은 단순히 ‘보수적인 농촌지역’으로 규정하기보다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대적으로 젊은 생활권과 기존 농촌생활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여성친화도시 추진 시에도 군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성평등 인식개선사업을 운영하기보다, 신도시에서는 맞돌봄·일가정양립 등 생활 속 성평등 실천을 강화하고 기존 농촌지역에서는 여성대표성, 마을 의사결정구조,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 등을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차별화가 요구됨
- 울진군에서도 성평등 수준이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와 기존의 보수적·가부장적 지역문화가 여전히 강하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타남. 특히 젊은 층에서는 성평등과 남성의 가사·양육 참여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대화와 가사·돌봄 역할에서는 성별 고정관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울진군은 한울원자력 등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타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 특징적임. 외부 유입 인구가 많은 생활권에서는 남성의 가사와 양육 참여, 지역행사 참여 등이 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타나, 동일한 군 내에서도 기존 농어촌지역과 원전·에너지산업 관련 생활권 사이에 성평등 문화의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줌

- “(지역의 성평등 점수는) 10점 만점에 5점...가부장 사회. 보수 플러스 가부장 사회” (참여자 9)
- “네, 그거는 당연히 있는 것 같고 많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깨어 있는 의식일까가 이게 있지만 그래도 전부터 이어오던 성에 관련된 고정관념이라든가 이제 생활에서부터 돌봄 이런 거 다 통틀어서 그런 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고 그 대화 속에서도 그런 여자는 이거 해야 돼 남자는 해야 돼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참여자 11)
- “예전 그러니까 저희 지역 자체가 일반 여기 그냥 여기서 나고 태어나신 분도 있지만 한 울 원자력이라고 거기가 있는 지역 단지는 외 뭐라고 해야 되지 타 지역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여기보다는 가사 참여라든지 양육 참여라든지 그리고 이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게 당연시되고 그리고 무슨 행사 같은 걸 하면 남성분들이 정말 참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여자 11))

- 성평등 인식의 한계는 여성의 지역사회 대표성과도 연결되어 나타남. 여성들이 농업교육, 가공·창업 등 실질적인 지역활동에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역할을 보조적인 것으로 인식하거나, 공식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일단은 이번에 인수위에 한 20명 그어지는데 여자가 한명 들어갔단니까 김○○. 내가 얘기 했잖아 보수적이고 좀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고를 경북 특히 이쪽에는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다 이게 뭐야 보조로 생각하지, 주로 생각하지 않는단니까 주로. 여성 대표성” (참여자 9)
- “회의나 참여 내지 가공 창업이나, 가공 같은 거는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는데 교육도 여성들이 받긴 하는데 여전히 가부장적이라 여성을 보조 수단으로 생각한단니까.” (참여자 9)

- 따라서 울진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중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과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성평등 교육만을 별도로 추진하기

보다 여성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농업·지역공동체·지역산업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을 ‘참여자’에서 ‘의사결정자’로 확대하는 접근이 중요함

- 김천시는 조사대상에 따라 지역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남. 일부에서는 시민의 성평등 개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난 반면, 여성 기관장과 정치적 대표성, 농촌지역의 성역할 규범 등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인됨. 이는 김천시가 혁신도시·시내생활권과 농촌 읍면지역이 함께 존재하는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과도 연결하여 볼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성평등 점수) 저는 한 7점 정도 줄 것 같아.”
- “제가 우선은 성평등이라는 그 개념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는 하고 있어요.” (참여자 14)
- “저는 한 8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문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 (참여자 15)

- 반면 여성의 공적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남

- “성평등 수준이 김천은 좀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저는 김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귀촌한 지 한 16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김천이 조금 성평등 수준이 낮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면장 이런 기관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보면은 비율이 좀 많이 떨어지지.” (참여자 13)

- 특히 읍면 농촌지역에서는 장기간 유지되어 온 성역할 규범이 여성 스스로의 태도와 지역공동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타남. 기존의 성별 역할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여성에게 지역사회의 부정적 평가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의 인식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규범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

가 있음

- “근데 그 우리 대항면에 사람들이 좀 거지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경로당에 수업도 가고 유치원 수업도 나가고 하는데 보면은 좀 우리 여자들이 내 자신이 내 자신이 나를 낮추더라고요.”
- “그렇지 옛날부터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게 이제 그게 사는 거다. 그러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면은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 땅으로 하고 사냐는 비난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참여자 13)

- 이에 대해 인식 자체를 단기간에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 “의식은 너무 바뀌어서 시간이 걸리니까 제도적으로 먼저 개선을 해 나가야지 해보고 따라하고 할 것 같아.” (참여자 16)

- 김천시의 경우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개념적 이해를 확대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여성의 실제 대표성과 정책참여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연결하는 것이 향후 과제임.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마을규약, 이장 및 주민자치 조직의 참여구조 등을 개선하고, 혁신도시·도심에서는 여성의 정책참여 및 경제·사회활동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생활권별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이상 세 지역을 종합하면, 성평등 수준은 단순히 ‘높음’ 또는 ‘낮음’으로 평가하기 보다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전통적인 성별 규범이 동시에 존재하는 과도기적 상태로 보는 것이 적절함. 또한 이러한 차이는 시군 간보다 시군 내부의 생활권과 세대에 따라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향후 여성친화도시 정책에서는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차원에서 생활권별·

세대별 성평등 수요를 세분화하고, 단순 교육보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사·돌봄, 여성대표성, 마을 의사결정, 경제활동 등의 문제와 결합한 실천형 성평등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여성의 단순 활동 참여를 넘어 이장·위원회·주민자치·정책협의체 등 실제 의사결정구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및 일자리 정책수요:

‘일자리’의 수보다 안정성·다양성·생애주기 적합성에 대한 요구

- 중점지역 조사에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쟁점은 지역 내 일자리 자체의 부족뿐 아니라 여성들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일자의 범위가 좁고, 연령·돌봄여건·이동수단 등에 따라 취업기회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임. 특히 여성들이 많이 진입하는 일자리가 돌봄·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부문 기간제, 농업보조 및 단순노무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수요는 단순한 취업자 수 확대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적절한 근로시간, 지속가능한 창업, 지역산업과 연계된 직종 다양화, 중장년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타남

□ 예천군: 일자리 부족과 돌봄·교통·직종편중이 복합적으로 작용

- 예천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수요 자체는 높은 반면, 실제로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특히 취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는 단순히 구인처가 부족하다는 것보다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지역에서 제공되는 근로시간이 맞지 않는 문제, 읍면지역의 교통 불편, 중장년 여성의 돌봄·단순업무 집중, 창업교육 분야의 편중 등으로 구체화됨
- 맞벌이 및 자녀양육기 여성의 경우 취업의지가 있음에도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시간대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타남. 특히 10시부터 오후 3~5시 사이 등 자녀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선호하지만 실제 지역 일자리가 이러한 조건과 충분히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됨

- “일자리 요구는 다 욕구는 다 있으시나 육아를 해야 되잖아요. 일가정 양립을 해야 되는 데 일가정 양립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상태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자기한테 맞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들이 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일은 하고 싶으나 자기한테 맞는 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좀 지역에서 일자리가 좀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참여자 5)
- “젊은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다 10시에서 5시 3시 4시 이 정도 그런 일자리들을 희망하시죠.” (참여자 5)

○ 반면 취업상담기관을 찾는 50~60대 여성은 요양보호, 청소 등 단순·돌봄 분야를 주로 희망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들에게는 이동수단 부족 자체가 취업 여부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일자리가 존재하더라도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자가용이 없으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제기됨

- “젊은 분들보다는 저희는 이제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죠. 가령 그러다 보면 50대 60대 이 정도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 이분들은 요양보호사 그런 쪽에 청소라든지 그냥 단순 업무 이렇게 희망을 하시는 편이죠. 그렇구나. 그런데도 차가 없으신 분들도 많고 이동 수단이 안 돼서 취업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움직이는 일단은 저희 교통편 때문에 자리가 있어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죠.” (참여자 5)
- “그렇죠 지역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면단위 사신다 그러면 차로 나와서 다시 또 도청을 간다든지 이런 식이면 네 교통편 때문에 60대 50대 60대 차를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른 돌봄 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미 진출을 다 거의 하셨거든요.” (참여자 5)

○ 돌봄 분야에서는 구인수요 자체는 높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도 나타남. 이는 여성 취업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여성 집중 직종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줌

- “자격증은 있으나 일이 좀 어렵고 힘들고 급여가 낮으니까 쳐우나 이런 것들이 낮으니까 자꾸 자꾸 이동을 하시죠.” (참여자 5)

○ 창업 분야에서도 정책수요가 구체적으로 나타남. 여성창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는 참여자도 있으나, 교육과 창업 분야가 카페·스마트스토어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되면서 한정된 지역시장에서 유사 업종 간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됨

- “저는 지역의 여성들이 엄밀히 말하면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아무래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그러고 경북대 내에서도 이제 예천군하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신 여성 선생님들을 몇 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프로그램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카페라든지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좀 몰려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여성 창업하신 분들도 실질적으로는 다 카페예요.” (참여자 6)
- “그러면 어차피 이 예천군이라는 시장에 인구가 정해져 있고 그분이 어떤 곳에서 오픈 하느냐 따라서 이용객이라는 게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결국은 10명 15명씩 이제 교육 수료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중에 한 세 분 두 분 창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라는 의문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과 얘기해 봐도 손님 걱정을 많이 하시고 매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참여자 6)

○ 또한 예천의 일자리 구조가 공공기관·농업·돌봄 등으로 제한적이라는 점과 육아기 여성의 근로가능시간이 사업주의 구인시간과 맞지 않는 문제가 동시에 지적됨

- “그게 딱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쪽으로 다 이제 되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점이 있긴 있지만 사실상 그런 어떻게 보면 시간하고 관계에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가게 주인분이 원하는 시간대와 또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워낙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특정 시간대는 결국은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게 되게 한정적인 것 같아요. 한정적인 일자 자체가 사실상 여기는 일반 회사보다는 공공기관과 농업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한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6)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예천군은 여성 일자리 정책을 단순한 직업교육이나 창업 교육 확대에 두기보다 생활권과 생애주기에 따른 차별화가 필요함. 도청신도시의 30~40대 여성에게는 공공·전문직, 시간선택형 일자리, 경력유지 지원이 중요하고, 읍면지역의 중고령 여성에게는 이동지원과 돌봄·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처우개선이 중요함. 또한 농업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카페·온라인 판매 중심의 창업보다 농식품 가공, 로컬푸드, 농촌관광, 돌봄·생활서비스 등 지역 내 실제 수요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가 요구됨

□ 울진군: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과 지역 주력산업-여성일자리 간 간극

- 울진군에서는 여성의 취업욕구는 존재하지만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남. 여성의 일자리가 공공부문 기간제, 사무보조, 요양·사회복지 등 일부 직종에 집중되고 있으며, 청년·고학력 여성의 경우 지역 안에서 전공이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확인됨
- 특히 단기기간의 기간제 일자리는 존재하지만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직접적으로 지적됨

-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해요. 잠깐 잠깐 일할 자리는 있는데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어야지. 기간제, 주로 기간제가 많아. 10개월 일하는 애. 안정적인 일자리 장기적 일자리가 필요해.” (참여자 9)

- 지역 내 민간 일자리 기반 자체가 협소하다는 인식도 강하게 나타남

- “공공 아니면 일자리가 없지. 없어요. 일자리 자체 개인 알바 같은 거 마트 같은 데 알바 같은 아주 소수가 하고 나머지 일자리가 없지. 원전에 일부 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없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이런 거 얼마 돈 되지도 않는 거 거기에 매여 있다고.” (참여자 9)

- 취업상담 현장에서도 울진군 여성의 취업처가 공공기관 기간제, 일반기업 사무원,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남. 특히 한울원자력 등 고임금·고속런 일자리와 일반 중소기업 사이의 조건 격차가 커서 청년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중간 수준'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제기됨

- “이렇게 제가 결혼을 안 했다 보니까 확 얘기를 못하겠는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돌봄 관련 이거 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일을 하고 싶어도 이제 양질의 일자리도 없기는 해서 이런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면 쪽 거기 왜 고학력 여성분들 많거든요. 또 좋은 일자리 이런 거 하고 내려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커버할 수 없는 이 지역 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참여자 11)
- “보통은 증가율이 정규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돌봄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군청 그 공공기관 계열의 기간제로 많이 사무 보조로 기간제 가거나 아니면 그냥 보통의 일반 기업의 사무원 그리고 가장 많은 거는 요양 장기 요양 계열의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이런 쪽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참여자 11)
- “거의 없어요. 지금도 저도 이제 20대 분들 상담을 좀 하고 있는데 행사 연기할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선불리 또 바로 계약직 이렇게 가라고 하지를 못하겠는 게 이제 보통 첫 직장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있고 본인들도 이왕이면 자기 적성이나 전공에 맞춰서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허들이 높은 건 너무 한수원이나 이런 데는 또 너무 높고 또 그 아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처우가 너무 낮으니까 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참여자 11)

- 돌봄 분야는 수요는 많지만 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가 동시에 나타남. 이는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돌봄분야를 활용할 수 있다는 단순한 접근보다 돌봄일자리 자체의 노동조건과 직업이미지를 개선해야 함을 의미함

-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요구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너무 많은 곳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다 알선을 할 수가 없어요. 인원이 없어가지고.” (참여자 11)
- “그렇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희도 이제 여기 자체에서 군 자체에서도 처우 개선하려고 처우 개선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만들고 있고 전보다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보통의 인식 자체가 장기 요양 업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게 있으니까 쉽게 진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참여자 11)

○ 청년여성의 창업과 관련해서는 지원사업이 존재하더라도 창업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여성청년 간 네트워크 자체가 부족하다는 수요가 나타남

- “뭘 하는 친구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됐든 청년 창업 해주려고 하는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긴 한 것 같은데 저도 몇몇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렇게 진입했다가 사실 잘 안 되는 게 체계적인 지원이랄까 이런 좀 지원이랄까 초기부터 중기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건지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리 잡는 분도 있긴 한데 그게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자 11)
- “노인이나 어린이 그런 건 진짜 많은데 또 여성 청년 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 사업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울진 대상인지 경북대상인지 모르겠는데 한창 여성 기업 이렇게 해서 뜬 걸 봤는데 그거 이제 말고는 뭔가 여성 청년이라는 걸 이제 두고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청년 사업 공식 네 일단 돈이나 이런 것보다도 약간 네트워킹. 네트워킹 인데 그게 또 단순히 모임보다도 그렇게 좀 정부 지원과 좀 더 이제 여성 창업 요즘 많이 지원해 주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걸 이제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여성 청년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일단 뭔가를 하면은 사실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대부분이 울진이 모이면은 다 이렇게 한마디씩 소감을 나누는 게 네 이런 사람이 있는 줄 몰랐더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참여자 10)

○ 또한 울진의 여성창업 및 일자리 개발은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얘기하는 평소에 이거는 어찌 됐든 여기가 이제 농어업이랄까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장점을 하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음식물 그걸 한다든지 제조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가 이제 바다나 이런 게 있으니까 뭔가 숙박 같은 개념의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준다든지 그게 낫지 않을까 하여튼 건강 계열의 그런 거.” (참여자 11)

□ 김천시: 일자리 인프라는 존재하나 중장년 여성의 사각지대와 교육·취업 연계 점검 필요

- 김천시는 예천·울진과 달리 상대적으로 다양한 일자리 기반과 여성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타남. 다만 심층조사에서는 기존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보다 교육이 실제 취업과 소득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 40~60대 중장년 여성의 정책 사각지대, 농촌지역 여성의 단순·계절 일자리 집중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됨
- 현재 여성 대상 직업교육과 자격증 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수료가 실제 취업이나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조사하고 사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타남

- “평생교육원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도 보면은 여성 일자리 해 가지고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어떤 교육이든 간에 교육을 계속시켜갖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활동을 하더라도 그 부분 그러면 이거 평생교육원에서 일자리 교육을 받잖아요. 그쵸 그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한번 뭐라 그럴까 뭐 어떠한 해가지고 도움이 됐다 아니면 이러한 부분이 있다. 부족한 개선 방안도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참여자 12)
- “아니 여기서 여성 평생교육원에서 여성 일자리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주는데 그 받는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가 또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쓰임이 있는 건지 교육에 대한 부족함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고를 좀 해서.” (참여자 12)

- 특히 김천에서는 청년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이에 있는 40~60대 여성층이 상대적

으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됨. 청년정책은 39세 이하에 집중되고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반면, 경제활동 욕구가 높은 중장년층에 대한 직업교육·창업·사업장 개선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임

- “청년 지원이 근데 사실은 김천에는 살고 계시는 대다수의 인원이 40대에서 50대 그러니까 60 그 중간에 들이 활동하고자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일을 못 가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한 개도 없어요.” (참여자 14)
-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에 대한 교육도 안 돼 그러니까 해주는 교육도 한정적이고 예산이 너무 적어서 교육할 수 있는 것도 몇 개 없고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뭔가 창업이나 이런 것도 청년 위주로만 돼 있으니까 지원 못 받고 그다음에 40 50 넘어서 이제 가게를 하는데 가게가 너무 안 좋고 인테리어 지원인가 그것도 청년만 되더라도 39세까지만 되고 이제 그분들은 나이에 자기 본인 나이에 대한 그것도 그다음에 지금 현재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이에 대한 부분은 청년 위주로만 다 전부 다 예상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예 없어요. 사실은.” (참여자 14)
- “실제적으로 돈이 필요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분들은 40 그러니까 50대 애들 65세 밑에 있는 분들은 직장 없거나 이런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돈이 금전적으로 교육이나 아니면 지원이 이런 거 많지 않다는 걸 내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참여자 14)
- “보통 대다수의 창업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지원 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을 만약 가게를 열면 청년들은 보수 보니까 시청에 보수하는 거 자기 사업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공모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월세도 지원해 주고 그건 젊은 39세까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14)

-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일자리 자체는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평가도 나타남. 포도·호두 등 농작업, 식당, 노노케어 등 다양한 단기·현장 일자리가 있다는 의견으로, 이는 김천 여성일자리 문제를 단순한 ‘일자리 부족’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됨을 보여줌

- “일자리는 주로 포도밭 포도밭이 임금이 제일 높으니까 서울로 가려고 그렇구나.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러고는 식당 이런 데 가면은 돈 많이 주잖아. 몇백만 원씩 주잖아.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워낙 여기는 김천은 노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식당에도 가고 호두밭에도 가고 포도밭에도 가고 또 요새는 어른들 돌봄 노노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어른들 돌보미가 있으니까 자기 동네 경로당에 가서 어른들 이렇게 이렇게 챙기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찾아보면 일자리는 풍부해.” (참여자 13)

3) 가족친화(돌봄) 환경 관련 정책수요:

시설·서비스의 단순 확대보다 생활권별 수요, 서비스 연계, 돌봄인력, 이용 시간을 고려한 접근 필요

- 중점지역의 돌봄 관련 조사결과에서는 아동돌봄이나 노인돌봄 서비스의 단순한 공급 확대만으로는 지역주민이 경험하는 돌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됨
 - 특히 세 지역 모두 지역 내부의 인구구조와 생활권에 따라 돌봄수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예천군은 도청신도시의 아동돌봄과 기존 읍면지역의 노인·생활돌봄이 병존하고, 울진군은 고령여성·1인가구 증가와 분산된 생활권으로 인해 노인 돌봄·생활돌봄·이동지원의 중요성이 크며, 김천시는 이미 다양한 돌봄시설과 서비스가 존재하여 신규 시설 확충보다 기존 사업의 조정·연계와 돌봄인력의 질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나타남
 - 또한 돌봄을 여성친화도시의 네 번째 목표인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에만 한정하여 접근하기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돌봄부담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남성의 돌봄참여와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이라는 점에서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주민이 직접 지역의 돌봄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와 연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예천군: 도청신도시의 아동돌봄과 읍면지역의 노인·생활돌봄을 구분하는 이중적 접근 필요

- 예천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동일한 군 안에서도 돌봄의 정책대상과 문제의 성격이 생활권별로 크게 다르다는 점임
- 도청신도시가 위치한 호명읍 등에서는 젊은 가구와 아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여 맞벌이가구의 아동돌봄과 일·가정양립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는 반면, 기존 읍면지역에서는 아동 수 자체가 크게 감소하면서 노인돌봄과 고령주민의 생활지원이 보다 현실적인 돌봄 문제로 제기됨
- 이러한 차이는 지역 전체에 동일한 아동돌봄 사업을 공급하는 방식보다 생활권별 인구구조와 실제 돌봄대상에 따라 정책을 차별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줌

• “그래서 지금 돌봄 나오면 돌봄 얘기 나오면은 이번에도 우리가 아 조사했는 거에 보면은 노인 돌봄. 그다음이 이제 아동 돌봄 나오는데 이제 저 이쪽에 면 지역은 무조건 1순위가 이제 노인 돌봄 얘기가 나오고 저쪽에 이제 호명 쪽은 아동 돌봄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의 당면 과제니까 여기 나가는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동 돌봄에 대해서 참 이야기하기가 참 모호한 거예요. 어른들은 애들 아동 돌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하더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아동이 있느냐라고 따져 보면은 이거예요. 뭐 용문면에 지금 중학교가 있는데 그 중학교에 전교생이 9명이야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전교생이 20명이 안 돼.” (참여자 1)

- 읍면지역의 돌봄 문제는 노인을 돌봐야 할 사람 역시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복합적임
- 농촌에서는 60~70대 여성도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으로 간주되어 자신의 농사와 가사뿐 아니라 요양보호 등 유급 돌봄노동과 마을 내 비공식 돌봄까지 함께 수행할 가능성이 나타남
- 따라서 농촌지역의 일·가정양립을 도시의 취업여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농업노동, 가족돌봄, 이웃돌봄, 유급 돌봄노동이 중첩되는 농촌 여성의 생활구조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사람이 없어. 그리고 60대 70대 이 정도가 되면 농촌 지역에서는 젊은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일 저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야. 돌봄 때문에 70대 분들은 70대 초반 여성분들은 내 일도 해야 되고 요양보호사 일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참여자 2·3)

- 농촌의 돌봄을 가정 내부의 문제로만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타남. 농촌에서는 농업노동 이후 이루어지는 가족돌봄과 마을돌봄 역시 여성의 지속적인 노동에 포함되지만, 이를 별도의 돌봄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임
- 이에 따라 향후 농촌형 여성친화도시 사업에서는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이 담당하는 사적 영역이 아니라 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이자 지역 일자리로 재평가하는 관점이 요구됨

- “농촌 여기 도시에서의 일은 기업에서 퇴근하는 그 순간 이제 일로부터 단절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시골의 일은 농사 지어서 농사 짓는 일만 일이나는 건가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정말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정말 많이 하는데 이거를 그럼 이 사람들은 돌봄으로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다 일로 생각한다는 건 거야. 우리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예를 들어 돌봄 지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애들을 이렇게 돌봄하고 일이 나뉘져 있다는 게 아니지. 이 사람들의 일에는 돌봄이 다 포함돼 있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정리해야 된다.” (참여자 3)

- 돌봄인력의 처우도 주요 문제로 나타남. 예천군에서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돌봄인력에 대한 구인수요가 많지만 낮은 임금, 높은 업무강도, 이동 부담 등으로 인해 인력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확인됨
- 특히 읍면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차량으로 대상자의 병원이나 생활서비스 이용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돌봄인력을 양성하는 것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우며 임금·처우·이동지원·업무범위 등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자격증은 있으나 일이 좀 어렵고 힘들고 급여가 낮으니까 처우나 이런 것들이 낮으니까 자꾸 자꾸 이동을 하시죠.” (참여자 5)
- “막상 가보면 급여가 굉장히 최저임금이잖아요. 최저임금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맞아요. 연세도 있다고 그러셨고 힘들어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또 이 돌봄을 하러 가는 재가 요양부터도 차량이 있으신 분들을 본인 요구자들이 희망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동을 해서 자기 볼일들 보시고 병원, 병원이라든지 개인 볼일을 보신다든지 그런 생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요양보호사들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요양보호사 분들이 차량이 없으시면 본인이 출퇴근도 문제가 되지만 이분들을 케어하기에도 조금 부족하다.” (참여자 5)

- 아동돌봄과 관련해서는 시설과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가정 내 실질적인 성별 돌봄 부담 문제도 중요한 정책수요로 확인됨
- 젊은 세대의 성평등 의식이 이전보다 개선되었음에도 실제 자녀양육에서는 여성이 주양육자로 간주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는 의견이 나타남
- 이는 여성친화도시의 돌봄사업을 공공서비스 공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와 가정 내 성평등 실천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그래서 지금 드는 거는 그 질문은 저는 아무래도 저희 또래 층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지금 여기 돌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시설들이 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양육에 있어서 주 양육자가 결국은 여성이 되고 있다는 게 계속 이어지는 고질적인 우리 사회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참여자 6)

- 또한 예천군에서는 돌봄이 의료·교통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녀가 아플 경우 지역 내 의료시설 부족으로 안동이나 대구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험의 제기되어, 농촌지역에서 돌봄의 접근성을 시설 수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의료·교통·돌봄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실상은 제일 첫 번째는 의료고 그다음에 교통이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절충하고 감당이. 예를 들어서 마트나 이런 건 솔직히 요즘은 배송이 워낙 좋으니까 어느 정도 맞춰서 사는 데 문제가 없는데 의료나 교통은 결국은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의료는 없으니까 또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 거고 가깝게는 안동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럼 또 교통이 문제인데 교통은 버스를 탔을 때 사실상 1시간 버스를 타고 갈 것 같으면 차를 최대한 이용해서 30분 내로 나가는 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보통 병원에 가더라도 제가 아파서 가는 것보다는 아이가 아파서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또 갔는데 대기 시간이 길고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대구로 나가는 게 더 빠를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여자 6)

- 따라서 예천군은 도청신도시에서는 맞벌이가구의 시간맞춤형 아동돌봄과 남성의 돌봄참여, 기존 읍면에서는 노인·생활돌봄과 돌봄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이중적 돌봄전략이 필요함
- 특히 읍면지역에서는 돌봄과 교통·의료·생활서비스를 각각 분리하여 접근하기보다 생활권 단위로 연계하는 방식이 요구되며,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생활돌봄, 이동지원, 마을돌봄 거점, 고령여성 안부·생활지원 등을 결합한 모델을 검토할 수 있음

나. 울진군: 고령여성·1인가구 중심의 생활돌봄과 돌봄인력 확보를 함께 고려

- 울진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아동인구와 높은 고령화, 지역의 공간적 분산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돌봄과 함께 고령여성의 노인·생활돌봄을 핵심과제로 설정할 필요성이 나타남
- 특히 혼자 거주하는 고령여성이 생활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동 자체가 생활돌봄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의견이 나타남

-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여성들이 많은데 젊은 여성들보다는 생활 돌봄 나이 드신 분들. 국가에서 하긴 하지만은 또 혼자 사는 여성을 뭐라 하지. 생활 기반 취약 계층. 버스는 너무너무 자주 안 다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애로사항이 있지.” (참여자 9)

- 노인돌봄이 행정과 마을 이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지역의 고령 여성 규모와 생활여건을 고려하면 현재의 돌봄 수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됨
- 특히 젊은 인구가 적고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기존 서비스의 제공 여부보다 얼마나 자주 대상자를 확인하고 실제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음

- “안 되지. 노인 돌봄이 제대로 안 되지. 글썄 여기는 젊은 층 애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인 여성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이제 대부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많고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지금 어렵단 말이야. 그걸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좀 미흡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마을 이장이 담당을 하는데 마을에서 담당하는데.” (참여자 9)

- 울진군의 돌봄 관련 또 다른 핵심문제는 시설보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점임
- 노인돌봄기관과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지만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가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주민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제기됨
- 따라서 시설이나 기관 수를 확대하는 것보다 서비스 제공인력을 확보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나타남

- “일단은 노인 돌봄이나 아동 돌봄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많이 생기고 한 것 같은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그게 다 연결되는 거긴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니까 그런 이 게 좀 그렇고 아이 돌봄도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이돌봄사들이 별로 없고 연계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차서 대기 과정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긴급 돌봄이나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력 풀 같은 게 없는 거 이런 거.” (참여자 11)

- 요양보호인력의 부족은 단순히 자격증 소지자가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기 어려움
- 자격취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참여자가 있고, 업무강도와 낮은 처우, 직업에 대한 인식 등이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따라서 돌봄인력 정책도 양성인원 또는 자격증 취득인원 중심에서 실제 취업·근속·처우개선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그러니까 저희 지역이 이렇게 60대 인구가 여기도 뭐라고 하죠? 초고령 장애 20%가 넘어가지고 노인 그게 되게 많아서 돌봄 업체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수요처는 되게 많은데 요양보호사분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군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자격 취득을 하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바로 다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격 취득만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참여자 11)

- 반면 울진군의 돌봄여건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존재함
- 한수원 지원 등을 기반으로 노인 및 아동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이 비교적 많이 구축되어 있다는 평가로, 이는 울진군의 문제 역시 돌봄시설의 절대적 부족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됨을 보여줌

- “모르지만 시골인 것 치고는 또 지방 행정은 좀 저는 잘 돼 있다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가 한수원 지원을 확실히 받아서 그런지 울진군 자체가 주변 여기 주변 지역군보다는 좀 돈이 그래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노인이 전체 적으로 사실 시골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활동이나 행사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아기 관련해서도 시설도 많이 세우고 활동도 많이 해주고 또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 지원금 주는 것도 많고 하는 것 같아서.” (참여자 10)

- 생활돌봄 서비스도 읍면 중심지에서는 공공 빨래방과 목욕시설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타나지만, 보다 작은 마을에서는 여전히 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가능성이 제기됨

- “그러니까 읍면 단위는 그래도 괜찮은 게 여기는 빨래 공공 영역에서 군 단위에서 빨래 방도 자체적으로 또 지어서 시니어 일자리로 활용을 해서 있고 또 공공 목욕탕 같은 것도 이렇게 없는 데, 거기에 지어가지고 그것도 해소를 하고. 그래서 저는 크게는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작은 단위의 정말 이런 기반 인프라가 없는 곳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여자 11)

- 따라서 울진군의 돌봄정책은 시설의 총량 확대보다 서비스가 실제 필요한 마을과 주민에게 도달하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여성 1인가구 중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고령여성에 대한 정기 안부확인, 병원동행, 식사·세탁·이미용 등 생활지원, 이동지원, 주거·화재안전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접근이 적절함
- 또한 긴급돌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단위 인력풀을 구축하고, 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이동비용을 지원하여 ‘시설은 있지만 사람이 없는 돌봄체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김천시: 돌봄서비스의 추가 공급보다 중복조정·이용관리·돌봄인력 지원으로 전환 필요

- 김천시에서는 예천군·울진군과 달리 돌봄시설이나 사업이 부족하기보다 이미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 나타남
- 따라서 김천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는 신규 돌봄사업을 계속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는 돌봄서비스를 파악하고 중복을 조정하며 이용자의 생활시간과 특성에 맞도록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있음
- 실제 현장에서는 유사한 목적의 돌봄센터와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명·대상연령·운영주체 등이 달라 담당 공무원조차 전체 사업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 “제가 볼 때 지금 지금 이 과에 와서 보니까 이름이 뭐 지역아동센터 돌봄 문화센터 이거 도대체... 복지직분들이 돼야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거 각종 시설마다 연령대만 구분해 가지고 겹치는. 그것도 많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막 제가 지금 다 그걸 할 수는 없는데 프로그램 이름만 달리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연령 이하는 연령대가 다 다르고 너무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아요. 돌봄 시설들이.” (참여자 18)

- 돌봄사업이 중앙정부·광역·기초지자체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신규사업이 기존 사업 위에 추가되는 구조 역시 서비스의 분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제기됨
-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담당부서의 업무량과 인력 한계로 전체 사업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됨
- 이는 김천의 가족친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선과제가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보다 부서 간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임을 보여줌

• “우리 복지 보조금 나가는 것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좀 처음부터 이게 체계적으로 잡혀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사업에 이게 막 보태는 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복지청들이 오죽하면은 우리가 신규 사업을 만들 때 기존에 있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일을 반드시 거쳐야지 이 사업이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막 너무 위에서 성평등 아니 보건복지부에서도 자기들도 정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8)

-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또 중앙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도 자체에서 광역에서 또 하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케이보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같은 실무자들이나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이것을 정리를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참여자 18)
- “아니요. 아니요. 그거보다도 복지 부서는 딱 3개입니다. 3개니까 이 부서가 업무가 대부분인데 그중에서도 돌봄은 저희 부서에서 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복지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도 뭐 보조금 각자 맡은 업무 쳐내는 데도 지금 야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손대려고도 엄두가예예. 엄두가 안 나서 필요성은 다들 느끼는데 손대기 힘들.” (참여자 18)

○ 시민의 입장에서 시설 수의 확대보다 관리와 이용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남. 유사한 목적의 시설이 많고 일부 시설의 이용자가 제한적인 경우 사업의 효율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임

- “돌봄센터가요. 너무 많아요. 이게.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 돌봄이 그러니까 좀 유행처럼 생겼다가 그러다가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좀 이런 것들이 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천이 해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생기는 건 좋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비슷한데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가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크게 센터 해놓고 사람은 다섯 여섯 명 이용하고 그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14)

○ 반면 긴급 아동돌봄이나 노인돌봄 자체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타남. 따라서 김천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이용률이 낮거나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고, 실제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재배치하는 방식이 적절함

- “그런 서비스는 우선 잘 되고 저는 이제 애들이 커서 그런데 제가 제 주위에는 잘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의외로 되게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 돌봄 너무 잘 돼 있죠. 김천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돼 있어요.” (참여자 14)

- 농촌지역에서도 아동돌봄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타난 반면, 아동 자체가 적고 혁신도시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생활권에 따라 수요가 다름
- 이는 김천 역시 돌봄서비스를 시 전체의 평균적인 공급량으로 판단하기보다 혁신도시의 맞벌이·아동가구, 원도심의 생활돌봄, 농촌지역의 고령여성 등 생활권별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할 필요를 보여줌

- “그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저도 유치원에 근무하러 나가는 유치원이 보면은 이제 방학도 없어 방학하는 애들은 하고 못하는 애들은 계속 운영을 하더라고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는 지역 아동 돌봄센터 이런 게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방학이 없더라고요. 수업 다 녀보면.” (참여자 13)

- 혁신도시의 맞벌이가구에서는 주민 스스로 공동육아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보다 필요한 시간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더 클 가능성도 확인됨
- 따라서 주민참여형 공동육아를 무조건 여성친화적 사업으로 간주하기보다 맞벌이 여성에게 또 다른 무급 돌봄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 가지는 분이 많지만 요새 요새 우리도 지원하면 거기다가 맞벌이. 맞벌이 그러니까 공동육아 하기는 솔직히 굉장히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애 맡기고 편하게.” (참여자 19)

-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서비스 이용자의 관계 역시 개선과제로 제기됨. 아이돌보미

와 요양보호사 등이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와 감정적 부담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돌봄노동자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에 대한 교육과 명확한 서비스 이용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이게 그리고 저는 이것도 받는 사람도 교육하고 그다음에 아이 돌봄하시는 분들이 너무 갑이예요.” (참여자 14)

- 이에 따라 김천시의 향후 돌봄 대표사업은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 기존 돌봄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이용자 중심의 연결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 보다 적절함
- 구체적으로는 아동·노인·장애·가족돌봄 관련 시설과 서비스 정보를 통합한 돌봄자원 지도 구축, 대상·시간대·생활권별 사각지대 분석, 긴급돌봄 연계체계, 돌봄노동자 권익지원, 서비스 이용자 교육 등을 하나의 정책패키지로 구성할 수 있음
- 따라서 세 지역에서는 여성일자리협의체를 형식적 회의체로 운영하기보다 지역산업부서·일자리부서·여성정책부서·새일센터·기업·여성근로자·젠더전문가가 참여하여 실제 여성고용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표사업을 발굴하는 정책조정기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향후 지역별 방향은 김천은 산업·혁신도시 연계와 중장년 여성 경력전환, 예천은 신도시 맞벌이여성과 농촌여성의 이원화된 일자리 전략, 울진은 에너지산업 여성진입과 지역자원 기반 여성청년 창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4) 지역사회 안전 및 이동 관련 정책수요: 범죄예방시설 중심에서 생활권·이동·기후·고령여성까지 포괄하는 안전정책으로 확대 필요

- 중점지역의 안전 관련 조사에서는 여성의 안전을 범죄·폭력 예방으로만 한정하기보다 야간보행, 가로등, 교통, 이동권, 고령여성의 생활안전, 기후위기와 농업노동, 사생활 침해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생활안전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확인됨

- 앞서 지역여건 분석에서도 김천시는 교통사고 5등급, 화재·생활안전·감염병 4등급으로 생활환경 전반의 안전개선 필요성이 높았고, 예천군은 범죄·생활안전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교통사고가 4등급이었으며, 울진군은 화재·범죄·감염병이 각각 4등급으로 복합적인 위험구조가 확인된 바 있음
- 심층조사에서도 이러한 지역별 차이가 일정 부분 확인되며, 특히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보다 주민이 실제 생활동선에서 체감하는 불편과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예천군: 신도시의 야간보행과 농촌의 이동·사생활 안전을 구분한 접근 필요**

- 예천군에서는 도청신도시의 비교적 잘 정비된 물리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야간에는 인적이 드문 구간과 단독주택지역, 중심상가 주변 등에서 보행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특히 주요 도로와 아파트 단지 주변은 상대적으로 밝고 이용자가 있으나, 주요 생활동선에서 벗어난 구간은 사람이 거의 없어 야간 이동을 꺼리게 되는 문제가 나타남
- 따라서 신도시의 안전정책은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안전한 공간으로 간주하기보다 여성·아동의 실제 야간 이동경로를 기준으로 보행환경을 재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함

- “아무래도 인구가 적다 보니까 야간 보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신도시도 이제 조성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보면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라고 있지만 그 부분도 이제 저녁 때 보면 이제 음주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른들이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동 혼자 이동하거나 아동과 같이 이동해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일 때도 있어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게 아파트 단지라고 봤을 때도 사람들이 주 다니는 도로에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나마 괜찮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조금 네 아파트 단지 말고 예를 들어서 단독 주택이 있는 동네들이나 경찰청 앞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할 때는 영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야간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이동을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참여자 6)

- 안전시설은 설치 이후의 관리와 이용자 관점의 점검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비상벨과 같은 시설이 존재하더라도 보행자의 방향에서 잘 보이지 않거나 위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실제 위급상황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설 설치실적보다 작동성·가시성·접근성을 점검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비상벨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게 그런 부분이 잘 설치돼 있는데 법적인 거라서 설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행자의 방향이 안 맞는 것들 종종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쪽 편에서는 보일 수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것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다 결국은 관리의 부재인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참여자 6)

- 반면 기존 농촌지역에서는 안전의 의미가 도시지역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물리적 범죄위험 외에도 소규모 마을에서 개인의 생활과 관계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주민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 이루어지는 것을 젊은 세대가 불편과 위험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남
- 이는 농촌형 여성친화도시의 안전정책에서 범죄예방과 함께 관계적 안전, 사생활 보호, 개인의 경계 존중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고려할 필요를 보여줌

• “한 동네 살면 또 그런 게 있는가 근데 예천만 해도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 걸. 특히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뭐 관여할 일이 전혀 없잖아. 촌은 옆집은 그런 게 있지 촌은 뭐 그래. 옆집에 뭐 한다고 들여다보고 항상 얘기를 하니까. 촌에서는 감천 같은 그런 동네에서는 가능한데 내가 봐서 예천읍 같은 데도 그렇게 쉽게 옆집에 별... 저거 동네의 특성이지 싫은 데가.” (참여자 4)

- 농촌의 안전을 단순히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장의 책임으로 두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타남
- 분산된 농촌공간에서는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기 어렵고 소수의 마을리더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민이 직접 위험요인을 파악하되 행정·경찰·소방 등 공공기관이 이를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함

- “그러니까 이장 부회장만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농촌 공간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안전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이라는 건 이제 내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데 30대 이하의 세대들인데 제일 중요한 안전은 무슨 안전이겠는가. 30대 이하 안전 지금 늦게 오니까 밤에 그런 안전벨트는 이 사람들은 개인화된 사람들이잖아. 개인화된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싶다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개인의 것들이 많이 노출되지 않은. 근데 시골은 안 되지. 노출되는 게 위험인 거야.” (참여자 3)

□ **울진군: 범죄안전만이 아니라 고령여성의 생활·이동과 야간환경을 포괄할 필요**

- 울진군에서는 지역 자체를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체감한다는 의견보다 고령화와 분산된 생활권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동과 생활기반의 취약성이 안전문제로 연결되는 특징이 나타남
- 특히 고령여성 1인가구가 많은 상황에서 대중교통이 자주 운행되지 않는 문제는 단순한 교통불편을 넘어 병원·장보기·생활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의 안전성을 낮출 수 있음

-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여성들이 많은데 젊은 여성들보다는 생활 돌봄 나이 드신 분들. 국가에서 하긴 하지만은 또 혼자 사는 여성을 뭐라 하지. 생활 기반 취약계층. 버스는 너무너무 자주 안 다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애로사항이 있지.” (참여자 9)

- 다른 면접에서는 울진이 전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체감되지는 않지만 일부 지역에 가로등이 부족하여 야간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나타남
- 이는 범죄발생 여부와 별개로 야간에 혼자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가 여성의 체감안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줌

- “진짜 가로등이 없는 데가 좀 많은데 이거는 뭐 여자라서 하기보다는 그냥 진짜 좀 무섭긴 하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험하다.” (참여자 10)

- 울진군은 앞선 안전지수 분석에서 화재·범죄·감염병이 모두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난 만큼 여성친화도시의 안전사업을 범죄예방시설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주거·화재·야간이동·보건의료 접근성을 함께 묶는 복합안전정책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관광·숙박·음식업 등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저녁이나 야간근무 이후 귀가가 발생할 수 있고, 고령여성은 주거 화재와 응급상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애주기와 근로형태에 따른 안전정책 차별화가 요구됨
- 또한 전문가 자문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안전사업을 기후위기와 농업노동환경 변화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제시됨
- 폭염으로 농작업 시간이 새벽이나 심야로 이동할 경우 고령 여성농업인의 건강위험과 야간 폭력·안전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이 직접 농업노동환경의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안전지도를 만드는 방식이 제안됨

- “폭염으로 인한 이른 새벽 또는 심야 시간대 농업노동이 급증한다고 했을 때, 여성 농업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마을의 안전 실태 조사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실시해보면 어떨까요? 고령의 여성 농업인에게는 건강 문제가, 세대와 상관없이 여성에게는 폭력 예방이 필요한 시간대가 아닌가 합니다.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할 때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노동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안전마을 사업 영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 28)

- 이는 울진뿐 아니라 예천 등 농어촌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방향으로, 기존의 CCTV·가로등 설치 중심 안전사업을 여성농업인의 건강·노동·이동·폭력예방이 결합된 기후안전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 따라서 울진군에서는 고령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화재·응급안전, 관광·서비스 여성근로자의 야간귀가, 여성농업인의 기후위기 대응 안전, 읍면지역 이동

권을 하나의 생활권 안전체제로 연결하는 접근이 적절함

□ **김천시: 안전인프라의 추가 설치보다 생활환경 전반의 모니터링과 환류 강화 필요**

- 김천시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는 평가가 나타나는 한편, 외곽·농촌지역의 가로등 부족, 폭염에 대응한 보행쉼터 운영, 횡단보도 등 생활안전시설의 관리 문제가 제기됨
- 이는 김천의 안전정책이 범죄예방 중심에서 교통·보행·기후·생활환경의 안전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김천은 사실 의외로 그런 거 되게 잘 돼 있는데 그래도 아직 시골 일 아니더라도 약간 외진 곳에 있잖아요. 가로등이 이런 데가 없는 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속도 있게. 그다음에 최근에는 횡단보도에 이 더운 여름에 펴지는 거 있잖아요. 쉼터. 쉼터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긴 있는데 아직도 진행률이 많이 낮다. 예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잘 안 되는 이유가 또 이게 수동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공무원이 이제 그러니까 진짜 더울 때 이게 제대로 안 펴지거나 그런 부분에 좀 더 그런 부분이 좀 예산이 좀 더 들어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참여자 14)

- 현재 시민참여단은 화장실, 안심거울, 횡단보도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여성친화도시의 안전영역에서 주민참여 기반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으나, 향후에는 모니터링 대상을 범죄예방시설에만 한정하지 않고 교통·폭염·보행약자·고령여성·주거안전 등 실제 생활불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횡단보도도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여자 14)

- 앞서 안전지수 분석에서 김천은 교통사고가 5등급으로 세 지역 중 가장 취약하게 나타났고, 화재와 생활안전도 4등급으로 확인됨
- 따라서 김천의 여성친화도시 안전대표사업은 안심거울이나 CCTV 등 범죄예방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방향보다 고령여성과 아동의 보행동선, 횡단보도, 대중교통 승하차 지점, 폭염쉼터, 농촌 외곽도로 등 생활권 단위의 교통·보행환경을 시민참여단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이 개선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민참여단이 시설을 점검한 이후 실제 개선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모니터링 자체가 형식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점검→부서 전달→개선 여부 확인→재점검의 환류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함

4) 가족친화(돌봄) 환경 관련 정책수요: 시설·서비스의 단순 확대보다

생활권별 수요, 서비스 연계, 돌봄인력, 이용시간을 고려한 접근 필요

- 중점지역의 돌봄 관련 조사결과에서는 아동돌봄이나 노인돌봄 서비스의 단순한 공급 확대만으로는 지역주민이 경험하는 돌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됨
- 특히 세 지역 모두 지역 내부의 인구구조와 생활권에 따라 돌봄수요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예천군은 도청신도시의 아동돌봄과 기존 읍면지역의 노인·생활돌봄이 병존하고, 울진군은 고령여성·1인가구 증가와 분산된 생활권으로 인해 노인돌봄·생활돌봄·이동지원의 중요성이 크며, 김천시는 이미 다양한 돌봄시설과 서비스가 존재하여 신규 시설 확충보다 기존 사업의 조정·연계와 돌봄인력의 질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나타남
- 또한 돌봄을 여성친화도시의 네 번째 목표인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에만 한정하여 접근하기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돌봄부담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남성의 돌봄참여와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이라는 점에서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주민이 직접 지역의 돌봄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와 연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예천군: 도청신도시의 아동돌봄과 읍면지역의 노인·생활돌봄을 구분하는 이중적 접근 필요

- 예천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동일한 군 안에서도 돌봄의 정책대상과 문제의 성격이 생활권별로 크게 다르다는 점임
- 도청신도시가 위치한 호명읍 등에서는 젊은 가구와 아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여 맞벌이가구의 아동돌봄과 일·가정양립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는 반면, 기존 읍면지역에서는 아동 수 자체가 크게 감소하면서 노인돌봄과 고령주민의 생활지원이 보다 현실적인 돌봄 문제로 제기됨
- 이러한 차이는 지역 전체에 동일한 아동돌봄 사업을 공급하는 방식보다 생활권별 인구구조와 실제 돌봄대상에 따라 정책을 차별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줌

• “그래서 지금 돌봄 나오면 돌봄 얘기 나오면은 이번에도 우리가 아 조사했는 거에 보면은 노인 돌봄 노인 돌봄 그다음에 이제 아동 돌봄 나오는데 이제 저 이쪽에 면 지역은 무조건 이제 1순위가 이제 노인 돌봄 얘기가 나오고 저쪽에 이제 호명 쪽은 이제 아동 돌봄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이제 당면 과제니까 당면 과제니까 여기 나가는데 놓여준 지역에서는 아동 돌봄에 대해서 참 이야기하기가 참 모호한 거예요. 어른들은 애들 아동 돌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하더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아동이 있느냐라고 따져 보면은 이거예요. 뭐 용문면에 지금 중학교가 있는데 그 중학교에 전교생이 9명이야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전교생이 20명이 안 돼.” (참여자 1)

- 읍면지역의 돌봄 문제는 노인을 돌봐야 할 사람 역시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적임
- 농촌에서는 60~70대 여성도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으로 간주되어 자신의 농사와 가사뿐 아니라 요양보호 등 유급 돌봄노동과 마을 내 비공식 돌봄까지 함께 수행할 가능성이 나타남
- 따라서 농촌지역의 일·가정양립을 도시의 취업여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농업노동, 가족돌봄, 이웃돌봄, 유급 돌봄노동이 중첩되는 농촌 여성의 생활구조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사람이 없어. 그렇구나. 그리고 60대 70대 이 정도가 되면 농촌 지역에서는 젊은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일 저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야. 돌봄 때문에 70대 분들은 70대 초반 여성분들은 내 일도 해야 되고 요양보호사 일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더 다 맞아요.” (참여자 2·3)

- 농촌의 돌봄을 가정 내부의 문제로만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타남
- 농촌에서는 농업노동 이후 이루어지는 가족돌봄과 마을돌봄 역시 여성의 지속적인 노동에 포함되지만, 이를 별도의 돌봄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임
- 이에 따라 향후 농촌형 여성친화도시 사업에서는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이 담당하는 사적 영역이 아니라 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이자 지역 일자리로 재평가하는 관점이 요구됨

- “농촌 여기 도시에서의 일은 기업에서 퇴근하는 그 순간 이제 일로부터 단절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시골의 일은 농사 지어서 농사 짓는 일만 일이라는 건가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정말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정말 많이 하는데 이거를 그럼 이 사람들은 돌봄으로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다 일로 생각한다는 건 거야. 우리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예를 들어 돌봄 지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애들을 이렇게 돌봄하고 일이 나뉘져 있다는 게 아니지 이 사람들의 일에는 돌봄이 다 포함돼 있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정리해야 된다.” (참여자 3)

○ 돌봄인력의 처우도 주요 문제

- 예천군에서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돌봄인력에 대한 구인수요가 많지만 낮은 임금, 높은 업무강도, 이동 부담 등으로 인해 인력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확인됨
- 특히 읍면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차량으로 대상자의 병원이나 생활서비스 이용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돌봄인력을 양성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임금·처우·이동지원·업무범위 등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자격증은 있으나 일이 좀 어렵고 힘들고 급여가 낮으니까 처우나 이런 것들이 낮으니까 자꾸 자꾸 이동을 하시죠.” (참여자 5)
- “막상 네 가보면 급여가 굉장히 최저임금이잖아요. 최저임금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맞아요. 연세도 있다고 그러셨고 힘들어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또 이 돌봄을 하러 가는 제가 요양부터도 차량이 있으신 분들을 본인 요구자들이 희망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동을 해서 자기 불일들을 보시고 병원 병원이라든지 네 개인 불일을 보신다든지 그런 생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요양보호사들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요양보호사 분들이 차량이 없으시면 본인이 출퇴근도 문제가 되지만 이분들을 케어하기에도 조금 부족하다.” (참여자 5)

- 아동돌봄과 관련해서는 시설과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가정 내 실질적인 성별 돌봄 분담 문제도 중요한 정책수요로 확인됨
- 젊은 세대의 성평등 의식이 이전보다 개선되었음에도 실제 자녀양육에서는 여성이 주양육자로 간주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는 의견이 나타남
- 이는 여성친화도시의 돌봄사업을 공공서비스 공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와 가정 내 성평등 실천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그래서 지금 드는 거는 그 질문은 저는 아무래도 저희 또래 층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지금 여기 돌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시설들이 늘고 있지만 실질적인 양육에 있어서 주 양육자가 결국은 여성이 되고 있다는 게 계속 이어지는 고질적인 우리 사회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참여자 6)

- 또한 예천군에서는 돌봄이 의료·교통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녀가 아플 경우 지역 내 의료시설 부족으로 안동이나 대구 등 다른 지역으

로 이동해야 하는 경험의 제기되어, 농촌지역에서 돌봄의 접근성을 시설 수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의료·교통·돌봄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실상은 제일 첫 번째는 의료고 그다음에 교통이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절충하고 감당이 예를 들어서 마트나 이런 건 솔직히 요즘은 배송이 워낙 좋으니까 어느 정도 맞춰서 사는 데 문제가 없는데 의료나 교통은 결국은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의료는 없으니까 또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 거고 가깝게는 안동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럼 또 교통이 문제인데 교통은 버스를 탔을 때 사실상 1시간 버스를 타고 갈 것 같으면 차를 최대한 이용해서 30분 내로 나가는 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보통 병원에 가더라도 제가 아파서 가는 것보다는 아이가 아파서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또 갔는데 대기 시간이 길고 이러다 보니까 여떨 때는 대구로 나가는 게 더 빠를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여자 6)

- 따라서 예천군은 도청신도시에서는 맞벌이가구의 시간맞춤형 아동돌봄과 남성의 돌봄참여, 기존 읍면에서는 노인·생활돌봄과 돌봄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이중적 돌봄전략이 필요함
- 특히 읍면지역에서는 돌봄과 교통·의료·생활서비스를 각각 분리하여 접근하기보다 생활권 단위로 연계하는 방식이 요구되며,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생활돌봄, 이동지원, 마을돌봄 거점, 고령여성 안부·생활지원 등을 결합한 모델을 검토할 수 있음

□ **울진군: 고령여성·1인가구 중심의 생활돌봄과 돌봄인력 확보를 함께 고려할 필요**

- 울진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아동인구와 높은 고령화, 지역의 공간적 분산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돌봄과 함께 고령여성의 노인·생활돌봄을 핵심과제로 설정할 필요성이 나타남
- 특히 혼자 거주하는 고령여성이 생활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동 자체가 생활돌봄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의견이 나타남

-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여성들이 많은데 젊은 여성들보다는 생활 돌봄 나이 드신 분들. 국가에서 하긴 하지만은 또 혼자 사는 여성을 뭐라 하지. 생활 기반 취약계층. 버스는 너무너무 자주 안 다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애로사항이 있지.” (참여자 9)

- 노인돌봄이 행정과 마을 이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지역의 고령 여성 규모와 생활여건을 고려하면 현재의 돌봄 수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됨
- 특히 젊은 인구가 적고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기존 서비스의 제공 여부보다 얼마나 자주 대상자를 확인하고 실제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음

- “안 되지. 노인 돌봄이 제대로 안 되지. “글쎄 여기는 젊은 층 애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인 여성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이제 대부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지금 어렵단 말이야. 그걸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좀 미흡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마을 이장이 담당을 하는데 마을에서 담당하는데.” (참여자 9)

- 울진군의 돌봄 관련 또 다른 핵심문제는 시설보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점임
- 노인돌봄기관과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지만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가 부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주민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제기됨
- 따라서 시설이나 기관 수를 확대하는 것보다 서비스 제공인력을 확보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나타남

- “일단은 노인 돌봄이나 아동 돌봄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많이 생기고 한 것 같은데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그게 다 연결되는 거긴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니까 그런 이게 좀 그렇고. 아이 돌봄도 원하시는 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이돌봄사들이 별로 없다고 들었어요... 대기 과정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지 . 그리고 긴급 돌봄이나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력 풀 같은 게 없는 거 이런 거.” (참여자 11)

- 요양보호인력의 부족은 단순히 자격증 소지자가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기 어려움
- 자격취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례가 있고, 업무강도와 낮은 처우, 직업에 대한 인식 등이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 따라서 돌봄인력 정책도 양성인원 또는 자격증 취득인원 중심에서 실제 취업·근속·처우개선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그러니까 저희 지역이 이렇게 60대 인구가 여기도 뭐라고 하죠? 초고령 장애 20%가 넘어가지고 노인 그게 되게 많아서 돌봄 업체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수요처는 되게 많은데 요양보호사분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군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자격 취득을 하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바로 다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격 취득만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참여자 11)

- 반면 울진군의 돌봄여건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존재함
- 한수원 지원 등을 기반으로 노인 및 아동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이 비교적 많이 구축되어 있다는 평가로, 이는 울진군의 문제 역시 돌봄시설의 절대적 부족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됨을 보여줌

- “모르지만 시골인 것 치고는 또 지방 행정은 좀 저는 잘 돼 있다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가 한수원 지원을 확실히 받아서 그런지 울진군 자체가 주변 여기 주변 지역군보다는 좀 돈이 그래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노인이 전체 적으로 사실 시골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활동이나 행사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아기 관련해서도 시설도 많이 세우고 활동도 많이 해주고 또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 지원금 주는 것도 많고 하는 것 같아서.” (참여자 10)

- 생활돌봄 서비스도 읍면 중심지에서는 공공 빨래방과 목욕시설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타나지만, 보다 작은 마을에서는 여전히 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가능성이 제기됨

- “그러니까 읍면 단위는 그래도 괜찮은 게 여기는 빨래 공공 영역에서 군 단위에서 빨래 방도 자체적으로 또 지어서 시니어 일자리로 활용을 해서 있고 또 공공 목욕탕 같은 것도 이렇게 없는 데 거기에 지어가지고 그것도 해소를 하고 그래서 저는 크게는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작은 단위의 정말 이런 기반 인프라가 없는 곳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여자 11)

- 따라서 울진군의 돌봄정책은 시설의 총량 확대보다 서비스가 실제 필요한 마을과 주민에게 도달하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여성 1인가구 중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고령여성에 대한 정기 안부확인, 병원동행, 식사·세탁·이미용 등 생활지원, 이동지원, 주거·화재안전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접근이 적절함
- 또한 긴급돌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단위 인력풀을 구축하고, 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이동비용을 지원하여 ‘시설은 있지만 사람이 없는 돌봄체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김천시: 돌봄서비스의 추가 공급보다 중복조정·이용관리·돌봄인력 지원으로 전환 필요

- 김천시에서는 예천군·울진군과 달리 돌봄시설이나 사업이 부족하기보다 이미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 나타남
- 따라서 김천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는 신규 돌봄사업을 계속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는 돌봄서비스를 파악하고 중복을 조정하며 이용자의 생활시간과 특성에 맞도록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있음
- 실제 현장에서는 유사한 목적의 돌봄센터와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명·대상연령·운영주체 등이 달라 담당 공무원조차 전체 사업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 “제가 볼 때 지금 지금 이 과에 와서 보니까 이름이 뭐 지역아동센터 돌봄 문화센터 이거 도대체...복직분들이 돼야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거 각종 시설마다 연령대만 구분해 가지고 겹치는. 그것도 많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막 제가 지금 다 그걸 할 수는 없는데 프로그램 이름만 달리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연령 이하는 연령대가 다 다르고 너무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아요. 돌봄 시설들이.” (참여자 18)

- 돌봄사업이 중앙정부·광역·기초지자체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신규사업이 기존 사업 위에 추가되는 구조 역시 서비스의 분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제기됨
-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담당부서의 업무량과 인력 한계로 전체 사업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됨
- 이는 김천의 가족친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선과제가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보다 부서 간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임을 보여줌

- “우리 복지 보조금 나가는 것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좀 처음부터 이게 체계적으로 잡혀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사업에 이게 막 보태는 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복지청들이 오죽하면은 우리가 신규 사업을 만들 때 기존에 있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일을 반드시 거쳐야지 이 사업이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게 막 너무 위에서 성평등 아니 보건복지부에서도 자기들도 정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또 중앙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도 자체에서 광역에서 또 하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케이보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같은 실무자들이나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이것을 정리를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참여자 18)
- “아니요. 아니요. 그거보다도 복지 부서는 딱 3개입니다. 3개니까 이 부서가 업무가 대부분인데 그중에서도 돌봄은 저희 부서에서 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복지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도 뭐 보조금 각자 맡은 업무 처내는 데도 지금 야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손대려고도 엄두가예예. 엄두가 안 나서 필요성은 다들 느끼는데 손대기 힘들.” (참여자 18)

- 시민의 입장에서 시설 수의 확대보다 관리와 이용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남
- 유사한 목적의 시설이 많고 일부 시설의 이용자가 제한적인 경우 사업의 효율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임

- “돌봄센터가요. 너무 많아요. 이게.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 돌봄이 그러니까 좀 유행처럼 생겼다가 그러다가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천이 해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생기는 건 좋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비슷한데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가 많긴 많아요.” (참여자 14)
- “네네 그러니까 크게 센터 해놓고 사람은 다섯 여섯 명 이용하고 그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14)

- 반면 긴급 아동돌봄이나 노인돌봄 자체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타남

- 따라서 김천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이용률이 낮거나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고, 실제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재배치하는 방식이 적절함

• “그런 서비스는 우선 잘 되고 저는 이제 애들이 커서 그런데 제가 제 주위에는 잘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건 의외로 되게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 돌봄 너무 잘 돼 있죠. 김천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돼 있어요.” (참여자 14)

- 농촌지역에서도 아동돌봄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타난 반면, 아동 자체가 적고 혁신도시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생활권에 따라 수요가 다름
- 이는 김천 역시 돌봄서비스를 시 전체의 평균적인 공급량으로 판단하기보다 혁신도시의 맞벌이·아동가구, 원도심의 생활돌봄, 농촌지역의 고령여성 등 생활권별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할 필요를 보여줌

• “그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저도 유치원에 근무하러 나가는 유치원이 보면은 이제 방학도 없어 방학하는 애들은 하고 못하는 애들은 계속 운영을 하더라고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는 지역 아동 돌봄센터 이런 게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방학이 없더라고요. 수업 다녀보면.” (참여자 13)

- 혁신도시의 맞벌이가구에서는 주민 스스로 공동육아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보다 필요한 시간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더 클 가능성도 확인됨
- 따라서 주민참여형 공동육아를 무조건 여성친화적 사업으로 간주하기보다 맞벌이 여성에게 또 다른 무급 돌봄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 가지는 분이 많지만 요새 요새 우리도 지원하면 거기다가 맞벌이. 맞벌이 그러니까 공동육아 하기는 솔직히 굉장히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애 맡기고 편하게.” (참여자 19)

-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서비스 이용자의 관계 역시 개선과제로 제기됨
- 아이돌보미와 요양보호사 등이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와 감정적 부담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돌봄노동자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에 대한 교육과 명확한 서비스 이용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이게 그리고 저는 이것도 받는 사람도 교육하고 그다음에 아이 돌봄하시는 분들이 너무 갑이에요.” (참여자 14)

- 이에 따라 김천시의 향후 돌봄 대표사업은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 기존 돌봄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이용자 중심의 연결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 보다 적절함
- 구체적으로는 아동·노인·장애·가족돌봄 관련 시설과 서비스 정보를 통합한 돌봄자원 지도 구축, 대상·시간대·생활권별 사각지대 분석, 긴급돌봄 연계체계, 돌봄노동자 권익지원, 서비스 이용자 교육 등을 하나의 정책패키지로 구성할 수 있음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및 대표성 관련 정책수요: ‘참여 인원’ 확대에서 실질적인 발언권·의사결정권·활동기반 강화로 전환 필요

- 중점지역 조사에서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자체는 과거보다 확대되고 있으나, 활동의 양적 확대가 실제 정책결정이나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대표성으로 충분히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됨
- 특히 여성들이 봉사활동, 교육, 농업·가공, 각종 단체활동, 시민·군민참여단 등에

-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장, 위원회, 지역협의체, 정치·행정의 주요 의사결정 영역에서는 여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는 의견이 나타남
- 이는 여성친화도시의 다섯 번째 목표인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단순한 교육횟수나 참여단 활동실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여성이 지역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의견을 공론화하며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여성친화도시 제도에서도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는 여성의 지역활동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와 활동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두고 있음

□ 예천군: 여성의 지역활동 증가에도 마을·협의체의 실질적 대표성에는 한계 존재

- 예천군에서는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마을의 공식적인 대표자인 이장은 여전히 남성 중심이라는 의견이 확인됨
- 여성 이장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여성 이장의 비중이 낮고, 이장직 자체를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일자리도 있고요. 낮은 대표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을 이장들이 조금 여성들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네 거의 대부분은 남성들이 제일 많으시거든요.” (참여자 5)

- 실제 여성 이장으로 활동하는 경험에서는 여성의 발언을 제한하는 분위기가 과거보다 많이 완화되었고 남녀 간 차별을 크게 체감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확인됨
- 이는 농촌지역의 여성대표성이 고정된 상태라기보다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여성리더의 경험을 활용하여 새로운 여성리더를 발굴하는 정책이 가능함을 시사함

- “차이는 없어요. 옛날에는 조금씩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어디 가도 제가 그냥 당당하게 할 말하고 그럴이 커서 그런지 크게 좌우하지는 않아요.” (참여자 8)
- “그런 데 대해서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요새 매스컴에도 많이 얘기하고 이래서 그런지 남자들도 옛날보다는 조심들을 많이 하고 그래도 뭐 좀 몰지각한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가는 입장에서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라고 넘어가고 그렇죠.” (참여자 8)

○ 그러나 여성들이 이장 등 지역의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존재하더라도 기존 남성 리더들이 장기간 자리를 유지하거나 이장직은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이 여성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제기됨

- “아무래도 이제 여성 앞으로는 더 여 여성들이 활발하고 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장 들은 많아요. 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많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퇴 직을 안 하니까 그냥 못 나오는 거죠. 그런데 또 일부는 또 이런 이장들은 이제 선입견 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해야 된다는 이런 옛날부터 고정관념 그렇구나 그런 게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렇지만 요즘 세대에 그거 그렇게 논하는 사람이 조금 그렇지 뭐 요즘에는 당당하게 다 잘해요.” (참여자 8)

○ 또한 각종 청년협의체나 주민협의체에 여성이 참여하고 대표자로 선출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직 자체의 정책영향력이 약하면 여성대표성이 실질적인 정책참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타남

○ 즉, 여성의 참여비율만 높이는 것과 참여한 여성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 중요하게 확인됨

- “제가 작년까지는 싶은데 제가 예천군 청년협의체라는 거를 활동을 해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맡았던 분과에서는 여성 선생님들이 더 많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이 질문하신 문제 문항에서 생각하는 그런 대표성과는 좀 낮다고 관계가 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협의체에서 대표가 여성으로 선출되고 하긴 했지만 그 뽑힌 대표의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했을 때 목소리가 반영되는 유무를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아무 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협의체 자체에 어떻게 보면 힘이 없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참여자 6)

- 여성의 참여 자체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젊은 세대의 협의체에서도 분과장 등 중간 리더 역할은 남성이 담당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남
- 이는 여성참여의 양적 증가만으로 리더십 구조가 자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줌

- “아무래도 그때 연령대가 30대에서 40대 정도로 좀 나이가 이제 예천군에서 얘기하는 청년의 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층이 좀 있다 보니까 여성이 대표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그런 거리감은 없었는데 거기 안에 4개의 분과가 있었는데 결국은 분과장들은 결국은 다 남성들이 하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6)

- 따라서 예천군의 여성대표성 정책은 위원회 여성비율이나 여성 이장 수와 같은 양적지표를 관리하는 것과 함께 여성들이 실제 마을의 의제를 제안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하는 질적 관리가 필요함
- 특히 도청신도시에서는 청년여성·맞벌이여성·전문직 여성 등 새로운 여성인재를 주민자치·지역협의체와 연결하고, 농촌 읍면에서는 여성농업인·부녀회·생활지원 활동가 등을 이장·주민자치·마을위원회 등 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진입시키는 이원화된 전략이 적절함

□ 울진군: 여성의 실제 지역활동과 공식적인 의사결정권 사이의 간극 해소 필요

- 울진군에서도 여성들이 지역의 농업·교육·가공·창업 등의 활동에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결정 및 대표영역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낮고 여성의 역할을

보조적으로 보는 문화가 남아 있다는 의견이 확인됨

- 특히 여성의 대표성과 정책결정 참여가 충분하지 않으며, 지역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타남

- “대표성 참여 엄청 부족하지. 일단은 이번에 인수위에 한 20명 그어지는데 여자가 한명 들어갔다니까 김복자 이거 보수적인 내가 얘기잖아 보수적이고 좀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고를 경북 특히 이쪽에는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다 이게 뭐야 보조로 생각하지 주로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주로 여자 대표성 대표성.” (참여자 9)

- 농업·가공·창업·교육 등 실제 활동영역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활발함에도 이를 지역 경제나 농업정책의 핵심주체로 인정하기보다 보조적인 역할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 “회의나 참여 내지 가공 가공 창업이나 가공 같은 거는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는데 교육도 여성들이 받긴 하는데 여전히 가부장적이라 여성을 보조 수단으로 생각한다니까.” (참여자 9)

- 다른 조사에서도 공식적인 지역정치와 의사결정 과정이 남성 중심이며 여성의 수가 적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대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가 나타남

- “어찌 됐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지만 여성 뭐라 하죠? 유리 천장이라 하듯이 이렇게 의장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 참여 비율이 낮긴 하니까 그분들이 10명이면 2명이 안 되니까 아직 대표하기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에는 부족하고 여기도 보면 의 의원님도 그렇고 거의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아직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참여자 11)

- 울진에서는 청년여성의 경우 전통적인 여성단체와 다른 방식의 사회참여 수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앞선 조사에서 여성청년·창업자들이 서로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렵고 네트워크 기회를 필요로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어, 향후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사업은 기존 여성단체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여성·여성창업가·전문직 여성·귀향·이주여성 등 다양한 집단을 연결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울진은 원전·에너지산업이라는 지역의 핵심 의제가 존재하는 만큼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를 복지·봉사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에너지, 환경, 안전, 지역개발, 관광 등 군의 핵심 정책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
- 여성들이 실제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영역과 정책결정권을 갖는 영역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향후 울진형 여성친화도시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

□ 김천시: 시민참여단 등 활동기반은 존재하나 공론화 정책제안 기능을 강화할 필요

- 김천시는 시민참여단을 비롯하여 여성기업, 여성 봉사단체 등 여성의 지역활동 기반이 일정 수준 존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남
- 특히 지역사회에서 실제 활동력을 가진 여성들이 많아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추진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확인됨

• “우선은 여성 기업이라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이 운영하는 봉사단체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천의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여성들이 좀 많아요. 남성들보다 비효율적으로 활동력이나 추진력이 여성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오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14)

- 또한 사회참여 자체는 비교적 활발하다는 평가도 나타남

• “사회 참여가 많은 쪽인 것 같아요. 예 사회 참여 쪽에서.” (참여자 15)

- 그러나 지역의 여성대표성과 의사결정 참여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함께 나타남. 특히 여성들이 자신의 생활문제와 정책요구를 논의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공

간과 기회가 부족하여, 개별적으로 문제를 느끼더라도 이를 정책언어로 전환하거나 공동의 의제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 “충분하지는 않고 그래도 적당한 없지는 않다. 이게 뭔가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우선은 제가 금방 가장 원초적으로 이 대표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누군가 말해서 뭔가 이야기할 공간이 없으면은 기본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가 모이고 의논하고 뭔가 문제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적이고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 대표성 자체의 지수도 낮출 수밖에 없어 없어요. 개인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공론화되지 않으면 그걸 말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거든요.” (참여자 14)

- 이러한 의견은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사업에서 여성활동 지원을 단순 교육이나 행사 중심으로 운영하기보다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활동공간과 공론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를 보여줌
- 특히 원도심의 유휴공간, 주민센터 등 기존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별도의 대규모 시설을 신축하지 않고 여성·시민참여단·지역활동가가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 김천의 시민참여단 활동 역시 현재 시설·공간의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기반이 존재하므로 향후에는 활동영역을 정책과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경북지역 여성친화도시 분석에서도 김천 시민참여단은 교육·정기회의·홍보·시설 모니터링은 수행하고 있으나 정책모니터링과 사업 직접운영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어, 향후 활동 고도화의 필요성이 확인됨
- 따라서 김천시에서는 시민참여단의 역할을 ‘시설을 점검하는 모니터링단’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시민정책파트너’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매년 일자리·안전·돌봄 등 5대 목표 중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시민참여단이 사업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사업 시행 후 이용자 관점에서 평가하며, 개선안을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여성친화도시 사업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중점지역의 주민·현장조사와 별도로 의성군 여성친화도시 추진 공무원과 여성친화도시 전문가, 문화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경험과 5대 목표별 사업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이들 자료는 김천·예천·울진 주민의 직접적인 정책수요라기보다 실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확인된 시행착오와 사업추진 조건, 다른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사업방식, 향후 중점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개발 참고의견으로 활용함

특히 전문가 의견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5대 목표별로 각각 하나씩 만드는 방식보다 지역의 실제 현안을 성평등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일자리·돌봄·안전·지역사회 참여를 서로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방향이 공통적으로 제시됨

(1) 타 지역 추진경험에서 확인된 시사점: 우수사례의 단순 도입보다

지역여건에 맞는 '전환'이 중요

- 군 지역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할 경우 도시지역의 우수사업을 그대로 도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실제 추진경험을 통해 확인됨
- 의성군은 여성친화도시 추진 초기 경북에서 비교적 경험이 축적된 도시지역의 사례를 참고하였으나, 특히 여성일자리 분야에서 기업·일자리 기반과 예산규모가 다른 군 지역에는 동일한 방식의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도시지역에서는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가능하더라도 기업이나 일감 자체가 부족한 군 지역에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다른 방식의 정책모델을 모색하게 된 경험이 제시됨

- “일단은 이유는 저희가 군수님의 그러니까 공약 사항 공약 사항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했었어요. 그거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의성군에 이제 발전 그런 걸 하는 것 중에 하나 나온 게 이제 지자체 브랜드 이미지 이런 거 하는 거 해서 여성 친화 도시 아동친화 도시 여러 가지 고령 친화 도시 이런 거를 하는 것 중에 나와서 그래도 이제 여성 친화 도시를 추진해 보자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이거를 시작을 하려고 하니깐 사실은 저희도 다 거의 시고 경북에 참고할 만한 데도 없고 이래서 일단은 경북에 참고할 만한 데가 포항이 그래도 좀 잘하는 데라서 첫 번째 벤치마킹을 갔더니 이게 참고할 만한 거는 있었는데 이게 어느 분야에서 제일 괴리감이 있었냐면 일자리 여성 경제 사회 참여에서 거기에는 시비를 상당히 역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약간 일자리 편의점처럼 포항에도 맞아 뭔가 경력 사업 경력 단절이 아니고 이제 뭐죠?”
- “경력 보유 여성 네 그런 분들을 시간제로 해서 일자리 해 주는 거를 사업을 하더라고 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가져와서 하려니 이게 사실은 저희 쪽에서 뭔가 일자리를 줄 만한 그 일도 없고 기업이나 뭐 그런 것도 사실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긴급 돌봄 하면은 그래도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면도 있고 또 단절 여성을 또 이렇게 돌봄으로 쓸 수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하다가 사실은 좀 성과가 미약할 것 같아서 또 다른 분야로 저희가 가는데.” (참여자 21)

- 이후 유사한 농촌지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마을단위의 성평등 교육과 공동체 활동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한 경험이 나타남
- 이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에서 ‘우수사례’의 의미를 동일한 사업을 복제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사업이 해결하려 했던 문제와 작동방식을 이해한 후 해당 지역의 자원과 주민구조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줌

- “그래서 거기에 무슨 단디 마을 단디 네 학교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마을마다 가서 민간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공동체식으로 하는 거 보고 우리도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양성평등 마을 만들기 이쪽으로 간 거거든요.” (참여자 21)

- 특히 군 지역에서는 기업기반이 약해 여성일자리를 독립된 취업사업으로 만들기 어려운 경우 돌봄·생활서비스·농촌공동체 등 지역에서 실제 필요한 일을 여성의

경제활동과 연결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됨

- “여기서는 일자리를 해도 단발성으로 끝나고 의미 없는 일자리밖에 못 만들 것 같은 생각이 아까 강의할 때도 잠깐 들어서 저희 쪽에는 아마 이제 그래도 그나마 저는 보니까는 마을 가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른 시군이라 비교는 잘 모르겠어요.”
-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가 사실 좀 제일 고민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일자리는 여성 농업인 그쪽으로 한 개 지었는데 그래서 오늘 하면서 사실 돌봄 쪽으로 긴급 돌봄이 저희가 지방 사멸 대응 기금으로 지금 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그나마 조금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하고 그런 이제 돌봄만 연계하는 게 아니고 저희 통합 돌봄 서비스라고 안부 확인하고 그런 일도 있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도 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은 일자리 부분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참여자 21)

- 실제 긴급돌봄 사업을 운영하면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 가구의 돌봄수요가 확인된 경험도 나타남
- 이는 사업을 사전에 완결된 형태로 설계하기보다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실제 수요를 발견하고 사업대상을 수정·확대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보여줌

- “근데 저희가 긴급 돌봄을 해보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아이 돌봄 서비스라는 그거 국비 사업이 있는데 그거에도 항상 이제 미연계 가구가 조금 한 10가구 넘게 항상 있더라고요. 매달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용 못하는 이유가 돌봄사가 연계가 안 돼가지고 못하는 게 발생하니 우리가 그럼 조금 돌봄사를 긴급으로 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만들었는데 사실 그것도 몇 가구 있긴 한데 거의 이제 아이 돌봄 서비스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은 이용을 못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 일하러 들어온 그분들이 이제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거의 이용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생각도 못한 수요를 이제 그래서 그분들도 여기서 이제 뭔가 일을 하려면 애들도 맡아줄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있어서 약간 좀 의외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21)

- 따라서 중점지역에서도 다른 여성친화도시의 우수사례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지역의 산업기반, 인구규모, 생활권, 행정인력, 주민조직의 특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변환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칠 필요가 있음
- 김천은 산업·혁신도시 기반을 활용할 수 있지만 예천과 울진은 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므로 동일한 여성일자리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고, 예천은 마을·농업·돌봄, 울진은 에너지·관광·생활서비스 등 지역자원과 연결하는 방식이 요구됨

(2)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전담인력 확보에서 '정책조정 기능' 강화로 전환 필요

- 전문가 자문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과 관련하여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핵심은 담당조직이 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위기, 산업변화 등 주요 현안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하고 관련부서의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의견임
- 서면자문에서는 특히 향후 지역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성인지 통계도 단순히 남녀 수치를 구분하는 자료가 아니라 지역현안을 분석하고 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이 명확하게 제안됨

-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확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전환사회 등 지역 현안을 성평등 관점에서 해석하고 부서 간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조정 기능이 중요하다. 성인지 통계도 단순 성별 분리통계가 아니라 인구구조, 돌봄, 노동, 안전, 디지털 접근성 등 지역 현안을 분석하는 정책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참여자 26)

- 실제 군 지역의 추진경험에서는 상위 결재를 통해 부서협조를 요청하더라도 실무 담당자까지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취지와 역할이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남
- 이는 협업을 단순히 공문이나 협조요청으로 확보하기보다 사업기획 단계에서 관련 부서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역할을 설정하는 구조가 필요함을 보여줌

- “복숭아 이거 이거 아니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이번에 부서 협업 문제도 저희가 공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 결제까지 다 협조 받아서 그 공문은 결제는 했는데 이게 과장님한테 설명해서 결제를 했는데 그 밑에 실무 팀장이나 담당자는 거의 모르는 일처럼.” (참여자 21)

- 또한 각 부서의 기존 사업을 여성친화도시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여성친화도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업무에서 어떤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함
- 따라서 여성친화도시의 성평등 추진기반은 별도의 여성정책을 많이 만드는 방향보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연계하여 일반 부서 사업의 추진방식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여성일자리협의체를 ‘회의체’에서 실행플랫폼으로 전환할 필요

- 전문가 의견에서는 여성일자리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몇 차례 실시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보다 실제로 지역 여성에게 지속가능한 일거리와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됨

- “협의체 구성과 회의 횟수보다 실제 여성 일거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조직화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협의체는 행정·의회·전문가·기업·여성단체가 함께 지역 일거리와 정책을 논의하는 실행 플랫폼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참여자 26)

- 군 지역의 실제 추진경험에서도 기존 도시의 일자리사업을 그대로 도입하기 어렵고, 여성에게 제공할 기업이나 일감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확인됨
- 따라서 여성일자리협의체가 해야 할 역할도 이미 존재하는 취업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수준보다 지역에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여성의 소득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기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 다른 전문가 사례에서는 기존 청년창업 사업을 여성친화도시와 연결하여 여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후 컨설팅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일반사업을 단계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제시됨

• “합천에는 안 그래도 일자리 사업이 너무 군은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게 이제 경제과에서 하는 그러니까 타 부서 사업이죠. 그러니까 창업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조금 이거를 여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성 일자리가 워낙 합천이 없으니까 청년 여성도 없고 여성 일자리도 없으니까 그나마 이 창업 지원 사업에 이제 여성 참여를 조금 적극적으로 독려하자 해서 원래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었는데 청년 여성 창업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꾸고 그쪽 경제과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이 사업에 이제 공고를 그런 식으로 이제 내 내서 여성 창업자가 필리 이제 지원이 되게끔.” (참여자 23)

- 이는 여성친화도시의 경제참여 사업을 반드시 신규 여성전용사업으로 개발할 필요가 없으며 지역경제·청년·소상공인·농업·기업지원 등 기존 일반사업의 대상과 추진 방식을 성평등하게 개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경북의 미조성 시군은 재정과 기업기반의 차이가 큰 만큼 김천에서는 산업·공공기관 연계 여성고용 확대, 예천에서는 공공·농식품·생활서비스, 울진에서는 에너지·관광·해양산업과 같은 지역산업별 차별화된 여성일자리 의제를 여성일자리협의회가 발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지역사회 안전 증진: 시설 설치 중심에서 주민이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안전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전문가 의견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안전사업이 CCTV·가로등·안심거울 등 물리적 시설 설치에 집중되는 경향에서 벗어나 주민이 생활공간의 위험을 직접 조사하고, 행정과 함께 개선하고, 그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 자체를 사업화할 필요가 제시됨
- 마을단위 안전사업의 경우 특정 시설 하나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실제

활동범위를 중심으로 생활환경 전체를 조사하고, 주민과 시민참여단이 함께 안전 의제를 발굴하는 방식이 제안됨

- “그래서 시민참여단이든 어쨌든 들어가서 안전 이 좀 우려되어지는 그런 마을을 하나 지정을 해서 안전 반상회를 하자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이 총장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안전 교육도 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지를 CCTV 설치한다고 CCTV만 딱 보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마을에 오백보 삼처럼 그 마을에 어쨌든 활동의 주 영역들 중심으로 반경을 넓혀가면서 예. 안전을 점검하고 시민참여단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시민참여단은 거기만 해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1호 2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산하는 사업을 제가 좀 권해드리거든요.” (참여자 24)

○ 시민참여단의 제안이 실제 행정조치로 연결되기 위해 전문가·담당부서·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가 함께 검토하는 방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그래서 어떤 이제 합천도 국민 참여단 활동 중에 이제 안전 분과는 네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진짜 이제 순찰도 같이 돌고 이제 모니터링하고 하면서 안전 시설에 대한 여기도 개선 의견을 국민 참여단들이 내요. 그림에 내면 이 국민 참여단들의 의견을 군에서 초창기부터 어떻게 그걸 했냐면 이제 저 전문가 부르고 그다음에 부서 부서의 담당자를 다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국민 참여단들이 실제 모니터링하면서 나온 의견 있잖아요. 의견을 하나하나 검토를 다 해서 부서에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재단에서 이제 저랑 저 이제 가서 국민참여단 의견에 대해서 이제 부서 담당자도 오고 이제 이제 전문가도 결합하고 그다음에 여친 담당 부서에서도 같이 이렇게 세 곳이 모여가지고 국민참여단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 같이 막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참여자 23)

○ J농어촌지역에서는 안전의 범위를 기후위기와 여성농업인의 노동환경으로 확장하는 사업도 제안됨

- 특히 폭염으로 농작업 시간이 이른 새벽이나 심야로 이동하는 경우 고령여성의 건강위험과 여성의 야간안전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기존 범죄예방사업과 다른 지역특화형 안전의제로 활용할 수 있음

- “폭염으로 인한 이른 새벽 또는 심야 시간대 농업노동이 급증한다고 했을 때, 여성 농업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마을의 안전 실태 조사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실시해보면 어떨까요? 고령의 여성 농업인에게는 건강 문제가, 세대와 상관없이 여성에게는 폭력 예방이 필요한 시간대가 아닌가 합니다.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할 때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노동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안전마을 사업 영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 28)

- 또한 주민이 직접 안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안전지도를 제작한 뒤 사후 모니터링 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은 지역사회 안전 증진과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안됨

-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실태조사 항목과 체크리스트 개발, 마을에서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공간 조성 등 최종 목표를 안전지도 제작 및 사후 모니터링으로 설정한다면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 확보 및 역량 강화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참여자 28)

- 따라서 향후 안전사업은 안전시설 설치 건수보다 주민이 문제를 찾아낸 과정, 개선된 정책과 공간, 주민참여의 지속성을 주요 성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새로운 시설보다 돌봄 사각지대와 돌봄노동을 함께 다룰 필요

- 전문가 조사에서는 돌봄영역이 여성친화도시 사업 가운데 지역별로 차별화된 사업을 개발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의견도 나타남
- 이미 국가·광역·기초 단위의 다양한 아동돌봄 인프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돌봄시설을 추가하는 방식만으로 여성친화도시의 특성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문제임

-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좀 좀 연결해서 도열을 이제 이제 내년에 다시 지성을 또 신청을 해야 되니까 올해 그때는 새로운 사업으로 좀 그걸 단계적으로 마을을 성과 목표를 좀 늘리는 식으로 마을 주민 참여형 안전 안전 마을 몇 호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예요. 그냥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면 예 좀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이 4 영역은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참여자 24)

- 타 지역의 돌봄사업 사례에서도 사업명 자체보다 실제 지역생활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예를 들어 농번기 아동돌봄을 기획했지만 실제 신청자가 많지 않았던 경험은 정책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사업과 주민이 실제 이용하는 사업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줌

- “이웃과 육아 나눔 그다음에 다 들어가는 육아 비용 부담 경감 예 원래 아이 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해 주는 거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군 지역은 애들이 학원을 합천이면은 진주로 가거나 어디 저기 대구 대구까지는 안 가도 하여튼 타 지역으로 이렇게 학원을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 “이웃 나눔에는 농번기 사업을 하나 만들긴 했어요. 농번기에 찾아가는 돌봄 사업을 만 들어서 추진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거 한번 시도해 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셨는데 막상 농번기에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이용 시간을 좀 이렇게 늘려가지고 운영을 해보려고 모집을 했는데 거의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막상 근데 어쨌든 그래도 계속 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참여자 23)

- 따라서 돌봄사업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먼저 정한 후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보다 생활권별 돌봄수요와 서비스 이용시간, 이동거리, 기존 서비스 이용실태를 먼저 조사한 후 사각지대에 맞추어 사업을 설계하는 방식이 필요함
- 농어촌지역의 경우 이주여성 가구를 마을단위에서 파악하고 양육·경제활동·안전 등을 함께 고려한 돌봄지원으로 연결하는 사업도 제안됨

- “각 지역의 마을별 이주 여성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돌봄사업을 추진한다면 저출생 대응과 연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자 28)

- 이러한 접근은 앞서 중점지역 조사에서 확인된 돌봄인력 부족과도 연결할 필요가 있음. 즉, 가족친화 환경 조성은 돌봄을 받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 등 돌봄노동자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하여 접근해야 함

(6)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시민참여단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 여성조직을 육성할 필요

- 전문가 의견에서는 시민참여단 운영이 여성친화도시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특정 행정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모임을 넘어 독자적인 지역 여성조직과 여성리더를 육성할 필요가 강조됨
- 특히 군 지역에서는 별도의 활동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할 사람과 조직이 존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경험이 제시됨

- “공간 하나 바로 확보해 가지고 왜냐하면 군 지역에는 유휴 공간이 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군수님 설득해서 이거는 이제 자기가 되니까 공간 좋은 거 하나 바로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처음에 간판 간판도 달시더 해가 했더니 간판도 만들고 그다음에 개소식까지 그냥 막 일사천리로 그냥 하셔버리더라고 홍보 짝 하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오픈을 딱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활성화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군에 사람이 없으니까 실은 그럴 구나.” (참여자 23)

- 시민참여단 역시 초기에는 시설·공간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쉽지만 이후 정책모니터링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경험이 나타남
- 따라서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 교육보다 실제 사업을 수행

하고 행정과 협의하는 경험을 축적하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함

- 전문가 서면자문에서는 향후 시민참여단 중심의 운영을 지역 여성조직 육성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여성조직이 단계적으로 사업을 기획·실행·자립하도록 지원하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안함

- “여성친화도시는 17년간 추진되면서 공간안전과 프로그램 중심 사업은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였다. 앞으로는 기후위기,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AI 전환사회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평등 관점에서 해결하는 지역혁신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 단위 지역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여성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참여자 26)
- “시민참여단 중심 운영에서 지역 여성조직 육성으로 확대 필요. 지역 여성 3~5명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1차년도(조직화·역량강화) → 2차년도(시범사업) → 3차년도(사업 고도화 및 자립)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참여자 26)

- 이러한 방식은 특히 예천·울진처럼 기존 여성친화도시 추진조직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음
- 초기에는 군민참여단을 구성하되 이후에는 안전·돌봄·일자리·농업·청년 등 관심분야별 소규모 여성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이들 조직이 주민제안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7)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가능성

- 문화 분야 전문가 조사에서는 여성친화도시의 지역특화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여성의 역사와 활동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접근이 제안됨
- 특히 김천의 경우 과거 여성단체와 여성인물의 활동이 있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활용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아니고 이원봉이라고 30년대 활동을 아주 맹렬히 했던 여성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김천이요. 근데 이게 지금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동처럼 김천이 여성의 활동이 굉장히 좀 활발했어요.” (참여자 25)

○ 또한 김천지역에 근우회와 여성회 활동자료 등이 존재하여 기존 연구자료와 지역 신문 등을 토대로 추가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제시됨

- “김천 근우회에도 있었고 여성회도 있고 그래서 내 제자가 석사학위 논문 하나 썼거든요. 박달을 해가지고 석사학위 논문을 하나 썼으니까 거기에서 좀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사업을 좀 하든지.” (참여자 25)

- 다만 이러한 의견은 현재 확인된 역사적 사실을 모두 확인한 것이 아니라 추가조사를 통해 사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탐색적 제안으로 이해해야 함
- 따라서 단기간에 여성역사길이나 관광콘텐츠를 바로 조성하기보다 우선적으로 김천 여성사 자료조사 및 아카이빙 → 지역여성·청소년 참여형 구술기록 → 인물·장소·단체 콘텐츠 개발 → 교육·전시·축제·탐방 프로그램 연계와 같은 단계적 접근이 적절함
- 이러한 사업은 여성친화도시의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와 직접 연결되며, 지역 여성의 역사를 현재 여성의 활동과 연결한다는 점에서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음

(8) 농어촌형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마을’을 정책실행 단위로 활용할 필요

- 농어촌형 사업개발 자문에서는 도시지역처럼 대규모 시설이나 다수의 전문기관을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마을 자체를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실행 단위로 활용하는 방식이 제안됨
- 마을의 안전, 돌봄, 이주여성, 주민활동 공간 등을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 주민이 자신의 생활문제를 직접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음

- 특히 기후위기 안전마을, 주민주도 안전지도, 마을단위 이주여성 돌봄 등은 예천과 울진 같은 농어촌지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됨
- 또한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주민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시됨
- 이러한 접근은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를 각각 분리하지 않고 마을이라는 생활공간에서 성평등·일자리·안전·돌봄·여성참여를 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9) 전문가 조사에서 도출되는 여성친화도시 사업개발의 기본원칙

- 전문가 및 타 지역 추진경험을 종합하면 향후 경북의 여성친화도시 사업개발에서는 사업의 수보다 사업이 지역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군 단위 지역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복지사업으로 운영하기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일자리 부족, 농촌 이동과 돌봄, 기후위기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문제를 성평등 관점에서 해결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응답에서도 5대 목표를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일자리·돌봄·안전·지역활동을 통합하는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여성의 조직화와 지속가능한 일거리 창출을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할 필요성이 제안됨

-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를 각각 추진하기보다 일자리·돌봄·안전·지역활동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대표사업 발굴이 필요함.” (참여자 26)

- “행정·의회·전문가·지역여성리더가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 (참여자 26)
- “향후 경북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견인하는 성평등 지역혁신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년도 사업보다 지역 여성의 조직화와 협업경제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거리 창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여자 26)

다. 김천시 기존 여성친화도시 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

- 김천시는 예천군·울진군과 달리 여성친화도시 지정 경험과 기존 사업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신규 정책수요 조사만으로 향후 사업방향을 도출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김천시는 지역주민·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정책수요 조사와 별도로 여성친화도시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존 대표사업과 추진체계의 적절성, 개선방향, 향후 특화사업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함
- 참여자 29~32는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FGI이며, 참여자 33~34는 개별 전문가 자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시민의 직접적인 정책수요라기보다 기존 김천시 사업을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재설계하기 위한 정책 보완의견으로 활용함
-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김천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은 지역이라기보다 이미 다양한 사업과 추진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와의 연결성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고 기존 복지·일자리·안전사업을 지정지표에 맞추어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을 새로 많이 만드는 것보다 기존 사업 가운데 유지할 사업, 여성친화적 관점을 강화할 사업, 대표사업에서 제외할 사업, 새롭게 지역특화형으로 개발할 사업을 구분하여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1)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통계와 제도를 '보유'하는 단계에서

실제 부서사업을 변화시키는 단계로 전환 필요

- 김천시는 자체 성인지 통계를 구축하고 주민조사 결과를 사업에 활용하려는 시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특히 성인지 통계와 구조화된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돌봄사업 등과 연결하려 한 점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됨

• “김천시 자체통계를 구축한 것이 인상적임. 직접 구조화된 면접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K-보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설문결과를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반영한 것도 노력과 진정성이 돋보임.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역량도 발전되었으리라 유추할 수 있음.” (참여자 34)

- 다만 향후 성인지 통계는 작성 자체를 성과로 제시하기보다 각 부서가 이를 실제 사업발굴과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성인지통계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고 부서별로 활용하게 하여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총괄부서의 업무로 인식) BSC에 여성친화도시 총괄부서에 컨설팅을 요청한 경우 가산점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참여자 29)

- 전담인력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담당자를 지정하는 수준보다 해당 담당자가 여성친화도시 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고 부서별 사업발굴과 컨설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직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전담인력의 업무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이 필요함. 전담인력의 업무는 BSC관련 협의, 부서별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직접 혹은 전문가 연결)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참여자 29)

- 따라서 향후 김천의 1영역은 전담인력·성인지 통계·BSC 등을 각각의 지표로 관리하기보다 성인지 통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 해당 부서와 컨설팅하고 → 일반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 → BSC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하나의 정책환류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즉, 성평등 추진기반의 성과를 ‘전담인력 1명’, ‘통계 작성 1회’, ‘교육 몇 회’로 설명하기보다 실제로 몇 개의 주요 시정사업이 성평등 관점에서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여성친화일촌기업 지원’ 중심에서

김천의 지역산업과 양질의 여성일자리 발굴로 전환 필요

- 전문가 평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영역 가운데 하나가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임
- 현재 김천의 대표사업으로 검토된 여성친화일촌기업 근로자 지원사업은 여성근로자의 조직문화 개선이나 복지지원이라는 의미는 있으나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나 지역산업의 성별 직종분리를 완화하는 대표사업으로 제시하기에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됨

- “여성일자리협의체의 논의 주제로 지역 사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도농 복합 상황과 연계한 유통사업에서의 여성참여방안,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설 등의 사업을 고려해 봐야 함. 대표사업으로 제시된 여성친화일촌기업 근로자 지원사업은 대표사업으로 제시되기에는 소극적인 접근으로 보임. 일자리협의체의 새로운 논의주제로 언급된 내용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취창업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발굴해야 함.” (참여자 29)

- FGI에서도 여성친화기업 협약이나 일촌기업 사업은 여성친화도시의 기본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계속 대표사업으로 제시하기보다 김천의 산업구조를 분석하여 보다 지역특화된 일자리 모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그러니까 김천도 차라리 그 김천 혁신도시에 특화된 영역을 찾아서 그 일자리의 여성 참여를 더 활성화시킬 시킨다거나 아니면 이미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먹거리에 놔두는 게 아니라 도시 여성하고 기존에 원주민들 살고 있는 농촌 지역하고 연계해서 괜찮은 일자리가 있다면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무슨 매개고리를 찾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 사업으로 차라리 하게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참여자 29~32)

○ 특히 김천은 혁신도시라는 자원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교육·돌봄·서비스 직종만 반복하기보다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에 존재하는 다양한 업무를 분석하여 여성의 진입이 가능한 직무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김천 같은 경우는 사실 혁신도시기 때문에 여성 관련 일자리 영역을 아니 일자리 부분을 찾는다면 좀 발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특징에 맞게.” (참여자 29~32)

○ 또한 전문가들은 여성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틈새일자리 자체가 반드시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성전용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지역에서 실제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에 여성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보다 중요하다는 문제도 제기함

- “그냥 여성 특화로 이렇게 하는 게 여성 일자리일지 지역에 정말 필요한 영역에서 질 좋은 여성 일자리 영역을 만드는 정책적인 부분 이 부분이 강화돼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성 일자리라고 얘기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만든 일자리가 별로 질 좋은 일자리도 아니고 별로 지속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도 아니거든요. 진짜 틈새인 일자리 계속 여친이 이거 갖고 붙들고 있어야 될까? 그 고민은 사실 있어요.” (참여자 29~32)

- 이는 앞서 김천의 통계분석에서 제조업이 주요 산업임에도 여성의 제조업 종사 비율이 낮고, 여성은 보건·복지·숙박·음식·교육 등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결과와도 연결됨
- 따라서 향후 여성일자리협의체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수나 여성친화기업 협약 수보다 ① 산업단지·혁신도시의 여성 진입 가능 직무 분석, ② 40~60대 여성의 경력 전환 수요, ③ 도농복합 특성을 활용한 유통·먹거리·생활서비스 일자리, ④ 지역기업의 여성고용 및 경력유지, ⑤ 직업훈련 후 실제 취업·근속 성과를 핵심의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성과가 확인되는 부분은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여성일자리협의체 논의 결과 지역일자리 선발과정에서 여성세대주에게 가점을 부여한 것은 구체적인 제도변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경력중단·경력보유여성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됨

- “여성일자리협의체의 결과로 지역일자리 선발점수제에 여성세대주 가점부여가 된 것은 좋은 성과임. 가점부여 대상을 경력중단(보유)여성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 권함.” (참여자 34)

- 여성친화일촌기업의 조직문화 교육 역시 폐기하기보다 법정의무교육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소규모 워크숍이나 직장문화 개선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여성친화일촌기업 조직문화 교육지원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진행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주제 소규모 워크숍 등까지 진행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개선까지 이뤄지면 좋겠음. 단계별 발전이 이뤄져야 함.” (참여자 34)

- 따라서 2영역의 개선방향은 기존 일촌기업 사업을 폐지하는 것보다 기본사업으로 유지하되 대표사업은 김천의 산업·혁신도시 특성과 여성의 실제 경제적 자립을 보

여주는 사업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적절함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안전 포커스 김천'의 물리적 시설 중심 구조를

주민참여형 생활안전 모델로 고도화 필요

- 김천의 안전사업은 안심거울, 비상벨, 안심거리, 불법촬영 점검 등 여러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기본적인 안전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전문가 FGI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다른 여성친화도시에서도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시설중심 안전사업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경북지역 여성친화도시의 안전 사업이 매우 유사함. 지역별 특성을 찾는 안전 사업이 필요함.” (참여자 34)

- FGI에서는 현재 김천의 안전영역에서 일부 시민 모니터링이나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넘어 주민이 지역의 안전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활동은 아직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타남

• “안심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일부 모니터링하고 협의하고 이제 이런 작은 단위에서 협업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넘어서는 그런 활동들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사실 또 김천시에서 기획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취약한데.” (참여자 29~32)

- 반면 김천시에는 주민이 생활안전 개선사업을 제안하면 지원할 수 있는 기존 행정사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연결할 가능성이 제기됨

- “안전 관련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 김천시에서 굉장히 예산을 크게 들여서 하는 안전 생활과 관련한 생활 안전 개선 100대 과제 발굴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떤 활동이라도 이제 그 신청을 하면 예산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장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활용해서 여기서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것들 거리들을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 (참여자 29~32)

- 따라서 향후 ‘안전 포커스 김천’은 새로운 안심시설을 추가하는 사업보다 김천의 기존 생활안전 예산과 시민참여단을 연결하여 여성·아동·고령자가 실제로 이용하는 생활동선을 조사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지역여건 분석에서 김천의 교통사고 안전지수가 취약하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특히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원도심 보행공간, 농촌 외곽도로, 고령여성의 병원·시장 이동경로 등 교통·보행안전을 김천형 안전대표사업의 핵심의제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사업운영 방식도 시민참여단 현장조사 → 문제지도 작성 → 관련부서 합동검토 → 개선사업 시행 → 시민참여단 재점검 → 개선결과 공개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시설설치 실적보다 주민의 정책참여와 실제 공간변화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 여성친화도시의 3영역과 5영역을 연계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음

(4)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K-보듬 자체를 대표사업으로 제시하기보다

김천만의 사각지대와 돌봄노동자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전문가 FGI에서는 김천의 돌봄영역이 기존 복지·돌봄사업을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남
- 특히 경상북도 전체에서 추진하는 K-보듬 사업을 김천의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으로 제시할 경우 김천시의 독자적인 정책기획이나 지역특화성이 충분히 나타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 “돌봄 인프라 구축 영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상북도에서 페이보듬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이제 이런 다도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지역 가까이에서 다 설치를 하고 확대하고 뭐 이런 사업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제 그 사업하고 같이 도비 지원도 시비 매칭 이렇게 해서 K보듬 사업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은 지난번에 경산도 그렇고 재지정에 탈락할 때 두 곳 다 K보듬 사업을 넣었는데 이게 도비 지원으로 전체 다 꾸려지는 사업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대표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던 것 같아요.” (참여자 29~32)

- 다만 K-보듬 사업을 통해 기존 돌봄시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 “K-보듬사업을 통해 돌봄시설 내 상호 연계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임. 신규시설을 만들어 내는 것도 좋으나 기존 시설 연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도 많으며 이런 네트워크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신규시설 설립을 한다면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음. 돌봄은 케이스별도 필요 욕구가 다른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며 이는 특정한 서비스나 기관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 (참여자 34)

- 따라서 K-보듬은 김천의 대표사업 자체라기보다 기존 돌봄자원을 연결하는 기반 사업으로 활용하고, 여성친화도시에서는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 어떤 사각지대를 실제로 해결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적절함
- 예를 들어 혁신도시 맞벌이가구의 야간·주말·긴급돌봄, 읍면 고령여성의 생활돌봄·병원동행,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1인가구 등 김천만의 구체적인 이용자 집단을 선정하여 사업성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FGI에서는 기존 신청서의 돌봄노동자 지원사업이 여성친화도시에서 요구하는 돌봄노동자 지원의 취지와 충분히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제기됨

- “일단 여기는 돌봄 활동가 지원 사업부터 다 바뀌야 돼요. 이거 활동가 지원 사업에 하 나도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기술하는 담당자가 너무 지정 신청서의 맥락을 이해를 못 하고 있다.”
- “여기는 돌봄 노동자 힐링 프로그램이든 하여튼 무슨 프로그램이든 그걸로 바뀌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담이랑 힐링 프로그램 꼭 들어가야 돼.” (참여자 29~32)

- 이에 따라 돌봄영역에서는 보육교직원·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김천지역 돌봄노동자의 심리적 소진, 감정노동, 권익, 이용자와의 갈등, 근무환경 등을 조사한 후 상담·회복·교육·권익지원을 결합하는 사업이 필요함
- 이는 앞서 주민조사에서 제기된 돌봄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 관계개선 필요성 과도 연결할 수 있음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시민참여단 운영실적보다

지역여성이 스스로 사업을 기획·실행하는 구조로 발전 필요

- 김천은 시민참여단 운영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신규 조성지역보다 기본적인 여성참여 기반이 존재함
- 그러나 전문가 FGI에서는 시민참여단 자체를 대표사업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여성들이 실제 지역문제를 발견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사업을 실행하는 경험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방향이 제기됨
- 특히 김천에서 추진한 여성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지역 여성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여성친화도시에서 요구하는 성평등·안전·돌봄 등의 정책목표와 내용적 연결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타남

- “그런데 이제 저도 선정할 때도 한번 가봤는데 이게 이제 여성 친화도시에서 얘기하는 그런 성평등, 증진, 안전, 돌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녹여주기를 바랬는데 일부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부는 또 이제 뭐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잘 연계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여자 29~32)

○ 문화·커뮤니티 활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활동을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성평등이라는 정책목표가 보다 분명하게 사업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중소도시에 여성들의 욕구가 문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모일 수 있고 자기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관심 있는 영역이 뭐 낭송, 뮤지컬, 인형극 막 이런 거예요. 동화책 구현. 그러다 보니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공모 사업을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있으려면 성평등한 인형극 공모 성평등을 주제로 한 인형극 공모 성평등을 주제로 한 뮤지컬 예를 들면 참여를 한다고 해도 그런 영역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참여자 29~32)

- 따라서 김천의 여성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단순 동아리 활동지원에서 지역문제 해결형 여성 커뮤니티 육성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공모분야를 성평등문화, 여성일자리, 생활안전, 돌봄, 여성역사·문화 등으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선정 후에는 여성친화도시와 성평등 관점에 대한 사전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며 최종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실제 활동이나 정책제안으로 연결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FGI에서는 여성조직을 한 번 지원하고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강화에서 실제 일거리와 자립으로 연결하는 단계적 지원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12팀, 20팀이 지원을 했었고 2년 차는 거기서 성과 나오는 팀으로 추려가지고 천만 원을 지원할 테니까. 그걸 갖고 실제 일거리를 써라. 일거리 비용으로 그랬더니, 이제 치어리딩을 하는 엄마의 경력단절 엄마가 10명을 500만 원으로 치어리딩 자격증 과정으로 해서 10명을 1년 차 양성을 했고 2년 차 천만 원은 그 돈을 갖고서 방과 후 아이들 돌봄 교실에 가가지고 치어리더를 애들을 이제 알려주는 일거리 비용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3년 차에 우리가 이제 과장님하고 야 그래도 한 번 더 지원하자 해서 3년 차 천만 원을 지원했더니,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더니, 딱 찾아와서는 저희 이제 궤도에 올라갔어요. 더 이상 지원 안 해도 돼요. 하면서 딱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팀들이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한 6팀은 됐었거든요.” (참여자 29~32)

- 이에 따라 김천에서도 1차년도 조직화·교육 → 2차년도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 3차년도 사업화·자립과 같은 단계적 여성커뮤니티 육성모델을 적용할 수 있음

(6) 김천의 지역특화성을 대표사업에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

- 전문가 FGI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개별사업이 모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업이 ‘김천의’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이어야 하는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임
- 따라서 향후 대표사업은 지역에서 이미 추진되는 일반사업 가운데 김천의 특성과 성평등 문제가 분명하게 만나는 지점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FGI에서는 혁신도시, 도농복합구조, 지역 먹거리, 김밥축제 등 기존 김천의 자원을 활용하여 여성의 일자리·지역활동·돌봄을 연계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됨
- 또한 별도 전문가 자문에서는 김천 여성친화도시의 변화가 단순한 사업추가보다 정책을 설계하고 지역여성을 조직할 사람을 양성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됨

- “정책은 사람이 있어야 움직임. 김천 여성친화도시의 변화는 먼저 여성들을 리더십·조직가·디자이너 등의 방식으로 중간역할자를 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 (참여자 27)

- 이에 따라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와 지역정책, 주민욕구 조사, 조직화, 정책제안 등을 교육하는 여성친화 정책디자이너 또는 지역 여성정책 기획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이후 시민참여단·위원회·커뮤니티 공모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특히 이러한 인력은 여성정책부서가 모든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과 행정,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7) 기존 사업 가운데 ‘유지-고도화-재설계-대표사업 제외’를 구분할 필요

- 김천의 기존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종합하면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유지하거나 전면적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교체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음
- 현재 사업 가운데 기본사업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는 사업과 내용적 개선이 필요한 사업,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함

3. 중점 분석지역 정책 요구와 시사점

가.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별 문제점 및 개선요구

- 김천에서는 ‘없는 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있는 사업을 여성친화도시의 5대 목표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강했음
- 특히 경제 영역에서는 중장년 여성의 정책 사각지대와 산업·혁신도시 연계, 안전에서는 시설 중심 사업의 생활안전 중심 전환, 돌봄에서는 다수 사업의 통합·조정, 참여에서는 시민참여단의 정책파트너화, 추진기반에서는 담당자 의존형 추진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했음

<표 IV-2>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별 문제점 및 개선요구

영역	면접·FGI에서 확인된 문제점	개선과 관련한 요구
① 성 평 등 추 진 기 반 구 축	·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개념적 이해는 확대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전통적 성역할 인식 잔존 · 여성 기관장·공직 대표성 등에 대한 낮은 평가 존재 · 여성친화도시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경험·전문성 축적 어려움 · 담당자 개인에게 기획·협업·성과관리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 · 돌봄 등 부서별 유사사업이 많으나 전체 사업을 조정하기 어려운 행정구조 · 성인지 통계, BSC, 성별영향평가 등이 각각 존재하더라도 실제 부서사업 변화와 연결되는 체계 미흡 · 기존 시정사업과 별도로 여성친화도시용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해야 한다는 행정부담 존재	· 담당자 변경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표준 인수인계·업무매뉴얼 구축 요구 · 전담인력의 실질적인 업무비중 확보 및 부서 조정 기능 강화 요구 · 성인지 통계를 단순 작성자료가 아닌 부서별 사업발굴 자료로 활용할 필요 · BSC·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여성친화도시를 연계한 성과관리 요구 · 5대 목표별 관련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전 부서 추진체계 필요 · 신규사업 추가보다 기존 시정 핵심사업을 성평등 관점으로 개선하는 방식 필요
② 여 성 의 경 제· 사 회 참 여 확 대	· 여성 직업교육·자격증 과정은 존재하나 교육수료 후 실제 취업·소득활동으로 이어지는 지 점검 부족 · 청년정책과 노인일자리 사이에 있는 40~60대 여성의 정책 사각지대 제기 · 농촌여성의 일자리가 농작업·식당·돌봄 등 일부 분야에 집중 · 제조업·혁신도시 등 김천의 주요 성장기반과 여성일자리의 연결 미흡 · 여성친화일촌기업 근로자 지원사업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보여주는 대표사업으로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전문가 평가 · 여성친화기업 협약·교육 등 기본사업을 대표사업으로 제시하는 한계 · 여성전용 틈새일자리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질에 대한 문제 제기	· 기존 직업교육 참여자의 취업·소득·근속 등 사후성과 조사 요구 · 4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직업전환·창업·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필요 · 산업단지·혁신도시의 여성 진입 가능 직무 발굴 요구 · 여성일자리협의체에서 지역산업별 성별 직종 분리와 여성진입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필요 · 여성친화일촌기업 사업은 기본사업으로 유지하되 조직문화 개선까지 단계적 고도화 필요 · 여성세대주 지역일자리 가점성격을 경력중단·경력보유여성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 도농복합 특성을 활용한 유통·먹거리·사회서비스 등 지역특화 일자리 발굴 필요
③ 지 역 사 회 안 전 증 진	· 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 다수 시설과 프로그램이 존재하여 주민과 담당자 모두 전체 체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 · 유사사업의 중복 및 부처·도·시 사업의 누적에 따른 분절 가능성 · 신규 돌봄시설이 계속 확대될 경우 이용률·효율성 문제 발생 가능성 · K-보듬과 같은 도 공통사업을 김천의 독자적인 대표사업으로 제시하는 데 한계 · 돌봄노동자 지원사업이 여성친화도시의 돌봄노동자 권익·소진 문제와 충분히 연결되지	· 신규시설보다 기존 돌봄자원의 통합정보·연계체계 구축 요구 · 대상·생활권·시간대별 돌봄 사각지대를 먼저 분석할 필요 · 혁신도시 맞벌이가구의 야간·주말·긴급돌봄과 농촌 고령여성의 생활돌봄을 차별화할 필요 · K-보듬은 기반사업으로 활용하고 김천만의 구체적인 사각지대 해결성격을 대표사업으로 제시할 필요 · 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않는다는 전문가 평가 · 맞벌이가구에 공동육아 참여를 요구할 경우 여성에게 새로운 무급 돌봄부담이 될 가능성	등의 상담·힐링·감정노동·권익지원 강화 요구 · 서비스 이용자 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필요
④ 가족친화(돌봄)환경조성	· 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 다수 시설과 프로그램이 존재하여 주민과 담당자 모두 전체 체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 · 유사사업의 중복 및 부처·도·시 사업의 누적에 따른 분절 가능성 · 신규 돌봄시설이 계속 확대될 경우 이용률·효율성 문제 발생 가능성 · K-보듬과 같은 도 공통사업을 김천의 독자적인 대표사업으로 제시하는 데 한계 · 돌봄노동자 지원사업이 여성친화도시의 돌봄노동자 권익·소진 문제와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평가 · 맞벌이가구에 공동육아 참여를 요구할 경우 여성에게 새로운 무급 돌봄부담이 될 가능성	· 신규시설보다 기존 돌봄자원의 통합정보·연계체계 구축 요구 · 대상·생활권·시간대별 돌봄 사각지대를 먼저 분석할 필요 · 혁신도시 맞벌이가구의 야간·주말·긴급돌봄과 농촌 고령여성의 생활돌봄을 차별화할 필요 · K-보듬은 기반사업으로 활용하고 김천만의 구체적인 사각지대 해결성과를 대표사업으로 제시할 필요 · 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상담·힐링·감정노동·권익지원 강화 요구 · 서비스 이용자 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필요
⑤ 여성의 지역사회활동참여강화	· 시민참여단·여성단체·여성기업 등 여성활동 기반은 비교적 존재함 · 여성의 사회활동과 공식적인 의사결정 대표성 사이의 간극 존재 · 여성들이 지역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정책요구로 공론화할 공간·기회 부족 · 시민참여단 활동이 시설모니터링·홍보 중심에 머물 가능성 · 여성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문화·동아리 활동으로 진행될 경우 성평등 정책목표와의 연결 부족 · 담당자와 일부 여성활동가에게 사업이 의존할 경우 지속가능성 제한	· 시민참여단을 시설점검단에서 정책모니터링·정책제안 조직으로 고도화할 필요 · 여성들이 지역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정책공론장·활동거점 필요 · 산업·도시계획·교통·경제 등 주요 정책분야의 여성인재 참여 확대 필요 ·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성평등·안전·돌봄·일자리 등 지역문제 해결형으로 전환할 필요 · 여성조직을 1년 단위 지원보다 조직화→시범사업→사업화·자립의 단계적 구조로 지원할 필요 · 지역여성을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중간리더로 육성하는 여성친화 정책디자이너 과정검토 필요

나. 예천군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별 문제점 및 개선요구

- 예천군은 조사에서 도청신도시와 기존 농촌지역의 차이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임
- 따라서 예천의 정책 요구는 군 전체에 동일한 정책을 공급하는 것보다 신도시의 젊은 취업·양육기 여성과 기존 농촌의 중고령·고령여성을 구분하여 지원하면서 두 생활권을 연결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표 IV-3> 예천군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별 문제점 및 개선요구

영역	면접·FGI에서 확인된 문제점	개선과 관련한 요구
① 성 평 등 추 진 기 반 구 축	· 도청신도시의 젊은 주민과 기존 읍면 고령층 간 성평등 인식차이 존재 · 기존 농촌지역에서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를 특별한 일로 인식하는 경향 잔존 · 여성의 적극적인 발언·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전통적 태도 일부 존재 · 작은 군 행정에서 담당자 1인이 다수 사업을 수행하여 부서 간 정보공유·협업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 제기 · 돌봄 등 유사사업을 서로 다른 부서가 추진하면서 상대 부서 사업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문제	· 신도시와 농촌을 구분한 성평등 수요조사 필요 · 농업인·이장·주민자치·평생교육 등 기존 교육체계에 성평등 관점 결함 필요 · 부서 간 협업을 담당자의 개인적 관계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할 필요 · 사업기획·결재단계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식 검토 ·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는 회의실적보다 실제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
② 여 성 의 경 제· 사 회 참 여 확 대	· 육아기 여성의 취업육구는 있으나 희망근로 시간과 사업주의 구인시간 불일치 · 공공기관·농업·서비스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 선택 폭 제한 · 50~60대 여성의 요양보호·청소·단순업무 집중 · 읍면지역에서 차량이 없으면 취업처가 있어도 이동하기 어려운 문제 · 돌봄직종의 낮은 급여와 높은 업무강도 문제 · 여성창업 교육이 카페·스마트스토어 등 일부 업종에 편중되고 제한된 지역시장에서 경쟁심화 가능성	· 도청신도시 육아기·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시간선택형·전문서비스 일자리 요구 · 도청 및 공공기관 관련 직무와 지역여성의 경력을 연계할 필요 · 읍면 중고령 여성 대상 근거리 일자리와 교통·이동지원 필요 · 돌봄일자리 확대와 함께 임금·처우개선 필요 · 농식품가공·로컬푸드·농촌관광·생활서비스 등 지역자원 기반 창업 확대 요구 · 창업교육 이후 판로·매출·사후컨설팅까지 지원하는 구조 필요
③ 지 역 사 회 안 전 증 진	· 신도시 주요지역은 비교적 정비되어 있으나 단독주택·외곽·인적이 드문 구간에서 야간 보행 불안 존재 · 설치된 비상벨 등이 보행자 방향에서 잘 보이지 않는 등 안전시설의 가시성·관리 문제 · 읍면지역에서는 범죄보다 교통·대중교통·고령자의 이동이 중요한 안전문제로 연결 · 소규모 농촌공동체에서 개인생활의 지나친 노출과 간섭을 겪은 층이 불편·위험으로 인식할 가능성 · 마을 안전을 이장·부녀회장 등 일부 리더에게 집중할 경우 지속성 한계	· 신도시 여성·아동의 실제 야간동선 중심 안전점검 필요 · 안전시설 설치 후 위치·가시성·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 · 농촌에서는 버스정류장·병원·시장·농작업 등 고령여성의 이동경로를 안전정책에 포함할 필요 · 범죄안전뿐 아니라 사생활 존중과 관계적 안전까지 농촌 안전의제로 확대할 필요 · 향후 군민참여단이 주민주도 안전지도와 사후모니터링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
④ 가 족 친	· 도청신도시는 아동돌봄, 기존 읍면은 노인·생활돌봄이 우선되는 서로 다른 수요 존재 · 농촌지역에서는 60~70대 여성도 자신의 농사·가사와 요양보호 등 돌봄노동을 동시에	· 신도시 맞벌이가구를 위한 시간맞춤형·긴급·틈새 아동돌봄 강화 필요 · 농촌 읍면은 노인생활돌봄·병원동행·이동지원 중심으로 차별화 필요

화(돌봄) 환경 조성	수행하는 문제 · 농촌여성의 농업노동과 가족·이웃 돌봄이 분리되지 않고 중첩되는 구조 ·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높은 업무강도와 차량이동 부담 · 돌봄시설이 확대되어도 가정 내 주양육자가 여성이라는 구조 지속 · 아동이 아플 경우 안동·대구 등 외부지역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하는 의료·교통 연계 문제	· 방문형·순회형 서비스 확대 요구 · 농촌여성의 무급 가족·마을돌봄을 지역의 필수노동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 ·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이동비 지원 필요 · 남성의 실질적인 돌봄참여 확대 필요 · 돌봄·교통·의료를 별도 정책이 아닌 생활권 서비스로 연결할 필요
⑤ 여성 의 지역 사회 활동 영역 강화	· 여성 이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남성 중심의 마을대표 구조 지속 · ‘이장은 남성이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일부 잔존 · 여성들이 협의체에 많이 참여하더라도 조직 자체의 정책영향력이 약하면 여성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 · 청년협의체에서 여성대표가 존재하더라도 분과장 등 중간 리더십은 남성 중심으로 형성되는 현상 · 여성의 활동참여와 의사결정 대표성 간 간극 존재	· 여성 이장·마을리더 발굴 및 기존 여성리더의 경험을 활용한 멘토링 필요 · 신도시 청년·전문직 여성과 농촌 여성농업인·생활활동가를 함께 포함하는 여성인재풀 필요 · 위원회 여성비율뿐 아니라 위원장·분과장·정책제안·정책반영 여부를 관리할 필요 · 군민참여단을 신도시·농촌 생활문제를 직접 조사하고 제안하는 여성정책 리더로 육성할 필요 · 주민활동→공론화→정책제안→행정반영으로 이어지는 참여구조 구축 필요

다. 울진군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별 문제점 및 개선요구

- 울진군은 ‘지역에는 여성이 활동할 일이나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좋은 일자리와 의사결정 구조가 여성에게 충분히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남
- 경제영역에서는 안정적인 여성일자리와 에너지산업 진입경로, 안전·돌봄에서는 고령여성 1인가구의 분산생활권 문제, 참여에서는 농업·에너지·안전·환경과 같은 지역 핵심분야에서 여성대표성을 확대하는 문제, 추진기반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인지도를 높이고 행정과 주민의 추진주체를 만드는 문제가 핵심적으로 제기됨

<표 IV-4> 울진군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별 문제점 및 개선요구

영역	면접·FGI에서 확인된 문제점	개선과 관련한 요구
① 성 평 등 추 진 기 반 구 축	· 지역사회를 보수적·가부장적이라고 평가하는 의견 존재 · 여성의 역할을 보조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 · 젊은 층에서는 성평등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가사·돌봄의 성별 고정관념 잔존 · 한울원자력 등 외부 유입인구가 많은 생활권과 기존 농어촌지역의 성평등 문화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 · 여성친화도시 자체에 대한 주민인지도가 낮아 초기 참여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 담당자 변경 시 추진경험이 단절될 가능성	· 농촌지역과 원전·외부 유입 생활권을 구분한 성평등 접근 필요 · 농업인·마을주민에게는 성역할·여성대표성 중심 프로그램 필요 · 직장·젊은 생활권에서는 맞돌봄·일생활균형·성평등 조직문화 프로그램 필요 · 여성친화도시의 명칭 홍보보다 주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시범사업부터 추진할 필요 · 담당자 변경에 대비한 업무매뉴얼·인수인계·추진자료 축적 필요
② 여 성 의 경 제· 사 회 참 여 확 대	· 단기·기간제 일자리는 있으나 안정적·장기적인 여성일자리 부족 의견 · 민간부문의 취업기반이 협소하고 공공부문 기간제·일반 사무·요양보호·사회복지 등에 여성취업 집중 · 북면 등 외부 유입 고학력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할 일자리 부족 · 청년여성에게 한수원 등 양질의 일자리는 진입장벽이 높고 중소기업 일자리는 처우가 낮은 양극화 문제 · 청년여성 창업지원이 초기지원 이후 성장단계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 문제 · 지역 여성청년 간 상호교류와 정보공유 네트워크 부족	· 단기취업보다 지속가능하고 적정 처우를 갖춘 여성일자리 확대 필요 · 원전·에너지 분야의 여성 진입 가능 직무를 중장기적으로 발굴할 필요 · 기술·안전·환경·품질·행정·디지털 등 에너지 연계 여성직무와 교육경로 마련 필요 · 농수산·먹거리·관광·숙박 등 울진 자원을 활용한 창업모델 개발 요구 · 창업지원 이후 판로·컨설팅·성장지원까지 연속지원 필요 · 여성청년 커리어·창업 네트워크와 정보공유 체계 구축 필요
③ 지 역 사 회 안 전 증 진	· 지역 전체의 범죄불안이 매우 높다는 의견보다 일부 생활권의 가로등 부족과 야간환경 문제 제기 · 고령여성의 경우 대중교통 부족이 병원·장보기·생활서비스 접근 문제와 연결 · 고령여성 1인가구의 생활기반 취약성 제기 · 공간적으로 분산된 농어촌 생활권에서 이동 자체가 안전과 직결되는 구조 · 지역 안전정책을 범죄예방 중심으로 접근할 경우 실제 고령·농촌 여성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	· 야간근로·서비스업 종사 여성의 귀가동선 점검 필요 · 고령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화재·응급·이동안전을 통합할 필요 · 병원·시장·생활서비스 접근을 위한 이동지원과 안전정책 연계 필요 · 여성농업인의 새벽·야간 농작업, 폭염 등 기후안전성을 새로운 안전의제로 검토할 필요 · 읍면별 주민참여형 안전지도와 생활안전 점검체계 구축 필요
④ 가 족 친 화(돌 봄) 환	· 한수원 지원 등을 통해 아동·노인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는 긍정적 평가 존재 · 반면 혼자 거주하는 고령여성의 생활돌봄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 · 요양보호사 수요는 많으나 실제 일할 인력 부족 · 자격취득자가 모두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 시설 추가보다 기존 서비스가 작은 마을까지 실제 도달하는지 점검할 필요 · 고령여성 안부확인·병원동행·식사·세탁·이동·주거안전을 묶은 생활돌봄 필요 · 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 등 실제 활동인력 확보 필요 · 자격증 취득인원보다 취업을·근속을 중심으로 돌봄인력 사업 평가 필요

경조성	문제 · 아이돌봄 수요에 비해 아이돌보미가 부족하여 대기 발생 가능성 ·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인력풀 부족	· 돌봄노동자 처우·이동비·소진예방 지원 필요 · 긴급돌봄 인력풀 구축 필요
⑤ 여성의 지역 사회 참여 확대 방안	· 여성들이 농업교육·가공·창업·봉사 등 실제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함 · 여성을 지역활동의 보조적 주체로 인식하는 문제 제기 · 공식적인 지역정치·정책결정 구조의 여성대표성 부족 의견 · 기존 여성단체가 다수 존재하더라도 여성의 권익·정책의제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조직은 부족하다는 의견 · 여성청년·창업자 등이 서로 존재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네트워크 부족	· 여성의 참여를 농업·봉사에서 정책의사결정으로 확대할 필요 · 에너지·안전·환경·지역개발 등 울진의 핵심 정책분야 여성대표성 확대 필요 · 여성농업인·청년여성·창업자·전문직·에너지분야 여성근로자 등을 포함한 여성인재풀 구축 필요 · 기존 여성단체와 별도로 새로운 세대 여성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필요 · 일반적인 리더십 강의보다 스피치·정책이해·현장조사·정책제안 실습형 역량강화 필요 · 향후 군민참여단을 정책제안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조직으로 육성할 필요

라. 3개 지역 종합 정리 및 비교

○ 중점분석지역인 3개 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정책 요구를 종합해서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IV-5> 3개 지역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별 문제점 및 개선요구

영역	김천시	예천군	울진군
성평등 추진기반	기존 추진체계와 사업의 고도화 요구	신도시·농촌 차이와 군 행정의 협업체계 구축 요구	주민인지도와 담당체계를 포함한 초기 추진기반 구축 요구
경제·사회 참여	중장년 여성 + 산업·혁신도시 연계	신도시 육아기 여성 + 농촌 고령 여성 이원화	안정적 일자리 + 에너지산업 여성진입 + 청년여성 네트워크
안전	시설 중심에서 교통·보행·생활안전으로 전환	신도시 야간보행 + 농촌 교통·이동안전	고령여성 이동·주거안전 + 야간·기후안전
돌봄	다수 사업의 통합·조정과 사각지대 관리	신도시 아동돌봄 + 농촌 노인·생활돌봄	고령여성 생활돌봄 + 돌봄인력 확보
여성의 활동역량	기존 시민참여단의 정책파트너화	신도시·농촌 여성리더 발굴과 공식 대표성 강화	농업·에너지·안전 등 핵심영역 여성대표성 및 새로운 여성네트워크 구축
전체적 성격	기존 사업의 재설계·고도화 요구가 강함	서로 다른 두 생활권에 대한 맞춤형 정책 요구가 강함	산업구조와 분산생활권이라는 지역특화 문제 해결 요구가 강함

V. 중점 분석지역 대표과제 및 경북의 향후 자원 방안

1.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2. 중점지역별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향
3. 중점지역별 세부 정책과제
4. 미조성 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대를 위한 제언

V. 중점 분석지역 대표과제 및 경북의 향후 지원 방안

1.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통계분석을 통한 중점지역 여성친화 여건 진단

- 통계분석에서는 김천시·예천군·울진군의 인구 및 가구구조, 산업과 여성고용, 안전, 돌봄 관련 기반, 정책결정과정의 여성대표성 등을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여건을 비교하였음
- 분석결과 세 지역 모두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안전, 돌봄, 대표성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나, 동일한 여성정책을 적용하기에는 지역의 인구구조와 산업기반, 생활권의 형태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남
- 먼저 김천시는 제조업과 혁신도시·공공기관이라는 도시적 성장기반이 존재하면서 읍면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는 도농복합형 지역으로 나타남
-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지만 제조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24.4%에 그치는 반면 여성은 보건·사회복지, 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지역의 핵심산업과 여성고용 간 분리구조가 확인됨
- 2025년 상반기 여성고용률은 57.8%로 남성 73.8%보다 16.0%포인트 낮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함께 일자리의 직종 및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안전에서는 교통사고 5등급, 화재·생활안전 4등급으로 나타나 범죄예방뿐 아니라 교통·보행·생활안전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안전지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지표가 아니므로 향후 여성의 실제 생활동선 및 체감안전 자료와 결합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은 41.5%로 양적 기준은 일정 수준 충족하고 있으나 제조업·도시계획·교통·안전·혁신도시 등 김천의 핵심 정책영역에서 여성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지를 추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예천군은 도청신도시의 조성으로 젊은 인구와 양육가구가 유입되는 동시에 기존 읍면에서는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어 신도시와 농촌이라는 두 개의 상이한 생활권

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나타남

- 여성 종사자 비율은 47.4%로 세 지역 중 상대적으로 높지만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여성고용이 집중되어 있으며, 교육·돌봄·공공서비스와 농촌생활서비스가 여성고용의 중요한 기반으로 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남성보다 17.5%포인트 낮아 여성의 양적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함께 신도시의 경력보유·양육기 여성과 농촌 중고령 여성에게 서로 다른 일자리 전략이 요구됨
- 또한 여성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농촌지역 여성 1인가구는 고령층에 집중되는 한편 도청신도시에는 청년여성 1인가구도 존재하여 고령여성의 생활돌봄과 청년여성의 주거·안전·관계망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위원회 여성비율은 41.5%로 양적 수준은 양호하지만 도청신도시의 전문직 여성과 기존 읍면 여성 간 대표성의 균형, 복지·교육 분야와 산업·농업·도시계획 분야 간 참여의 균형이 향후 과제로 확인됨
- 울진군은 세 지역 가운데 여성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원전·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한 남성 중심 산업구조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동시에 고령여성 1인가구와 분산된 농어촌 생활권이 공존하는 지역임
- 전체 여성 종사자 비율은 42.4%이지만 여성은 숙박·음식 및 보건·복지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에너지·기술·건설 분야에서는 과소대표되어 있어 지역의 핵심 성장산업과 여성 경제활동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도출됨
- 여성고용률의 남녀 격차는 20.5%포인트로 세 중점지역 중 가장 크게 나타나 여성에게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문제가 특히 중요함
- 여성 가구주 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은 63.6%로 높게 나타나 고령여성의 돌봄·주거·이동·안전 문제를 생활권 단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여성비율 역시 33.6%로 세 중점지역 중 가장 낮아 에너지·안전·환경·산업개발과 같은 지역 핵심정책 분야에서 여성전문인재를 발굴하고 정책결정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나타남
- 종합하면 통계분석에서는 김천은 ‘산업·혁신도시와 도농복합구조’, 예천은 ‘도청신

도시와 농촌의 이중생활권', 울진은 '에너지산업과 고령·분산생활권'이라는 차별적 특성이 확인됨

- 따라서 여성친화도시의 5대 목표는 세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정책대상과 사업내용은 각 지역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표 V-1> 통계분석을 통한 중점지역별 여성친화도시 조성여건 요약

영역	김천시	예천군	울진군
인구·생활권 구조	· 산업·혁신도시와 읍면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 구조 · 고령여성과 양육기 여성의 정책수요 병존	· 도청신도시의 젊은 양육가구와 기존 농촌 고령인구 공존 · 신도시-농촌 이중생활권 구조	· 원전·에너지산업 중심 인구구조와 농어촌 고령화 병존 · 넓게 분산된 읍면생활권 구조
여성 경제활동	· 여성고용률 57.8% · 남녀 고용률 격차 16.0%p · 제조업 핵심산업 대비 여성참여 제한 · 보건·복지·교육 분야 여성 집중	· 여성고용률 59.5% · 남녀 고용률 격차 17.5%p · 보건·복지·교육 중심 여성고용 · 신도시와 농촌 여성의 일자리 수요 차이	· 여성고용률 55.5% · 남녀 고용률 격차 20.5%p · 숙박·음식·보건복지 분야 여성집중 · 에너지·기술 분야 여성 과소대표
1인가구·돌봄	· 여성 1인가구 및 고령여성 생활지원 필요 · 혁신도시 양육가구와 농촌 고령여성 수요 동시 존재	· 농촌 고령여성 1인가구와 신도시 청년여성 1인가구 공존 · 생활권별 돌봄정책 이원화 필요	· 여성 가구주 1인가구 비중 높음 · 고령여성 중심 생활돌봄·이동·주거지원 필요
안전	· 교통사고·화재·생활안전 취약성 확인 · 교통·보행 중심 생활안전 강화 필요	· 교통안전과 신도시 야간보행, 농촌 이동안전 고려 필요	· 화재·범죄·감염병 등 복합 위험 고려 필요 · 고령여성 주거·이동 및 분산생활권 안전 중요
여성 대표성	· 위원회 여성비율 41.5% · 산업·도시·교통·안전 분야 여성진입 확대 필요	· 위원회 여성비율 41.5% · 신도시·농촌 간 여성대표성 균형 필요	· 위원회 여성비율 33.6% · 에너지·안전·환경 분야 여성대표성 확대 시급
종합 진단	산업·혁신도시형 여성친화도시 고도화 필요	도청신도시-농촌상생형 여성친화도시 구축 필요	에너지·분산생활권형 여성친화도시 구축 필요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지역 주요업무계획 분석 결과

- 정책분석에서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지방정부 시행계획에 포함된 김천시·예천군·울진군의 사업과 각 지역의 주요업무계획을 검토하여 현재 지역정책이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세 지역 모두 여성·가족 관련 사업뿐 아니라 일자리, 돌봄, 안전, 청년, 산업, 도시·농촌개발 등 여성친화도시와 연계 가능한 정책자원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사업을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주요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5대 목표와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양성평등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여성일자리 교육, 폭력예방, 돌봄, 여성 단체 역량강화 등 전통적인 여성·가족정책 영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역의 주요업무계획에는 산업·청년·교통·도시계획·통합돌봄·에너지 등 보다 폭넓은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정책에서는 여성·가족부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 일반 시정·군정 핵심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 김천시는 세 지역 중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기존 정책기반이 가장 많이 축적된 지역임.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는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양성평등기금 사업,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여성시간선택 일자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불법촬영 점검, 아이돌봄, 남성 육아참여, 안심거울 등 5대 영역과 연결 가능한 사업이 비교적 폭넓게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운영계획상 전담인력, 성인지 통계, 시민참여단과 협의체 운영 등 제도적 기반도 일정 수준 구축되어 있음
- 그러나 기존 사업의 상당수가 일자리 교육, 안전시설, 돌봄서비스,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형태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에는 제조업·혁신도시·도시계획 등 김천의 핵심 정책과 여성친화도시를 연결하고 기존 사업 간 조정과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함
- 예천군은 2026년 주요군정에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자체를 역점사업으로 설정하고 군민참여단 구성, 부서 간 협력체계와 관련 협의체 구성,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어 신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형성 의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됨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서는 여성일자리 교육,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공공부문

폭력예방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현재 여성정책 자체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편임

- 반면 주요업무계획에는 도청신도시 청년센터, 첨단산업단지, K-보듬, 아픈아이돌봄센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독거노인 지원 등 여성친화도시와 연결 가능한 정책 자원이 다수 존재함
- 따라서 예천은 기존 여성정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보다 도청신도시·청년·첨단산업 정책에는 여성의 일자리와 참여를, 농촌복지·통합돌봄 정책에는 고령 여성의 이동과 생활돌봄을 결합하는 방식이 중요함
- 울진군의 양성평등 시행계획은 양성평등주간, 지역특화 여성취업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 및 역량강화, 폭력피해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통적인 여성정책 및 교육·지원사업의 비중이 높음
- 그러나 군 전체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신한울 3·4호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청년 정착지원, 청년일자리센터, 사회적경제, 의료·요양 통합돌봄, 군민 참여형 재난예방 등 훨씬 폭넓은 정책자원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원전 관련 주요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여성친화도시에서는 이 과정에 여성의 고용·전문인력 양성·의사결정 참여를 연결할 여지가 큼
- 또한 군정 차원에서 통합돌봄과 군민 참여형 재난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고령여성 생활돌봄과 주민주도 안심마을 등으로 연결할 가능성도 확인됨
- 종합하면 현재 정책기반은 부족하다기보다 관련 사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기존 사업이 성별 수요와 충분히 연결되지 않은 것이 핵심적인 한계로 볼 수 있음

<표 V-2> 양성평등 시행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분석 결과 요약

영역	김천시	예천군	울진군
①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 기존 여성친화도시 추진 경험과 전담인력·성인지 통계·참여단 기반 존재 · 기존 제도의 실질적 정책 조정 기능 강화 필요	·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및 군민참여단·부서협력 체계 구축 계획 존재 · 신규 추진체계의 안정적 정착 필요	· 양성평등 교육·여성단체 지원 중심 기반 존재 · 여성친화도시 전담·협업·주민참여체계 확대 필요
②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새일센터·시간선택 일자리 등 기존 여성고용 정책기반 존재 · 제조업·혁신도시·공공기관 등 일반 경제정책과의 연계 필요	· 여성일자리 교육은 존재하나 규모 제한적 · 신도시 청년정책·첨단산업단지·공공서비스와 여성고용 연계 필요	· 여성취업교육은 자격취득 중심 · 청년일자리·사회적경제·원전·에너지산업과 여성진입 연계 필요
③ 지역사회 안전 증진	· 불법촬영 점검·안심거울 등 시설형 사업 기반 존재 · 교통·보행·생활안전 및 주민참여 안전활동으로 확대 필요	· 여성친화도시 안전정책 신규 개발 가능 · 기존 스마트·산업안전 정책을 여성 생활안전과 연결할 필요	· 폭력예방·피해자 지원과 재난안전 정책 기반 존재 · 분산생활권·고령여성 및 주민참여형 안전활동과 연결 필요
④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 아이돌봄 및 혁신도시 돌봄기반 존재 · 다수 사업의 연계·조정과 농촌 고령여성 돌봄 보완 필요	· K-보듬·아픈아이돌봄·가족센터·통합돌봄 등 기반 풍부 · 신도시 아동돌봄과 농촌 생활돌봄의 이원화 필요	· 아이돌봄·공동육아·교육돌봄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기반 존재 · 읍면별 서비스 도달성과 돌봄인력 확보 필요
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여성지도자 교육·여성친화 공모·시민참여단 기반 존재 · 단체활동을 정책기획·의사결정 참여로 고도화 필요	· 향후 군민참여단 구성계획 존재 · 신도시·농촌 여성인재를 함께 발굴하는 구조 필요	· 여성단체 연수·역량강화 중심 사업 존재 · 청년·농업·에너지 등 새로운 여성주체 발굴 필요
정책 방향	· 기존 여성친화 사업의 고도화 및 주요 시정과 연결 필요	· 신규 추진체계 구축과 기존 신도시·농촌정책의 여성친화적 연결 필요	· 신규 추진체계 구축과, 기존 여성정책 범위를 넘어 에너지·청년·통합돌봄·재난정책과의 연결 필요

3) 면접 및 FGI를 통한 여성친화도시 정책수요 분석 결과

- 심층면접과 FGI에서는 통계와 행정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여성의 실제 생활 경험과 정책이용의 제약 및 수요, 기존 사업의 실효성, 지역사회 참여와 행정추진 과정의 문제를 파악함
- 3개 지역 현장의 활동가, 유관기관, 공무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정책수요 분석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고, 김천시의 경우 전문가 FGI를 통해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 발굴을 추가하였음. 따라서 조사결과는 동일 문항에 대한 정량조사가 아니라 지역과 조사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과 제안이 제시된 질적자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함
- 먼저 김천시에서는 새로운 사업의 부족보다 기존 정책의 분절과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제기됨
- 여성일자리 분야에서는 여성 대상 교육이나 자격과정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와 함께 청년과 노인 사이에 놓인 40~60대 여성에 대한 지원 부족이 제기됨
- 돌봄에서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의견보다 다양한 시설과 사업이 존재하지만 전체 자원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사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나타났으며, 안전에서는 기존 시설의 양보다 외곽 가로등·횡단보도·폭염대응 등 일상적인 생활안전과 설치 후 관리가 중요하게 제기됨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은 비교적 활발하지만 여성들이 생활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정책요구로 발전시킬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확인됨
- 전문가 FGI에서도 여성친화일촌기업·안심시설·K-보듬 등 기존 사업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지역산업·생활안전·돌봄사각지대·여성정책 참여와 연결하여 재설계해야 한다는 평가가 제기됨
- 이에 따라 김천의 정책수요는 기존 사업의 고도화, 중장년 여성과 산업·혁신도시의 연계, 생활안전 중심 전환, 돌봄자원 조정, 시민참여단의 정책파트너화로 집약됨
- 예천군에서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도청신도시와 기존 읍면 농촌지역의 정책수요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 가장 특징적임

- 성평등 인식에서도 젊은 인구가 많은 신도시와 기존 농촌지역의 차이가 제기되었으며, 여성일자리에서는 신도시 양육기 여성의 근로시간과 일자리 시간의 불일치, 농촌 중고령 여성의 이동제약과 제한된 일자리 선택지가 함께 나타남
- 돌봄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명확하여 호명읍 등 신도시는 아동돌봄이 중요한 반면 기존 읍면은 노인·생활돌봄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고, 농촌에서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자신의 이동과 처우 문제도 함께 나타남
- 안전 역시 신도시는 야간보행과 시설관리, 농촌은 교통·이동과 생활관계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됨
- 여성대표성에서는 여성 이장과 여성 협의체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참여의 수가 실제 의사결정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경향이 확인됨
- 따라서 예천의 정책수요는 신도시-농촌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각각의 일자리·안전·돌봄 수요를 맞춤형하고 두 생활권의 여성인재를 지역정책 참여구조 안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울진군은 안정적인 여성일자리 부족, 공공기간제·돌봄·사무직 중심의 제한된 취업구조, 고학력·청년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부족 등을 제기함
- 또한 청년여성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창업지원 역시 초기단계 이후 지속적인 성장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남
- 고령여성에게는 범죄 자체보다 교통부족, 1인가구의 취약한 생활기반, 생활돌봄 등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 등 실제 돌봄인력의 부족도 확인됨
- 여성들은 농업·가공·교육·봉사 등의 지역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은 낮다는 평가도 나타남
- 이에 따라 울진의 정책수요는 안정적인 여성일자리, 에너지산업과 여성의 연결, 청년여성 네트워크, 고령여성 생활돌봄·안전, 지역 핵심정책 분야의 여성대표성 강화로 집약할 수 있음
-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중요한 정책수요 중 하나는 안전정책을 물리적 안전환경 조성에만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임

- 주민과 시민·군민참여단이 직접 생활공간을 살펴보고 위험요인을 발굴하며 안심반상회·안심마을·안전지도 활동을 통해 개선안을 만들고 행정과 협의한 뒤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함
- 이는 안전환경 개선뿐 아니라 주민이 자신의 지역을 스스로 안전하게 만드는 역량을 높인다는 점에서 3영역인 지역사회 안전 증진과 5영역인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결합하는 중요한 사업방향으로 볼 수 있음

<표 V-3> 면접 및 FGI를 통한 지역별 여성친화도시 정책수요 요약

영역	김천시	예천군	울진군
①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 담당자 교체에 따른 정책 연속성 문제 제기 · 부서 간 사업조정 및 협업 필요 · 기존 시정사업의 성평등 관점 재설계 요구	· 신도시와 농촌의 성평등 인식차이 확인 · 소규모 행정의 업무과중과 협업 한계 제기 · 부서협업 제도와 요구	· 보수적 성역할 인식과 세대별 변화가 함께 나타남 · 여성친화도시 주민인지도 및 행정연속성 확보 요구
②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직업교육의 취업연계 점검 요구 · 40~60대 여성 정책 사각지대 제기 · 산업·혁신도시와 여성일자리 연계 요구	· 육아기 여성의 근로가능시간과 지역 일자리 근무시간 불일치 · 농촌 중고령 여성의 이동 제약 · 창업업종 편중 및 돌봄직종 채우 문제	· 안정적인 장기 일자리 부족 · 청년·고학력 여성의 적합일자리 부족 · 여성청년 네트워크와 창업 성장지원 요구
③ 지역사회 안전 증진	· 외곽 가로등·교통·보행·폭염 등 생활안전 요구 · 기존 모니터링의 정책한류 강화 요구 · 주민참여형 안심활동 확대 필요	· 신도시 야간보행과 시설관리 문제 · 농촌 교통·이동안전 및 관계안전 요구 · 안심반상회·주민 안전지도 등 참여형 방식 필요	· 가로등·야간환경과 고령여성 이동문제 제기 · 1인가구 생활안전 및 주거안전 요구 · 마을단위 안심활동과 기후안전 확대 필요
④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 다수 돌봄사업의 중복·분절 문제 제기 · 신규시설보다 통합·조정 요구 · 돌봄노동자 권익 및 이용자 교육 요구	· 신도시 아동돌봄-농촌 노인·생활돌봄의 차이 명확 · 의료·교통·돌봄 연계 요구 · 돌봄노동자 채우·이동지원 요구	· 고령여성 생활돌봄 수요제기 · 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 부족 문제 · 긴급돌봄 및 돌봄인력풀 요구
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시민참여단 및 여성활동기반 존재 · 공론화·정책제안 기능 강화 요구 · 여성정책 중간리더 육성	· 여성 이장 및 공식 여성리더 확대 요구 · 참여인원과 실질적 영향력 간 간극 확인 · 신도시·농촌 여성인재 연	· 여성의 실제 활동 대비 공식 대표성 부족 · 기존 여성단체 밖 청년·전문직 여성 네트워크 요구

	필요	결 요 구	· 에너지·안전·환경 분야 여성참여 확대 필요
정책 방향	· 기존 사업의 실효성·연계성·지역특화성 강화	· 신도시와 농촌의 상이한 생활수요를 반영한 이원화·연계	· 양질의 여성일자리와 고령·분산생활권 보장 및 여성대표성 확대

2. 중점지역별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향

○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필수지표 사업과 대표사업을 제시하고자 함. 사업명, 내용 등의 범위를 검토할 때 생성형 AI인 ChatGPT를 활용하여 검토하였고, 최종 2-4개 범위에서 제시하였음

가. 김천시 : 산업혁신형 여성친화도시 고도화

- 김천시는 이미 여성친화도시 추진경험과 시민참여단, 성인지 통계, 여성일자리 관련 사업, 돌봄·안전사업 등의 기반이 존재하므로 신규사업을 많이 추가하기보다 기존 시정사업을 성평등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 특히 제조업·혁신도시라는 성장기반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연결하고, 40~60대 여성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기존 돌봄·안전·시민참여 사업을 실제 생활변화와 연결하는 것이 대표사업 선정의 핵심기준임

<표 V-4>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별 필수지표 및 대표사업 제시

영역	필수지표 및 필수 추진사항	대표사업 예시	주요 내용 및 방향
①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 여성친화도시 전담인력 안정적 확보 -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지속 관리 - 성인지 통계 정기 구축 및 활용	① 여성친화도시 부서협업·BSC 고도화	- BSC를 과제 건수 중심에서 성인지 통계 활용, 성별영향평가 연계, 주민의견 반영, 실제 정책개선 성과 중심으로 고도화 - 일자리·산업, 교통·안전, 돌봄·복지 등 부서협업형 공동과제 발굴 및 협업실적 관리

			· 과제 제출 전 전문가 사전컨설팅 및 연말 개선성과 환류
		② 성인지 데이터 기반 「김천 정책 리디자인」	· 성인지 통계와 시정자료를 활용해 매년 핵심 성평등 정책의제 선정 · 산업·일자리·교통·안전·돌봄 등 일반 시정사업의 성인지 리디자인 및 차년도 사업 반영
②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여성일자리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의 실질적 여성 일자리 발굴 기능 확보	① 「김천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인증	· 김천형 특성을 담은 여성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준 마련(도내 경산, 구미 사례 참고) · 부서 협업을 통한 인센티브 발굴 및 제공 강화
		② 「산업·혁신도시 여성 커리어 프로젝트」	· 산업단지·혁신도시 기업·공공기관의 여성 진입 가능 직무 발굴 및 교육·일 경험-취업 연계
		③ 「김천 중장년 여성 커리어 브리지」	· 40~60대 여성의 경력진단, 직무교육, 현장실습, 취업·창업 및 사후 경력관리
		④ 「투게더 김천」 협업형 여성일거리 실험	· 농산물·먹거리·관광·생활서비스 등을 활용한 여성팀 단위 협업형 일거리 실험 및 사업화·조직화 지원
③ 지역사회 안전 증진	· 안전 관련 부서 TF 구성·운영 · 여성안전 관련 부서 간 협의구조 정례화	① 「안전 포커스 김천 2.0-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생활권」	· 혁신도시·원도심·읍면 등 생활권별 안심반상회와 주민 안전점검 운영 · 주민제안-행정개선-재점검 체계 구축 및 시범생활권 확산
		② 「김천 여성 생활동선 안전지도」	· 여성·아동·고령자의 통학·출퇴근·버스정류장·농촌도로 등 실제 생활동선 조사 · 야간보행·교통·조명·폭염·섬터 등 생활안전까지 포함한 주민참여형 안전지도 제작

		③ 주민주도 「안심마을」 조성 사업	· 매년 안심마을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주민 안전교육·안전걷기·마을안전지도 운영 · 시민참여단의 모니터링 경험을 주민주도형 안전활동으로 확산
④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 돌봄노동자 자원사업 추진 · 돌봄종사자의 처우·역량·권익 관련 실적 관리	① 「김천 돌봄노동자 안심일터」	· 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보육·복지종사자의 감성노동·안전·휴게·권익 실태조사 및 상담·소진예방·권익지원 · 서비스 이용자 대상 돌봄노동 존중문화 확산
		② 「김천 돌봄자원 통합맵+돌봄 사각지대 관리」	· 아동·노인·가족돌봄 자원의 대상·시간·지역·이용조건 통합정보 구축 · 혁신도시·원도심·읍면별, 야간·주말·긴급 등 돌봄공백 분석 및 기존 자원연계·조정
		③ 「배달의 돌봄-김천형 찾아가는 생활돌봄」 시범사업	· 병원동행·일상생활지원·긴급·틈새돌봄 수요와 공급인력을 조사하고 소규모 찾아가는 생활돌봄 시범운영
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관리 · 시민참여단 교육 및 실적·활동실적 관리	① 여성 지역문제 해결형 커뮤니티 공모」	· 안전·돌봄·일자리·성평등·문화 등 지역문제 해결형 여성커뮤니티 발굴 및 조직화-프로젝트-지속조직 단계별 성장지원
		② 「김천 여성친화 디자인스쿨」	· 여성친화도시·지역정책·예산 이해와 현장조사·주민수요·정책제안 실습을 통한 정책디자이너 양성
		③ 「시민참여단 「정책파트너 프로젝트」	· 시민참여단의 역할을 시설모니터링에서 시정 핵심사업 정책모니터링과 부서 간 정책협의로 확대 · 주민제안→정책반영 환류체계 구축

		④ 「김천 HER-STORY 프로젝트」	· 최송설당, 여성독립운동가, 근우회 활동 등 김천 여성사 관련 인물·장소·자료 조사 · 시민참여단·지역여성·청소년이 참여하는 여성사 조사단 구성 · 지역 원로·주민 구술채록 및 사진·문헌·신문자료 수집 · 여성인물·단체·활동지 스토리 발굴 및 아카이빙 · 여성역사 지도·스토리북·영상·웹콘텐츠·전시 등 콘텐츠 제작 · 역사해설·탐방 프로그램 및 지역축제·문화관광사업과 연계 · 조사에 참여한 지역여성을 여성사 해설가·스토리텔러로 양성
--	--	-----------------------	---

나. 예천군 : 도청 신도시-농촌상생형 여성친화도시

- 예천군은 도청신도시의 젊은 양육가구·공공기관 종사자와 기존 읍면의 농촌·고령 인구가 공존하고 있어 신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면서 동시에 연결하는 여성친화도시 모델이 가장 중요함
-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편의점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경제·사회 참여 영역의 대표사업으로 충분히 고도화할 수 있는 기존 자원으로 판단됨
- 단순한 단기 일자리 알선 기능을 넘어 육아기 여성의 근로가능시간, 기업·공공기관의 단시간 일감, 중장년 여성의 경력과 농촌생활권의 일거리를 함께 연결하는 예천형 여성시간 일자리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이 적절함
-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별도의 대규모 시설보다 마을을 정책단위로 활용하여 성평등·안전·돌봄·여성참여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효과적임
- 경북 농촌지역 양성평등 연구(김명화, 2024)에서도 농촌 특성을 이해하는 양성평등 강사를 양성·관리하고, 주민자치·마을공동체 등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방

안이 제안되어 있음

- 성평등 마을은 마을규약, 주민교육, 맞돌봄·맞살림, 여성일자리, 대표성 개선 등을 한 마을 안에서 통합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 활용 가능함

<표 V-5> 예천군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별 필수지표 및 대표사업 제시

영역	필수지표 및 필수 추진사항	대표사업 예시	주요 내용 및 방향
①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 여성친화도시 전담인력 확보 ·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관리 · 성인지 통계 구축 및 활용	① 「예천 여성친화 정책발굴 공무원 아카데미」	· 여성친화도시 신규 추진 초기 공무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형 성인 지교육 운영 · 실제 사업을 활용한 사례 토론 중심 운영 · 일자리·교통·농업·돌봄·신도시·안전 등 부서별 주요사업을 성별 관점에서 재검토 · 부서별로 기존 사업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과제로 발전 가능한 사업 발굴 · 추진경험 축적 후 부서평가·BSC 등 제도적 성과관리체계로 단계적 전환
		② 「예천군 여성친화도시 BSC 단계적 도입」	· 부서별 기존사업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과제로 발전 가능한 사업 발굴 및 협업형 과제 시범운영 · 공감대·역량 형성 → 부서협업 과제 운영 → 예천형 BSC 도입의 단계적 추진 · 초기에는 교육·과제발굴·협업 참여 중심, 장기적으로 실제 정책개선·생활권 격차 개선 등 성과지표 중심으로 전환
②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여성일자리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고용기관·기업·농업·공공기관·여성대표 참여	① 「예천 일자리 편의점 2.0」	· 기존 일자리 편의점 사업을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으로 고도화 · 기업·공공기관의 단시간·유연 일강 발굴 · 구직여성의 경력·시간·생

			· 활권과 일자리 매칭 · 취업 후 근속·경력관리까지 연계
		② 「도청신도시 여성 경력 이어가기」	· 공공기관·전문서비스·도시첨단산업 연계 직무 발굴 · 육아휴직·경력중단 이후 복귀여성 일경험 지원 · 공공기관 여성멘토와 지역여성 연결 · 전문직·사무직 경력유지 지원
		③ 「예천 농촌여성 로컬워크」	· 농촌여성의 농식품가공·로컬푸드·농촌관광·생활서비스 등 지역자원형 일거리 발굴 · 소규모 협업형 로컬워크 실험과 판로·사업화·지속 활동 지원
③ 지역사회 안전 증진	· 안전 관련 부서 TF 구성·운영 · 여성·아동·고령자 안전의 제 공동관리	① 「예천 안심반상회-안심마을 만들기」	· 신도시·농촌 각각 시범지역 선정 · 주민·군민참여단·행정이 함께 안심반상회 운영 · 농촌마을의 사생활 존중·개인프라이버시 존중·폭력예방 논의 · 주민이 직접 생활안전 약속 작성 · 주민+참여단이 직접 마을 위험요인 발굴 · 행정부서 개선 후 주민 재점검 · 안심마을 1호→2호→3호 단계적 확산
		② 「신도시-농촌 여성 안심생활권 이동지도」	· 신도시의 통학·야간보행·상가주변과 농촌의 병원·시장·버스정류장·농로 등 실제 이동경로 조사 · 여성·아동·고령자 참여형 이동지도 작성 및 교통·가로등·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
④ 가족친화 (돌봄) 환경 조성	· 돌봄노동자 지원사업 추진 · 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 등 돌봄인력의 처우와	① 「같이 돌보는 예천 아빠 돌봄-성평등 프로젝트」	· 도청신도시 아빠를 대상으로 가사·육아 실습, 부모역할 교육, 남성 육아휴직자 네트워크 등 공

	활동 지원 (농촌 돌봄이동 지원)		돌봄 문화 확산 · 농촌마을을 단위로 성역할·돌봄·안전·대표성 문제를 주민이 발굴하고 성평등 마을규약·실천과제를 추진
		② 「예천 성평등 마을 만들기」	
		③ 「예천 생활권 맞춤형 돌봄 네트워크」	· 신도시 아동돌봄과 읍면 고령자 생활돌봄 구분 · 기존 K-보듬·아픈아이돌봄·가족센터·통합돌봄 연계 ·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 분석 · 생활권별 필요한 시간·서비스 보완
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관리 · 군민참여단 구성·교육·활동실적 확보	④ 「농촌 돌봄이동 지원」	· 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 종사자의 이동지원 · 고령여성 병원·생활서비스 동행과 연계 · 교통·보건·복지 부서 협업 운영
		① 「예천 여성생활권 정책 기획단」(군민참여단 확장)	· 신도시 청년·전문직 여성과 읍면 여성농업인·여성리더 공동참여 · 신도시·농촌 생활문제 현장조사 · 군정 정책제안 및 부서간 담회 추진
		② 「여성 마을리더 성장학교」	· 여성 이장·주민자치위원·마을활동가 후보 발굴 · 회의진행·정책이해·스피치·갈등조정 교육 · 선배 여성리더 멘토링 운영 · 마을단위 공식 의사결정 참여 연계
		③ 「농촌형 성평등 마을강사 양성과 찾아가는 교육」	· 농업노동·마을조직·성역할 특성을 이해하는 지역 성평등 강사를 양성하고 이장·주민자치회·농업인단체 등에 찾아가는 교육 실시
		④ 「예천 여성의 삶을 기록하다-농촌여성 구술생」	· 읍면 농촌여성·여성농업인·고령여성·여성이장·지

		애사 프로젝트」	역활동가 등의 생애경험 채록 · 농업노동·가족돌봄·마을 활동·지역변화·여성리더 경험 등 기록 · 지역여성·청년·군민참여 단을 구술채록 활동가로 양성 · 음성·영상·사진·생활자료를 지역 여성생활사 아카이브로 구축 · 구술자료를 스토리북·영상·전시·팟캐스트·마을이야기 등으로 콘텐츠화 · 신도시 주민과 농촌여성의 세대·생활권 교류 프로그램으로 확장
--	--	----------	---

다. 울진군 : 도청 신도시-농촌상생형 여성친화도시

- 울진군은 여성친화도시의 신규 추진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동시에 원전·에너지라는 지역 핵심산업과 고령·분산생활권이라는 생활조건을 함께 반영해야 함
- 따라서 초기부터 너무 많은 개별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마을단위 성평등·안전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이 여성친화도시를 체감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산업 여성일자리와 여성대표성을 확장하는 전략이 적절함
- 전문가 조사에서도 군 지역에서는 시설 중심 안전정책보다 관계안전과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중고령여성·지역활동가 등을 시민강사와 조직가로 양성하여 지역역량으로 남기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표 V-6> 울진군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별 필수지표 및 대표사업 제시

영역	필수지표 및 필수 추진사항	대표사업 예시	주요 내용 및 방향
①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 여성친화도시 전담인력 확보 ·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관리 · 성인지 통계 신규 구축 및 활용	① 「울진 여성친화 정책발굴 공무원 워크숍」	· 신규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공직사회 공감대 형성 · 실·과·소의 담당자와 중간관리자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형 성인지교육 운영 · 원전·에너지, 일자리, 관광·해양, 농업, 재난안전, 교통, 통합돌봄 등 실제 군정사업을 사례로 활용 · 부서별로 기존 사업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과제로 발전 가능한 사업 발굴 · 추진경험 축적 후 부서평가·BSC 등 제도적 성과관리체계로 단계적 전환
		② 「울진군 여성친화도시 BSC 단계적 도입」	· 부서별 기존사업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과제로 발전 가능한 사업 발굴 및 협업형 과제 시범운영 · 공감대·역량 형성 → 부서협업 과제 운영 → 예천형 BSC 도입의 단계적 추진 · 초기에는 교육·과제발굴·협업 참여 중심, 장기적으로 실제 정책개선·생활권 격차 개선 등 성과지표 중심으로 전환
②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 여성일자리협의체 구성·운영 · 원전·기업·일자리기관·여성·전문가 참여구조 마련	① 「울진 에너지 여성 커리어 패스」	· 원전·에너지 관련 여성진입 가능 직무조사 · 기술·안전·환경·품질·보건·디지털·행정 분야 발굴 · 직업교육-현장실습-멘토링-채용연계 · 관련 기업의 여성친화 근무환경 개선 병행
		② 「울진 로컬 여성일거리 협업랩」	· 관광·해양·농수산·생활서비스 분야 일거리 발굴 · 3~5명 단위 협업형 일거

			- 리 실험 · 사회적경제·마을기업 등 조직화 연계 · 종고령 여성과 여성청년의 협업모델 검토
		③ 「울진 여성청년 커리어·창업 네트워크」	· 여성청년·이주여성·경력보유여성·창업자 연결 · 지원사업 정보제공·컨설팅·멘토링 · 여성청년 간 협업프로젝트 운영 · 초기 창업지원 이후 성장단계 지원
③ 지역사회 안전 증진	· 안전 관련 부서 TF 구성·운영 · 재난·교통·보건·복지·원전 안전 등 관련부서 참여	① 「울진 주민주도 안심마을」	· 주민 안심반상회 정례운영 · 여성·고령자 중심 안전걷기 추진 · 주민 안전체크리스트와 안전지도 작성 · 행정부서 개선 후 사후점검 · 안심마을 단계적 확산
		② 「고령여성 안심생활권」	· 여성 1인가구 주거·화재·전기·가스·응급안전 점검 · 버스·병원·시장 이동경로 조사 · 생활돌봄 및 이동지원과 연계 · 읍면별 생활안전 사각지대 관리
		③ 「여성농업인 기후안전마을」	· 폭염·새벽·야간 농작업 실태조사 · 여성농업인 건강·이동·야간안전 점검 · 주민이 직접 기후안전지도 작성 · 안전한 작업시간·휴게공간·마을대응체계 개발
④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 돌봄노동자 지원사업 추진 · 돌봄종사자의 처우·역량·권익 관련 실적 관리	① 「울진 성평등 마을」 만들기	·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성역할·돌봄분담·안전·여성대표성 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마을별 실천과제 운영 · 성평등 마을을 초기 여성

			친화도시 체감형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읍면별로 단계적 확산
		② 「울진 찾아가는 고령여성 생활돌봄」	· 읍면 고령여성 1인가구 중심 · 안부·식사·세탁·병원동행·생활지원 연계 · 주거안전과 보건서비스 통합 · 기존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
		③ 「울진 돌봄인력 매칭·긴급풀」	· 실제 활동가능 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 DB 구축 · 서비스 수요와 인력을 지역별로 매칭 · 긴급 돌봄인력풀 운영 · 이동비·소진예방·근속지원 병행
		④ 「마을 돌봄거점」 시범사업	· 마을회관·경로당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식사·건강·생활정보·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소규모 돌봄거점 운영 · 시설신축보다 기존 공간 활용 우선
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개선 · 군민참여단 구성·교육·활동 활성화	① 군민참여단 「안심마을 코디네이터」 육성	· 군민참여단을 단순 모니터링 조직에서 주민조직 촉진자로 지속 성장 지원 · 안심반상회 진행·현장조사·주민의견 수렴교육 · 성평등 마을·안심마을의 지역확산 역할 수행
		② 「울진 여성 에너지·안전 정책리더」 양성	· 에너지·안전·환경·보건 분야 여성인재 발굴 · 정책·예산·위원회 실무·성인지 분석교육 · 수료자를 원전·환경·재난·산업 관련 위원회와 연계
		③ 「울진 여성정책 네트워크」	· 여성농업인·청년여성·창업자·전문직·귀촌여성 연결 · 지역별·세대별 여성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 생활의제 발굴 및 군정 정책제안 추진
		④ 「농어촌 성평등 시민강사 양성과정」	· 지역주민·여성활동가·귀촌여성 등 강사후보 발굴 · 농촌 성역할·여성농업인·폭력예방·성인지 교육 · 마을·농업인단체·경로당에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외부강사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내 성평등 역량 축적
		⑤ 「울진 여성의 삶과 마을을 기록하다-구술생애사·여성생활사 아카이브」	· 고령여성·여성농업인·여성어업인·지역활동가·귀촌여성 등의 생애경험 채록 · 농어업노동·가족돌봄·지역공동체·재난·환경변화·원전 입지 이후 지역변화 등에 대한 여성경험 기록 · 지역여성·청년·군민참여단을 구술채록자·생활사 기록활동가로 양성 · 사진·생활자료·음성·영상 등을 여성생활사 디지털 아카이브로 축적 · 마을별 여성스토리 지도·영상·전시·책자·문화콘텐츠 개발 · 지역문화·관광·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3. 중점지역별 세부 정책과제

① 김천시: 산업·혁신도시형 여성친화도시 고도화

1)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가. 여성친화도시 부서협업·BSC 고도화

□ 필요성 및 목적

- 김천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부서평가 공통지표에 반영하고 있어 전 부서가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지역 추진·컨설팅 관점에서는 부서가 여성친화도시에 적합한 사업을 별도로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된 기존 사업과 여성친화도시 과제의 연계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제기됨
- 따라서 BSC를 단순한 과제 제출·실적 관리수단이 아니라 기존 시정사업의 성평등한 개선과 부서협업을 촉진하는 제도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여성친화도시에서도 부서평가는 과제 수뿐 아니라 성별영향평가 연계, 전문가 의견 반영, 정책개선 노력 등을 함께 평가하는 방향이 강조되고 있음

□ 추진 내용

- BSC 평가항목 개선
 - 과제 건수보다 성인지 통계 활용, 성별영향평가 연계, 주민의견 반영, 실제 정책 개선 성과 중심으로 개편
- 부서협업형 과제 운영
 - 일자리·산업, 교통·안전, 돌봄·복지 등 2개 이상 부서가 함께 추진하는 공동과제 발굴
 - 협업회의 및 공동개선 실적을 평가에 반영
- 사전컨설팅과 성과환류 강화
 - 과제 제출 전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연말에는 컨설팅 반영 여부와 개선성과를 점검하여 우수사례를 다음 연도 부서교육에 활용

나. 성인지 데이터 기반 「김천 정책 리더십」

□ 필요성 및 목적

- 김천시는 2024년 자체 성인지 통계를 구축하여 인구·경제·복지·사회참여·안전 등 7개 분야 79개 지표와 시민 설문 등을 통해 일·돌봄 병행, 야간보행 안전, 가사·돌봄 분담, 성별 고정관념 등을 조사하는 등 성인지 정책기반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음
- 다만 성인지 통계의 구축 자체보다 통계에서 확인된 성별 격차와 생활수요를 실제 시정사업의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에서도 김천은 제조업 등 지역 핵심산업과 여성고용 간 간극, 여성의 고용·임금 격차, 교통·생활안전 등의 과제가 확인된 만큼 여성가족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산업·일자리·교통·돌봄 등 주요 시정사업을 성인지 관점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성인지 통계를 정책현황 자료에서 정책개선 도구로 전환하여 지역의 주요 성별격차를 발굴하고, 관련부서 사업을 개선하는 「김천 정책 리더십」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성인지 데이터 기반 핵심과제 발굴
 - 성인지 통계와 주요 시정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3~5개 핵심 성평등 정책의제 선정
 - 산업·일자리·교통·안전·돌봄 등 일반 시정사업을 우선 검토
- 부서별 정책 리더십 컨설팅
 - 사업대상, 이용시간, 접근성, 정책수혜, 참여방식 등을 성별 관점에서 점검
 - 담당부서·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전문가가 공동으로 개선안 도출
- 정책개선 성과관리
 - 성인지 통계 활용사업과 실제 개선내용을 사례화
 - 우수사례를 부서교육 및 차년도 사업발굴에 활용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가. 「김천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인증

□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친화도시의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영역은 단순한 취업지원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지속가능한 고용과 경력유지,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특히 김천은 제조업·산업단지·혁신도시 등 지역의 산업·고용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여성의 취업 확대와 함께 기업 내부의 근무환경을 여성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 대표과제로서 요구되는 여성 고용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기에 범위와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존 기업지원사업을 단순 연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김천의 산업구조와 여성 근로자의 현실을 반영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발굴·인증하여 실질적인 기업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김천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은 여성채용 실적만을 평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여성고용 확대, 경력유지, 일·생활 균형, 안전한 근무환경, 조직 내 성평등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김천형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기업에 행정·재정·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연계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자발적인 여성친화 경영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추진 내용

- 김천형 여성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 마련
 - 지역 산업구조와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여성고용, 고용안정, 일·생활 균형, 안전·편의, 조직문화 등 분야별 인증지표 개발
 -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중소기업도 단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형·우수형 등 차등 인증방식 검토
- 인증기업 발굴 및 맞춤형 개선지원

- 기업 공모와 여성일자리협의체 추천 등을 통해 참여기업 발굴
- 인증 전 사전진단을 실시하여 기업별 여성고용 및 근무환경 개선과제 도출
- 기존 미충족 기업에는 컨설팅을 제공하여 일정기간 개선 후 재신청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인증기업 인센티브 패키지 구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업환경 개선사업, 각종 기업지원 공모 등 김천시 기존 사업과 가점·우선선정 방식으로 연계
 - 인증현판, 시 홈페이지·언론 홍보, 우수기업 사례집 등 기업 이미지 제고 지원
 - 여성인력 채용연계, 직무교육, 일경험·인턴십 등 일자리사업 우선 연계
 - 우수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휴게공간, 안전·편의시설 개선 등 추가 지원

나. 「산업·혁신도시 여성 커리어 프로젝트」

□ 필요성 및 목적

- 김천시는 제조업 종사자가 1만 4,842명으로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제조업 내 여성 비율은 24.4%에 그치며, 여성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
- 2025년 여성고용률 역시 57.8%로 남성 73.8%보다 16.0%p 낮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함께 지역 핵심산업으로의 진입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음
- 김천 전문가 FGI에서도 일반적인 여성특화 일자리를 추가하기보다 혁신도시라는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여성의 참여가 가능한 일자리 영역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산업단지·혁신도시의 기업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여성의 진입 가능 직무를 발굴하고 교육·일경험·취업으로 연결하는 김천형 여성 커리어 경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산업·혁신도시 여성직무 발굴

- 제조업 및 혁신도시 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 진입 가능 직무와 필요역량 조사
- 사무·품질관리·안전·디지털·연구지원·공공서비스 등 직무 발굴
- 직무교육-일경험-취업 연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기존 직업교육과 연계한 맞춤형 직무과정 운영
 - 기업·공공기관 현장체험, 인턴십·일경험, 여성 멘토링 및 채용 연계
- 여성일자리협의체를 통한 지속관리
 - 기업·공공기관·일자리기관·관련부서가 참여하여 여성채용 수요와 진입장벽 지속 점검
 - 교육수료보다 취업·근속·직무확장 등 실제 성과 중심 관리

다. 「김천 중장년 여성 커리어 브리지」

□ 필요성 및 목적

- 김천 심층면접에서는 청년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이에 있는 40~60대 여성 가운데 취업이나 창업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존재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 특히 청년층에는 창업·임차료·사업고도화 등의 지원이 있는 반면 50대 전후 여성에게는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경향이 확인됨
- 기존 여성 직업교육도 교육과 자격취득 자체보다 실제 취업이나 소득활동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제기됨
- 따라서 중장년 여성의 기존 경력과 생활경험을 재평가하여 재취업·직업전환·창업으로 연결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중장년 여성 경력진단 및 수요발굴
 - 40~60대 여성의 경력, 자격, 취업·창업 희망분야 및 근로조건 조사
 - 기존 직업교육 참여자의 취업·소득활동 연계성과 함께 점검

- 커리어 전환 패키지 운영
 - 경력진단-직무교육-현장실습-취업매칭 또는 창업컨설팅 연계
 - 기존 경력과 지역 수요를 활용한 재취업·소규모 창업·직업전환 지원
- 사후 경력관리 강화
 - 취업·창업 이후 일정기간 근속·사업유지 여부 모니터링
 - 교육수료 인원보다 취업·근속·소득활동 등 실질적 성과 중심 관리

라. 「투게더 김천」 협업형 여성일거리 실험

□ 필요성 및 목적

- 김천의 여성일자리 정책은 여성에게 별도의 틈새일 자리를 만드는 방식보다 지역에서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일거리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FGI에서도 여성특화라는 이유만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반드시 질 좋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됨
- 김천은 자두·샤인머스켓 등 농업자원과 혁신도시의 소비생활권이 함께 존재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전문가 논의에서는 지역 농산물 생산자와 혁신도시 소비자를 연결하는 방식 등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발굴 가능성이 제안됨
- 따라서 개별 여성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여성들이 공동으로 일거리를 기획·실험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여성 협업형 일거리 공모·발굴
 - 지역 먹거리, 농산물 유통·가공, 행사·관광, 생활서비스 등 김천 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발굴
 - 3~5명 내외 여성의 팀 단위 참여와 공동기획 지원
- 소규모 시범사업 운영
 - 초기 사업비·전문가 컨설팅·판로 및 지역기관 연계 지원
 - 혁신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 등 도농생활권을 연결하는 사업 우선 검토

○ 사업화·자립 단계 지원

- 시범사업 평가 후 사업성이 확인된 팀에 브랜딩·판로·경영 컨설팅 지원
- 협동조합·사회적경제조직·공동사업체 등 지속가능한 조직화 연계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 「안전 포커스 김천 2.0-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생활권」

□ 필요성 및 목적

- 김천시는 지역안전지수에서 교통사고 5등급, 화재 4등급, 생활안전 4등급으로 나타나 범죄예방시설뿐 아니라 교통·보행·생활환경을 포함한 폭넓은 안전정책이 요구됨
- 다만 지역안전지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지표가 아니므로 여성·아동·고령자 등의 실제 생활동선과 체감안전을 별도로 확인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김천 시민참여단은 화장실·안심거울·횡단보도 등의 안전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으나, 면접에서는 폭염 시 그늘막 운영과 같은 생활안전 문제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기존 「안전 포커스 김천」을 시설점검 중심에서 주민이 직접 지역의 안전문제를 발견하고 행정과 함께 해결하며 재점검하는 주민참여형 안심생활권 사업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생활권별 안심반상회 및 주민 안전점검
 - 혁신도시·원도심·읍면 농촌 등 생활권별 시범지역 선정
 - 주민·시민참여단이 함께 야간보행, 교통,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폭염 등 생활안전 문제 발굴
- 주민제안-행정개선-재점검 체계 운영
 - 안전지도 및 안심반상회를 통해 개선과제 선정
 - 교통·도로·안전·복지 등 관련부서가 개선 가능성 검토 및 조치

- 개선 이후 주민과 시민참여단이 현장을 재점검하여 결과 확인
- 안심생활권의 단계적 확산
 - 시범지역의 추진과정과 개선성과를 사례화
 - 우수모델을 다른 동·읍면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나. 「김천 여성 생활동선 안전지도」

□ 필요성 및 목적

- 김천은 혁신도시와 원도심, 읍면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생활권에 따라 여성의 이동방식과 안전문제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현장조사에서도 김천 전체를 특별히 위험한 지역으로 평가하기보다 시민참여단이 횡단보도·대중교통 등 일상적인 이동환경을 점검하고 남녀노소가 함께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기존의 범죄취약지역 중심 안전지도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아동·고령자의 실제 생활동선을 기반으로 교통·보행·야간이동·기후안전을 함께 진단하는 안전 지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설의 설치 유무보다 실제 이용과정에서의 불편과 위험을 확인하여 관련 시정사업의 개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추진 내용

- 생활동선 현장조사
 - 여성·아동·고령자가 자주 이용하는 통학로, 출퇴근로, 버스정류장, 상가, 공원, 농촌도로 등 조사
 - 야간보행, 횡단보도, 조명, 그늘·쉼터, 대중교통 접근성 등 점검
- 주민참여형 안전지도 제작
 - 시민참여단과 생활권 주민이 현장조사 결과를 지도화
 - 위험지점뿐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이유와 이용자 경험을 함께 기록
- 시정사업과 연계한 개선

- 조사결과를 교통·도로·도시·안전 관련부서에 제공
- 우선 개선지점을 선정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및 생활안전 사업과 연계

다. 「김천 주민주도 안심마을」 사업

□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친화도시의 안전정책은 CCTV·가로등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타 지역 여성친화도시에서는 안전마을을 중심으로 안심반상회, 주민참여형 안전문화활동, 민·관·경·소방 안전교육, 마을안전지도 제작 등을 연계하여 주민이 안전활동의 주체가 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음
- 김천도 시민참여단의 기존 안전모니터링 경험을 마을주민에게 확산하여 시민참여단이 직접 모든 지역을 점검하는 방식에서 주민이 자신의 마을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안전사업과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음

□ 추진 내용

- 안심마을 시범지역 선정
 - 생활환경 개선 필요성과 주민 참여의지를 고려하여 매년 1~2개 마을 또는 생활권 선정
 - 시민참여단을 초기 활동의 촉진자로 연계
- 주민 안전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안심반상회, 안전교육, 마을 안전견기 및 안전지도 제작
 - 교통·범죄뿐 아니라 화재·재난·폭염·고령자 이동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안전의제 발굴
-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확산
 - 주민이 발굴한 과제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 시범마을의 활동과정을 축적하여 1호·2호·3호 안심마을 형태로 단계적 확대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가. 「김천 돌봄노동자 안심일터」

□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친화도시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은 돌봄서비스 이용 확대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의 권익과 근무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것을 포함함
- 김천에서도 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보육 및 사회복지 종사자 등 다수의 여성들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종사자의 소진과 감정노동,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김천 기존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서도 돌봄노동자 지원사업을 단순 프로그램 제공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상담·힐링·권익보호 등 실제 노동환경 개선과 연결할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돌봄노동자를 정책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 돌봄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노동 주체로 보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돌봄노동자 근무환경·수요조사
 - 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보육·복지종사자의 감정노동, 안전, 이동, 휴게 및 권익 관련 애로사항 조사
- 상담·소진예방·권익지원
 - 심리상담, 소진예방 프로그램 및 노동권·안전교육 운영
 - 필요 시 관련 전문기관 상담체계 연계
- 이용자 대상 돌봄노동 존중교육
 -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호존중·부당요구 예방 안내
 - 돌봄기관과 연계하여 건강한 돌봄서비스 이용문화를 확산

나. 「김천 돌봄자원 통합맵+돌봄 사각지대 관리」

□ 필요성 및 목적

- 김천은 아동돌봄과 관련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비교적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돌봄 등의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평가가 확인됨
- 반면 면접에서는 유사한 목적의 돌봄시설과 프로그램이 많아 전체 체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업 간 중복과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 공무원 조사에서도 돌봄시설과 프로그램이 연령대·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면서 담당자조차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의견이 나타나, 김천은 신규시설 확충보다 기존 돌봄자원의 연계와 사각지대 진단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김천 돌봄자원 통합맵 구축
 - 아동·노인·가족돌봄 서비스의 대상, 시간, 지역, 이용조건 등을 통합 정리
 -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정보 제공
- 생활권·시간대별 돌봄 사각지대 분석
 - 혁신도시와 원도심·읍면을 구분하여 서비스 중복과 공백 점검
 - 야간·주말·긴급돌봄 등 실제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 중심 분석
- 기존 돌봄사업 연계·조정
 - 관련부서와 돌봄기관 간 정기협의를 통해 유사사업 조정
 - 신규시설보다 기존 자원의 공동활용과 서비스 연계 우선 추진

다. 「배달의 돌봄-김천형 찾아가는 생활돌봄」 시범사업

□ 필요성 및 목적

- 김천은 기존 돌봄시설이 비교적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기보다 필요한 돌봄이 실제 생활공간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상 시설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읍면지역이나 긴급·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구의 수요를 기존 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 모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김천 정책 보완 전문가 논의에서는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가정으로 연계하는 「배달의 돌봄」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으며, 이를 돌봄일자리와도 연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다만 이는 전문가가 제안한 사업개념인 만큼 전면 도입보다 수요조사와 돌봄인력 현황 파악을 선행한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검증하는 것이 적절함

□ 추진 내용

- 돌봄 수요 및 공급자원 조사
 - 병원동행, 일상생활 지원, 긴급·틈새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 조사
 - 실제 활동 가능한 돌봄인력과 기존 서비스 자원 DB 구축
- 소규모 찾아가는 돌봄 시범운영
 - 특정 읍면 또는 돌봄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시범 제공
 - 기존 공공돌봄과 중복되지 않는 틈새수요 중심 운영
- 성과평가 후 단계적 확대
 - 이용수요, 만족도, 돌봄인력 확보 가능성 및 운영비용 평가
 - 효과가 확인된 서비스부터 기존 통합돌봄·일자리사업과 연계 확대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가. 「여성 지역문제 해결형 커뮤니티 공모」

□ 필요성 및 목적

- 김천 현장조사에서는 여성들이 지역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부족하다는 요구가 제기됨
- 특히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활용 가능한 공공공간이 제한되어 여성들이 자유롭게 만나 지역활동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경험이 확인됨

- 이에 기존의 문화·취미 중심 소모임 지원에서 나아가 여성들이 지역의 일자리·돌봄·안전·성평등 등 생활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실험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단년도 활동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업성과가 있는 조직은 지속적인 지역활동 주체로 성장하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추진 내용

- 지역문제 해결형 여성 커뮤니티 공모
 - 안전·돌봄·일자리·성평등·문화 등 지역문제를 주제로 여성 소모임 발굴
 - 주민조사·캠페인·서비스 실험 등 실행형 활동 지원
- 단계별 성장지원
 - 1단계 소모임 조직화 → 2단계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 3단계 지속가능한 조직화로 연계
 - 우수팀에 컨설팅과 후속사업 참여기회 제공
- 시민참여단·정책디자이너와 연계
 - 공모사업 결과를 시민참여단 정책제안 및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 발굴과 연계

나. 「김천 여성친화 디자인스쿨」

□ 필요성 및 목적

- 김천시는 시민참여단과 여성단체 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여성의 참여가 모니터링·봉사·행사 참여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문제를 발굴하여 정책으로 제안하는 역량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자문에서도 여성친화도시의 변화를 위해 지역여성을 리더십·조직가·정책디자이너 등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중간역할자로 양성할 필요성이 제안됨
- 김천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41.5%로 양적 참여기반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산업·도시·교통·안전 등 주요 정책분야에서 여성의 전문성과 실질적인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여성정책 디자이너 양성과정 운영
 - 여성친화도시·지역정책·예산·성인지 관점 등에 대한 교육
 - 현장조사, 주민수요 파악, 정책제안서 작성 등 실습 중심 운영
- 지역현안 프로젝트 수행
 - 일자리·안전·돌봄·도시환경 등 실제 김천 지역문제를 팀별로 조사
 - 조사결과를 관련부서와 공유하고 정책제안으로 발전
- 여성정책 인재풀 연계
 - 수료자를 시민참여단, 각종 위원회, 지역 공모사업 등에 연계
 - 산업·도시계획·교통·안전 등 여성참여가 필요한 정책분야의 인재풀로 관리

다. 시민참여단 「정책파트너 프로젝트」

□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시설·공간 모니터링에서 출발하더라도 추진경험이 축적되면 정책과 사업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을 제안하는 단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관련 연구에서도 추진단계에서는 시설·정책 모니터링을, 활성화 단계에서는 생활정치와 여성참여 등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이 제시됨
- 김천 시민참여단은 안전시설과 횡단보도 등 현장 모니터링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시정 주요사업을 여성의 생활경험과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행정부서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파트너 역할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여성친화도시 점검체계에서도 시민참여단의 교육과 지속적인 활동이 지역사회 여성대표성의 주요 요소로 관리되고 있음

□ 추진 내용

- 시정 핵심사업 정책모니터링
 - 매년 일자리·안전·돌봄·도시환경 등 2~3개 핵심사업 선정

- 사업 이용자 관점의 현장조사와 정책 모니터링 실시
- 시민참여단-사업부서 정책간담회
 -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부서에 직접 제안
 - 개선 가능사항과 추진일정을 함께 협의
- 정책환류 결과 관리
 - 시민참여단 제안사항의 반영 여부와 개선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
 - 우수 정책제안을 차년도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연계

라. 「김천 여성사 다시 잇기-여성역사 발굴·스토리텔링 프로젝트」

□ 필요성 및 목적

-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주로 공적으로 기록된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여성의 활동과 기여가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문화사업 전문가 조사에서는 김천에서도 지역과 관련된 여성인물과 여성의 활동을 추가 조사하여 서로 연결하고 이야기로 구성할 가능성이 제안됨
- 이에 최송설당, 여성독립운동가, 근우회 활동 등 김천과 관련된 여성사 자원을 사료와 자료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지역여성이 직접 발굴·기록·스토리텔링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단순 문화콘텐츠 제작을 넘어 지역여성이 자신의 지역을 여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조사자·기록자·해설자로 성장하는 활동역량 강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의미가 있음
- 타 지역에서도 여성인물과 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주민참여형 여성문화 콘텐츠와 탐방자원으로 발전시킨 사례가 확인됨

□ 추진 내용

- 김천 여성사 조사단 구성 및 기초조사
 - 지역여성·시민참여단·청년 등을 여성사 기록활동가로 양성
 - 문헌·신문·사진·구술자료 등을 활용하여 여성인물·단체·활동지 조사

-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과 장소는 사료 검증 후 활용
- 여성사 스토리텔링·콘텐츠 개발
 -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여성사 지도, 스토리북, 영상, 전시 등 제작
 - 지역여성이 직접 콘텐츠 기획과 스토리텔링 과정에 참여
- 지역문화·교육과 연계
 - 여성사 탐방, 해설 프로그램, 청소년 교육 등으로 확장
 - 조사 참여 여성을 여성사 해설자·스토리텔러 등 지속적인 지역활동 주체로 육성

② 예천군: 도청신도시-농촌상생형 여성친화도시

1)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가. 「예천 여성친화 정책발굴 공무원 아카데미」

□ 필요성 및 목적

- 예천군은 여성친화도시를 처음 추진하는 단계로, 초기에는 제도적 성과관리보다 공무원들이 여성친화도시의 취지를 이해하고 기존 군정사업을 성평등 관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공감대와 실무역량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여성친화도시는 담당부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공무원의 이해와 부서 간 협업이 핵심적인 추진기반이라는 점이 선행연구에서도 강조되고 있음
- 특히 예천은 도청신도시와 기존 농촌지역의 생활수요가 상이하고 일자리·돌봄·교통·농업·청년정책 등 다양한 부서의 기존 사업을 여성친화도시와 연계할 여지가 큼
- 따라서 일반적인 강의식 성인지교육보다 실제 예천군 주요사업을 사례로 토론하면서 성별·세대별·생활권별 차이를 발견하고 여성친화도시 과제로 전환하는 실습형 교육이 필요함

□ 추진 내용

- 토론식 성인지·여성친화도시 교육 운영
 - 관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와 지역현안의 관계 교육

- 강의보다 실제 군정사업을 활용한 토론·사례분석 중심 운영
- 부서별 여성친화 과제 발굴
 - 일자리 편의점, 돌봄, 농업, 교통, 청년·신도시 정책 등 기존 사업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
 - 부서별로 여성친화도시 연계 가능 과제 도출
- 부서협업형 과제 시범운영
 - 교육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 2~3개를 선정하여 관련부서 공동기획
 - 초기 시범운영 경험을 축적한 후 향후 성과관리체계와 연계

나. 예천군 「여성친화도시 BSC 단계적 도입」

□ 필요성 및 목적

- 예천군은 신규 여성친화도시 조성단계로, 초기에는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5대 목표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고 부서별로 여성친화 관점의 정책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이에 「여성친화 정책발굴 공무원 아카데미」 등을 통해 정책 이해와 과제발굴 역량을 축적하고, 이를 부서 간 협업과 성과관리체계로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 담당부서만의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 안전, 교통, 도시계획, 농업, 복지, 보건 등 군정 전반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야 하는 정책임. 특히 예천군은 도청신도시와 기존 농촌 읍면의 인구구조와 생활환경이 상이하므로, 각 부서가 사업대상과 생활권의 차이를 성별 관점에서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부서 단위 성과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교육 참여나 단순 과제 제출 여부를 넘어 실제 사업의 개선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관련 지표를 BSC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만 신규 조성단계에서는 BSC를 평가와 점수부여 수단으로 즉시 적용하기보다 교육 및 공감대 형성 → 부서별 과제발굴 → 협업사업 실행 → BSC 반영의 단계적 방식으로 도입하여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추진 내용

- 1단계: 공무원 역량강화 및 부서별 과제발굴
 - 여성친화 정책발굴 공무원 아카데미와 연계하여 5대 목표, 성인지 관점, 타 지자체 사례, 예천 지역특성 등을 교육
 - 부서별 기존 사업을 대상으로 여성의 이용경험, 참여기회, 안전·돌봄 접근성, 생활권 격차 등을 점검하여 여성친화 개선과제 발굴
- 2단계: 부서협업형 여성친화 과제 운영
 - 도청신도시-농촌 생활권 격차, 여성일자리, 이동·안전, 돌봄 등 단일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중심으로 협업사업 선정
 -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가 관련부서와 정기적으로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컨설팅 및 정책자문 연계
- 3단계: 예천형 여성친화도시 BSC 도입
 - 초기에는 교육 이수, 과제발굴, 협업 참여 등 과정지표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후 사업개선 및 정책성과 중심으로 지표 고도화
 - 우수과제에 대한 BSC 가점, 부서평가 반영, 우수부서 포상 등을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여성친화도시를 군정 전반의 공동성과로 관리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가. 「예천 일자리 편의점 2.0」

□ 필요성 및 목적

- 예천군은 2025년 여성고용률이 59.5%로 남성 77.0%보다 17.5%p 낮게 나타나 미취업·경력중단여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함
- 또한 예천은 여성임금비가 세 중점지역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지만 여성 상용근로자 비율은 37.4%로 낮아, 단순 취업 확대보다 실제 근로가능 조건과 고용안정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앞선 조사에서는 육아기 여성의 근로가능 시간과 지역에서 제시되는 일자리의 근무시간이 맞지 않는 문제가 중요한 정책수요로 확인됨

-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일자리 편의점」을 단기 일자리 연결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돌봄단계·가능시간·경력과 사업체의 실제 일감 수요를 세밀하게 연결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육아기 여성 맞춤형 구직 DB 구축
 - 경력·자격·희망직무와 함께 등·하원시간, 가능한 근무시간, 생활권 등을 파악
 - 일자리 참여 이후 경력관리까지 연계
- 기업·공공기관의 유연한 일감 발굴
 - 전일제 채용 외에 시간선택형·단시간·프로젝트형 업무 발굴
 - 여성의 근로가능 시간과 기업의 실제 업무시간을 맞춤형으로 매칭
- 매칭 이후 고용유지 관리
 - 근무시간 적합성, 직무만족도, 재계약 가능성 등을 점검
 - 단기 일거리에서 안정적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 연계

나. 「도청신도시 여성 경력이어가기」

□ 필요성 및 목적

- 예천은 도청신도시와 경북도청·공공기관이라는 지역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적인 농촌지역과 다른 여성 일자리 전략이 가능함
- 본 연구에서는 예천의 여성 종사자 비율이 비교적 높음에도 여성 고용률은 남성보다 17.5%p 낮아 경력중단·미취업여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도청·공공기관의 행정·기획·기술·전문직으로 여성의 진출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중단되었거나 지역이동 이후 이전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신도시 여성을 대상으로 단순 자격증교육보다 기존 경력의 재설계와 공공·전문직 일자리 연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경력보유여성 발굴 및 경력진단
 - 도청신도시 거주 여성의 전공·직무경험·경력중단기간·희망근로조건 조사
 - 개인별 경력복귀 계획 수립
- 공공·전문직 맞춤형 역량보완
 - 행정지원, 연구·조사, 회계, 데이터, 사회서비스 기획 등 지역수요형 교육 운영
 - 단순 교육보다 실제 직무과제와 일경험 중심 구성
- 도청·공공기관·지역기업 일경험 연계
 - 단기 프로젝트, 인턴십, 시간선택형 직무 등을 발굴하여 경력복귀 기회 제공
 - 참여기관과 여성일자리협의체를 연계하여 실제 채용·고용유지로 발전

다. 「예천 농촌여성 로컬워크」

□ 필요성 및 목적

- 예천은 도청신도시뿐 아니라 넓은 읍면 농촌생활권을 포함하고 있어 신도시 여성과 농촌여성의 일자리 조건과 정책수요가 다를 가능성이 큼
- 농촌 여성은 농업노동과 함께 가사·돌봄을 병행하는 부담이 크고,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이 가족농이나 비임금노동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농촌여성 일자리를 단순 농업보조나 단기근로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 농식품 가공·농촌관광·생활돌봄·지역서비스 등 예천의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여성의 경험과 기술을 소득활동으로 전환하는 지역기반 일거리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예천의 고용정책도 신도시에서는 공공·전문직 진출을, 기존 읍면지역에서는 농식품·농촌관광·생활돌봄 등 지역자원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이원적 접근이 요구됨

□ 추진 내용

- 농촌여성 일거리·자원 조사
 - 여성농업인·귀농귀촌여성 등의 기술, 생산품, 생활서비스 경험과 희망활동 조사

- 농식품 가공, 로컬푸드, 농촌체험·관광, 돌봄 등 사업가능 분야 발굴
- 소규모 협업형 로컬워크 실험
 - 여성 3~5명 단위로 공동상품·서비스를 기획하고 시범운영
 - 마을·농협·관광·복지 등 기존 지역사업과 연계
- 사업화 및 지속활동 지원
 - 수요가 확인된 팀에 브랜딩·판로·회계·조직화 컨설팅 지원
 -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경제 등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단계적 연계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 「예천 안심반상화-안심마을 만들기」

□ 필요성 및 목적

- 예천군은 2021년 지역안전지수에서 교통사고 4등급, 화재 3등급, 범죄 2등급, 생활안전 2등급으로 나타나 범죄안전보다 교통·이동안전의 개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특히 도청신도시와 기존 농촌지역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 신도시의 보행·통학안전과 읍면지역 고령여성의 이동안전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행정이 일방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보다 주민이 생활 속 위험요인을 직접 조사하고 개선과정에 참여하는 「안심반상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주민이 현장조사와 안전지도를 통해 문제를 발굴하고 행정부서와 개선방안을 협의한 후 다시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안전환경 개선과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것이 목적임

□ 추진 내용

- 생활권별 안심반상회 운영
 - 도청신도시와 읍면 농촌지역에서 시범마을 선정
 - 여성·고령자·아동 등 주민이 참여하여 보행·교통·생활안전 문제 발굴
- 현장조사-행정개선-재점검 추진

- 주민 안전견기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개선지점 선정
- 교통·도로·안전 등 관련부서와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조치 후 주민이 재점검
- 안심마을 단계적 확산
 - 추진과정과 개선성과를 마을안전지도로 정리
 - 우수사례를 인근 마을로 확산하여 주민주도 안전활동의 기반 마련

나. 「신도시-농촌 안심생활권 이동지도」

□ 필요성 및 목적

- 예천군은 도청신도시와 읍면 농촌지역이 공존하기 때문에 동일한 안전정책을 전 지역에 적용하기보다 생활권별 이동특성을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함
- 지역분석에서도 예천은 교통·이동안전형 지역으로 분류되며, 신도시에서는 통학·보행안전, 농촌지역에서는 고령여성의 이동지원과 버스승강장·생활권 안전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
- 또한 예천군 1인가구 가운데 여성은 55.4%를 차지하며, 도청신도시의 청년여성 1인가구와 읍면지역 고령여성 1인가구의 생활조건이 다를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여성의 실제 이동경로를 조사하여 신도시의 보행·귀가경로와 농촌의 대중교통·생활서비스 이동경로를 함께 점검하는 생활권 맞춤형 안전지도가 필요함

□ 추진 내용

- 생활권별 여성 이동경로 조사
 - 신도시는 통학로·출퇴근로·공동주택·상업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조사
 - 읍면지역은 버스승강장·시장·병원·복지시설 등 주요 생활이동경로 조사
- 안심생활권 이동지도 제작
 - 조명, 횡단보도, 보도, 대중교통 대기환경, 야간이동 등 이용자 관점에서 위험·불편지점 표시
 - 주민의 실제 이용경험과 개선요구를 함께 기록
- 교통·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

- 조사결과를 관련부서에 제공하여 우선 개선지점 선정
- 향후 도로·교통·도시계획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반영

4)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가. 「같이 돌보는 예천 아빠 돌봄-성평등 프로젝트」

□ 필요성 및 목적

- 예천 도청신도시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젊은 양육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생활권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는 여성에게 돌봄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남성의 가사·양육 참여를 확대하여 가족 내 돌봄책임을 보다 평등하게 분담하는 접근이 필요함
- 경북의 남성 육아참여 관련 연구에서도 남성 육아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고, 아빠 육아멘토링과 자녀 성장단계별 육아정보 등의 지원이 제안된 바 있음
- 또한 양성평등정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와 양육 참여 확대를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음
- 이에 여성에게 돌봄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아빠가 일상적인 돌봄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도청 및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자·육아기 남성을 지역의 성평등한 돌봄문화 확산 주체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아빠 돌봄 실천 프로그램 운영
 - 영유아·초등 자녀를 둔 아빠를 대상으로 식사, 놀이, 등·하원, 생활돌봄 등 실습형 프로그램 운영
 - 남성 육아휴직자·육아기 남성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돌봄, 식사·가사, 놀이·소통 등 실제 생활기술 중심 교육, 성평등한 부모역할과 부부 간 돌봄분담 교육 병행
- 아빠 돌봄 네트워크 운영
 - 남성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아빠의 경험공유·멘토링 추진
 - 공공기관·가족센터 등과 연계한 정기 프로그램 운영

○ 도청신도시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돌봄활동과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우수 참여사례를 주민교육과 지역 캠페인으로 확산

나. 「예천 성평등 마을 만들기」**□ 필요성 및 목적**

- 예천은 도청신도시의 젊은 생활권과 기존 농촌지역이 공존하고 있으며, 심층면접에서는 기존 농촌지역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여성의 마을 의사결정 참여 문제가 여전히 개선과제로 제기됨
- 경북 농촌지역 연구에서도 여성 이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장·농협 임원·생산자 조직 등 주요 의사결정 구조가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성평등 마을규약과 맞돌봄·맞살림 등의 생활실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인됨
- 성평등 마을은 별도의 교육사업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마을의 성역할·돌봄·안전·대표성 문제를 논의하고 실천과제를 만드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농촌형 여성친화도시의 초기 체감사업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함
- 농촌형 여성친화마을 역시 여성의 주체적 참여와 여성리더십, 사회적 자본, 성평등 가치의 강화를 핵심요소로 제시하고 있음

□ 추진 내용

- 성평등 마을 시범지역 선정
 - 주민 참여의지와 여성활동 기반 등을 고려하여 읍면 마을을 시범선정
 - 주민이 직접 마을의 성평등 문제와 생활의제 발굴
- 성평등 마을규약 및 실천과제 마련
 - 마을회의 여성참여, 가사·돌봄분담, 성평등한 행사운영, 여성리더십 등을 논의
 - 필요 시 마을규약·실천약속 등에 반영
- 안전·돌봄·대표성 사업과 연계
 - 안심반상회, 여성 마을리더 육성, 주민돌봄 등 다른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통합 운영

- 시범성과가 확인된 마을을 단계적으로 확대

다. 「예천 생활권 맞춤형 돌봄네트워크」

□ 필요성 및 목적

- 예천군은 유아 1,982명, 보육시설 34개로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가 17.2개로 경북 평균 17.9개와 유사하여 군 전체의 시설 수만으로는 보육기반이 크게 부족한 지역으로 보기 어려움
- 그러나 도청신도시는 젊은 부부와 아동가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보육수요가 높은 반면, 농촌 읍면지역은 영유아 수가 적고 시설이 분산되기 어려워 생활권에 따라 돌봄 접근성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30~49세 여성 고용률은 남성과 21.4%p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 돌봄서비스를 단순 가족복지 차원이 아니라 여성의 경력유지를 지원하는 생활기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존 어린이집·아이돌봄·초등돌봄·가족지원서비스 등을 생활권별로 연계하여 도청신도시와 농촌지역의 서로 다른 돌봄수요에 대응하는 통합적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생활권별 돌봄수요 및 자원 진단
 - 도청신도시와 읍면별 어린이집·아이돌봄·초등돌봄·가족지원서비스 현황 및 이용수요 파악
 - 연장·긴급·방학돌봄, 이동거리 등 돌봄 공백 집중 점검
- 생활권 맞춤형 돌봄 연계
 - 신도시는 맞벌이가구 중심의 연장·긴급·방학돌봄 강화
 - 농촌지역은 소규모 공동돌봄과 기존 마을·복지자원 연계
- 돌봄기관 협력체계 구축
 - 가족센터·보육기관·학교·복지기관·관련부서 간 정기협의 운영

-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를 공동 점검하고 돌봄노동자 지원수요도 함께 발굴

라. 「예천 농촌 돌봄이동 지원」

□ 필요성 및 목적

- 예천군 여성 1인가구 5,181가구 가운데 65세 이상은 3,468가구로 66.9%에 달해 농촌 읍면지역의 고령여성 생활지원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나타남
- 지역분석에서는 병원·장보기·행정업무 이동지원, 방문형 보건·복지서비스 등이 농촌 고령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제시됨
- 예천 면접에서도 고령자가 요양보호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노인이 배우자를 직접 돌보거나 방문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사례가 확인되어, 서비스가 존재하는 것과 실제 이용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시설을 추가하는 방식보다 병원·돌봄기관·생활서비스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농촌 고령여성의 이동을 지원하고 기존 돌봄서비스와 연결하는 사업이 필요함

□ 추진 내용

- 돌봄이동 취약대상 발굴
 - 고령여성 1인가구, 노노돌봄가구, 차량 이용이 어려운 가구 등을 읍면별로 파악
 - 병원·복지시설·장보기 등 주요 이동수요 조사
- 생활밀착형 돌봄이동 지원
 - 병원진료, 건강관리, 돌봄기관 이용 등 필수생활 이동 지원
 - 기존 교통복지·이동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중복을 최소화
- 이동지원과 돌봄서비스 연계
 - 이동과정에서 확인된 건강·주거·돌봄문제를 관련기관에 연계
 - 단순 차량지원이 아니라 안부확인과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는 전달체계로 운영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가. 「예천 여성생활권 정책기획단」(군민참여단 확장)

□ 필요성 및 목적

- 예천군은 도청신도시와 기존 농촌 읍면지역이 공존하여 여성의 생활조건과 정책수요가 생활권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특히 신도시의 청년·양육여성과 농촌의 고령여성·여성농업인은 일자리, 돌봄, 안전, 이동, 지역활동에서 서로 다른 과제를 가지고 있어 군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정책을 설계하기보다 생활권별 여성의 의견을 직접 정책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여성친화도시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는 여성의 단순 참여를 넘어 지역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에 도청신도시와 읍면지역의 다양한 여성이 직접 생활문제를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생활권 기반 여성정책 참여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생활권별 여성정책기획단 구성
 - 도청신도시, 예천읍, 농촌 읍면 등 생활권을 고려하여 청년·양육여성·여성농업인·고령여성 등 참여자 구성
- 생활문제 조사 및 정책과제 발굴
 - 일자리·이동·돌봄·안전·문화 등 생활권별 주요 현안을 조사하고 정책제안서 작성
- 군정 정책제안 및 환류
 - 관련부서와 정책간담회를 운영하고 제안사항의 반영 여부를 지속 점검
 - 우수과제를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 또는 기존 군정사업 개선과 연계

나. 「예천 여성 마을리더 성장학교」

□ 필요성 및 목적

- 경북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조직 미참여 비율은 28.9%이며, 참여에 어려움을 느

끼는 주요 이유로 가사·경제활동 부담과 신체적 제약 등이 나타나 농촌여성이 지역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강화가 요구됨

- 또한 농촌형 여성친화마을 사례에서는 여성리더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때 여성의 참여가 지역 의사결정과 공동체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음이 확인됨
- 따라서 예천의 부녀회장·여성농업인·귀농귀촌여성·여성 이장 후보군 등을 대상으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을 조직하며 행정과 협력할 수 있는 여성리더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여성 마을리더 교육과정 운영
 - 마을회의 운영, 주민소통, 사업기획, 정책제안, 갈등조정, 성인지 관점 등을 중심으로 실습형 교육 운영
- 마을현안 프로젝트 수행
 - 교육 참여자가 안전·돌봄·마을환경·공동체 등 실제 지역문제를 선정하여 소규모 프로젝트 추진
- 여성리더 활동경로 연계
 - 수료자를 주민자치, 각종 위원회, 성평등 마을, 군민참여단 등 지역 의사결정 및 활동기구와 연계

다. 「농촌형 성평등 마을강사 양성과 찾아가는 교육」

□ 필요성 및 목적

- 농촌지역의 성평등 문제는 일반적인 성인지교육만으로 접근하기보다 농업노동, 마을조직, 가족돌봄, 이장·부녀회 등 농촌의 실제 생활구조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함
- 경북 농촌지역 양성평등 연구에서도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 대한 이해를 가진 특화형 양성평등 강사를 양성하고 강사풀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안됨

- 다른 지역에서는 노인·마을리더·여성결혼이민자 등 농어촌 주민의 특성에 맞춘 강사 역량강화와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 예천에서도 외부강사에 의존한 일회성 교육보다 지역활동가를 농촌형 성평등 강사로 육성하여 지속적인 교육역량을 지역 안에 축적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농촌형 성평등 마을강사 양성
 - 여성활동가·여성농업인·귀농귀촌인 등 지역인재를 강사후보로 발굴
 - 농업·농촌의 성역할, 여성대표성, 맞돌봄, 폭력예방 등을 중심으로 교육
- 찾아가는 마을교육 운영
 - 이장·부녀회·주민자치·농업인단체·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마을 맞춤형 교육 실시
 - 강의보다 주민사례와 생활문제를 활용한 토론식 교육 강화
- 강사풀 및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 교육수료자를 예천군 성평등 강사풀로 관리
 - 성평등 마을, 안심마을, 군민참여단 교육과 연계하여 지속적 활동기회 제공

라. 「예천 여성의 삶을 기록하다-농촌여성 구술생애사 프로젝트」

□ 필요성 및 목적

- 예천 농촌지역 여성은 농업노동과 가족돌봄, 마을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이러한 경험은 공식적인 지역기록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경우가 많음
- 특히 고령여성의 생애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여성의 삶을 지역의 역사와 정책자료로 축적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여성의 생애를 지리적·산업적·문화적 특성과 연계하여 구술사로 기록하고 여성사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예천에서도 여성농업인·고령여성·여성 마을리더 등의 생애를 기록하는 과정 자체를 지역여성의 활동역량 강화와 연결하여, 기록-공감-지역문제 발견-정책제안으

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농촌여성 구술기록단 양성
 - 지역여성·청년·군민참여단 등을 대상으로 구술인터뷰, 기록윤리, 자료정리 교육 실시
- 예천 여성 생애사 발굴·기록
 - 여성농업인, 고령여성, 여성 마을리더·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농사·가족돌봄·마을 생활·지역변화 경험 기록
 - 녹취, 사진, 영상, 스토리북 등 다양한 형태로 아카이브 구축
- 기록의 정책·지역문화 활용
 - 구술자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돌봄·노동·이동·마을참여 문제를 여성친화도시 정책의제로 연계
 - 전시·낭독회·마을기록집 등을 통해 주민과 공유하고 세대 간 지역이해 확산

③ 울진군

1)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가. 「울진 여성친화 정책발굴 공무원 워크숍」

□ 필요성 및 목적

- 울진군은 여성친화도시를 새롭게 추진하는 단계이므로 초기에는 성과평가나 별도 사업 수 확대보다 공무원이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을 이해하고 기존 군정사업을 성평등 관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에서도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은 담당부서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공무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대표과제 발굴, 부서 간 협업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특히 울진은 원전·에너지, 해양산업, 관광, 교통, 안전 등 여성가족부서 외의 주요 군정영역과 여성친화도시를 연결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서도 원전 현안, 해양신산업, 에너지복지, 전기·화재 예방 등 다양한 핵심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일반적인 제도 설명형 교육보다 실제 올진 군정사업을 활용하여 여성의 일자리·안전·돌봄·참여 관점에서 개선과제를 직접 발굴하는 워크숍이 필요함

□ 추진 내용

- 관리자·실무자 대상 정책발굴 워크숍
 -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와 올진의 지역현안을 연계한 토론회 교육 운영
 - 원전·에너지, 관광, 교통, 안전, 복지 등 실제 군정사업을 사례로 활용
- 부서별 기존사업 성인지 점검
 - 사업대상, 이용조건, 접근성, 참여구조 등을 성별·연령·생활권 관점에서 검토
 - 부서별 여성친화도시 연계 가능 과제 발굴
- 협업형 시범과제 선정
 - 발굴과제 중 2~3개를 선정하여 관련부서와 전문가가 공동으로 사업화
 - 시범운영 경험을 축적한 후 향후 부서성과관리 체계와 단계적으로 연계

나. 올진군 「여성친화도시 BSC 단계적 도입」

□ 필요성 및 목적

- 올진군은 신규 여성친화도시 조성단계로, 여성친화도시가 복지·여성정책에 한정된 사업이라는 인식을 넘어 군정 전반과 연결되는 정책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이에 「여성친화 정책발굴 공무원 워크숍」 등을 통해 공무원의 기본 이해와 정책발굴 역량을 강화하고, 일정한 경험이 축적된 이후 부서성과관리체계로 발전시키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올진군은 원전·에너지산업, 재난·안전, 관광, 교통, 농어촌, 보건·돌봄 등 여성친화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군정영역이 다양함. 따라서 여성친화도시를 여성 관련 부서의 개별사업으로 운영하기보다 에너지·산업부서는 여성의 산업진입과 근무환경, 안전부서는 생활·재난안전, 교통부서는 고령여성 이동권, 농업부서는 여성농업인

안전과 참여 등 각 부서의 고유업무를 성평등 관점에서 재설계하도록 유도하는 성과관리체계가 필요함

- 특히 울진과 같은 분산생활권에서는 동일한 사업이라도 읍면별 접근성이나 이용여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 사업건수보다는 실제 정책대상자의 이용가능성과 생활여건 개선을 평가하는 방식이 중요함
- 장기적으로 BSC를 도입하되 초기에는 공무원의 이해와 과제발굴을 중심으로 하고, 이후 부서협업과 성과관리로 확대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를 지속가능한 균형운영체제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추진 내용

- 1단계: 여성친화도시 이해 및 부서별 정책점검
 - 여성친화 정책발굴 공무원 워크숍과 연계하여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와 울진 군정사업 간 연계방안 교육
 - 에너지·안전·교통·관광·농업·복지 등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여성의 참여, 고용, 이동, 안전, 돌봄 접근성 등을 점검하여 개선과제 발굴
- 2단계: 전략부서 협업과제 운영
 -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와 에너지·경제·안전·교통·보건·농업 등 관련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 여성고용, 재난·생활안전, 고령여성 생활권, 농어촌 돌봄 등 울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협업과제를 선정하여 공동 추진
- 3단계: 울진형 여성친화도시 BSC 구축
 - 초기에는 교육·과제발굴·협업 참여 등 실행기반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제도 정착 이후 정책개선 효과와 주민체감 성과를 포함하도록 고도화
 - 우수부서 및 우수과제에 대한 가점·포상, 차년도 사업계획 반영 등을 연계하여 부서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가. 「울진 에너지 여성 커리어 패스」

□ 필요성 및 목적

- 울진군은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종사자가 2,513명으로 전체 산업의 11.0%를 차지하여 원전·에너지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지만, 해당 산업의 여성 종사자는 392명으로 여성 비율이 15.6%에 그침
- 반면 여성은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핵심산업과 여성의 실제 취업분야가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음
- 울진군 여성고용률은 55.5%로 남성 76.0%보다 20.5%p 낮고, 여성 상용근로자 비율은 38.0%, 남성 대비 여성임금비는 57.3%로 나타나 단순 취업자 수 확대보다 지역 핵심산업으로의 진입과 고용의 질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원전·에너지기업과 협력하여 여성에게 적합한 별도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보다 실제 채용수요가 있는 기술·관리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육·일경험·채용 경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에너지산업 여성 진입직무 발굴
 - 원전·에너지 및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채용수요와 필요역량 조사
 - 안전·환경·품질·보건·데이터·연구지원·기술행정 등 여성 진입 가능 직무 발굴
- 직무교육·현장경험·채용 연계
 - 기업 참여형 맞춤형교육과 자격·직무역량 과정 운영
 - 현장견학·직무체험·인턴십 등을 실제 채용과 연계
- 여성일자리협의체를 통한 성과관리
 - 기업·일자리기관·관련부서·전문가가 여성채용과 진입장벽을 지속 점검
 - 수료인원보다 취업·근속·상용직 전환 등 실질적 성과 중심 관리

나. 「울진 로컬 여성일거리 협업랩」

□ 필요성 및 목적

- 울진군 여성 종사자는 숙박·음식점업에 1,911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와 도소매 등 생활서비스업에도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
- 따라서 에너지산업 여성진출 확대와 함께 현재 다수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관광·생활서비스 분야의 직무를 고도화하고 안정적인 소득활동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다른 여성친화도시에서도 여성들이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상품을 개발하고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
- 울진에서도 단기 일자리나 개별 창업을 반복적으로 지원하기보다 해양·관광·먹거리·지역서비스 등 울진의 자원을 활용하여 여성들이 팀 단위로 새로운 일거리를 공동기획하고 시험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지역자원형 여성 협업과제 발굴
 - 해양·관광, 로컬푸드, 생활서비스, 지역콘텐츠 등 울진 자원을 활용한 사업 아이디어 공모
 - 3~5명 내외 여성의 팀 단위 참여 지원
- 소규모 사업실험 지원
 - 상품·서비스 개발, 시범판매, 팝업운영 등 초기 실험비와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기존 관광·로컬산업 사업과 연계하여 판로와 수요 검증
- 지속가능한 사업화 연계
 - 성과가 확인된 팀에 브랜딩·경영·판로지원 제공
 - 협동조합·마을기업·공동사업체 또는 기존 기업과의 협업으로 단계적 성장 지원

다. 「울진 여성청년 커리어·창업 네트워크」

□ 필요성 및 목적

- 울진군은 에너지·기술산업과 관광·생활서비스업이 함께 존재하지만 청년여성이 지역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취업·창업 정보와 전문적인 교류기반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이 필요함
- 지역분석에서도 경력보유여성과 청년여성에게 지역정착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에너지산업 진입과 관광서비스 전문화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됨
- 특히 직접 면접에 참여한 울진 참여자는 9~11의 소수 질적 사례이므로 특정 청년 여성의 경험을 전체 수요로 일반화하기보다 취업·창업 희망여성을 발굴하여 실제 수요를 확인하면서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취업교육이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각각 제공하기보다 지역기업·선배여성·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여성청년 커리어·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함

□ 추진 내용

- 여성청년 커리어·창업 수요 발굴
 - 취업희망, 경력전환, 자영업·창업 준비 등 참여자의 경력과 희망분야 조사
 - 에너지·공공·관광·로컬서비스 등 지역기반 분야와 연계
- 직무·창업 네트워크 운영
 - 지역기업·여성사업자·공공기관 전문가와 정기적인 멘토링·정보교류 운영
 - 취업 준비자에게는 직무정보, 창업 준비자에게는 사업모델·판로·경영정보 제공
- 실행기회 연계
 - 기업 일경험, 소규모 프로젝트, 팝업·마켓 등 실제 경험기회 제공
 - 성과가 있는 참여자는 취업·창업지원기관의 후속사업과 연계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 「울진 주민주도 안심마을」

□ 필요성 및 목적

- 울진군은 2021년 지역안전지수에서 화재·범죄·감염병이 각각 4등급으로 나타나 특정 위험 하나보다 주거·범죄·보건안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지역임
- 또한 읍면 생활권이 분산되어 있어 행정이 모든 생활안전 문제를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주민이 자신의 마을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개선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함
- 울진 면접에서도 고령여성 1인가구의 생활기반과 이동 불편, 마을 내 돌봄 부족 등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참여자 9~11의 소수 질적 조사이므로 전 지역의 공통현상으로 일반화하기보다 현장수요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이에 주민이 현장조사-안심반상회-개선과제 제안-행정부서 협의-재점검에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안전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마을 생활안전 현장조사
 - 주민·군민참여단이 보행, 주거, 화재, 재난, 야간이동 등 마을별 위험요인 점검
 - 마을 특성을 반영한 안전 체크리스트와 안심지도 작성
- 안심반상회와 행정개선 연계
 - 주민이 우선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안전·교통·복지 등 관련부서와 협의
 - 개선 이후 주민이 현장을 다시 점검하여 변화 확인
- 안심마을 단계적 확산
 - 시범마을의 활동과 개선성과를 사례화
 - 주민활동가를 후속마을의 코디네이터로 연계하여 확산

나. 「울진 고령여성 안심생활권」

□ 필요성 및 목적

- 울진군은 분산된 읍면 생활권과 고령여성 1인가구의 비중을 함께 고려한 생활안전정책이 중요함
- 지역분석에서도 울진의 주요 여성안전 과제로 고령여성의 주거안전, 화재예방, 방문보건과 함께 분산생활권에 따른 의료·생활서비스 접근 문제가 제시됨
- 직접 면접에서도 고령여성이 혼자 생활하면서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돌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따라서 고령여성의 안전을 범죄예방시설 설치에 한정하지 않고 집-이동경로-생활서비스-건강을 연결하는 생활권 안전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고령여성 안심생활권 점검
 - 고령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골목길, 버스승강장, 병원·시장 이동경로 조사
 - 화재·전기·가스, 낙상, 보행 및 야간이동 위험요인 점검
- 주거·이동 안전서비스 연계
 - 노후주택 안전점검, 화재예방 장비, 생활안전 수리 등 기존사업 연계
 - 버스승강장과 주요 생활이동경로의 조명·대기환경 등 개선
- 안부확인·보건·돌봄 연계
 - 안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건강·돌봄 위험을 방문보건·복지서비스와 연결
 - 마을 이장·주민활동가 등 지역 관계망을 활용한 안부확인체계 보완

다. 「울진 여성농업인 기후안전마을」

□ 필요성 및 목적

- 울진은 농어촌지역으로 여성농업인이 농작업과 가사·돌봄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폭염·한파 등 기후위험을 농업재해 차원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과 건강 문제

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경북 여성농업인은 수확, 잡초관리, 수확 후 관리, 파종·육묘 등 다양한 농작업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연령도 60대 이상이 81.1%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된 농작업자의 안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 확보된 울진 면접자료에서는 여성농업인의 폭염·기후재난 피해가 직접적인 공통수요로 충분히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사업 초기에는 실태조사와 주민참여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이에 농작업 시간과 장소, 쉼터 접근성, 응급연락체계 등을 여성농업인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농촌형 기후안전마을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여성농업인 기후안전 실태점검
 - 폭염·한파 시 농작업 시간, 작업장소, 휴식공간, 물·그늘 접근성 등 조사
 - 고령여성농업인과 1인 농작업자를 우선적으로 점검
- 마을 단위 기후안전 실천
 - 무더위 시간대 농작업 자제, 공동휴식, 안부확인, 응급연락 등 마을별 실천수칙 마련
 - 마을회관·농작업 쉼터 등 기존 시설의 활용여건 개선
- 안전·보건사업과 연계
 - 보건소·농업기술센터·안전부서 등과 연계하여 온열질환 예방교육과 건강관리 추진
 - 시범마을의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다른 농어촌마을로 단계적 확산

4)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가. 「울진 성평등 마을」 만들기

□ 필요성 및 목적

- 울진군은 읍면 생활권이 넓게 분산된 농어촌지역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초기 체감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군청 중심의 제도구축과 함께 주민이 생활하는 마을단위에서 성평등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실천하는 사업이 필요함

- 성평등 마을은 주민이 마을의 성역할 고정관념, 의사결정 참여, 돌봄분담, 안전 등 일상적인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한다는 점에서 농어촌형 여성친화도시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울진의 직접 면접조사는 참여자 9~11의 소수 질적 사례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초기에는 특정 문제를 전 지역의 공통현상으로 전제하기보다 주민 참여의지가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교육-문제발굴-실천-평가를 거치는 시범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함. 이를 통해 성평등 마을 1호의 경험을 단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음

□ 추진 내용

- 성평등 마을 시범선정
 - 주민 참여의지와 여성활동 기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개 내외 마을 선정
 - 주민 스스로 성평등 생활문제와 개선의제 발굴
- 마을별 성평등 실천과제 추진
 - 마을회의의 여성참여, 가사·돌봄분담, 성평등한 행사운영, 관계안전 등 마을 특성에 맞는 과제 선정
 - 필요 시 마을규약 또는 주민 실천약속과 연계
- 성평등 마을 단계적 확산
 - 1호 마을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주민사례로 축적
 - 선행마을 주민이 후속마을의 경험공유와 활동지원에 참여

나. 「울진 찾아가는 고령여성 생활돌봄」

□ 필요성 및 목적

- 울진군은 전체 1인가구 비율이 42.3%로 세 중점지역 가운데 가장 높으며, 여성 가구주 가구 가운데 1인가구 비율은 63.6%에 달함
- 특히 65세 이상 1인가구 4,462가구 가운데 여성은 3,146가구로 70.5%를 차지하

여 고령여성의 건강·주거·이동·일상생활을 포괄하는 생활돌봄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나타남

- 울진 면접에서도 고령여성 1인가구를 중심으로 목욕·이미용·세탁 등 생활돌봄 부족과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이 제기됨
- 다만 울진의 직접 면접은 참여자 9~11의 소수 질적 조사이므로 이를 전 지역의 보편적 수요로 일반화하기보다, 읍면별 수요를 확인하면서 서비스를 찾아오도록 하는 방식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생활공간으로 전달하는 방문형 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고령여성 생활돌봄 수요 발굴
 - 고령여성 1인가구와 돌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식사·세탁·이미용·주거관리·건강·안부확인 등의 수요 파악
 - 읍면별 기존 복지·보건서비스 이용 여부와 사각지대 함께 점검
- 찾아가는 생활돌봄 서비스 연계
 - 방문건강, 간단한 생활지원, 안부확인 등 기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결
 - 단일 서비스 제공보다 가구별 필요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
- 생활돌봄과 복지·보건 연계
 - 방문과정에서 확인된 건강·주거·안전문제를 보건소·복지기관·관련부서에 연계
 - 반복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지속관리 대상으로 등록

다. 「울진 돌봄인력 매칭·긴급돌」

□ 필요성 및 목적

- 울진은 읍면생활권이 분산되어 있어 기존 돌봄서비스가 있더라도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인력을 신속하게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직접 면접에서도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확인되어, 기존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별도로 돌봄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긴급수요와 연결하는 대응체계가 필요함

- 또한 여성친화도시 지정평가에서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의 필수지표로 돌봄노동자·돌봄활동가 지원사업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긴급돌봄 인력풀을 단순 자원봉사자 모집으로 운영하기보다 활동 가능한 돌봄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상담·안전관리까지 포함하는 돌봄활동가 지원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지역 돌봄인력 DB 구축
 - 요양·생활지원·아이돌봄·가사지원 등 활동가능 인력의 분야, 활동지역, 가능시간 등을 등록
 - 기존 돌봄기관과 인력정보를 연계하여 중복 최소화
- 긴급·틈새돌봄 매칭
 - 기존 서비스가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단기·긴급수요를 중심으로 인력 연계
 - 읍면과 시간대를 고려하여 가까운 생활권의 인력을 우선 매칭
- 돌봄활동가 지원
 - 안전교육, 소진예방, 상담 및 활동상 애로사항 점검
 - 활동경험과 수요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돌봄인력의 지속적인 참여기반 마련

라. 「울진 마을 돌봄거점」

□ 필요성 및 목적

- 울진은 행정구역이 넓고 마을이 분산되어 있어 모든 돌봄서비스를 읍내의 전문시설에 집중하는 방식만으로는 외곽지역의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움
- 지역분석에서도 울진의 고령여성 1인가구 정책은 시설 집중보다 이동형·방문형 서비스와 읍면 거점, 지역 관계망을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시됨
- 면접에서도 행정과 이장 등 기존 지역주체가 노인돌봄에 참여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 따라서 새로운 대규모 돌봄시설을 설치하기보다 마을회관·경로당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서비스 연결, 안부확인, 공동활동이 이루어지는 소규모 생활권 돌봄거점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기존 마을공간의 돌봄거점화
 - 마을회관·경로당 등 접근성이 높은 기존 공간을 시범거점으로 선정
 - 별도 시설 신축보다 기존 공간의 기능 확장 중심으로 추진
- 마을 단위 생활돌봄 운영
 - 공동식사, 건강·생활정보 제공, 안부확인, 방문서비스 연계 등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 이동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찾아가는 생활돌봄과 연계
- 마을-전문기관 돌봄연계
 - 이장·주민활동가가 복지·보건기관과 돌봄수요를 연결하는 창구 역할 수행
 - 성평등 마을·안심마을과 연계하여 돌봄·안전·관계망을 함께 강화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가. 「군민참여단 안심마을 코디네이터」

□ 필요성 및 목적

- 앞서 제안한 「주민주도 안심마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모든 마을의 현장조사와 주민회의를 직접 운영하기보다 주민 사이에서 안전점검과 행정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활동주체가 필요함
- 여성친화도시에서도 시민참여단의 교육과 지속적인 활동은 지역사회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주요 추진기반으로 관리되고 있음
- 따라서 군민참여단을 단순 모니터링 인력으로 운영하는 데서 나아가 주민 안전견기, 안심반상회, 안전지도 작성, 행정부서 협의 등을 지원하는 안심마을 코디네이터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안전 증진과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할 수 있음

□ 추진 내용

- 안심마을 코디네이터 양성
 - 생활안전, 성인지 관점, 주민조사, 회의진행, 갈등조정, 정책제안 방법 등 교육
 - 실제 현장실습을 포함한 단계적 교육 운영
- 안심마을 현장지원
 - 주민 안전견기와 안심반상회 진행 지원
 - 주민의견을 안전지도와 개선과제로 정리하여 관련부서에 전달
- 마을 간 경험확산
 - 선행 안심마을의 코디네이터가 신규마을의 초기활동 지원
 - 우수사례와 개선과정을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활동역량 축적

나. 「울진 여성 에너지·안전 정책리더」

□ 필요성 및 목적

- 울진군은 원전·에너지산업과 재난·안전정책이 지역의 핵심 의제로 자리하고 있으나, 여성의 참여가 일자리나 생활지원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이러한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과 주민참여 과정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여성친화도시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도 단순한 참여인원 확대보다 지역문제 해결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성의 실질적인 참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울진 면접에서는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와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직접 제기되었고, 농업·가공·교육에는 여성이 참여하지만 주요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인식도 확인됨
- 다만 울진의 직접 면접은 참여자 9~11의 소수 질적 조사이므로 이를 전체 여성의 인식으로 일반화하기보다, 에너지·안전 분야에 관심 있는 여성을 발굴하여 지역 핵심정책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리더로 육성하는 방식이 필요함

□ 추진 내용

- 에너지·안전 정책리더 교육
 - 원전·에너지정책, 재난·생활안전, 주민참여제도, 성인지 정책분석 등을 중심으로 교육
 - 전문지식 전달보다 지역 현안과 실제 군정사업을 활용한 토론·실습 중심 운영
- 지역현안 정책프로젝트 수행
 - 에너지, 재난, 교통, 생활안전 등 분야별 현안 조사
 - 주민의 생활경험과 여성 관점에서 개선과제 및 정책제안 도출
- 정책참여 경로 연계
 - 수료자를 관련 위원회, 주민협의체, 군민참여단 등과 연계
 - 주요 군정 성평등 사전검토 과정의 주민참여 인력으로 활용

다. 「울진 여성정책 네트워크」

□ 필요성 및 목적

- 울진은 읍면별 생활권이 분산되어 있고 여성의 연령·직업·생활환경도 다양하여 단일 여성단체나 특정 계층의 의견만으로 지역 전체의 여성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여성농업인·자영업자·청년·돌봄종사자·귀농귀촌여성·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여성이 정기적으로 지역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함
- 직접 면접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 의지는 존재하지만 주요 의사결정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참여기반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인됨
- 이에 기존 단체 간 친목이나 행사 참여 중심의 연계보다 생활권과 분야를 넘어 여성들이 공동의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행정과 협의하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분야·생활권별 여성 네트워크 구성
 - 읍면,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여성 참여자 발굴
 - 기존 여성단체 외에 비조직 여성과 신규활동가의 참여경로 마련
- 정기 정책라운드테이블 운영
 - 일자리·안전·돌봄·교통·문화 등 주요 현안을 주제로 의견공유
 - 생활권별 공통문제와 차별화된 수요를 구분하여 정책의제화
- 행정과의 정책협의 연계
 - 주요 제안을 관련부서와 정기적으로 공유
 - 우선과제는 여성친화도시 신규사업 또는 기존 군정사업 개선으로 연결

라. 「울진 성평등 시민강사 양성과정」

□ 필요성 및 목적

- 울진군은 신규 여성친화도시 조성지역으로, 공무원 대상 교육뿐 아니라 주민이 여성친화도시와 성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교육기반을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울진은 읍면생활권이 분산되어 있어 군청이나 중심지에서 일회성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방식만으로는 다양한 마을과 주민층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의 생활환경과 농어촌 특성을 이해하는 주민·여성활동가 등을 성평등 시민강사로 양성하여, 이장·주민자치회·농어업인단체·경로당·마을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외부강사 의존형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 안에 성평등 교육역량을 축적하고, 여성친화도시의 주민 확산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장기적으로는 시민강사를 단순 교육인력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성평등 마을, 안심마을, 군민참여단, 여성정책 네트워크 등과 연계하여 주민교육-의제발굴-지역활동으로 이어지는 여성 활동가 인력풀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추진 내용

- 울진형 성평등 시민강사 양성과정 운영
 - 성평등 기본개념, 성역할 고정관념, 돌봄분담, 여성의 지역대표성, 폭력예방, 농어촌 생활 속 성평등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
 - 강의기법, 주민소통, 토론진행, 마을사례 분석 등 실제 현장교육에 필요한 실습 포함
- 찾아가는 마을 성평등 교육 연계
 - 이장·주민자치회·농어업인단체·경로당·마을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시민강사 파견
 - 획일적인 이론교육보다 마을회의, 가사·돌봄, 농어업 활동, 주민관계 등 지역생활 사례 중심으로 운영
- 시민강사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 수료자의 강의활동 실적과 교육수요를 지속 관리하고 정기 보수교육·사례공유 운영
 - 성평등 마을, 주민주도 안심마을, 군민참여단, 여성정책 네트워크 활동과 연계하여 지역 성평등 활동가로 성장 지원

마. 「울진 여성의 삶과 마을을 기록하다-구슬생애사·여성생활사 아카이브」

□ 필요성 및 목적

- 울진의 지역사는 농업·어업, 원전·에너지산업의 성장, 관광과 생활권 변화 등 다양한 지역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성의 노동과 가족돌봄, 마을활동, 지역정착 경험은 공식적인 기록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울진은 고령여성 1인가구 비중이 높고 농어촌 마을이 분산되어 있어 고령여성의 생애경험과 마을생활을 기록하는 작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성이 커질 수 있음
- 따라서 고령여성·여성농어업인·지역활동가·귀농귀촌여성 등을 대상으로 생애와 마을생활을 기록하고, 이를 단순 문화자료가 아니라 지역여성이 조사자·기록자·해석

자로 참여하는 활동역량 강화사업이자 향후 정책수요를 발견하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내용

- 지역 여성 구술기록단 양성
 - 지역여성·청년·군민참여단 등을 대상으로 구술인터뷰, 기록윤리, 사진·자료 정리 교육 실시
 - 주민이 직접 지역여성의 삶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운영
- 여성 생애·마을생활 기록
 - 농업·어업, 가족돌봄, 지역산업 변화, 마을활동, 귀농귀촌 등 다양한 경험 수집
 - 음성·사진·영상·글 등을 활용하여 여성생활사 아카이브 구축
- 기록의 정책·지역문화 활용
 - 구술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동·돌봄·노동·대표성 문제를 여성친화도시 정책의제로 연계
 - 기록집, 전시, 낭독회, 마을이야기 콘텐츠 등으로 주민과 공유

4. 미조성 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대를 위한 추가 제언

- 경북의 낮은 여성친화도시 조성률을 높이기 위해 미조성 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언하고자 함. 먼저 여성친화도시 미조성 지역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가. 단계별 추진 및 지원

- 미조성 지역의 확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지정도시 수를 늘리는 것보다 해당 시군이 여성친화도시를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주민 기반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 특히 군 지역은 여성정책 담당자가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관련부서에서도 여성친화도시를 여성가족부서만의 사업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어,

지정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갑자기 부서협업과 대표사업 발굴을 요구하면 형식적인 사업발굴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미조성 지역에는 ‘여성친화도시 준비도시’ 단계를 두고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표 V-7> 미조성 지역 단계별 지원내용

단계	주요 목표	경상북도 지원내용	시군 추진내용
1단계 준비·공감	· 여성친화도시 필요성 인식 · 공직사회 공감대 형성	·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설명회 · 관리자·실무자 토론회 성인지교육 · 지역유형 진단자료 제공	· 전담담당자 지정 · 부서별 교육 참여 · 기존 사업 자체점검
2단계 진단·발굴	· 지역의 성별 정책수요 파악 · 기존 사업의 여성친화 과제 전환	· 시군 성인지 통계 패키지 제공 · 유형별 전문가 컨설팅 · 사업발굴 워크숍 지원	· 성인지 통계 검토 · 주민수요 파악 · 부서별 후보사업 발굴
3단계 시범사업	· 지역특화 대표모델 실험	· 도비 특화사업 공모 · 사업별 전문컨설팅 · 유사유형 시군 공동학습	· 5대 영역 중 우선분야 시범사업 추진 · 시민·군민참여단 구성 · 주민참여형 사업 운영
4단계 지정 준비	· 필수지표 확보 · 5대 영역 대표사업 체계화	· 지정신청 집중컨설팅 · 필수지표 사전점검 · 신청서·성과자료 컨설팅	· 전담인력 및 협업체계 안정화 · 필수지표 충족 · 지정신청 추진
5단계 고도화	·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운영	· BSC·성과관리 컨설팅 · 우수사업 확산 · 재지정 대응지원	· 부서성과관리 제도화 · 대표사업 확대 · 지역 여성조직 자립화

- 준비도시 선정 시 단순히 단체장의 의지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전담인력 확보 가능성, 관련부서 참여의지, 시민·군민참여 기반, 지역특화 정책자원, 지정추진 의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선정지역에는 도와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지역 성평등 여건 진단 → 공무원 토론회 성인지교육 → 부서별 여성친화 과제 발굴 → 시민·군민참여단 구성 → 지역특화 시범사업 → 전문가 컨설팅 → 지정신청 지원]을 하나의 연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통해 시군이 각 단계를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여성친화도시 경험이 부족한 군 지역도 체계적으로 지정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나.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개선

- 현재 경상북도는 2025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시군과 지정 시군의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군과 매칭해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 교육과 컨설팅, 협의체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 사업비 교부 이후 시작되는 방식에서 '전년도 기획-차년도 실행' 방식으로 전환

- 현재 시군 매칭형 지역특화사업은 사업비가 교부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설계·집행해야 하므로 실제 사업 착수시기가 늦어지고 충분한 기획·주민참여·성과축적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단순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주민수요 확인, 부서협업, 시민·주민참여단 참여, 전문가 컨설팅, 사업실행 및 사후 모니터링이 연결되어야 하므로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도비 지원사업은 사업연도에 들어가서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보다 전년도 하반기에 차년도 사업을 미리 발굴하고 컨설팅하여 사업계획을 확정된 후 연초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전년도 8~9월 시군 수요조사 → 9~10월 지역진단 및 사업발굴 워크숍 → 10~11월 전문가 사전컨설팅 → 11~12월 차년도 특화사업 선정 → 차년도 1~2월 사업계획 보완 → 예산교부 즉시 사업착수 → 연중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연말 성과평가

2) '사례 소개형 컨설팅'에서 '지역진단 기반 정책개발형 컨설팅'으로 전환

- 현재 여성친화도시 사업발굴 과정에서는 다른 여성친화도시의 우수사례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성인지 통계와 지역정책 분석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할 경우 지역특성과의 정합성이 낮은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음
- 앞선 중점지역 분석에서도 같은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이라 하더라도 김천은 산업·혁신도시, 예천은 신도시-농촌 이중생활권, 울진은 에너지·분산생활권이라는 서로 다른 문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컨설팅은 우수사례를 먼저 제시하는 방식보다 '이 지역에서 여성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먼저 진단한 뒤 이에 적합한 사업방식을 찾는 순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컨설팅 전에 시군별로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인지 통계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인구·연령·1인가구의 성별구조/ 여성고용률 및 남녀 고용격차
 산업별 여성종사 구조/ 여성 상용근로자 및 임금수준
 돌봄·보육 관련 지표/ 안전 관련 지역지표
 여성위원 및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
 지역 주요업무계획 및 양성평등 시행계획
 기존 여성·가족·일자리·돌봄·안전·주민참여 사업

- 이를 「시군 여성친화도시 지역진단 카드」 형태로 사전에 작성하여 전문가와 담당자가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임
- 다만 모든 미조성 시군이 별도의 성인지 통계 연구를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특히 군 지역은 예산과 전문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용역을 먼저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경상북도 또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공통통계를 활용하여 시군별 기초진단을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매년 또는 2년 단위로 「경북 여성친화도시 시군별 정책진단」을 실시하여 22개 시군의 주요 성인지 지표를 업데이트하고, 미조성 지역에는 보다 상세한 진단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임

3) 신규 추진지역은 '공무원 교육'을 컨설팅보다 앞서 추진

- 신규지역에서는 담당자만 여성친화도시를 이해해서는 부서협업이 작동하기 어려움.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핵심은 여성가족부서가 새로운 여성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교통·안전·농업·도시계획·복지 등 기존 부서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사업발굴에 앞서 관련부서 공무원의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신규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컨설팅 이전에 관리자·중간관리자·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단계별 공무원 교육을 의무적인 준비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 역시 일반적인 성인지 감수성 강의보다 해당 지역의 실제 사업을 가져와 함께 분석하는 토론·워크숍형 방식이 적절함. 전문가 조사에서도 법·제도 전달 중심 교육보다 지역현안 해결형 토론회 교육이 필요하며, 성평등을 여성정책이 아니라 지역발전 전략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4) 시군협의체를 '사업현황 공유'에서 '공동학습·우수사례 확산 플랫폼'으로 고도화

- 현재 시군 간 협의체 운영은 경북 전체의 여성친화도시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자산으로 볼 수 있음. 향후에는 단순히 각 시군의 추진현황을 발표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보다 시군이 실제 경험한 문제와 해결과정을 공유하는 학습형 협의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우수사례는 최종 성과만 소개하기보다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어떤 주민수요가 있었는지, 처음 계획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부서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민은 어떻게 참여했는지, 실패하거나 수정한 부분은 무엇인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함께 공유해야 미조성 지역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음

참고문헌

참고문헌

□ 문헌자료

- 구미시(2025), 2025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보고서
- 경산시(2025), 2025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서
-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21),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사업 결과보고서
- 경상북도(2025),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시군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선정안내
- 경상북도(2026),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시군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선정안내
- 경주시(2025), 2025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보고서
- 경기도여성가족재단(2023),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실무담당자 업무지침서
- 김명화(2018), 경북지역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효과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명화(2022), 여성친화도시 지정제도 개편에 따른 경북의 대응방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김명화(2024), 경북 농촌지역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김명화(2025),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모델 개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김천시(2025), 2025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서
- 동구여성희망창작소 리플렛
- 민연경·김은숙(2020), 강원도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여성친화도시 사업모델 개발
- 성평등가족부(2026), 202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계획
- 성평등마을사업단(2024), 2024년 제주 성평등마을 만들기 사업 결과자료집
- 수성여성클럽(2026), 행복수성 여성친화 가이드북
- 오미란(2025), 광주시 여성친화마을 사례,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교육 자료집
- 울진군(2026), 2026년 울진군 주요업무계획
- 여성가족부(2016),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집 : 여성친화도시와 지역사회 변화
-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3-2027), 2025년 시행계획(지자체)
- 여성가족부(2025), 2025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계획
- 의성군(2025),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서

이경하(2023),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사업 이행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이은진(2025),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교육 자료집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유희정·김양희·최진·문희영(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연구, 여성가족부

정현자·김들순·문지현(2023), 인천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 방안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철곡군(2025), 2025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서

포항시(2025), 2025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보고서

□ 통계 자료

경상북도, 「경상북도사업체조사」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위원회 여성 참여현황」

통계청, 「인구총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전국사업체조사」

행정안전부,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

□ 홈페이지

경상북도청 홈페이지(www.gb.go.kr)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gc.go.kr>)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s://www.ycg.kr>)

울진군청 홈페이지(<https://www.uljin.go.kr>)